

2010 연구보고서(수시과제) - 4

북경행동강령 이행 15주년 점검 및 향후과제

이선주 · 변화순 · 박성정

KW/D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북경행동강령 이행 15주년 점검 및 향후과제

연구책임자 : 이 선 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변 화 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 성 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집필진

1. 여성과 빈곤	홍승아 (본원 연구위원)
2. 여성과 교육·훈련	박성정 (본원 연구위원)
3. 여성과 건강	김동식 (본원 연구위원)
4. 여성에 대한 폭력	변화순 (본원 선임연구위원)
5. 여성과 무력분쟁	김원홍 (본원 연구위원)
6. 여성과 경제	김종숙 (본원 연구위원)
7. 여성과 권력 및 의사결정	김은경 (본원 전문연구위원)
8.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이선주 (본원 연구위원)
9. 여성인권	윤덕경 (본원 연구위원)
10. 여성과 미디어	이수연 (본원 선임연구위원)
11. 여성과 환경	명진숙 (한국여성재단 배분팀장)
12. 여아	장미혜 (본원 연구위원)

발 간 사

2010년은 북경행동강령이 채택된 지 1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3월 뉴욕에서 개최된 제54차 여성지위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는 북경행동강령 이행 15주년을 맞이하여 이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북경행동강령 이행에 있어서 지난 15년 간 양성평등 증진과 여성의 지위향상에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그 성과가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북경행동강령 이행 15주년을 맞이하여 국제적 점검만이 아니라 국내적 점검과 향후과제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난 15년 간 한국의 여성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국가기구의 설립, 차별을 없애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강화, 여성의 정치·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의 시행, 여성에 대한 폭력을 철폐하기 위한 제도의 시행 등을 통한 양성평등 증진하고 여성의 권한 강화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북경행동강령의 각 부문마다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북경행동강령 15주년 이행사항을 점검해 보고, 우리나라의 성과와 향후과제도 살펴보고자 수행되었습니다. 본 연구가 지난 15년간 북경행동강령이 국내외적으로 어떻게 이행되어 왔는지를 점검하고, 향후과제를 도출하는 데 기여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내용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집필자들을 포함한 원내외 모든 분들께 연구자들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0년 10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 장 김 태 현

연구요약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2010년은 북경행동강령이 채택된 지 15주년이 되는 해임. 지난 15년간 북경행동강령 이행에 있어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의 국제적인 경제, 식량, 환경위기로 인해 여성들의 경제적 지위는 더욱 약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여성에 대한 사회, 제도적 차별은 여전함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북경행동강령 이행 15주년을 맞이하여 북경행동강령의 각 부문별로 국제적 이행 정도와 성과 및 국내 여성정책 상황을 점검하고자 함. 동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성과, 향후과제 및 효과적인 여성정책 이행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함

2. 연구방법

- 본 연구는 북경행동강령 15주년 점검을 위해 방대한 국내외 문헌, 통계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이루어졌음.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유엔의 통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국내에서의 이행사항 역시 국내 문헌 및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함
- 연구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연구 내용을 풍성하게 하고자 관계 부처, 관련 분야 전문가, 비정부기구(NGO) 활동가 등과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음. 자문회의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연구에 반영, 연구의 완결성을 높임

II. 여성의 권한 증진을 위한 아젠다: 북경행동강령

1. 북경행동강령 점검 진행 현황

- 북경행동강령은 1995년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된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적 아젠다로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공, 사영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남녀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바꾸어 인권을 증진하고 사회정의 실현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
- 북경행동강령은 12개의 주요 관심분야를 선정하고 이들 각 분야에서 여성에게 차별적인 사회구조적 장애요인을 파악하여 각국 정부, 시민단체, 국제기구가 각 주체별로 실천할 향후 활동을 제시함. 1997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 52/100 (A/RES/52/100)은 각국 정부에 동 강령의 이행을 촉구, 여성지위위원회가 이행사항을 점검,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고할 것을 요청하였음. 또한 유엔사무총장은 이행사항을 매년 유엔총회에서 보고하도록 되어있음

※ 북경행동강령 이행 점검 주요 내용

- 1) 북경행동강령 채택('95.9): 1985년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3차 세계여성대회의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미래전략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채택됨
- 2) 북경행동강령+5 ('00.6): 유엔총회 결의안 52/100에 따라 제23차 유엔특별총회에서 북경행동강령 이행 5주년을 평가. 정치선언과 결과문서인 “북경선언과북경행동강령이행을 위한추가조치및계획” 채택함
- 3) 북경행동강령 +10 ('05.3): 제23차 유엔특별총회에서 채택된 정치선언 및 결과문서에 따라 북경행동강령의 이행상황 재확인
- 4) 북경행동강령 +15 ('10.3): 제54차 여성지위위원회에서 지난 15년간 동 강령 이행성과, 모범사례 공유함. 또한 효과적 이행의 장애요소 파악, 대응책 논의

2. 북경행동강령과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연계

- MDGs는 빈곤퇴치와 전 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 달성을 목표로 2000년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국제개발목표임. 양성평등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목표는 MDG 3 “양성평등과 여성 역량 강화”, MDG 5 “모성 보건 증진”이나, 성불평등과 차별을 야기하는 사회구조와 공사영역에서 남녀의 권력관계의 변화를 위해 역부족임. 이에 폭력, 성차별과 같은 이슈들은 여성차별철폐협약, 북경행동강령의 이행을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시각임. 이같은 북경행동강령과 MDGs의 연계는 기본적으로 젠더는 크로스커팅 이슈로서 양성평등의 증진이 담보되지 않고서는 전체 MDGs를 달성할 수 없다는 국제적 합의가 전제된 것임

III. 국제사회의 북경행동강령+15 점검 및 향후과제

1. 여성과 빈곤

- 국제사회는 최근의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여성들이 더욱 취약하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으며, 향후 여성의 빈곤화 현상이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 이에 각 국가는 이를 대처할 수 있도록 빈곤층 여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회안전망 정비가 요구됨

2. 여성과 교육 · 훈련

- 여아에게 교육의 기회가 15년 전 보다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여아의 취학률은 남아보다 낮게 나타남.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여아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하는 모든 사회, 문화적 장애물을 인식하고 제거해야 할 것임

3. 여성과 건강

- 여성과 건강 분야에서도 진전이 있었으나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도 생식기 관련 질병, HIV/AIDS, 모성사망률 문제 등이 남아 있음. 사회의 재생산이 여성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비추어볼 때, 여성 건강의 문제는 여성 개인 뿐 아니라 국가의 재생산과도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로서 이해되어야 함. 이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4. 여성에 대한 폭력

-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은 전 세계적인 문제이면서도 모든 지역, 국가에서 발견되는 매우 보편적 현상임.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인권을 침해하고 양성평등을 달성하는데 장애요소임. 이에 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희생자와 생존자에 대해 적절하게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동 이슈에 대한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임

5. 여성과 무력분쟁

- 평화안보 분야에서 양성평등 증진의 중요성은 부각되었으나 아직은 많이 미흡한 실정에 있음. 무엇보다도 의사결정과정에서 남녀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함. 무력분쟁과 관련된 성차별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다방면에서 계속 되고 있으나 여전히 성차별 폭력 피해자가 보고되고 있는 실정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법적근거와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 지원 등과 더불어 쉼터 및 생계수단을 마련해야 함

6. 여성과 경제

- 15년 전과 비교해서 여성의 노동기회는 증가하였음. 그러나 노동기회의 질적인 면을 평가한다면 여성은 남성보다 높은 실업률을 보일 뿐 아니라, 임금, 고용분야 및 형태, 사회보장제도 면에서 성불평등한 부정적인 상황에 있음을 알 수 있음. 근로환경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희롱, 출산과 육아에 따른 해고와 같은 문제들이 시급히 개선되어야함

7. 여성과 권력 및 의사결정

- 개별 국가 차원 뿐 아니라 국제기구 등에서 아직도 여성은 의사결정직에서 충분한 대표성을 갖고 있지 않음. 이는 여성이 의사결정직에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 여성 역량 강화와 양성평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하는 분야임을 알 수 있음

8.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 각 국가는 여성부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 양성평등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러나 많은 경우, 여성지위향상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는 정치적으로 핵심적인 위치를 확보하지 못해 인력 및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현실임. 국제적으로는 보다 효과적으로 양성평등과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자 기존의 유엔시스템 내 존재하던 여성지위 향상국, 국제여성연구훈련원, 사무총장 여성특별 보좌관실, 여성개발기금을 UN Women이라는 단일기구로 통합, 출범한 것을 성과로 꼽을 수 있음

9. 여성인권

- 여성차별철폐협약은 국제법으로서 동 협약에 비준한 국가에게 여성인권증진을 위한 국내법을 제정하도록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많은 국가들이 협약 내용에 부응하는 법 개혁을 이룩하였으나, 실제적으로는 법과 관습 내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기도 하고 혹은 실제적 집행까지는 아직 이루지 못한 경우가 나타나고 있어 주목해야 함

10. 여성과 미디어

- 북경행동강령 채택 이후 미디어 분야에 여성의 참여가 증가하였음. 그러나 미디어 보도의 대부분이 성고정관념을 고착화시키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미디어 산업, 특히 의사결정직에 여성의 대표성이 남성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는 여성이 국경, 사회, 문화의 경계를 넘어 자신들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요인으로 부각되었으며 이에 여성 대상 정보통신 관련 교육훈련의 확대가 중요한 이슈로 인식되고 있음

11. 여성과 환경

- 전 세계 빈곤인구의 대다수는 여성으로 이들은 생계를 위해 천연자원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최근의 기후변화현상, 그로 인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현상들-식량수확의 감소, 에너지 자원 부족, 자연재해 등은 여성들의 경제, 건강, 노동 생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국내, 국제적인 환경 및 농촌개발을 위한 국가적 계획은 충분히 성 인지적이지 못해 여성, 농업 종사 여성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음. 특히 국제적인 환경 분야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은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알려짐

12. 여아

- 전 세계적으로 여아들의 교육기회 접근성은 상당히 높아졌지만 여아들은 정책, 프로그램 개발, 자원 분배에 있어서 충분히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음. 여아들의 성적, 생식적 건강, 아동노동, 조기강제결혼 등의 이슈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조치, 행동계획 이행으로 개선이 필요함

IV. 한국의 북경행동강령+15 점검 및 향후과제

1. 여성과 빈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으로 국가 빈곤정책의 여성수혜자 수 증가. 근로연계복지, 사회적 일자리사업,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에 성 인지성 도입 및 확대는 주목할 만 함. 그러나 국내적으로도 빈곤의 여성화는 진행되고 있음. 이에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성 인지적 개편에 기반한 여성 접근성 향상으로 여성빈곤의 구조적 원인 해소 및 탈빈곤을 위한 여성경제활동 접근성 개선이 요구됨

2. 여성과 교육 · 훈련

- 기초 문해 달성은 물론 남녀의 교육에 대한 접근기회는 중등교육까지 거의 동등해졌다는 평가임. 그러나 아직 과학, 기술 특히 공학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은 저조한 편으로 성 역할 편견이 배제된 교과과정 구성 및 교과선택에 있어 성차별의 해소가 필요함. 교육관리직, 전문직의 여성비율은 증가했으나 남성

에 비해 아직 저조한 편임. 고령여성, 여자청소년의 효과적인 평생교육 증진 방안 및 결혼이민여성, 탈북여성, 경력단절여성의 교육접근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임

3. 여성과 건강

- 여성건강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적용범위도 확대됨. 여성건강과 관련한 다양한 통계가 생산되고 건강증진 사업이 활성화된 것은 주성과이나 성 인지적 관점에서 수집된 생애주기별 통계생산을 기반으로 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계획의 수립이 절실함. 우리나라가 올해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면서 공적개발원조(ODA)의 질적 제고가 필요한 시점에서 한국 ODA의 보건의료 분야 개선을 위한 근거중심의 성 인지적 사업기획, 실행, 평가 요구됨

4. 여성에 대한 폭력

- 가정폭력 관련법의 제정 및 법률에 근거한 피해자 지원의 제도화가 이루어지고, 성폭력 관련법이 제정되고 성폭력 범죄자의 처벌이 강화된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임. 그러나 대검찰청 통계 분석결과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여전히 가정보호사건에 의존하기 보다는 피해를 감수하거나, 개인적으로 상황을 해결하고 있다고 추측되기에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긴급임시조치권 도입 및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을 통한 가해자 처벌의 강화가 시급함. 성폭력 범죄 역시 최근 10년 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성폭력 범인의 조속한 검거를 위한 수사 전담체계의 구축 및 아동성범죄 사전 예방이 절실함

5. 여성과 무력분쟁

- 한국은 무력분쟁국이 아닌 분단국가로서 분단극복을 위한 노력, 즉 여성단체, 정부의 분단극복을 위한 노력 및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슈 중심으로 살펴보았음. 여성단체 및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이 전개된 것은 성과이나 통일 관련 주요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이 현저히 낮아 여성참여 확대가 필요함

6. 여성과 경제

- 여성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정비되고,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정책이 확대되어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지원을 통해 여성 고용의 기회를 증진하고자 한 점은 최근 주요 정책의 성과임. 그러나 양적인 지표로서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1995년 이후 소폭 제고된 것으로 나타나 취약계층 여성들을 포함한, 여성들의 경력형성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실행 및 일과 과정 양립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의 정착이 요구됨

7. 여성과 권력 및 의사결정

- 한국에서의 가장 큰 성과는 공직의 여성참여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율-여성 비례대표 후보 50%할당제 도입을 꼽을 수 있음. 공직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를 목표로 여성채용목표제, 양성채용목표제, 관리자급 이상 여성 공무원 확대계획등이 마련되었음. 그러나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리더십 훈련 및 공직 내 경력지속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청되는 시기임

8.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 여성담당 국가기구인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양성평등진흥원을 설치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체계를 마련함. 성별영향평가, 성 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해 입법, 공공정책, 프로그램 및 사업에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온 것과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한 여성정책조정회의, 여성정책책임관 및 여성정책협조부서를 지정한 것은 큰 성과로 평가됨. 그렇지만 성 주류화의 대표적인 도구로 불리는 성별영향평가와 성 인지 예산제의 대상 과제 다양화 및 적용기관 확대조치가 요구됨. 또한 모든 부처가 성별분리통계 및 정보를 생산하여 성 주류화 확대를 위한 기반을 확고히 하는 것이 필요

9. 여성인권

- 2005년 호주제 폐지에 따른 민법 개정, 여성가족부의 전폭적인 예산 확대, 모든 정부 정책에 성 인지적 관점의 도입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주목할 만 함.

또한 2006년 성 인지적 예산 정책 도입,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은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온전한 국내 이행을 위한 노력의 성과로서 국제적 인정을 받음. 그러나 법률문해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등의 체계적 접근을 통해 차별철폐 관련법의 사실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요구됨

10. 여성과 미디어

- 지난 15년 간 미디어 종사자 중 여성비율이 꾸준히 증가한 사실과 1,2,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대중매체 모니터링, 종사자 양성평등 교육, 방송 양성평등 심의기준 및 콘텐츠 지원사항이 포함된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임. 그렇지만 지상파 방송사의 의사결정직의 여성임원 비율이 매우 저조하여 여성 대표성 증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방송 종사자 정규교육에 양성평등 과목 포함 또한 향후 과제로 남아있음. 최근 국제적으로 여성 역량 강화 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서 ICT가 각광받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개발도상국에 ICT 교육훈련을 확대, 여성 직업능력 개발 노하우를 공유하도록 해야 할 것임

11. 여성과 환경

- 환경정책 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는 다소 진전을 보인 것과 더불어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여성환경 정책이 제한적으로나마 포함된 것은 성과로 간주됨. 그러나 여성환경 분야 정책 영역의 확대 방안을 모색, 환경관련 정책 결정과정에 여성참여를 촉진시키고, 국제적인 여성환경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조치 마련이 시급함

12. 여아

- 1995년 이후 교육에서의 성차 개선,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아 낙태 및 성비 불균형 예방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조치가 이행되었음. 그러나 최근 여아의 안전 문제가 사회 이슈화 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아에 대한 폭력 예방과 일관된 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기관의 협치 체계 구축 및 여아 안전을 보장하는 지역 환경 조성 및 광범위한 지역사회 전체의 사회적 개입이 요구됨

V. 정책제언

- 12개 주요 관심 분야 중 강화되어야 할 분야로는 여성 고용, 무력분쟁, 환경, 그리고 여아로 나타남. 동 분야에 있어 여성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마련과 더불어 집중적 관심이 필요하며,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에 있어서도 정책개발 및 예산의 확대가 요구됨
- MDGs 달성을 위한 한국의 ODA기여 부문 개발. 한국이 축적한 여성과 건강 부문에서의 성공 경험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의 모자보건 증진, HIV/AIDS 및 기타 전염병 예방 등 MDGs 달성과 직결된 분야에 기여. 이를 위해서는 동 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개선이 요구되는 바 ODA 보건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KOICA의 내외적 역량 강화 및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통한 향후 보건의료 원조정책에 근거중심의 피드백을 강화해야 할 것임
- 성 주류화의 국제화를 위하여 정책분야별로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를 다양화하여 정책 전반에 걸친 성주류화의 확산을 꾀함

목 차

I. 서 론	1
1. 목적과 필요성	3
2. 연구방법	4
II.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아젠다: 북경행동강령	5
1. 북경행동강령 점검 진행 현황	7
2. 북경행동강령과 새천년개발목표의 연계	10
3. 국제사회의 북경행동강령+15	12
III. 한국의 북경행동강령+15: 12개 부문 이행 사항 점검	57
1. 여성과 빈곤	59
2. 여성과 교육·훈련	76
3. 여성과 건강	90
4. 여성에 대한 폭력	106
5. 여성과 무력분쟁	122
6. 여성과 경제	137
7. 여성과 권력 및 의사결정	153
8.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168
9. 여성인권	181
10. 여성과 미디어	195
11. 여성과 환경	212
12. 여아	228

IV. 정책제언 : 향후과제	243
1. 12개 주요 관심분야별 정책제언	245
2. 12개 주요 관심부문 중 강화되어야 할 정책	260
3. MDGs 달성을 위한 한국의 ODA기여 부문 개발	261
■ 참고문헌	265
■ Abstract	275

표 목 차

<표 II-1>	북경행동강령 이행 점검 주요 내용	8
<표 II-2>	새천년개발목표 3과 5	11
<표 III-1-1>	전체 빈곤율과 여성빈곤율	63
<표 III-1-2>	여성가구주 변화(1995-2010)	66
<표 III-1-3>	저소득 한부모가족 구성	67
<표 III-1-4>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2008)	68
<표 III-2-1>	국민 평균 교육년수	78
<표 III-2-2>	유치원 취원율	78
<표 III-2-3>	학교급별 취학률	78
<표 III-2-4>	학위취득자의 여성 비율	79
<표 III-2-5>	고등학교 계열별 여학생 비율	80
<표 III-2-6>	전공 분야별 대학교의 여학생 비율	80
<표 III-2-7>	학위수준별 이공계 여성 양성 규모	81
<표 III-2-8>	여성과학기술 연구개발인력 고용 현황(정규직)	81
<표 III-2-9>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 운영기관 여성채용 비율	82
<표 III-2-10>	평생학습 참여율	84
<표 III-2-11>	재직자 직업교육훈련 성별 참여율	84
<표 III-2-12>	직업훈련유형별 여성참여율	84
<표 III-2-13>	초·중등 교원의 직급별 여성 비율	87
<표 III-2-14>	교육전문직의 여성 비율	88
<표 III-2-15>	대학이상 직위별 여교원 비율	88
<표 III-3-1>	성별·연도별 기대여명 및 건강수명	95
<표 III-3-2>	성별·연령별 주관적 건강상태	95
<표 III-3-3>	유병률, 유병일수 및 외병일수	96
<표 III-3-4>	건강검진수진율	97

<표 III-3-5> 합계출산율과 여성의 초혼 연령	98
<표 III-3-6> 출생성비 및 피임 실천율	99
<표 III-3-7> 모성·영아사망률 및 저체중아 출생율	100
<표 III-3-8> 제왕절개분만을 및 인공임신중절을	101
<표 III-3-9> 성별·연도별 HIV/AIDS 감염인 비율	102
<표 III-4-1> 가정폭력 발생유형별 현황	108
<표 III-4-2> 전국가정폭력 실태조사에 의한 지난 1년간 가정폭력 발생변화 : 2004년과 2007년 비교	109
<표 III-4-3> 가정폭력상담소 현황	109
<표 III-4-4>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경찰의 조치현황(2000년-2010년)	112
<표 III-4-5> 성폭력범죄의 발생건수 및 발생비	113
<표 III-4-6> 여성의 성폭력 피해율	114
<표 III-4-7> 성폭력상담소 현황	116
<표 III-4-8> 성매매 피해자 보호·지원 상담실적	119
<표 III-4-9> 구조·자활 서비스 제공 실적	119
<표 III-5-1> 2010년 상반기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126
<표 III-5-2> 여성단체 간부대상 통일교육 현황	127
<표 III-5-3>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 현황	128
<표 III-5-4> 지원대상자 현황	132
<표 III-5-5> 연도별 신규 발생자 및 사망자	132
<표 III-5-6> 생활안정지원금 연도별 추이	133
<표 III-5-7> 치료사업 및 간병인 지원 사업 현황	134
<표 III-6-1> AA 적용대상 사업장 및 기준 미달 사업장 변화 추이	147
<표 III-6-2> 조직문화에 대한 구성원의 조직 내 인식차이(5점 척도)	151
<표 III-7-1> 정당의 여성공천할당 관련 정당법 개정과정	155
<표 III-7-2> 여성 국회의원 현황	156
<표 III-7-3> 연도별 광역의회 의원선거 여성 후보자 및 당선자수	157
<표 III-7-4> 연도별 기초의회 의원선거 여성 후보자 및 당선자 수	157
<표 III-7-5> 여성장관 현황	160

<표 III-7-6>	중앙부처 여성공무원 현황	160
<표 III-7-7>	여성채용목표제 목표비율	161
<표 III-7-8>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목표비율	162
<표 III-7-9>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비율 및 5급 이상 여성공무원 현황 ...	163
<표 III-7-10>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확대 목표비율	163
<표 III-7-11>	여성 판·검사 현황	165
<표 III-7-12>	외무고시 여성 합격자 현황	165
<표 III-7-13>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	166
<표 III-8-1>	성별영향평가 추진단계	173
<표 III-8-2>	추진 실적	174
<표 III-8-3>	2010년도 성 인지 예산서 개요 (29개 기관)	178
<표 III-9-1>	남녀차별철폐를 위한 법 개정 현황(1995-2010)	184
<표 III-10-1>	성별 언론 종사자 현황	197
<표 III-10-2>	지상파 3사 직능별 여성 종사자	198
<표 III-10-3>	신문사 직능별 여성 현황	199
<표 III-10-4>	언론관련 위원회 여성 비율 (2010)	200
<표 III-10-5>	언론 관련 위원회 여성비율(2000)	200
<표 III-10-6>	내 직급별 여성고용현황	209
<표 III-11-1>	의제 21 국가실천계획 제24장 중 환경 부분	213
<표 III-11-2>	지방의제 21 추진기구(협의체) 위원 구성	217
<표 III-11-3>	지방녹색성장위원회 현황	218
<표 III-11-4>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중 환경 분야 실적 (2007)	221
<표 III-11-5>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련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2007)	222
<표 III-11-6>	지방의제 21 추진기구 및 여성·양성평등 분과 구성현황 (2009)	223
<표 III-12-1>	출생 순위별 출생성비	232
<표 III-12-2>	성폭력범죄(강간)의 피해자 성별·연령별(1995-2008)	234
<표 III-12-4>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피해자 성별·연령별 (2002-2008)	236
<표 III-12-5>	「성매매방지법」 피해자 성별·연령별(2004-2008)	239

<표 IV-1>	여성과 빈곤 현황 및 향후과제	246
<표 IV-2>	여성과 교육·훈련 현황 및 향후과제	247
<표 IV-3>	여성과 건강 현황 및 향후과제	248
<표 IV-4>	여성과 폭력 현황 및 향후과제	250
<표 IV-5>	여성과 무력분쟁 현황 및 향후과제	251
<표 IV-6>	여성과 경제 현황 및 향후과제	252
<표 IV-7>	여성과 권력 및 의사결정 현황 및 향후과제	253
<표 IV-8>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현황 및 향후과제	254
<표 IV-9>	여성인권 현황 및 향후과제	255
<표 IV-10>	여성과 미디어 현황 및 향후과제	257
<표 IV-11>	여성과 환경 현황 및 향후과제	258
<표 IV-12>	여아 현황 및 향후과제	259

그 림 목 차

[그림 II-1]	초등교육 연령아동 100명당 취학 아동의 수	17
[그림 II-2]	전문보건인력에 의한 출산비율 (2000-2008)	22
[그림 II-3]	전 세계 실업동향 (1998-2008)	33
[그림 II-4]	여성 국회의원 비율추이	37
[그림 III-1-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성별 수급자 현황	60
[그림 III-1-2]	노인의 성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현황	64
[그림 III-1-3]	여성가구주와 남성가구주의 빈곤율 비교(도시근로자 가구) ·	67
[그림 III-1-4]	국민연금(2008) 및 고용보험(2010) 성별가입율	70
[그림 III-1-5]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73
[그림 III-2-1]	여학생 취학률	79
[그림 III-2-2]	교육전문직 여성 비율	88
[그림 III-4-1]	유형별 성매매사범 단속 현황(2004년-2009년 8월)	118
[그림 III-6-1]	여성 전체 및 대졸자의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139
[그림 III-6-2]	비경제활동사유의 변화	139
[그림 III-6-3]	남성과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140
[그림 III-6-4]	전체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141
[그림 III-6-5]	임금 및 비임금 근로자 현황	142
[그림 III-6-6]	성별 · 년도별 남녀 임금 비	143
[그림 III-6-7]	연령별 고용형태 분포	144
[그림 III-6-8]	여성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	144
[그림 III-6-9]	여성 취업자의 직종분포	145
[그림 III-6-10]	성별 승진 비율	147
[그림 III-6-11]	산전후 휴가급여 수급자 수	149
[그림 III-6-12]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	150
[그림 III-7-1]	국회 및 지방의회 연도별 여성 참여현황	158

[그림 Ⅲ-7-2]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	167
[그림 Ⅲ-8-1]	여성가족부 체계도	171
[그림 Ⅲ-8-2]	연도별·정책분야별 과제 추이	175
[그림 Ⅲ-8-3]	연도별 의무적용대상기관의 과제추이	176
[그림 Ⅲ-8-4]	국가 재정운용과 성인지 예산제도	177
[그림 Ⅲ-12-1]	20세 이하 성폭력범죄 피해자	234
[그림 Ⅲ-12-2]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세 이하 여성피해자	237

I

서론

1. 목적과 필요성	3
2. 연구방법	4

1. 목적과 필요성

2010년은 양성평등 증진과 여성의 권한 강화를 위한 특별한 해이다. 2010년은 북경행동강령이 채택된 지 15주년이 되는 해이며, 또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가 채택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이와 더불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1325가 채택된 해이기도 하다. 따라서 올해는 이 모든 것이 지금까지의 이행 정도와 성과를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양성평등의 관점에서는 북경행동강령, MDGs 그리고 결의안 1325가 각각 개별의 것이 아니라 이들 모두 양성평등 증진과 여성의 권한 강화라는 하나의 맥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2010년 3월 뉴욕에서 개최된 제54차 여성지위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CSW)는 북경행동강령 이행 15주년을 맞이하여 이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고, 향후과제를 살펴보았다. 북경행동강령 이행에 있어서 지난 15년 간 양성평등 증진과 여성의 지위향상에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그 성과가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여성들은 아직까지도 경제적 취약한 위치에 있으며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해 여성들이 경제적 지위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정치적으로도 역시 여성들은 남성과 동등하게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할당제와 특별조치가 여성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확대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제도적 차별은 여전히 여성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최근 분쟁지역의 여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분쟁 중이거나 또는 분쟁이 종식된 이후에도 여성들의 삶이 황폐해지고 인권이 유린당하지만 국가재건과 개발 과정에서 여성들이 배제됨으로써 여성들의 당면문제를 주체적으로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게 된다. 게다가 인간이 통제하기 어려운 기후변화는 저개발국가에서 식량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전 세계 빈곤층의 대다수를 여성이 차지하며 그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천연자원에 크게 의존하는데 이러한 천연자원이 기후변화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수확의 감소는 그들이 먹을 식량뿐 아니라 수입

4 ●●● 북경행동강령 이행 15주년 점검 및 향후과제

량 감소로 인해 식량가격의 상승을 가져오고 있어서 빈곤층의 식량 확보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경제위기, 분쟁지역의 국가재건, 기후변화, 식량안보와 같은 이슈는 최근 국제사회의 핵심 이슈가 되고 있다.

북경행동강령 이행 15주년을 맞이하여 국제적 점검만이 아니라 국내적 점검과 향후과제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지난 15년 간 한국의 여성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국가기구의 설립, 차별을 없애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강화, 여성의 정치·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의 시행, 여성에 대한 폭력을 철폐하기 위한 제도의 시행 등을 통한 양성평등 증진하고 여성의 권한 강화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북경행동강령의 각 부문마다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들이 남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북경행동강령 15주년 이행사항을 점검해 보고, 우리나라의 성과와 향후과제도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북경행동강령 15주년 점검을 위해 국내외문헌과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 북경행동강령의 이행정도를 점검하기 위하여 유엔의 통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국내에서의 이행사항도 국내문헌 및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연구 내용을 풍성하게 하고자 관계부처, 관련 분야 전문가, NGO 활동가 등과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자문회의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연구에 반영하였다.

II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아젠다: 북경행동강령

1. 북경행동강령 점검 진행 현황	7
2. 북경행동강령과 새천년개발목표의 연계	10
3. 국제사회의 북경행동강령+15	12

1. 북경행동강령 점검 진행 현황

북경행동강령은 1995년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된 여성의 권한 강화(women's empowerment)를 위한 아젠다이다. 이 강령은 1985년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3차 세계여성대회의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미래전략(Nairobi Forward-looking)”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 채택되었다. 북경행동강령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공사영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남녀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바꾸어 인권을 증진하고 사회정의 실현하여 평등, 발전, 평화가 어우러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그 지향점으로 하고 있다. 이 강령은 또한 양성평등을 인간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한다.

북경행동강령은 앞으로 살펴 볼 12개의 주요 관심부문(여성과 빈곤, 여성과 교육·훈련, 여성과 건강,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과 무력분쟁, 여성과 경제, 권력 및 의사결정과 여성,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여성 인권, 여성과 미디어, 여성과 환경, 여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각 부문에서 여성에게 차별적인 사회구조적 장애요인을 파악하여 사회적 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각국 정부, 시민단체,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가 각 주체별로 실천할 향후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¹⁾

1997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 52/100(A/RES/52/100)은 각국 정부에 북경행동강령의 이행을 촉구하고, 여성지위위원회가 그 이행 사항을 점검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 결의안은 또한 유엔사무총장은 북경행동강령의 이행 사항을 매년 유엔총회에서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CSW의 주관 하에 각국 정부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모여 북경행동강령의 이행사항을 점검 및 평가하고, 새롭게 도출되는 과제들에 대하여 논의한다. 이와 더불어 북경행동강령 채택 매 5년마다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그 성과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과제 역시 살펴본다. 2000년 6월에는 유엔총회 결의안 52/100에 따라 뉴욕에서 개최된 제23차 유엔특별총회에서 북경행동강령 이행 5주년을 평가하였다. 북경행동강령+5에서는 “정치선언(Political Declaration)”

1) 강선혜·김영혜 (2000). 「북경행동강령이행조사 보고서」. 한국여성개발원. p.11.

8 ●●● 북경행동강령 이행 15주년 점검 및 향후과제

과 결과문서 “북경선언과 북경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추가조치 및 계획 (Further actions and initiatives to implement the 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을 채택하였다.²⁾

〈표 II-1〉 북경행동강령 이행 점검 주요 내용

연도	특성	내용
1995.9	북경행동강령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5년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된 여성의 권한 강화를 위한 아젠다로 1985년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3차 세계여성대회의 “여성 지위향상을 위한 미래전략”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 채택됨 • 남녀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바꾸어 인권을 증진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여 평등, 발전, 평화가 어우러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지향점으로 함. • 12개의 주요 관심부문으로 이루어져 있음 • 각 분야에서 여성에게 차별적인 사회구조적 장애요인을 파악하여 사회적 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각국 정부, 시민단체,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가 각 주체별로 실천할 향후 활동을 제시
2000.6	북경행동강령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총회 결의안 52/100에 따라 제23차 유엔특별총회에서 북경행동강령 이행 5주년 평가 • “정치선언(Political Declaration)”과 결과문서 “북경선언과 북경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추가조치 및 계획” 채택
2005.3	북경행동강령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9차 여성지위위원회에서 제23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정치선언과 결과문서에 따라 북경행동강령의 이행 사항과 성과를 점검하고 평가 • 북경행동강령과 새천년개발목표와의 연계성 강조 • 새천년선언에 대한 고위급점검회의에서 성 인지적 관점의 통합을 강조 • 양성평등 증진과 여성지위향상을 위해 북경행동강령과 여성차별철폐협약 간의 상호보완적 관계 재확인
2010.3	북경행동강령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4차 여성지위위원회에서 지난 15년간의 북경행동강령 이행 성과와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여성의 권한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나타난 장애요소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과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논의 • 2010년은 북경행동강령 15주년인 동시에 새천년개발목표 채택 10주년의 해로 2015년까지 달성해야 할 MDGs를 북경행동강령과 연계하여 다룸

2) CSW, 홈페이지, <http://www.un.org/womenwatch/daw/followup/beijing+5.htm>. 2010.8.19 검색.

2005년 제49차 여성지위위원회에서는 북경행동강령 10주년을 맞이하여 제23차 유엔특별총회에서 채택된 정치선언과 결과문서에 따라 북경행동강령의 이행 사항과 성과를 점검하고 평가하였다. 북경행동강령+10에서는 북경행동강령과 MDGs와의 연계성을 역설하는 동시에, 새천년선언(Millennium Declaration)에 대한 고위급점검회의에서 MDGs에 성 인지적 관점의 통합할 것을 강조하였다.³⁾ 또한, 북경행동강령과 여성차별철폐협약 간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재확인하였다.

2010년은 북경행동강령 15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써, MDGs 채택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다. 제54차 여성지위위원회에서 지난 15년간의 북경행동강령 이행 성과와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여성의 권한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나타난 장애요소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과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2015년까지 달성해야 할 MDGs를 북경행동강령과 연계하여 다룸으로써, 국제개발목표인 MDGs 달성을 위해서는 양성평등 증진과 여성의 권한 강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⁴⁾

MDGs 달성 기한이 앞으로 5년 정도 밖에 남지 않아서 국제사회는 현재 기한 내 MDGs를 달성하는 것을 우선과제로 손꼽고 있다. 2010년 6월28일-7월3일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의 연례각료급 점검회의(Annual Ministerial Review, AMR)⁵⁾에서는 ‘양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에 관련된 국제개발목표와 책무(internationally agreed goals and commitments in regards to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을 주제로, 각국 정부들이 양성평등과 관련된 MDGs를 어느 정도 이행하였는지를 평가하였다. 이 각료회의의 국별 프리젠테이션(National

3) UN(2005), Declaration issued by the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at its forty-ninth session. 3 March, 2010 E/CN.6/2005/L.1.

4) UN (2010a).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Report on the fifty-fourth session (13 March and 14 October 2009 and 1-12 March 2010), Economic and Social Official Records. 2010, Supplement No. 7. E/2010/27, E/CN6/2010/11.

5)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의 연례각료회의(Annual Ministerial Review, AMR)는 2005년 세계정상회의(2005 World Summit)의 결정에 따라 만들어진 회의로, 2007년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AMR에서는 MDGs를 비롯한 국제개발목표의 달성정도를 평가하고, 모범사례와 교훈을 함께 공유한다.

Voluntary Presentation)에서는 우리나라, 호주, 브라질, 과테말라, 몰도바, 몽골, 나미비아, 몽골, 화란, 노르웨이, 콩고, 미국 등이 양성평등과 여성권한 강화와 연계하여 자국의 MDGs 이행 사항을 자발적으로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MDGs 달성에 있어서 양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2015년까지는 북경행동강령을 MDGs 달성과 연계하여 이행하고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2. 북경행동강령과 새천년개발목표의 연계

전 지구적 차원의 발전을 지속하고 빈곤을 감소할 목적으로 2000년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새천년선언이 채택되었고, 2001년 유엔총회에서 국제개발목표인 MDGs가 승인되었다. 새천년선언문의 양성평등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6절 평등: 개인과 국가 모두 개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부터 차단당하지 않아야 함. 남녀평등권과 기회의 보장이 남녀에게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함.
- 제20절: 빈곤, 기아, 질병에서 벗어나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과 여성의 권한 강화를 도모함.
- 제25절: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근절하고, ‘여성차별철폐협약(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을 이행할 것.

MDGs는 8개의 주요 목표와 그에 따른 세부 목표 21개와 주요 지표 60개로 이루어져 있다.⁶⁾ MDGs의 8개 주요 목표는 ①절대빈곤 및 기아 퇴치,

6) MDGs가 채택될 당시에는 8개의 주요 목표와 18개 항목의 목표 대상, 그리고 항목별 총 48개의 지표로 구성되었다. 2005년 세계정상회의에서 MDGs 이행 5주년을 점검하고 평가하면서 8개의 주요 목표의 대상과 지표를 21개의 목표 대상과 60개의 지표로 변경하여 2008년 1월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②보편적 초등교육, ③양성평등 및 여성역량강화, ④아동사망을 감소, ⑤모성보건증진, ⑥에이즈, 말라리아 등 질병퇴치, ⑦지속가능한 환경, ⑧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이다. 8개의 주요 목표 중 젠더(gender)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은 MDG 3과 MDG 5이다. 하지만 아래 <표 II-2>에서 보는 것과 같이 MDG 3과 5의 지표들은 양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부족한 점들이 많다. MDG 3과 5의 지표들은 성불평등과 차별을 야기하는 사회구조와 공사영역에서 남녀의 권력관계를 변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미 국제사회에서 이미 강조되고 있듯이 양성평등의 증진 없이는 MDGs의 달성이 요원하므로, MDGs 달성을 위해서는 MDGs 전체 목표에 젠더이슈를 크로스커팅(cross-cutting)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II-2> 새천년개발목표 3과 5

목표 3 : 양성평등과 여성역량 강화	
- 목표 대상 3.A : 교육에서의 성별간 차이를 초등 및 중등교육에서는 2005년까지, 모든 교육수준에서는 2015년까지 제거	3.1. 초·중·고등교육에서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비율 3.2. 비농업분야에서 임금노동자중 여성 비율 3.3. 의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목표 5 : 모성 보건 증진(Improve maternal health)	
- 목표대상 5.A : 1990-2015년간 모성사망률 3/4 감소	5.1. 모성사망률 5.2. 전문보건인력에 의한 출산비율
- 목표 대상 5.B : 2015년까지 출산 관련 보건의 보편적 접근성 달성	5.3. 피임율 5.4. 청소년 출산율 5.5. 출산 전 의료서비스 5.6. 충족되지 않은 가족계획 욕구

이를 위해서 MDGs에서 결여된 폭력과 성차별 등과 같은 이슈들을 여성차별철폐협약과 북경행동강령의 이행을 통해 보완해야 할 것이다. 2010년 6월 현재,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비준한 국가는 186개국 이다. 새천년선언의 제25절에서 여성차별철폐협약을 이행할 것을 이미 선언한 바 있으므로,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비준한 국가들이 이에 맞추어 MDGs의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한다면 MDGs 달성의 어려움도 조금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

다. 그리고 북경행동강령의 12개 부문 역시 MDGs 지표들과의 연계 속에서 이행한다면 MDGs에서 보이지 않던 젠더 이슈들이 드러날 것이다.

2010년은 MDGs 채택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그래서 2010년 9월 20-22일 뉴욕에서 MDGs 이행 10주년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정상회의(2010 MDG Review Summit)를 개최한다. 이 회의에서는 MDGs 달성 기한이 앞으로 5년 정도 밖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의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와 회원국의 노력을 더욱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⁷⁾ 이 회의는 한편으로 MDGs 달성을 위해서는 양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가 필수적임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⁸⁾

3. 국제사회의 북경행동강령+15⁹⁾

2010년은 북경행동강령 채택 15주년이 되는 해다. 여성지위위원회는 지난 15년 동안 북경행동강령 채택 매 5주년 마다 12개 주요관심부문에 대한 점검 및 평가하였다. 그리고 북경행동강령의 이행 성과를 국제사회, 각국 정부, 시민단체 등과 함께 공유하면서, 이로부터 얻는 교훈도 서로 나누었다. 이번 15주년 북경행동강령 점검회의에서도 역시 지난 15년 간 이루어 온 성과를 평가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였다. 아래에서는 북경행동강령의 12개 부문에 따라, 전 지구적 차원에서 지난 15년간의 이루어 온 주요 성과와 국제사회의 정치·경제적·환경적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나타난 과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7) UN (2010c).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10*. UN.

8) UN (2010a).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Report on the fifty-fourth session (13 March and 14 October 2009 and 1-12 March 2010), Economic and Social Official Records. 2010, Supplement No. 7. E/2010/27, E/CN.6/2010/11. p.37-46.

9) 본 장의 제3절은, UN(2010d).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 the outcomes of the twenty-third special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and its contribution to shaping a gender perspective towards the full realization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E/2010/4 - E/CN.6/2010/2 을 정리 및 요약한 것이다.

가. 여성과 빈곤

북경행동강령에 따르면 빈곤은 굶주림과 영양실조, 저소득, 교육의 기회 제한, 주거 불안정, 사회로부터의 차별과 배제, 위험한 환경에의 노출 등과 같이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북경행동강령에서 빈곤퇴치는 양성평등 관점을 포함한 사회·경제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제23차 유엔특별총회에서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사람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 보존, 충분한 사회적 보호 조치 목표를 달성하도록 만들어져야한다고 역설하였다.

2005년 세계정상회의(2005 World Summit)에서는 각국 지도자들은 양성평등 증진과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퇴치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이어 2008년 도하선언(Doha Declaration)에서 각국 정상들과 고위급 대표인사들은 양성평등은 기본 인권이자, 근본적인 가치와 사회 정의이며, 경제발전, 빈곤감소, 환경지속가능성과 발전효율성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유엔여성지위위원회는 양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재정조달에 대한 결정을 2008년에 채택하였다. 여성지위위원회는 여성과 여아에 대한 재정지원은 경제발전, 새천년개발목표 달성과 빈곤퇴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여성지위위원회는 여성들이 전지구화로 인한 부정적인 사회적, 경제적 영향에 대응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빈곤퇴치전략들을 수립할 것을 각 정부에 촉구하였다.

1) 국가차원의 이행 현황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기한이 가까워짐에 따라 그 목표 중의 하나인 절대빈곤 퇴치에도 많은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의 절대빈곤층은 1990년에는 인구의 2분의 1을 차지했으나 2005년에는 인구의 4분의 1로 감소하면서 큰 진전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진전은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절대빈곤층은 1995년 39%, 2005년 19%로 감소하였으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57% (1995년)에서 51% (2005년) 로 뚜렷한 진전이 없었다.

일부 국가의 보고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보다 빈곤에 처하게 될 위험이 높으며 특히 여성 가장, 여성 농업인, 이주 여성, 여성 장애인, 여성 노인이 취약층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여성의 경제적 권한을 보장하는 법이 미흡하고 하고 상속이나 토지 재산, 신용과 관련된 여성 차별적 관습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와 직종 분리, 여성실업 또한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가) 여성 빈곤층을 우선시한 정책개발과 연구의 필요성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는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경제성장에 이르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빈곤감소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데 양성평등 관점이 기존의 개발정책에 반영되면서 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양성과 연구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성평등 증진을 통한 빈곤퇴치와 관련된 공공정책 분야 연구가 활성화 되고 있다.

나) 여성 빈곤층을 위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

회원국들은 빈곤이 저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빈곤만이 아니라 교육, 건강,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발언권과 힘을 얻는데 기회를 박탈당함으로서 다각적으로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여성을 사회적으로부터 배제시키고 경제적 종속관계에 놓이게 하는 성불평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남미, 아태지역, 유럽에서는 소득지원과 보육 지원을 통해 여성과 아동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여성을 사회적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숙련시킴으로써 긍정적 효과를 보인다. 특히 현물과 현금 급여는 보건 서비스와 교육의 기회를 높일 수 있었다.

식량위기로 인해 빈곤민들, 특히 여성들과 여아들이 적은 양의 음식을 섭

취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국가들에서 비타민과 무기질 섭취에 필요한 우유와 음식구매를 위한 현금을 제시하는 등의 정책 및 프로그램들을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고 있다.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에이즈(AIDS)에 감염된 노인 여성에 대한 지원과 이로 인해 부모를 잃은 아동에 대한 보육지원도 있었다.

여성의 연금과 퇴직에 대한 평등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도 취해졌다. 그 예로, 연금개혁은 여성이 보육으로 인해 취업을 잠시 중단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였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최저생계유지를 위해 연금의 수혜연령을 낮추고, 연금자의 최저소득을 정하는 등의 변화도 있었다.

다) 토지 및 기타 자원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 강화

토지와 생산적 자원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 강화는 생계유지와 빈곤감소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다. 특히 과거에는 남성 가장을 중심으로 토지가 상속되었으나, 최근에는 성 인지적(gender responsive) 관점에서 토지의 공동소유와 같은 법안이 마련되어 토지 및 주택과 관련한 여성의 소유권이 증가되었다.

물, 에너지 등과 같은 중요한 자원에 대한 접근성은 여성이 가사노동을 하는 부담을 줄이고, 그 대신에 소득창출활동과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여성의 빈곤퇴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자원 공급 확보를 위한 많은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런 노력에 의해 자원활용에 대한 여성의 발언권과 역할이 개선되고 있다.

라) 금융서비스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 강화

저축, 보험, 송금 등과 같은 금융 서비스에 대한 여성의 권한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취약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어 금융 서비스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 강화가 요구된다. 소액금융기관 (microfinance organization)에 따르면 무담보 소액대출 (micro credit)을 받은 회원 1억 5천명 중 1억 명에 달하는 회원이 첫 대출을 받은 극빈층이었으며 이중 83.4% 가 여성으로 조사되었다.

무담보 소액대출은 여성의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는 국가적 차원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양성평등 증진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

2) 격차와 향후과제

성인지적 빈곤감소를 위해서는 자원의 제한, 고용 불평등, 여성 문맹률, 시장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 제한을 아우를 수 있는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국가들의 보고에 따르면, 빈곤감소를 위해 가족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과 사회보장제도 개선, 보건서비스와 교육 규칙의 제정, 농업인을 위한 단기대출상환 유예와 개발전기금 형성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빈곤퇴치 과정에서 양성평등 정책이 많이 논의 되고 있으나 정책이 수행되는 과정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보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양성평등 증진을 통한 빈곤퇴치를 위해서는 성별분리 통계가 필요하나 많이 부족한 실정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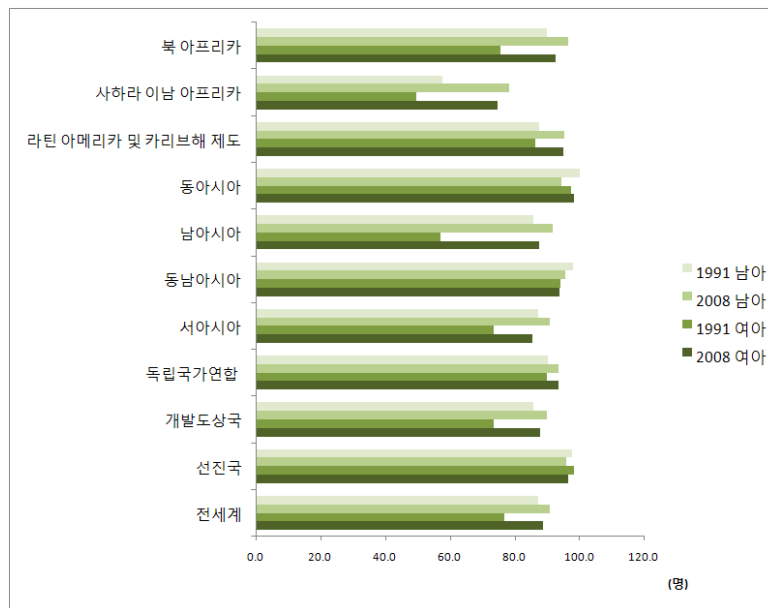
나. 여성과 교육 · 훈련

북경행동강령은 초등, 중등, 고등교육에 대한 남녀의 동등한 접근권 보장을 요청하였다. 이는 만인교육(Education For All)과 MDG 3과 5의 목표와 같은 맥락에 있다. 특히, 여성지위위원회는 교육과 훈련에서의 성별격차를 제거하고, 성 인지적 교육과 훈련을 촉진할 것을 요청하였다.

1) 국가차원의 이행 현황

지난 10년 동안 여성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은 전 세계적으로 크게 향상되었다. 초등교육에 있어서 남학생 100명당 여학생의 수가 1999년 91명에서 2008년 96명으로 증가하였고, 중등교육의 경우 남학생 100명당 여학생의 수가 1999년 88명에서 2008년 95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¹⁰⁾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동의 성별격차 역시 지난 몇 년 동안 좁혀졌으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여아의 경우 1999년 57%에서 2008년 53%로 감소하였다.¹¹⁾ 여학생의 비율이 이렇게 증가한 것은 수업료 폐지, 장학금 제공, 급식제도 마련, 더 많은 여성교사를 채용하여 안전한 학교환경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가 행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아프리카와 같은 지역의 경우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동의 66%는 아직도 여아이다.



자료: UN (2010c).

[그림 Ⅱ-1] 초등교육 연령아동 100명당 취학 아동의 수

선진국, 카리브해(Caribbean), 태평양, 중동 지역의 국가에서는 교육은 받은 여성의 수가 남성의 수를 초과하였으나, 사하라 사막 이남지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교육 받은 여성의 수가 많이 뒤쳐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0) UN (2010c). p.20.

11) 위의 자료. p.17.

가) 국가정책에서의 우선순위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가발전전략에서 교육과 훈련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성 인지적 정책과 프로그램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젠더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육부나 학교 내에 여성관련 부서를 만들어 관리함으로써 교육 분야에서 양성평등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 공식교육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한 개발전략과 이행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은, 여성이 초등, 중등,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다. 현물 지원, 높은 학습 성과에 따른 보상과 같은 경제적 지원은 여성의 학교 등록율과 더불어 출석률을 높일 수 있는 주요한 요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에서 배급된 식사를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제도(take-home food ration)를 마련함으로써 경제사정이 어려운 가구에서도 여아를 학교에 보내게 만드는 실질적 환경을 조성하였다.

여성의 조기결혼과 조기임신은 여성이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이유로 꼽히는데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출산 후의 재입학, 출산 기간 내의 출석 인정등과 같은 실용적인 정책을 고안했다.

또한 보육지원, 장학금을 포함한 재정적인 지원으로 여성의 진학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같은 재정적 지원은 실질적으로 고등교육으로의 진학률을 높일 수 있다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다) 양성평등한 교육의 촉진

성고정관념(gender stereotype)은 교육 성과와 진로 선택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직업교육과 더불어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성 인지적 교육을 통해 이를 개선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있어서도 나타나고 있다. 커리큘럼과 교재를 보완하여 성고정관념을 없애고, 교사들의 성 인지성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역시 이루어지고 있다.

라) 특정 분야에서 발생하는 성별격차에 주목

여성은 일반적으로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과 훈련에 있어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노력한 결과, 전통적으로 여성의 주류분야가 아니었던 목수, 에어컨 및 냉장고와 같은 기계 설비사와 같은 직업군에서 여성의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정보전달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전통적으로는 대학교와 같은 고등교육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던 정보전달이, 인터넷과 세미나, 여러 행사를 통해 이루어지면서 소통의 통로가 다양해졌고 그 결과, 직업 선택과 직업 훈련의 길 또한 넓어졌다.

마) 비공식 교육과 훈련에 주목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민간기관과 민간비영리단체(non-profit organization, NPO)에서 제공하는 비공식 교육과 훈련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특히 여성가구주, 이주여성, 실직한 여성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며, 출산 후 재취업하고자 하는 여성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2) 격차와 향후과제

공식적인 교육 부분에서는 여성의 교육 기회가 많이 확대되었지만, 지역 간 격차는 여전히 크게 남아있다.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남녀 간의 초등교육 등록율 격차가 크고, 여성들은 여전히 불리한 처지에 놓여있다. 또한 교육권제도 밖에 있는 75백만명의 아동 중 55%가 여아이며, 이들은 초등학교에 등록조차 해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등교육에 있어서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에서 여성의 등록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역할을 가사일과 가족을 돌보는 것으로 한정된 그 간의 전통적인 시각은 여성의 교육 기회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그리고 조기결혼과 조기임신 또한 여성이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등, 하교길이 안전하지 못한 점이 여성들이 교육받을 기회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희롱과 같은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성별직종분리와 관련한 연구는 계속되어 왔으나 이는 여성이 남성의 주류 분야에 진출하는 연구로 국한되어 왔다. 직종분리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남성이 여성의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여성 교육률이 높아졌다하더라도 이것이 양성평등한 고용으로서는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직종분리와 더불어 임금간의 격차 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학업성취가 노동시장에서도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학업과 노동시장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확충되어야 한다.

다. 여성과 건강

북경행동강령과 제23차 유엔총회의 결과문서가 채택된 이후, 여성이 전생애를 걸쳐 최상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수준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어 왔다. MDG 5의 모성건강증진, MDG 6의 HIV/AIDS,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 퇴치, MDG 4의 유아사망률감소는 국제사회의 이러한 노력을 나타낸 결과이다. 2005년 개최된 사회개발세계정상회의(2005 World Summit on Social Development)에서 양성평등을 증진하고 성 차별을 철폐 할 것이 논의되었는데, 그 중에서 재생산 건강(reproductive health) 분야에 대한 남녀의 동등한 접근성이 중점사항이었다. 2006년 HIV/AIDS에 대한 정치선언(2006 Political Declaration on HIV/AIDS)에서, 회원국들은 보건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성 차별을 없애고, 여성이 에이즈 감염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데 동의하였다. 2009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성 인지적인 보건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1) 국가차원의 이행 현황

가) 건강 관련 정책에서 성 인지적 관점을 주류화, 여성을 위한 조치 확대

성 인지적인 관점은 여성의 건강문제를 심화하여 다루는데 중요한 틀을 제공한다. 많은 국가들이 법률 제정과 정책, 전략, 행동 계획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여성이 건강 서비스를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률을 강화하거나, 가족계획이나 임신 전후 여성의 건강 관리를 위한 법을 마련한 것이 그 예들이다.

많은 국가에서 여성의 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정책들이 실행에 옮겨졌다. 일부 국가에서는 모성 건강 증진과 모성 사망률 감소에 중점을 두었으며, 다른 일부 국가에서는 임신과 출산에 의한 산부인과적 질병(obstetric fistula)을 감소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이행하였다. 조기임신과 성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영양개선과 모유수유의 건강상 이로운 점에 대하여 알리고, 권장하기 위한 단계적 노력들이 있었다.

HIV/AIDS 관련 정책에서 예방과 치료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그 세부사항에는 상담, 자가진단, 모-자 전염, 적절한 피임기구 사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여성의 약물과 알코올의 남용이 증가함에 따라, 예방, 상담, 치료에 대한 행동계획들이 추진되었으며,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섭식장애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 계획들이 채택되었다.

제도적 장치들은 건강분야에서의 성 주류화를 촉진 및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중에게 여성의 건강에 대한 정보 제공을 돕는 기구들이 설치되었으며, 건강정책 개발을 위하여 대학들과의 제휴를 통한 여성 건강에 대한 연구들이 착수되었다. 여성과 남성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적절한 예산 할당을 위해서 양성평등 관점에서 건강 예산이 검토되었다. 여러 국가들에서 산부인과 개설과 여성건강 진료소 확장과 함께, 암과 HIV 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월등히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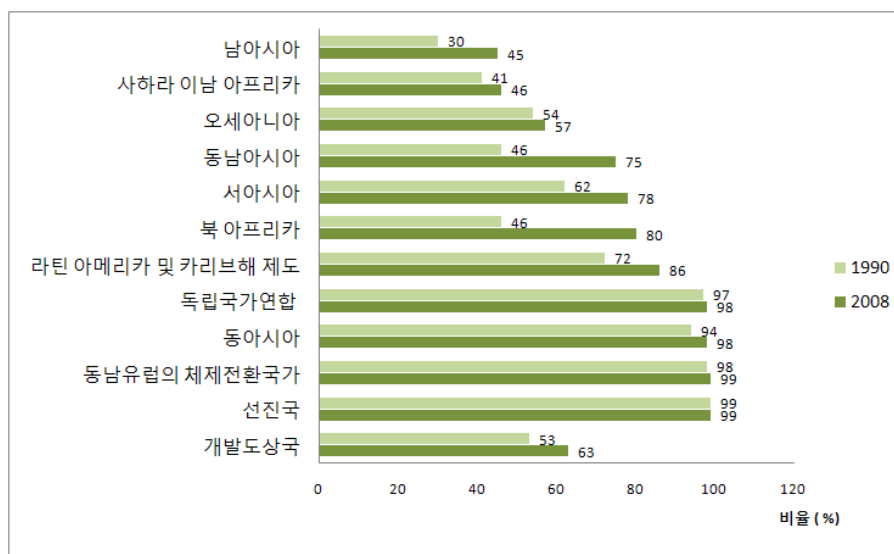
또한 성별분리통계와 성 인지적 지표들을 생성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통계자료들은 여성과 건강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근거 자료

로 활용된다.

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 강화

의료 서비스의 범위, 질적 향상, 전문 의료인력의 역량강화는 여성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데 우선순위가 되는 항목들이다.

여성 의료서비스 기반 확충은 병·의료원 건설 및 확대, 의료 장비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몇 국가에서는 특히 지방의 여성의료 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민관협력이 있었는데, 이동 진료소가 그 예이다. 최근 들어, 여성의 비만 혹은 흡연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국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화된 의료 시설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료: UN (2010c).

[그림 II-2] 전문보건인력에 의한 출산비율 (2000-2008)

건강 서비스의 범위 및 질 향상을 위해서 가족계획 서비스의 확충뿐만 아니라 가정 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여성을 위한 상담소가 설치되고 있으며, 이에 배정된 의료 인력의 수가 점차 증가되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

다) 여성의 재생산 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

매년 536,000명의 여성 및 여아가 임신 중 혹은 출산 후 6주 이내에 합병증으로 사망한다. 그 중의 대부분은 개발도상국의 의료상의 문제로 인한 것이며, 이는 거의 예방 및 치유가 가능하다. 선진국에서 100,000명 당 모성사망인구는 9명인데 반하여, 개발도상국은 450명에 달한다. 이 중 14개국의 100,000명당 모성사망인구는 최소 1,000명이며, 모성 사망의 절반은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과 남아시아에서 발생하고 있다.

모성 건강증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증대와 함께 임신을 비롯한, 산전, 출산, 산후 관리에 대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빈혈을 예방하거나 임신기간 중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약물들이 여성들에게 제공되었으며, 산과와 산부인과 의사를 포함한 출산 전문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다.

정부는 피임도구의 가격을 낮추거나 무료로 배부하고, 피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가족계획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였다. 또한, 정부는 청소년 임신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그 발생 수치를 억제하기 위해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특히 젊은 여성들의 낙태율이 증대되었다. 이 밖에도 불임이 재생산 건강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점이라는 것이 인식되면서 불임 치료에 대한 정부의 보조가 법으로 제정된 경우도 있다. 많은 국가들에서 HIV예방을 위한 정보제공에 힘쓰고 있다. 그 중에서도, 모-자 전염, 자가 진단, 상담소 확대 설치 등에 초점을 두었다.

라) 여성의 비전염성(non-communicable) 질병에 대한 관심 제고

여성과 여아에게 비전염성 질병이 증가하고 있어 회원국들은 이런 질병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비전염성 질병의 원인과,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예방 조치하기 위한 연구에 배정되는 예산을 점차 늘리는 추세이다.

유방암 다음으로 가장 흔한 암인 자궁암에 대한 조기 검사와 치료를 개

선하기위한 조치들이 착수되었다. 자궁경부암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향상되었고 일부 연령의 여성층에게 자궁암 검사의 비용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일부 국가들에서는 9세 이상의 여아에게 자궁암 예방을 위한 유두종 백신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암에 대한 조기 예방이 정보 알리기 캠페인을 통해서 활성화되고 있다.

퇴행성 골다공증과 같은 비전염성 질병이 선진국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 노년 여성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연구조사가 실시되었다. 많은 국가에서 건강한 라이프스타일과 질병 예방에 대한 상담을 통해 여성의 갱년기와 류마티스에 대처하고 있다. 흡연 관련된 질병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흡연예방 프로그램 등도 확대 실시되고 있다.

2) 격차와 향후과제

여성의 건강 증진에 있어서 국가 간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몇몇 국가의 건강보건시스템에서 비형평성(inequity)이 나타나고 있어, 여성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회 계층화를 야기한다. 회원국들은 특정 지역의 건강증진, 그 중에서도 기반확충, 역량 배양(capacity building), 재정지원 등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고르지 못하여 앞으로 재정비가 필수적이다.

MDG 5는 다른 목표들보다도 그 성과가 가장 미흡한 분야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대식 피임기구의 확산, 여성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응급 조산 조치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만성질환, 정신질환, 흡연으로 인한 질병, 노화로 인한 질병에 많은 주의가 기울여 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HIV/AIDS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책임 의식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한다. HIV/AIDS 감염 인구의 절반이 여성과 여아이며,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는 HIV 감염자의 3/4가 여성이다. 또한 여성이 HIV/AIDS 감염자들을 돌보는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도 분명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여성과 여아의 영양부족 문제도 많은 국가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게다가, 여성과 여

아에 대한 폭력은 이들의 신체적 건강만이 아니라 정신적 건강도 해치는 결과를 낳는다. 여성건강 증진을 위해 재정지원과 성별분리통계의 생산으로 성 인지적 건강정책의 개발, 평가 및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라. 여성과 폭력

북경행동강령 채택 이후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가 우선 해결 과제로 떠올랐다. 2005년 세계정상회의에서 국가들은 여성과 여아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근절시킬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2006년에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사무총장보고서(In-depth study on all forms of violence against women)가 발간되었다. 2009년에는 유엔통계위원회(the Statistical Commission)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 지표를 임시적으로 수립할 것을 결정하고(Decision 39/116), 여성의 폭력을 측정하기 위한 지침들을 구체화하려고 노력하였다.

분쟁지역에서 성폭력을 근절하고, 국가재건에 여성의 참여 촉진하기 위해, 유엔 안보이사회의(the UN Security Council)에서 2000년 결의안 1325(2000), 결의안 1888(2009), 결의안 1889(2009)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성과에 추진력을 가세하여, 2008년, 유엔 사무총장은 2015년까지 시행되는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단결”이라는 전 세계적인 캠페인인 UNiTE를 시작하였다. 각 정부, 시민사회, 여성단체, 대중매체와 UN 등이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을 철폐하기 위해서 이 캠페인을 조직하였다. 유엔 총회의 요청에 따라 사무총장은 회원국들의 여성폭력 근절 조치에 대한 정보를 집대성하는 “one-stop” 사이트를 개설하였다.(www.un.org/esa/vawdatagbase)

1) 국가차원의 이행 현황

가) 더욱 포괄적이고 강화된 법, 정책, 그리고 제도적 틀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틀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근본이 된다. 최근 특히 남미 및 카리브해 지역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범죄로 간주하고 가해자에 대한 기소와 처벌을 촉진하는 노력을 경주할 뿐 아니라, 희생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의무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마련은 인신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부속 의정서(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에 근간을 두고 있다.

2005년 이후 많은 회원국들이 과거의 경험을 숙지하여 형법과 더불어 가정폭력, 성폭력, 인신매매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명료화하는 법을 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스토킹과 혼인관계에서 강간을 범죄화하였고, 노동법, 공무원법, 양성평등 법(gender equality law) 등에서 성희롱(sexual harassment)을 금지하였다. 민법에서 혼인관계를 비롯한 다른 관계에서 강간을 정의하는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아프리카에서 강간은 신체적으로 강제적인 힘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의 여부에 의해 정의되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의 이행 현황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여성할례와 같은 위험한 행동들을 규제하는 제도의 법제화이다.

공무원들의 인식전환과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필요한 적절한 조치 없이는 여성에 대한 폭력관련 법률은 완전히 이행될 수 없다. 2005년 일부 국가들은 특별 법원을 세우고 전문 검사들과 전문 경찰들을 고용하여 가정 폭력과 성폭력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한편,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차원과 지역적 차원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나) 여성 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의 확대 및 서비스의 질 향상

여성 폭력 피해자들은 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신체적 상해를 치료받고, 재발생할 수 있는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지원이 절실하다. 정부, 시민사회, UN 기구들의 협력과 지원으로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가 늘어났으며, 정부의 재정 지원도 상당히 증가되었다.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를 비롯하여 피해자의 신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시설들이 늘어났으며, 법률 상담을 위한 전문 상담기관과 핫라인과 같은 피해 여성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증가하였다. 또한 점점 더 많은 회원국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피해자 상담기관에 파견될 전문 인력의 양

성을 지원하고 있다.

다) 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stakeholder)의 참여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국가들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 뿐 아니라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성불평등과 여성 폭력을 묵인하는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회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미디어 대표, 민간 부문, 시민사회, 종교와 지역공동체, 저명 인사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치계의 의지 또한 증가하고 있다.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위한 캠페인으로 많이 나타났다. 유럽지역에서는 가정폭력에 중점을 둔 캠페인들이,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캠페인들이 발견되었다. 또한 피해자 혹은 취약계층 여성의 인권에 대한 의식을 향상하기 위해서 출판물들과 웹사이트를 매개로 하는 다양한 정보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라) 자료 수집과 분석의 개선

정확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폭력 관련 자료들은 인구통계학적 요소들 즉, 성별, 나이, 인종에 따라서 분리되어야 한다. 경찰에 보고된 사건의 수, 병원에 입원한 사람의 수를 포함한 행정 통계들은 건강 및 형사 처벌과 관련된 조치와, 여성에 대한 폭력의 비율을 측정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연구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회원국들이 정확한 통계자료를 산출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통계학자 교육연수, 가이드라인 및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합의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2) 격차와 향후과제

전 지구적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인권 침해는 여전하다. 일

부 국가들에서는 여성폭력 피해자의 수가 증가하는 곳도 있다. 또한, 지역 원주민, 젊은 여성, 소수자(minorities), 혹은 민족소수자(ethnic minorities) 등 취약계층은 특히 더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많은 국가들에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폭력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증가하고 있지만, 명예범죄(honor crime)나 배우자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일관성이 부족하다. 여성에 대한 차별 및 여성에 대한 폭력을 보는 사회적 시각이 변화되어야만 이 폭력을 해결할 수 있다.

2차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사법조치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의 인권을 인식하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들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마. 여성과 무력분쟁

1995년 북경여성대회에서 무력분쟁 분야에서 여성 역할의 중요성을 논의했고, 이후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한 규범과 정책이 확충되기 시작했다. 2000년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된 여성, 평화, 안보에 대한 결의안 1325은 평화구축과정에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하도록 하여 국가재건과 평화구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였다. 또한 안전보장이사회는 2008년 결의안 1820과 2009년 결의안 1888과 1889을 채택하여 무력분쟁과 관련된 모든 성폭력을 근절할 것을 촉구했다.

2006년에는 유엔 평화구축위원회(the UN Peacebuilding Commission)와 평화구축기금(UN Peacebuilding Commission and Peacebuilding Fund)가 만들어져 여성 인권과 양성평등을 아우르는 평화구축활동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UN 평화구축기금은 여성의 역량강화와 양성평등을 위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데, 현재는 브룬디, 시에라리온, 기니아 비소, 중앙아프리카 공화국과 같은 국가에서 평화구축활동을 펴고 있다.

1) 국가차원의 이행 현황

가) 국제정책의 이행 강조

많은 나라들이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1325에 따라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을 마련하고 있다. 2010년 6월 현재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한 국가는 총 24개국이다.¹²⁾ 그 국가들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칠레, 코트디부아르, 덴마크, 네덜란드, 핀란드, 아이슬란드, 라이베리아,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우간다, 영국, 필리핀, 시에라리온, 르완다, 부룬디, 콩고민주공화국, 아르헨티나, 자메이카 등이다.¹³⁾ 국가행동계획을 마련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평화와 안보 그리고 여성에 관한 아젠다를 기존의 국가정책에 통합시킴으로써 국제정책에 따르고 있다.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1325와 1820의 중요성을 알리고 따르기 위한 노력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수행되지만 워크숍이나 회의등을 통한 시민사회의 참여에 의해서도 확대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는 지역 간의 협력에 의해서도 나타나는데, 유럽연합은 ‘EU 1325 파트너십’(EU 1325 Partnership)을 통해 지역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학계와 NGO, 군대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나) 평화와 안보 구축과정에 여성의 참여 확대

평화 및 안보와 관련하여 여성 참여의 중요성은 증대되었지만, 중요한 분야에 있어서 여성의 의사결정권은 여전히 제한되어있다. 이에 따라, 국가 평화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일부 국가들은 여성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양성평등을 추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채용과정에서 양성평등, 출산과 육아의 지원, 여성친화적 업무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이를 실천하고 있다.

또한 유엔의 평화유지활동과 프로젝트를 통해서 국제평화안보와 관련한 여성의 의사결정과정의 참여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11월 조사

12) 위의 사이트.

13) WomenWatch. <http://www.un.org/womenwatch/feature/wps/index.html>. 2010.8.24 검색.

결과 27개의 평화유지 활동 중 3개의 미션에서 여성이 지휘관으로, 7개의 미션에서 부지휘관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현재 8%에 그치는 평화유지 활동의 여성경찰의 비율을 2014년까지 20% 높이는 목표를 갖고 있다.

다) 성폭력과 처벌면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

무력분쟁지역에서 젠더에 기반한 폭력(gender-based violence)을 근절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안 1820(2008)과 1888(2009)을 통해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리학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07년에 기소된 시에라리온 특별재판에서는 강제결혼을 다루었으며, 이는 국제법으로 다룬 인권유린의 첫 케이스였다. 또한 젠더에 기반한 폭력을 다루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시작하였으며 강간피해자 보호법(rape laws)가 그 한 예이다. 이밖에도 젠더에 기반한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고 있으며 의료지원과 상담센터 운영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군 위안부 문제와 더불어 평화유지요원에 의한 젠더에 기반한 폭력 문제 또한 논의되고 있다.

라) 평화안보 분야에 성 인지적 관점 통합

평화안보 분야에서 양성평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성 인지적 관점의 통합으로 이 분야에서의 성 주류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엔의 산하 기구들과 회원국 시민사회, 지역의 단체들(regional organizations)은 여성의 인권 신장과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원칙을 만들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결의안 1325를 바탕으로 한 젠더에 기반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평화유지요원을 교육시키고 있다.

유럽 안보방위정책 (European Security and Defence Policy)은 동 결의안 1325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소책자로 만들어 배포함으로써 평화안보 분야의

성 주류화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젠더 분야의 전문가를 배치하였다.

2) 격차와 향후과제

평화안보 분야에서 양성평등 증진의 중요성은 부각되었으나 아직은 많이 미흡한 실정에 있다. 무엇보다도 의사결정과정에서 남녀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1992년 이래로 여성은 평화회담의 공식적인 협상대표의 7.1%를 차지해왔으며, 그 중 오직 2.1%만이 평화협정에 서명했다. 외교와 안보분야의 여성 간부를 늘리고, 평화유지 의사 결정 과정에 여성 참여를 높임으로써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무력분쟁과 관련된 성차별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다방면에서 계속 되고 있으나 여전히 성차별 폭력 피해자가 보고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법적근거와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 지원 등과 더불어 쉼터 및 생계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바. 여성과 경제

2006년 유엔의 경제사회이사회 각료선언(ministerial declaration)은, 고용 과정에 있어서 여성의 인권신장과 더불어 양성평등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천명하였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는 2009년 6월 “Recovering from the crisis: A Global Jobs Pact”를 채택하여 경제위기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특히 ILO는 경제위기를 양성평등정책을 펼 수 있는 새로운 계기로 인식하고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에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시킬 것을 요청하였다.

유엔여성지위위원회는 2008년 양성평등 증진과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여성지위위원회는 국가적 차원에서 성 인지적 평가를 시행하고 이에 따라 양성평등한 노동법과 노동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글로벌 경제위기는 여러 분야에 걸쳐 양성평등 증진에 위협적인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경제위기로 인해 여성실업률이 남성실업률에 비해 높아졌으며, 특히 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 또한 경제위기의 여파는 여성의 해고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는 세계 무역량이 감소함에 따라 제조업, 수출산업에서의 일자리가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위기는 여파는 여성에게 더욱 불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사회 안전망과 사회정책을 통해 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한다.

기후변화는 곡물생산량 감소, 곡물가격 폭등으로 이어지며 이것은 수입국들 빈곤층의 식량 확보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전 세계 빈곤층의 대다수를 여성이 차지하며 그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천연자원에 크게 의존하는데 이러한 천연자원이 기후변화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수확의 감소는 그들이 먹을 식량뿐 아니라 수입량 감소로 인해 식량가격의 상승을 가져온다. 이러한 곡물가격의 상승은 빈곤층의 식량 확보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특히 여성과 여아들은 이로 인해 남성에 비해 더 큰 건강상의 문제를 겪는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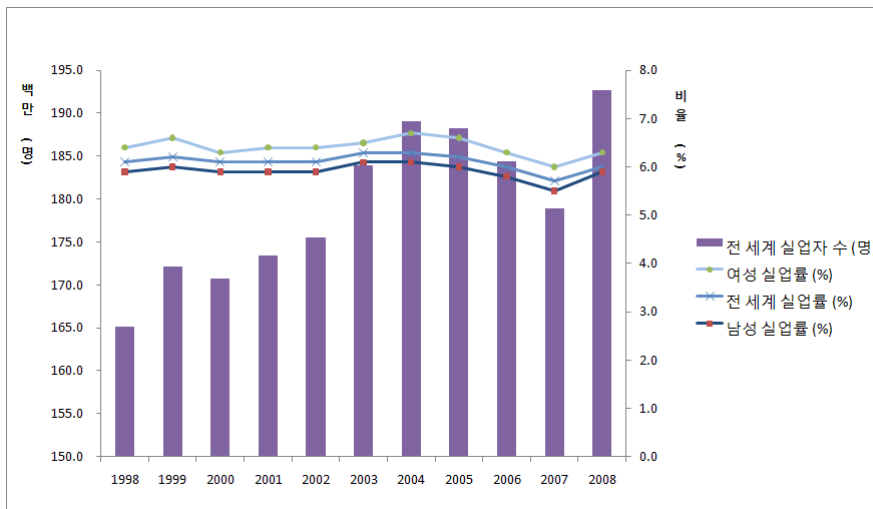
1) 국가차원의 이행 현황

여성의 고용기회는 늘어났으나 여전히 저임금에 머물거나 사회적 보호(social protection)으로부터 배제 되어 있다. 2006년 통계에 따르면 농업 분야를 제외하고, 임금근로자 중 여성이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1990년 35% 보다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8년 52.6%에 머물러 남성 경제활동 참가율 77.5%와 큰 격차를 보였다.

2008년 전 세계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경제성장률이 낮아져 취업률은 감소하고 실업률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8년 전세계 실업률은 6.0%정도로 예측되었는데, 이는 2007년보다 0.3% 증가한 것이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보면, 동 기간 여성은 6.0%에서 6.3%로, 남성은 5.5%에서 5.9%

14) UN (2010c). 위의 자료.

로, 남녀 모두의 실업률이 증가하였으며 여성실업률이 남성보다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¹⁵⁾ 간혹, 남성 실업률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도 있는데, 이는 남성에 비해 여성은 저임금 노동에도 마다하지 않을 확률이 다소 높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료: ILO (2009).

[그림 Ⅱ-3] 전 세계 실업동향 (1998-2008)

실업률만이 아니라 취업의 형태도 성불평등을 나타내는 중요한 신호이다. 1991년에서 2009년 사이 자영업 및 가족종사자의 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였다. 자영업 및 가족종사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다. 2007년 자영업자 및 가족종사자와 같이 취약한 고용(vulnerable employment) 형태에 종사하는 있는 여성의 비율이 52.7%로 남성 49.1%보다 높게 나타났다. 취약한 고용형태에 종사하는 남녀의 비율은 지역 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며,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15) ILO (2009). *Global Employment Trends for Women*. March 2009. p.36.

가)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참여 제고를 위한 정책과 법안 마련

국제노동기구에 의해 비준된 조약을 바탕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정책과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동일노동에 있어서 남녀 간 임금격차를 줄여야 하며, 모든 직업에 있어 여성의 진출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직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희롱, 출산과 육아로 인한 해고 등의 직접, 간접적 차별을 근절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성 지적 입법과 정책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 성별직종분리와 임금격차 개선

성별직종분리와 임금격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방면에서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같은 직업의 동일한 노동에 있어서 성별로 분리하여 평가하지 않음으로써 동일한 임금을 적용하는 방법은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으로써 양성평등 증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다.

노동시장에 여성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직종 분리를 없애고 남성위주의 직종에도 여성의 취업을 장려함으로써 성별간의 고정관념을 버릴 수 있도록 한다. 민간부문의 역할에도 주목해야 하는데, 양성평등 증진을 위해 자발적이고 효율적인 참여를 하는 회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안해 여성고용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무임금 노동에 종사하는 여성에 주목

보육이나 가사일과 같은 무임금노동에 있어서의 남녀 불평등은 여성의 교육과 훈련, 고용에 제약을 가져온다. 공공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무임금 노동을 재분배 할 수 있는 정책을 확충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육아와 출산 휴가 제도를 마련하는데 일부 국가에서는 육아 휴직의 대상자에 남성도 포함시킴으로써 여성과 남성 모두에

게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 다른 정책으로는 세금 환급 현물지원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육아 시설 확충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특수집단 여성이 직면한 문제점에 주목

실업여성, 재취업여성, 이주여성, 한부모, 농촌여성 등과 같이 제각기 다른 특성을 지닌 여성 취약 계층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 기업인 발굴은 빈곤 감소와 더불어 경제 개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국가들은 훈련 프로그램, 세미나, 워크숍, 무역 박람회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성공적인 여성 기업인과의 네트워크를 마련하고 멘토십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여성기업인을 장려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무담보 소액대출을 통하여 여성기업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격차와 향후과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여성은 여전히 저임금,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참여 제한, 무임금 노동에 있어서의 성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다.

임금격차는 모든 직종에 걸쳐 3%-51% 까지 나타나며 평균은 17%로 조사되었다. 임금격차의 가장 큰 이유는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 낮은 교육 수준과 기술력, 파트타임 근무, 무임금 노동에 있어서의 불평등으로 조사되었다.

근로환경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희롱, 출산과 육아에 따른 해고와 같은 문제들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자원 분배나 은행신용의 접근성에 있어 여성 기업인에게는 여전히 제약이 따르는데 이는 여성의 비즈니스 능력을 저평가한 고정관념에서 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은 여성의 고용 기회를 늘릴 수 있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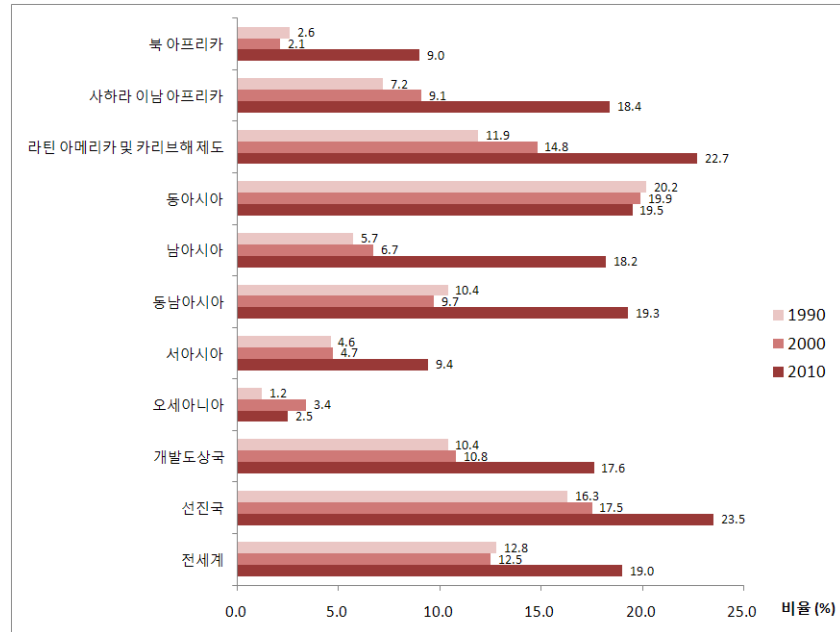
나 육아 시설이 확충되고 탄력적인 근무환경 보충되지 않으면 실질적 고용과 지속적 경제 활동으로 이어지기 힘들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성인지적 정책을 통해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양성평등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성별분리통계의 생산으로 남녀의 고용상황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 여성과 권력 및 의사결정

국제인권협약과 국제정책체제들은,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이 참여하는 것은 인권의 한 이슈로서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요소일 뿐 아니라 양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보고가 있다. MDG 3에서도 여성의원 증가를 중요한 목표로 한다. 2005년 세계정상회의에서 의사결정기구에 여성의 참여와 여성의 완전한 정치참여를 통해 양성평등을 증진하고 성차별을 철폐할 것을 결의하였다. 뒤를 이어 여성지위위원회는 2006년, 2008년, 그리고 2009년 정치, 경제, 사회분야에서의 의사결정과정에 여성 참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으며, 각 정부들도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전 분야에서 지도자와 의사결정권자로서의 여성과 여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1) 국가차원의 이행 현황

1990년 전 세계적으로 하원 또는 단원제 국회에서 여성의원은 12.8%였으나 20년이 지난 2010년 1월 현재 19%로 증가하였다. 지역적으로는 인도를 제외한 남아시아에서 여성의원 비율이 1990년 5.9%에서 2010년 20.1%로 매우 괄목할 만하게 증가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동시기 7.2%에서 18.4%로, 남미 및 카리브해 지역에서는 11.9%에서 22.7%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남·동유럽의 구 사회주의 국가권에서는 동 시기 여성 의원의 비율이 27.8%에서 18.3%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과 여성의 권한 강화를 중요시하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약화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자료: UN (2010c).

[그림 II-4] 여성 국회의원 비율추이

북경행동강령이 채택된 이후 분명히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증가하였지만, [그림 II-7]에서 보는 것과 같이 현재 지역의 평균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임계치(critical mass) 30%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하여 2015년까지 목표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0년 현재 국가 또는 정부의 수장을 맡고 있는 사람 중 여성은 단지 15명밖에 없다. 이들 국가는 라이베리아, 리투아니아, 세인트루시아, 스위스(3),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앤티가바부다, 인도, 캐나다, 코스타리카, 키르기스스탄, 핀란드, 호주이다.¹⁶⁾ 이것은 1995년에 12명이었던 것에 비해 증가한 것이다.

2008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여성장관은 전체의 16.1%로, 이들 대부분은 사회분야, 가족, 유아, 청년, 여성분야, 교육과 환경과 관련된 영역에

16)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elected_or_appointed_female_heads_of_state, 2010.8.24 검색.

중사한다. 하지만, 무역, 노동, 외교, 법에 대해서도 일부 진전을 이루었다. 공무원사회에 중간 관리자 직급에서 여성의 진출이 성장했으나, 고위관리직에서는 여전히 남성이 우세하다. 사법과 법 집행부 분야에서는 여전히 남성이 지배하고 있으며, 경찰과 군부에서도 여성은 10% 이하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관련 자료는 미흡한 실정이어서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민간부문에서는 여성의 임원직 비율이 2004년 19%에서 2009년 24%로 증가하여 여성의 임원직 진출에 있어서 진전이 나타났다.

가)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의 접근성과 참여 강화를 위한 할당제의 효과적 이행

할당제나 다른 임시적인 특별 조치는 공공 영역에서 여성의 수적 증가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할당제는 헌법과 법을 통해 실행되며, 정당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활용된다. 공공 영역에서 할당제는 10%에서 50% 사이로 적용된다. 최근에는 남녀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할당제를 남녀 모두에게 적용하여, 한 성(sex)의 점유율이 60%가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민간 부문에서 할당제는 경제적 영역에서의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

나)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증대를 위한 환경 조성

여성이 선거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자금이 융통성 있게 쓰이고 있는 것을 나타냈다. 선거인단 명부에서 여성의 인원이 증가한 정당의 경우에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으며, 일부에서는 대중연설이나 캠페인 활동, 기금 모금 활동에 대한 기술을 익히기 위한 여성의 지도력 개발 훈련에 대한 지원도 있었다.

민간 부문의 훈련 프로그램들은 리더십 교육과 모니터링으로 구성되어 여성이 고위직과 경영직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하였다. 민간부문과 정부 사이의 협력, 대화, 지식 공유는 최고 경영직 여성의 수를 늘리기 위한 노력의

한 부분이었다. 예를 들어 일부 회원국은 비즈니스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준 여성과 최고 경영권에 대하여 양성평등을 위해 노력한 회사에 대한 시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후보자들에 대한 투표자들의 신뢰와 지지를 높이기 위한 캠페인도 있었다. 여성지도자 네트워크가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여성의원들은 양성평등 안건 개발을 위한 전략과 경험을 교환하기 위한 정당이나 의회 내부에 모임을 형성하였다.

정부, 국제연구네트워크, 비정부기관들은 연구와 옹호활동을 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선거 결과, 여성의 정부기관 임명, 기업의 임원직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다) 의사결정 과정과 정책성과 간의 연계성에 대해 향상된 여성 의식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이루는데 긍정적인 요인을 인식되고 있다. 회원국들의 보고에 따르면, 여성의원들은 성인지예산과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 등과 같은 성 인지적 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 격차와 향후과제

공공영역과 정치영역의 전 분야에 걸쳐 여성의 참여율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위직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은 여전히 불평등을 겪고 있다. 회원국들은 할당제를 적용하는 등의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효율적으로 할당제를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정당과 남성 정치인들의 양성평등 증진에 대한 책무성의 결여가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막는 구조적인 문제이며, 자원과 교육에 대한 여성의 제한된 접근성도 역시 중요한 문제로 파악되고 있다. 성고정관념과 성역할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도 여성의 지도자 진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고질적인 성고정관념은 여성을 포함한 투표자들이 여성후보자들에 대한 지도력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 투표율을 저하시킨다. 일과 가정을 동시에 책임져

야하는 여성들이 갖는 어려움이 그들의 정치와 공공영역의 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다.

정치 영역 외에 다른 영역에서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많은 국가들이 직면한 과제이다. 사법권, 학계, 미디어,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는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에 대한 자료가 미비한 실정이다. 여성과 남성 각각에 대한 양적, 질적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과 분석은 전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를 증가하도록 하는 법률적, 정책적 조치를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양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촉진하는 촉매역할을 한다. 북경행동강령은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전략을 이행할 것을 정부와 기타 단체들에게 권장하였다. 성 주류화를 위해서는 각 정부들이 연령, 성별, 사회경제 및 기타 지표로 구성된 기본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 지위위원회는 양성평등을 위한 법률제정, 계획, 프로그램을 지원, 모니터링, 평가할 수 있는 국가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가장 큰 성과는 UN WOMEN의 설립이다. 동 기구는 역량강화를 위한 UN 여성통합기구이며 유엔총회 결의안 64/289(2010년 7월), 63/311(2009년 10월)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유엔체제내의 일관성 증진이라는 유엔개혁의 한 부분으로서, 기존에 양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했던 여성지위향상국(DAW), 국제여성연구훈련원(INSTRAW), 사무총장 여성특별 보좌관실(OSAGI), 여성개발기금(UNIFEM)이 UN WOMEN이라는 단일 기구로 통합되었다. 2006년부터 논의되어 왔던 이 기구는 2011년 1월에 출범할 예정이며, 기존 4개 기구의 예산 규모의 합인 2억5천만 달러의 2배에 달하는 5억 달러가 UN WOMEN의 예산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통합 기구의 주요목표 3가지로는 첫째, 유엔여성지위위원회와 같은 정부 간 기구들이 정책이나 국제적 기준, 규범을 만들 수 있도록 돕고, 두 번

째로 회원국들에게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시민 사회와의 효과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회원국들이 이러한 국제적 규범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우며, 마지막으로 UN체제 전반에 걸친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양성평등이라는 국제적 합의사항을 UN이 계속해서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UN헌장에 명시되어 있는 양성평등이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UN WOMEN은 특히 여성과 여아에 가해지는 폭력의 근절, 여성의 역량 강화, 개발·인권·인도적 활동·평화 안보를 위한 동등한 협력자이자 수혜자로서 남녀평등을 달성이라는 3가지 이슈에 집중할 것이다.

1) 국가차원의 이행 현황

가) 양성평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강화

여성부나 기회평등위원회와 같은 국가 기구는 양성평등을 증진하는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은 점차 그 형태와 역할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양성평등에 대한 책무성도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 기구들은 여전히 정치적 지원을 완전하게 받지 못하고 있다.

양성평등을 위한 국가 기구의 주요 기능은 양성평등을 위한 계획, 전략, 프로그램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법률 등을 제정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양성평등을 위한 국가기구는 북경행동강령과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관한 내용을 다루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여성의 인권, 고용, 노동시장의 여성의 접근을 높이기 위한 일과 가정의 양립, 여성에 대한 폭력, 인신매매, 양성평등을 위한 남성과 남아의 역할, 에이즈 예방 등의 특정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들 국가 기구는 인적자원과 재정 지원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¹⁷⁾ 일부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공적개발원조에 의존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양성평등 증진과 여성과 여아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국가기구들이 생겨났다. 많은 국가에서 양성평등위원회, 차별철폐 재

17) UN Women, <http://www.unwomen.org/facts-figures/#institutional>. 2010.8.24 검색.

판소, 행정감찰관(ombudsperson)과 같은 기구를 설치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 문제를 다루고 있다. 양성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기구들이 탈중앙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많은 국가에서 부처 안에 여성정책담당관(gender focal point)을 두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부처 간의 태스크 포스팀(task forces)을 구성하거나 공식 또는 비공식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양성평등 전문가들이 정보와 경험을 교환하고 있다.

법률 제정의 효과를 평가하거나 국회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관련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활동들이 증가하고 있다. 각 국의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국가 기구들은 양성평등의 증진을 위해서는 여성 단체들과의 협조가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많은 국가들은 여성 단체와의 협력하여 양성평등정책 및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하고 있다.

나) 성 주류화를 위한 지원

2005년 이후로 성 주류화 전략이 재차 강조되면서, 많은 국가들에서 모든 정책에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하고 있다. 성 주류화의 도구인 성별영향평가 매뉴얼과 성 인지 예산 매뉴얼 등의 활용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각 부처의 직원들에 대한 성 인지도교육, 워크숍, 세미나 등이 제공되었으나, 이들 교육의 질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적다.

다) 성별분리 통계와 성 인지적 지표 수집 노력

정책개발, 모니터링, 평가를 위한 성별분리 통계와 성 인지적 지표 수집에 대한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 MDGs 역시 성별분리통계의 권장하고 있다. 교육과 고용을 포함한 많은 분야에서는 성별로 분리된 통계의 수집이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빈곤과 여성에 대한 폭력 등의 분야에서 아직도 자료들이 부족하다. 여성에 대한 폭력관련 지표의 잠정적 수립에 대한 유엔통계위원회의 승인은 성별분리통계 구축의 중요한 진전이다. 매 5년마다 발행되는 유엔의 “세계의 여성: 추세와 통계(the World's Women: Trends and Statistics)”는 양성평등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2) 격차와 향후과제

많은 국가에서 양성평등을 위한 국가 기구는 정치적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중요 정책과 의사결정과정에서 대하여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이는 성차별 철폐의 진전을 지체시킨다. 한 국가 내에서도 점차적으로 양성평등의 증진을 위한 국가 기구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이들 기구 간에 서로에 기능과 협력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심지어 양성평등에 대한 정치적인 지지가 강한 국가에서조차도 인적 자원과 재정 지원이 부족하다. 많은 국가들에서 성분석을 하고 효과적으로 성 인지적 관점을 정책, 계획,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역량이 부족하다. 정보 수집에 있어서도 방법론에 대한 지식 부족과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즉, 양성평등과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해 통계 자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통계자료를 아직까지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자. 여성인권

1995년 이후로 여성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강화되었다.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여성의 인권증진을 위한 초석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2009년은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는 노력의 중추 역할을 하는 여성차별철폐협약 채택 30주년을 기념한 해였다. 2010년 6월 현재 186개의 국가들이 이 협약에 비준하였고 99개의 국가들은 선택의정서에 비준하였다. 2006년 설립된 유엔인권이사회는 여성의 인권 보호와 추진을 위한 활동을 증강해왔다. 여성인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국제인권협약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새천년선언(2000)과 2005 세계정상회의 결과 문서에서도 양성평등 증진과 여성의 역량강화가 각 국가들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책무로 포함되어 있다. 2006년 설립된 유엔인권이사회(the Human Rights Council)는 여성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활동을 증강해왔다. 인권이사회는 각 국가들의 여성인권의 현황을 검토하고 인권 보호를 위한 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1) 국가차원의 이행 현황

가) 여성의 법적 평등에 대한 증대된 관심

여성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적 틀을 만드는 것은,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누리도록 하는 중요한 초석이 된다. 양성평등 원칙과 성차별 금지의 헌법과 기회의 평등과 양성평등 법률 제정에서 점점 더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정치와 공공 영역에서 양성평등의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임시적인 특별조치를 도입하였다.

국가들은 실질적으로 여성 폭력에 대하여 형법과 형사상의 조치와 관련한 법의 개혁에 중점을 두었다. 이와 더불어 직장에서의 차별을 다루는 법의 채택에도 중점을 두었다. 많은 국가에서 새로운 노동법 또는 고용평등법의 실행으로, 동일가치 동일노동, 남녀에게 평등한 연금권 및 사회적 급여권, 단체 교섭에의 여성 참여 등을 보장되었다. 또한 성희롱을 금지하여 직장에서의 차별을 금지하였다.

더 많은 국가들이 사적 영역인 가족 내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민으로서의, 가족으로서의, 개인으로서의 지위를 규정한 관련된 법을 수정하고 있다. 몇몇 국가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혼인할 수 있는 연령에 차이를 둔 법 규정을 제거하였으며, 이혼 시에도 남녀가 같은 책임과 권리를 갖도록 하는 법 규정을 채택하였다. 아시아 서부지역에서는 이혼 시 여성에게 이혼 수당(alimony)을 제공하는 법을 만들었으며, 아프리카에서는 여성이 재산을 활용하고, 소유하고, 상속받을 수 있도록 법적 개정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몇몇 국가에서는 동성이 혼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장애인, 원주민, 피난민, 노인, 한부모가족 등의 특정 그룹에 속한 여성들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법 개혁을 다루는 위원회와 기관들이 설립되고 국제인권법을 채택하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법의 유효성을 검토하는 보고서들이 법률 제정을 하는데 더욱더 고려되고 있다.

나) 여성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법 앞의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법들이 실효성을 가져야한다. 여성의 인

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기타 조치 등에 의해 여성의 권리를 향상하기 위한 법적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여성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행동계획과 전략을 수립하였다.

국가들은 법, 정책,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국가 인권 기구들의 여성 인권에 대한 책임도 강화되었다. 여성 인권알리기 캠페인이나 촉진 프로그램들을 실행하였으며 법 구체 프로그램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만 사항들을 처리하는 담당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사법부 또한 여성의 권리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점점 더 많은 법원들은 여성차별철폐협약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여러 국가들에서 여성의 인권을 지지하는 법 조직이 형성되고 있다.

여아와 남아에게 여성 인권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여성 인권 침해를 하는 사회적 행동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주요한 방법이다. 많은 국가에서 여성 인권을 포함한 인권 교육을 학교, 대학, 교사 연수훈련에서 실시되고 있다. 또한 공무원들과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의식을 환기시키고 차별에 대한 처벌을 알리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더욱 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가정과 사회에서 만연한 성 고정관념을 없애기 위한 캠페인은 접근성이 뛰어난 정보수단을 이용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방면에서의 협력이 여성 인권 추진을 위한 통합적이고 일관적인 조치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정부와 비정부기관들의 협력이 국가와 지역차원에서 훈련과 인식높이기 활동에서 증가하였다. 시민사회에서 양자, 다자적인 프로젝트도 활발하였다.

2) 격차와 향후과제

법적 평등과 실제적 평등이 동시에 실현한 국가는 지금까지 하나도 없다. 여성들은 수없이 많은 형태의 차별과 자원에 대한 제한된 접근성 때문에 법과 현실에서 수난을 겪고 있다. 여성의 인권을 위한 국가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법안들이 미결정에 놓여있다. 법적 개혁을 이룬 후에도 관련 공무원들은 바뀐 법이나 의무사항에 대하여 모르고 있고, 당사자인

여성들도 정보 부족으로 인해 모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국가의 조치들은 종종 강령과 협약 이행사항들을 완전히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적절한 감시 체계도 제공되고 있지 않다.

차. 여성과 미디어

북경행동강령은 미디어가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지한다. 즉, 첫째, 미디어와 새로운 정보 기술을 통해 여성의 의사발언권을 강화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를 제고하고 둘째, 여성에 대한 미디어의 균형적인 시각을 세우겠다는 전략 목표를 가지고 있다. 제23차 유엔 특별총회는 여성과 남성을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의 이용자와 생산자로서 ICT에 대한 균등한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미디어와 정보 산업은 성고정관념을 제거하기 위한 규정과 지침을 만들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권장하였다. 또한 여성의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ICT를 통해 양성평등, 개발, 평화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여성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육성하도록 제안하였다.

2003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된 정보화 사회에 대한 세계정상회의(the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를 통해 국제사회는 양성평등 증진에 있어서 미디어와 ICT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05년 이후 유엔총회는 미디어와 ICT가 양성평등과 여성 역량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결의안 62/136 채택하여 농촌여성과 여아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ICT 접근성과 ICT 개발과정에 이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모범사례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여성지위위원회는 여성의 ICT에 대한 차별적인 접근성이 여성의 지위 향상을 가능하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데 큰 제약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회원국 정부를 포함한 여러 관계기관들이 여성의 ICT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1) 국가차원의 이행 현황

미디어와 ICT의 성장과 함께 여성의 참여도 현저히 증가하였다. 하지만 남성의 참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며, 이들 분야에서 성고정관념은 아직도 만연하고 있다. 2005년 북경행동강령 이행 10주년 평가 이후, 국가들은 미디어와 ICT를 통해 성차별을 없애려는 노력을 강화하였다.

가) 여성의 미디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

2005년 글로벌 미디어 모니터 프로젝트(the Global Media Monitoring Project)가 76개국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미디어에서 여성의 고용률, 특히 의사결정자를 할 수 있는 고위직에는 여성의 고용률이 현저히 낮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의 몇몇 분야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예를 들면, 여성 기자 비율이 1995년 28%에서 2005년 38%를 증가하였다.

회원국들의 보고에 따르면, 특히 아프리카에서 미디어 분야의 여성 고용 비율이 증가하였고, 많은 국가들에서 출판 미디어와 텔레비전 저널리스트들의 고용비율이 55%에서 67%로 증가하였다. 여성의 미디어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많은 국가들이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에서 여성의 참여를 저해하는 법안을 없애고, 양성평등한 법률과 정책개발에 힘썼다.

나) 미디어 관계자들의 양성평등 인식 확산

양성평등과 여성의 권리에 대한 미디어 관계자들의 의식은 미디어에서 여성에 관련된 이슈가 다루어지도록 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준다. 미디어 전 영역에 걸쳐 젠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대학들과 교육기관들을 활용하여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미디어 관련자들 사이에 양성평등 이슈가 공론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부 기관들은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단체들과 지역 미디어와 협력하고 있다. 양성평등과 여성의 권리 신장에 기여한 감독들이나 저

널리스트들에게 상을 주는 것은 양성평등 의식을 강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다) 여성의 미디어와 ICT 사용을 보편화시키려는 노력

휴대전화의 사용이 여성들이 중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은 휴대폰 사용을 통해서 은행 서비스, 농작물의 시장가격 조사, 농사에 대한 정보, 건강, 에이즈, 그 밖의 여러 분야의 정보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는 데, 이는 여성을 역량 강화에 일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CT 기술을 익히는 것 또한 여성이 취업 시 경쟁력을 갖추고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여성들은 ICT 교육 프로그램들은 통해 정보 기술 장비나 컴퓨터에 대한 기술을 익히고, ICT 발전에 따른 시장변화에 맞추어 경쟁력을 갖도록 돕고 있다.

라) 성고정관념에 대한 대처 방안

미디어가 사회 전반에서 걸쳐 있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없애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여러 단체들이 미디어에서의 젠더이슈에 관한 연구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정부차원에서는 미디어에서 여성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성차별적인 홍보를 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법률적 제재를 가하였다. 또한 방송인들을 상대로 여성의 신체부위를 언급하는 것에 관한 지침을 세우거나 여성이 참여하는 스포츠의 보도 비중을 높이는 등의 노력도 나타났다. 정부들은 또한 여성차별 또는 성고정관념에 대하여 미디어를 감시하였으며, 이런 활동은 비정부기관과 시민단체들과 협력이 있었다. 젊은 층을 대상으로 미디어에서 드러나는 성고정관념에 대하여 알리고, 성평등 사회의 이점을 강조하는 교육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다. 또한 저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성 인지적인 인터뷰나 글쓰기 기술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과 젠더이슈에 관한 성 인지적 보도에 대한 프로그램도 있었다.

마) 여성과 여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주제에 대한 관심 제고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에서 여성과 여아의 역량강화와 양성평등에 대한 보도를 늘리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이들 중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룬 것은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를 대중매체가 중점 보도한 것이다. 대중매체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과 성착탈대를 다루는 온라인 상담 서비스와 여성과 여아 인신매매의 위험을 알리는 핫라인이 점차적으로 개설됨으로써 양성평등을 확산시키는데 ICT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 격차와 향후과제

성 분석적인 자료가 부재하는 상황에서 여성의 미디어와 ICT 참여 수준을 명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렵다. 미디어에서 여성의 고용은 늘었지만 의사결정 지위는 남성과 대등하지 못한 실정이다. 성 인지적인 정책이 마련되지 않은 이유로 미디어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의 고용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 게다가, 특히 농촌지역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는 ICT가 보편화된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 접근의 어려움, 언어장벽, 문맹 등의 제약으로 인해 여성이 평등한 접근성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인터넷이나 정보 기술 습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여러 국가들에서 양성평등 이슈에 대한 보도가 제한적이며 뉴스 보도가 남성 지배적인 성향을 가지고 여성에 대하여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 ICT가 발전하고 보편화됨으로써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확산되고 있다. ICT 영역에서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에 대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카. 여성과 환경

북경행동강령은 양성평등과 지속가능한 발전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밝혔다. 북경행동강령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에 성 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고, 환경관련 문제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높이고, 지역, 국가, 국제적 차원에서 개발과 환경정책들이 어떻게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하거나 이런 기구가 이미 있다는 그 역할을 강화를 요청하였다.

2008년 여성지위위원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성 중립적이 아닌, 성 인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기후변화를 새롭게 도출된 이슈(emerging issue)로 보고, 이 이슈에 초점을 둘 것을 결정하였다.

여성들은 기후변화와 재앙에 대응하는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지역 공동체 발전과 천연자원 관리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여성들은 환경정책 결정과정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그들의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1) 국가차원의 이행 현황

양성평등과 지속가능한 발전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구체적인 이행 성과에 대하여 보고하지 않았다. 다음은 지역별로 큰 격차를 나타내는 국가들의 전반적인 이행 진행 현황이다.

가) 환경 분야에서 성 주류화하기 위한 기구의 강화

환경, 농업, 물, 임업 등과 같은 관련된 부처들은 여성 담당 조직과 양성평등을 위한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하였다. 일부 국가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하고, 교육 프로그램과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의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였다.

나) 환경 문제의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 증대

환경부의 장관이 여성이 되는 사례가 많은 국가들에서 나타났다. 또한 시민사회 단체에서 여성의 참여와 기여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국가들은 환경과 여성 단체들과의 정규 모임을 통해 양성평등 관점을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 성 인지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정책과 프로그램을 위한 여성의 역량 강화

유엔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10년(the United Nations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관련된 정부 부처들은 환경, 농업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성 인지적 관점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 공동체 단위의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정부들은 농업에서 환경 지속성과 천연 자원 관리에 대한 여성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무담보 소액 대출 등을 통해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라) 천연자원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요인

정부 부처들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들을 여성들에게 알리고 있다. 농촌 여성들은 습득한 기술을 통해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환경 친화적인 농업 활동과 경영을 하고 있다.

해양지역의 여성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실업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어, 이러한 지역들에 대한 정부의 특별한 보호 관리가 필요하다. 여성들은 또한 불평등한 자원의 접근성 때문에 청정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몇몇 국가에서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정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대체 에너지 기술이 여성이 가장인 가구를 포함한 일부 농촌 가구에 제공되고 있다.

마)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처

천연 자원에 의지하는 생활하는 지역에서 여성들은 빈곤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농촌 여성들은 가정의 물 공급과 조리과 난방을 위한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 가뭄이나 홍수, 그리고 산림벌채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성들이 자원에 대하여 접근이 제한되고 있고, 문제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에 더욱 노출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들은 점차 성 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여성들, 특히 빈곤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연재해관리 정책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들은 비상사태의 경우 위생, 물 관리, 성폭력 예방에 대한 여성의 재난 대처 능력과 재난 극복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 내용을 담고 있다.

2) 격차와 향후과제

여전히 많은 국가들은 성 인지적 관점에서 천연 자원 관리를 하고 있지 못할 뿐이 아니라, 성 인지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환경에 대한 성 분석적인 연구들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점들은 여성이 환경과 관련된 문제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데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농업과 식량 생산에서의 여성의 중심적인 역할이 여러 불평등한 조건들 때문에 제한되고 있다. 이 상황은 식량 안보와 지속가능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엔의 기후변화협약(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과 교토 의정서는 기후변화에서 나타나는 젠더의 특수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제공 시, 기후변화가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고, 성 인지적 평가와 전략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타. 여아

유엔여성지위위원회는 다양한 환경에서 여아에게 가해지는 모든 형태의 차별과 폭력에 대해 인지하고, 여성과 여아의 권리를 증진하고 이들이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각국에 촉구하였다. 여성지위위원회는 여아들이 교육과 건강을 포함한 기본 서비스를 더욱 쉽게 받을 수 있

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다. 여성지위위원회는 2007년 차별과 폭력에 대한 근절에 대한 합의안(agreed conclusions)에서 여아의 강제조기결혼 및 여성할례 근절과, 에이즈 등에 대한 광범위한 지침서를 제공하였다.

1) 국가차원의 이행 현황

정부들은 여아 폭력 근절과 여아교육에 역점하고 환경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적 목표를 정하고 달성하는데 다양한 영역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가) 여아의 권리와 복지를 위한 강력한 법률과 정책 구조 확립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서 조명된 아동들의 권리와 복지 보호의 중요성에 따라 법률과 정책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여아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보고가 미흡한 실정이다.

몇몇 국가들은 여아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 장기적이고 생애주기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또한 아동이 가지는 특정 권리를 인식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의 아동행동강령을 강화하거나 제정하였다. 다른 일부 국가들은 가족법을 개정하기도 하고, 아동의 노동을 금지하는 하도록 하여 법을 수정하기도 하였다. 노동법을 비롯한 아동에 관련된 새로운 법안을 채택하거나 개정하여 아동의 권리를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다급한 상황에 대해 전례 없는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수많은 형태의 폭력이 여러 다른 공동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2006년 유엔의 보고(UN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에 따라, 정부들은 이를 금지하는 폭력처벌법 또는 제도를 채택하였다.

강제조기결혼, 여아차별, 여아의 권리침해, 성적 학대와 착취를 처벌하고 제지하는데 괄목할 만한 진전이 있었다. 일부 국가들에서 강제결혼을 제지하기 위한 법이 제정되었고, 법적 혼인연령을 올리는 조치를 취하였다. 많은 국가들이 섹스관광에 연루된 외국인들을 기소할 수 있는 치외 법률을

비롯한 여아포르노, 여아의 성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2005년 이래로 수많은 국가들이 여성과 관련된 법률들을 개선해온 노력에 더하여, 여아에 대한 폭력에 대한 국가들과 관련기관들의 연구과 자료 제공이 여아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과 이행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나) 여아를 비롯한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프로그램과 이에 따른 활동들은 여아를 비롯한 아동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과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초·중등 교육에서 양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국제적인 노력들에 의하여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수업료 면제, 무료 책과 급식 등의 보급이 빈곤가정에서 여아의 입학률과 학업유지율을 높이는데 큰 기여하였다. 또한 일부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빈곤층의 여아, 농촌에 거주하는 여아, 원주민 여아의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여아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려는 노력과 함께, 십대 임신과 성병 전염을 예방하는 성 교육과 가족생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교과과목에 접목시키거나 특별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루는 경우가 늘고 있다. 생식 건강에 대한 정보는 학습 자료와 온라인상의 청소년 클리닉의 정보매개체를 통해 전달되고 있다. 십대의 임신은, 여성이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주요 원인이므로 남아와 여아에게 임신에 대한 교육 캠페인과 더불어 임신한 여성의 학업 유지를 돕는 장학 혜택과 육아 보육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국가들은 아동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교사, 공무원, 그리고 군부 인사들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회의를 활용하여 프로그램과 활동들을 진행해왔다. 또한 여아들의 학업을 유지시키고,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된 캠페인들도 있었다.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십대 임신과 성병 예방을 위한 캠페인, 남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과 인터넷 성폭력 예방 프로젝트 그리고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 결혼 주제 교육이 있었다.

상담, 치료, 핫라인, 위기센터, 의료지원, 보호소시설을 통한 다양한 범위의 지원 서비스가 폭력 피해 아동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특별한 예들로 성 착취 피해아동을 위한 상담 지원, 숙식 제공, 사회 재활 프로그램과 강제 결혼의 위협을 받는 여아들을 위한 같은 또래를 통한 일대일 상담, 익명의 온라인 서비스, 학교 상담이 있었고 음핵 절개 피해자를 위한 의료 지원이 있었다.

다) 여아의 권리 증진을 위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력

공공 기관들, 사법부, 지역 단체, 비정부기관들, 미디어 등 그 밖의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협력하여 아동과 여아의 권리를 알리고, 폭력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다양한 형태의 협력이 법과 정책 이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 예들로 아동 노동 근절을 위하여 정부 인사들과 민간 부문, 무역 조합, 비정부기관, 종교 단체들이 협력하였고, 강제결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 이민 기관, 보건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 기관들이 강제 결혼 방지를 위하여 협력하였다. 이러한 협력이 여아의 권리 증진에 대한 인식 확산과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라) 차별 없는 문화 촉진

성고정관념과 관습적 성역할은 여아의 권리와 자긍심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국가들과 이해당사자들은 대중과 여론 지도자들에게 직업이나 스포츠, 가정 내부 등에서의 차별화된 성역할에 대하여 알리고, 교육을 통해 성 차별적인 태도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회원국들과 다른 이해당사자들이 교육 분야에 중점을 두고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성에 대한 인식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여성과 여아에게 해가 되는 법과 가치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고, 자료 배포를 통하여 가족과 같은 특정그룹 안에서 그릇된 성역할을 고치고, 가족생활의 남아의 책임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외에도 교과 과정에서 여성과 여아의 권리에 대한 토

론을 교육 내용으로 담거나 성편견을 담은 교과서 이미지를 제거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다.

여아의 학습 선택 영역에 대한 성차별적인 인식을 없애고 직업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 과학과 기술에 여아의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캠프와 모니터 프로그램, 여성 과학자들과 만남의 기회 제공을 통한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여아들에게 여성 기업가들을 역할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스포츠에서도 성고정관념과 양성평등을 촉진하는데 많은 관심들이 쏠리고 있다.

2) 격차와 향후과제

전반적으로 아동의 권리에 대하여 성 중립적인 접근이 지속되고, 여아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국가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교육에 집중되어 있으며, 여아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다. 정보가 부족한 이유로, 여아들이 가진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아들에게 성고정관념과 빈곤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은 학업을 막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그들의 상당한 노동시간 역시 교육 받을 권리를 상실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III

한국의 북경행동강령+15: 12개 부문 이행 사항 점검

1. 여성과 빈곤	59
2. 여성과 교육·훈련	76
3. 여성과 건강	90
4. 여성에 대한 폭력	106
5. 여성과 무력분쟁	122
6. 여성과 경제	137
7. 여성과 권력 및 의사결정	153
8.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168
9. 여성인권	181
10. 여성과 미디어	195
11. 여성과 환경	212
12. 여아	228

1. 여성과 빈곤¹⁸⁾

북경행동강령 전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곤여성의 욕구와 노력을 포함한 거시경제정책과 발전전략을 점검하고 채택하며 유지한다. ■ 경제자원에 대한 여성의 동등한 권리 및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법과 행정적 시행을 개정한다. ■ 예금과 신용제도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을 촉진한다. ■ 성인지적 방법론을 개발하고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가. 국내 현황

여성의 빈곤 문제는 노동 시장에서의 성차별, 사회보장 체계에서의 불평등한 지위, 가부장적 가족 구조 및 보살핌 노동에 대한 가치 평가 절하 등 다양한 여성 차별적인 사회 구조들과 긴밀히 연동되어 있다. 특히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 현상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서 국제적으로 최대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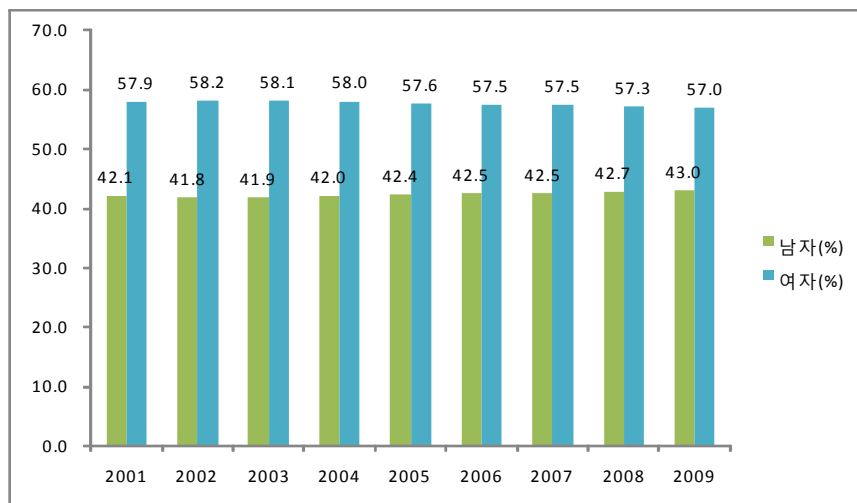
이러한 배경에서 북경행동강령에서도 빈곤을 12개 주요 관심부문 중 최우선 관심부문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여성을 위한 탈빈곤 전략은 여성의 지위향상 및 양성평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북경행동강령에서는 여성을 위한 탈빈곤 전략은 빈곤의 다면적인 본질을 포괄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한국 사회 역시 빈곤 문제는 “빈곤의 여성화”라 할 정도로 여성 빈곤의 문제가 심각하며, 현실적으로 여성들은 여성가구주, 여성노인, 여성장애인 등이 빈곤의 대표적인 집단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거시경제 정책과 발전 전략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의 과정에서 아직까지 여성의 욕구를 충분히

18) 여성과 빈곤은 본원의 홍승아 연구위원이 집필하였다.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빈곤 문제는 남성의 경우와는 달리 노동시장에서의 주변적 지위뿐만 아니라 가족 형태, 가구 규모, 복지 제도 등을 포괄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서 여성의 욕구를 반영한 빈곤 정책은 더욱 필요하다.

지난 15년간 한국 정부의 여성빈곤 정책을 개괄해 보면, 우선 대표적인 공적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01년 도입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결과 많은 수의 여성들이 국가의 빈곤 정책의 수혜자가 되고 있다. [그림 III-1-1]에서 보듯이 한국의 빈곤 정책의 성별 수급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의 빈곤율은 전체 빈곤율보다 2배 이상 높다. 즉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더 많은 수급비율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이는 특별히 여성의 욕구를 반영한 성 인지적인 빈곤 정책의 결과라기보다는 그만큼 여성빈곤 집단이 거대한 결과일 뿐이다.



자료: 보건복지부 (2010).

[그림 III-1-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성별 수급자 현황

또한 경제 자원에 있어서도 여성의 동등한 권리 및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법과 행정적인 시행은 제도 시행 초기의 단계인 만큼 성 인지적인 접근

으로 제공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예컨대 2009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근로 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의 도입이라는 의의는 갖고 있지만 가구 단위로 설계되어 있어서 여성의 동등한 권리 및 접근의 보장측면에서는 제한적인 의의를 갖는다.

또한 최근 시행되고 있는 소액담보 대출제도와 같은 신용제도 역시 제도 시행의 짧은 역사 속에서 특별히 여성의 접근성을 촉진하는 전략을 갖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도들은 향후 제도시행의 정착기로 들어서면서 점차 성 인지적인 관점과 접근을 취해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나. 지난 15년간 주요 정책 및 성과

한국 사회에서 지난 15년간 빈곤 정책은 상당히 발전되어 왔다. 무엇보다도 대표적인 빈곤 정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함으로써 공적 부조제도를 통한 종합적인 빈곤 대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또한 저소득 한 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기초 노령 연금, 장애인 연금 및 장애 수당 등을 도입함으로써 빈곤 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 보장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빈곤 정책들은 여성의 빈곤 문제에 보다 집중하거나 성인지적인 접근으로 제공되지는 않았다. 지난 15년간 성중립적인 제도로써 다양한 빈곤 정책들이 도입되고 시행되었으며, 그 결과 일부 제도에서는 여성 빈곤 집단이 더 많은 대상 집단이 되기도 하였지만, 나머지 제도들에서는 특별히 성 인지적인 제도 설계나 정책 시행이 되지는 못하였다. 이후에서는 지난 15년 간의 주요 정책 및 성과를 검토하도록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2000년 한국의 대표적인 빈곤 정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99년 9월 7일 구(舊)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경한 것으로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 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 모든 국민에 대해 국

가가 생계, 교육, 의료 등 기본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공적부조 제도이다. 지난 40여 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 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즉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 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동시에 종합적 자립 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이들의 탈빈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2009년 현재 국가가 정한 절대 빈곤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1,482 천명이며, 이들 중 남성은 43.3%(638 천명), 여성은 57.0%(844천명)으로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난다. 2001년 이후의 국민기초생활급여 성별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 수급자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한국의 빈곤층이 여성에 편중되어 있으며, 이는 여성의 빈곤화 현상과 맞물리는 현상이 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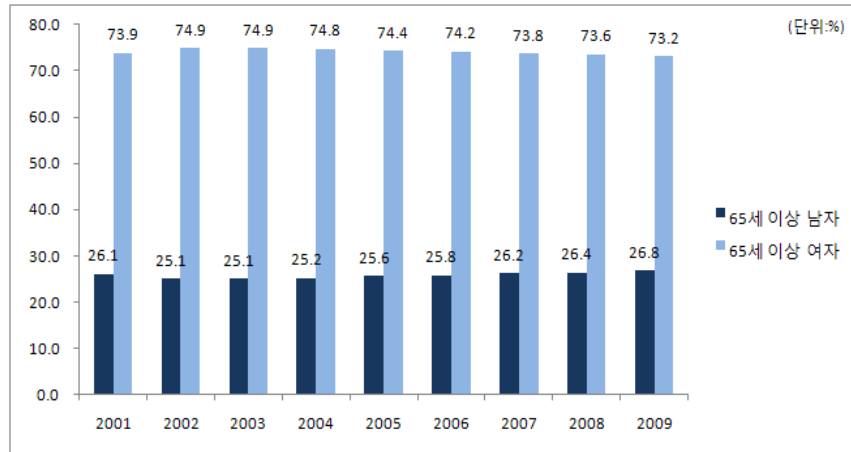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결과 많은 수의 여성들이 국가의 빈곤 정책의 수혜자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여성 빈곤율은 전체 빈곤율보다 2배 이상 높다. 전체 빈곤율과 여성 빈곤율을 비교해 보면(시장소득 중위 50%를 기준), 여성의 빈곤율이 훨씬 높게 나타난다. 2003년 전체 빈곤율이 16.1%인데 비해 여성빈곤율은 31.3%, 2004년 전체 빈곤율이 16.6%인데 비해 여성 빈곤율은 31.3%, 2003년 전체 빈곤율이 16.1%인데 비해 여성 빈곤율은 31.4%, 2005년 전체 빈곤율이 16.9%인데 비해 여성빈곤율은 31.1%, 2006년 전체 빈곤율이 18.4%인데 비해 여성 빈곤율은 36.6%, 2007년 전체 빈곤율이 18.9%인데 비해 여성 빈곤율은 31.1% 등으로 나타난다.

〈표 Ⅲ-1-1〉 전체 빈곤율과 여성빈곤율

연도	성별	시장소득 - 중위 40% (%)	시장소득 - 중위 50% (%)	시장소득 - 중위 60% (%)
2003	전체	11.3	16.1	21.2
	여성	23.3	31.3	40.3
2004	전체	12.0	16.6	22.2
	여성	22.5	31.4	40.4
2005	전체	12.6	16.9	22.6
	여성	23.4	31.1	39.4
2006	전체	14.2	18.4	23.9
	여성	29.3	36.6	44.2
2007	전체	14.5	18.9	24.1
	여성	28.6	36.1	43.2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정보시스템(<http://gsis.kwdi.re.kr/>).

또한, 여성노인의 빈곤문제는 훨씬 심각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비율에서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의 약 3배에 달한다. 이는 가부장적 가족 구조 내에서 재생산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온 여성의 생애사적 결과에 주요한 원인이 있다. 첫째, 이 세대 여성들이 가정 내에서 재생산역할을 담당하면서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었으며, 둘째, 가부장적 가족 구조 내에서 개별 재산권 및 사회보장 제도의 수급권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노후에 빈곤의 문제를 떠안게 되는 것이다.



자료: 보건복지부(2010).

[그림 Ⅲ-1-2] 노인의 성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현황

2) 근로연계복지(자활사업) 확대

자활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제도화된 사업으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능력 수급자 중 미취업자와 일부 차상위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연계복지(Workfare) 이념을 수용함으로써 자활사업이 발전되었다.

자활지원사업은 첫째, 수급자에게 기초생활보장의 기반 위에서 취업 또는 각종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자립자활을 도모하고, 둘째, 단순한 근로기회 제공의 차원에서 벗어나 수급자가구의 생애 전반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 하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자활급여를 제공하며, 셋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생계급여와 근로활동을 연계함으로써 근로의욕 저하와 빈곤의 함정(poverty trap)에 빠지는 것을 방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¹⁹⁾.

자활사업에 참여한 수급자 중 탈 수급하여 자활에 성공한 자는 2008년 말 현재 3,277명으로, 2004년 5.4%, 2005년 5.5%, 2006년 6.0%, 2007년 6.3%, 2008년 6.7%로 자활 성공율이 점차 증가하고는 있으나, 규모면에서는 낮은 지적을 받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그러나 자활사업의 성별 탈 수

19) 보건복지부 (2000).

급율에 대한 통계는 제공되고 있지 않아서 구체적인 여성빈곤 성과를 분석하기는 어렵다.

3) 근로빈곤층을 위한 취업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가) 사회적 일자리사업

사회적 일자리사업은 유럽의 사회적 협동조합 이념과 결합하여 자활공동체라는 조직형태를 갖추어 발전되었다. 사회적 일자리사업은 2003년말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되어 2006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을 계기로 확대되었다. 이 법을 통하여 자활 사업에 참여했던 민간 단체와 자활공동체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여성들의 사회적 일자리사업에의 참여는 활발하여 주로 노인 돌보미,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사 간병 도우미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나) 마이크로 크레딧(무담보 소액대출)

마이크로 크레딧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지원 서비스이다. 2000년경 사회연대금고 또는 자활기금에서 출발한 사업으로, 이후 “신나는 조합”, “사회연대은행”을 거쳐 최근 실시되고 있는 “미소금융”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미소금융은 영세 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및 프랜차이즈 창업자 중 신용등급(전체 10등급) 7등급 이하가 주된 지원 대상이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79개 자활공동체에 매년 20 억원씩 사회연대은행, 신나는 조합 등에서 창업 자금을 대여하였다²⁰⁾.

4)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도입

근로장려세제는 정부가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인 사람들에게 가구별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산전 된 근로 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빈곤층의 근로 유인을 제고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 연계형

20) 보건복지가족부 (2009).

소득지원제도로, 2008년부터 실시되었다.

2009년도에 최초로 지급되는 근로장려세제는 2008년 소득을 기준으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이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된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빈곤층 지원에 적합한 사회안전망의 도입, 저소득 근로자의 빈곤완화와 경제적 자립지원, 근로유인의 제고, 조세·복지행정의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시행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성별통계가 아직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5)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최근의 경제위기, 가족해체 등으로 여성가구주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성가구주 비율은 지난 15년간 증가세를 계속하여 1995년 16.6%에서, 2000년 전체 가구주의 18.5%, 2005년 21.7%, 2010년 22.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가구주 비율은 전체 가구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²¹⁾.

〈표 Ⅲ-1-2〉 여성가구주 변화(1995-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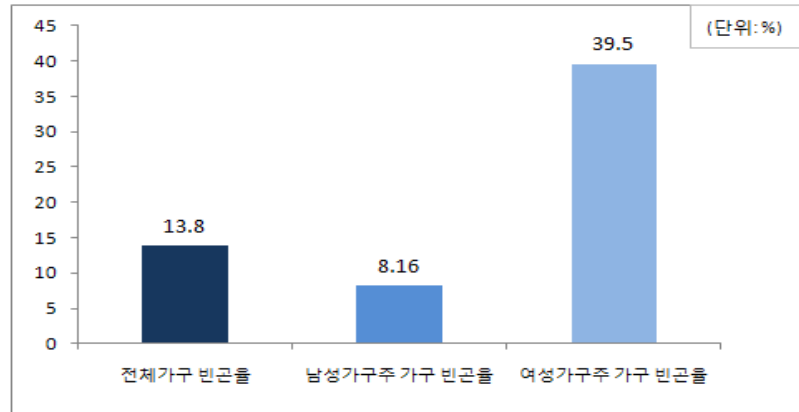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비율	16.6	18.5	19.3	20.0	20.6	21.1	21.7	21.9	22.1	22.1	22.2

자료: 통계청.

또한 여성가구주는 양육책임자로서 자녀양육을 수행함과 동시에 생계책임자로서 노동시장에 참여해야 하는 이중의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노동시장 내 열악한 지위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외환위기로 인한 여성근로자들의 실업과 불안정한 취업의 반복은 여성가구주의 경우 그대로 가구의 빈곤으로 이어져 한국사회의 빈곤의 여성화를 초래하는데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실제로 도시근로자를 대상으로

21) 통계청 (2010).

여성가구주와 남성가구주의 빈곤율을 비교해 보면, 여성가구주의 빈곤율이 39.5%, 남성가구주의 빈곤율이 8.16%로 거의 5배나 높게 나타난다.



자료: 김교성(2007).

[그림 Ⅲ-1-3] 여성가구주와 남성가구주의 빈곤율 비교(도시근로자 가구)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2004년 109,039 가구에서, 2005년 123,666 가구, 2006년 140,188가구, 2007년 147,947 가구, 2008년 150,209 가구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체 150,209 세대 중에서 모자가정이 117,538 세대, 부자가정이 30,468 세대로 모자가정의 비율이 78%를 차지해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이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요대상이 저소득 모자가정이 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표 Ⅲ-1-3〉 저소득 한부모가족 구성

가족구성별	세대수(세대)	인원수(명)
모자가정	117,538	311,501
부자가정	30,468	82,041
조손가정	2,203	5,472
계	150,209	399,014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정보시스템.

이러한 현실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법적 개선조치가 시행되었다. 우선 종래의 「모부자복지법」을 2008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비롯하여 아동교육비 지원,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의 생계비 지원, 아동 양육비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2008년 말 현재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150,209세대, 399,014명이며, 그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세대는 81,792세대, 212,851명이다. 개별법에 의하여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현황은 아래와 같다. 여기에 더하여 한부모가족의 경제생활 향상을 위하여 고용촉진 및 고용지원을 연계하여 이들의 취업을 장려하고 있다(「한부모가족지원법」).

〈표 Ⅲ-1-4〉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2008)

	구분	계	「한부모가족 지원법」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대상	「국가보훈법」 대상
전체	세대	150,209	81,792	68,395	22
	세대원	399,014	212,581	186,385	48
모자 가정	세대	117,538	63,469	54,057	12
	세대원	311,501	163,567	147,900	34
부자 가정	세대	30,468	18,150	12,308	10
	세대원	82,041	48,572	33,455	14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9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한편, 2010년부터는 한부모가족 중에서도 미혼 한부모가족을 특별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한부모 지원 사업이 실시되었으며, 이 제도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저소득 청소년 학부모가 만 25세가 될 때까지 최장 5년간 아동양육비(월 10만원), 아동 의료비, 자립 적립금, 검정고시 학습 등을 지원한다.

6) 기초노령연금제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노인빈곤 완화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5.1%로 노인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빈곤에 인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²⁾. 특히 사회보장제도의 발달이 늦은 한국사회에서 노인의 소득보장 문제는 심각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매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종래의 노령연금을 보편적인 기초연금의 형태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²³⁾. 우선 2008년 1월부터는 70세 이상(1937.12.31 이전 출생자)의 노인에게, 2008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등으로 대상자를 확대하고 있다.

2009년 현재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저소득층 70%의 노인에게 지급하며, 이는 전체 노인 509 만 명 중 약 356 만 명이 해당된다. 연금액은 단독 수급자인 경우에는 매월 최고 90,000원, 부부 수급자인 경우에는 매월 최고 144,000원을 지급하고 있다²⁴⁾.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여성노인 빈곤문제가 심각한 현실에서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07년 공적 부조제도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년기 빈곤층이 26.4%를 구성하고 있고, 이들은 총인구수 대비 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연령별 여성수급자 중 노년기 여성이 3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총인구수 대비 9.9%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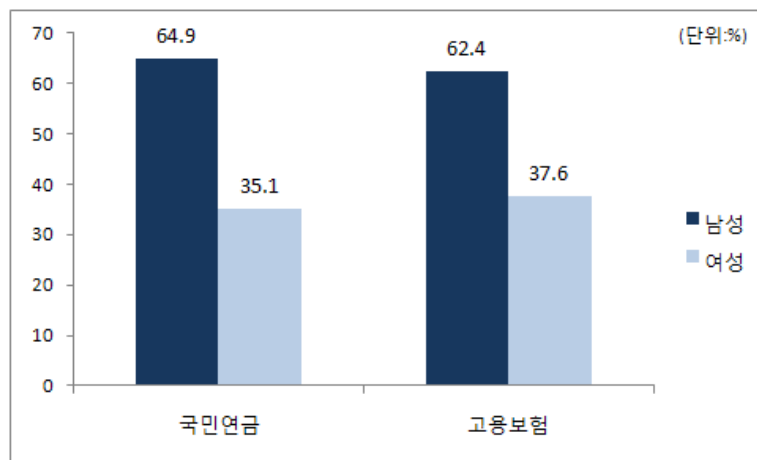
특히 여성의 사회보장 제도에서의 제한적인 접근성은 여성 빈곤의 중요한 원인중 하나를 구성하고 있다. 사회보장 제도에서 여성의 배제 현상은 사회보장 제도 자체가 남성 생계부양자를 기반으로 한 노동 시장의 활동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사회보장의 자격 및 수혜에 있어서도 불평등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즉 남성 중심의 경제 활동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는 사회보장 제도에서는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의 경우 피부

22) OECD (2010).

23) 이전의 경로수당은 아주 낮은 수준의 정액급여(저소득 노인 2만원, 생활보호대상자 노인 4.5만원)로 지급하여 지원효과가 매우 저조하였다.

24) 보건복지가족부 (2009).

양자로서의 파생적인 수급권을 가질 수 있을 뿐이다. 그 결과 주요 보험제도의 성별 수급율은 현격한 차이가 나타난다. 국민연금 가입율은 남성 64.9%, 여성 35.1%(2008년), 고용보험 가입율은 남성 62.4%, 여성 37.6%(2010.7월)로 나타난다. 이같이 한국 사회에서도 복지 정책의 이분화 현상은 그대로 확인된다. 기여에 기반한 사회보험 제도에서는 여성보다 남성들이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적 부조제도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중요한 대상이 되고 있다. 즉 여성들은 본인의 경제 활동을 통한 기여에 기반한 사회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되기보다는 국가에 의한 공적 부조에 의한 사회보장의 틀 속에 편입되고 있다. 그러나 점차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들의 독립적인 사회보험 수급자격이 늘어날 것이며, 따라서 향후에는 이러한 편중 현상도 점차 완화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Ⅲ-1-4] 국민연금(2008) 및 고용보험(2010) 성별가입율

한편, 여성노인 빈곤의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인 빈곤의 문제만이 아니라 건강의 문제에서도 심각한 현실이 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

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로,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본인 부담금을 50% 경감하여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였다. 2009년 장기요양보험 제도 인정자수는 286,907명이며, 이 중 여성 70.7%, 남성 29.3%로 여성의 서비스 욕구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

7) 장애인연금제도 및 장애수당의 개선

여성장애인 역시 빈곤의 주요 집단이 되는데, 이들은 교육 및 노동시장의 참여에서도 배제되어 있을 뿐더러 장애연금 및 수당제도에서도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다.

한편, 여성장애인의 경우는 일반 장애인가구의 빈곤상황보다도 더욱 열악한 상황이다. 2006년 장애인가구의 약 40%가 최저생계비(117만원)를 겨우 면한 소득계층을 구성하고 있는데 반해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는 1/3의 여성이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을 구성하고 있다. 2008년 현재 장애인 가구의 상대빈곤율은 34%로, OECD 평균인 22%보다 13%가 높다. 또한 장애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위험율은 2.4로, 장애인가구가 빈곤에 처할 위험은 비장애인 가구보다 2.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장애인의 취업률은 남성장애인의 절반수준, 일반 여성의 절반수준으로 나타나 가장 취약한 취업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노동 시장에서의 취약한 현실은 사회보험에 그대로 반영되어 장애인의 2/3가 연금 미가입자로 나타나 사회보장 제도를 통한 경제생활 보장이 거의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경제생활에서의 성차별, 취업에서의 성차별, 소득보장에서의 성차별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여성장애인을 빈곤의 위험에 놓여지게 한다. 이러한 현실은 여성장애인들의 경제적, 사회적 자립에 커다란 2차적 장애요인을 제공하게 되며, 이러한 다중요인

들의 복합적인 결과로 여성장애인의 빈곤의 구조를 구축하게 된다.²⁵⁾

이러한 현실에서 빈곤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하여 장애인을 별도로 지원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연금제도와 장애수당 제도가 개선되었다. 우선 장애인연금제도는 18세 이상의 장애인 중 근로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급된다(월 9-15만원, 2010년 기준). 또한 장애수당은 경증 장애인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다(월 3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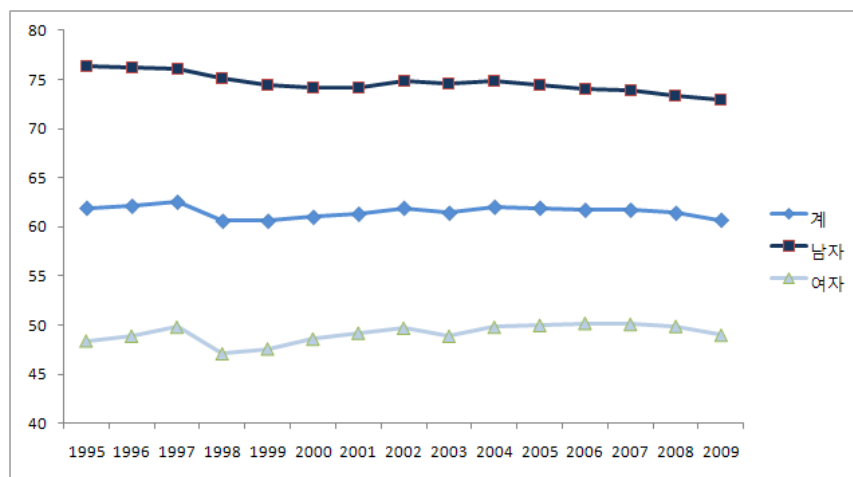
2008년 현재 장애연금 성별 수급액 현황을 보면, 전체 수급액 중의 89.1%를 남성이, 10.9%를 여성이 수급하고 있다. 장애수당 역시 2008년 전체 수급자 중 남성이 61.0%, 여성이 39%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장애인이 남성장애인에 비하여 훨씬 수급율이 낮게 나타난다. 이는 여성장애인의 등록율(40.1%)이 남성장애인의 등록율(59.9%)보다 훨씬 낮고, 장애등급 판정에 있어서도 여성의 장애등급 판정이 남성보다 낮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8) 여성 경제활동 접근성 개선 미흡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지난 15년간 한국 정부는 다양한 빈곤 정책을 도입하고 실시하였다. 그렇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는 여성 빈곤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여성 경제활동 접근성의 개선이 미흡하였다는 문제이다. 여성 빈곤은 여성의 경제적 독립과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의 제한성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고시키는 적극적인 전략이야말로 여성 빈곤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성들의 노동시장 내 불안정한 지위나 근로 조건으로 인하여 여성들의 경제력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며, 또한 여성들은 출산 및 육아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잦은 이탈을 경험하거나 재진입이 어려워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어렵게 하고 빈곤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기업의 구조조정 시 여성들은 우선적으로 해고되어 여성실직자가 증가하였으며, 경기침체 속에서 여성의 구직은 더욱 어려워 여성의 경제적인 안정은 크게 위협받게 되었다.

25) 홍승아 외(2007).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지원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지난 15년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크게 변화가 없다. 1995년 48.4%에서 2009년 49.2%로 15년간 거의 변화 없이 50% 미만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여성들의 경제적인 독립을 어렵게 하며 여성빈곤을 심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향후 여성 경제활동 접근성을 개선하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자료: 통계청.

[그림 Ⅲ-1-5]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다. 향후과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15년간 한국사회의 빈곤정책은 상당히 발전되었다. 무엇보다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최저생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였으며 종합적인 빈곤정책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또한 근로빈곤층을 위한 취업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실시, 근로장려세제 도입 등을 통하여 근로연계복지를 확대해 왔다. 또한 핵심 여성빈곤 집단을 이루고 있는 대상별 접근을 통하여 이들의 빈곤완화에 대해서도 노력하였다. 예컨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여성노인 빈곤의 문제를 완화하였

으며,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제도의 도입으로 여성장애인 빈곤문제에도 노력하였다. 이제까지가 빈곤정책의 도입 및 정착의 단계였다면 향후 이러한 정책에 빈곤여성의 욕구와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포함하는 거시경제 정책과 발전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여성의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탈빈곤정책은 여성의 빈곤이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 노동시장 내 열악한 지위, 출산 및 육아로 인한 노동단절,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상대적 배제 등 복합적인 원인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노동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동시에 출산 및 육아로 인한 노동단절 현상 완화와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여성들이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경제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제도 시행 10년간 여성이 남성보다 일관되게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노인의 경우에는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거의 3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통계에서 보듯이 향후 여성노인의 빈곤완화를 위해서는 제도의 대상 범주의 적절성과 급여의 충분성을 검토하여 제도설계를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자활사업은 ‘여성의 빈곤화’를 근절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책으로,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떠한 관점보다 성주류화적 관점이 요구된다. 자활지원사업 대상자의 60% 정도가 여성(삶의질향상기획단, 2000)이라는 점에서 자활지원사업은 다른 어떠한 국가사업보다도 여성의 욕구에 민감해야 한다. 또한 자활사업의 성공은 결과적으로 빈곤여성들을 정책에서 소외시키지 않는 즉, 평등한 결과를 누리도록 할 것이다. 이것은 성주류화 전략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과 명확히 일치하므로, 자활지원 사업에 있어서 여성주의적 관점은 매우 필요하다.

넷째, 여성가구주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견된다. 따라서 여성가구주의 원활한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지원과 자녀양육 지원, 자녀양육의 책임과 취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일가정양립지원 등을 강화하는 등의 보다 구체적인 탈빈곤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서는 아

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기존의 10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정도의 변화를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월 5만원의 양육비 지원으로는 실질적인 양육지원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우리나라 장애인가구의 상대빈곤율은 35%로(2000년대 중반), 이는 OECD 평균인 22%보다 13% 포인트 높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장애급여 지출이 최하위 수준이다. 여기에는 장애인의 낮은 취업률,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부족 등이 높은 빈곤위험에 처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장애인복지예산 등의 증액을 통하여 장애인의 빈곤지원 정책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여성 빈곤 장애인의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주로 전반적인 장애정책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 왔지만, 소득보장 외에도 여성장애인의 취업지원, 모성역할과 관련된 서비스의 지원 등 다양한 제도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그 외 기초노령연금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마이크로 크레딧, 근로장려세제 등의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 제도의 시행초기이고 성별통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성과를 정확히 분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향후 보다 성인지적인 제도설계와 운영, 제도의 평가가 보완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평균수명 연장으로 소득원이 없는 노년기가 연장되면서 개별적인 노후 소득보장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여성노인들의 경우 노년기 빈곤이 심각해질 것이므로 보다 성인지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확대가 요구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는 가구단위로 설계되어 있어서 오히려 2차 소득원이 되는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여성가구주, 한부모가족,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특성을 고려한 여성친화적인 개편의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여성근로자와 여성가구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기반하여 근로장려세제가 보다 양성평등한 근로복지연계제도로서 정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성빈곤의 완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 시민권적 개념에 기초한 소득보장 프로그램, 여성의 피부양자로서의 수급권이 아닌

개별적 수급권을 확보해 줄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의 성인지적 개편이 필요하다.

2. 여성과 교육·훈련²⁶⁾

북경행동강령 전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 여성의 문맹을 퇴치한다. ■ 직업훈련, 과학, 기술 및 평생교육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 남녀 간 동등한 교육과 훈련을 개발한다. ■ 교육개혁을 위한 충분한 자원을 할당하고 이행을 점검한다. ■ 여아와 여성을 위한 평생교육과 훈련을 증진한다.

가. 국내 현황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에는 모든 국민이 성별에 의한 차별 없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2000년 교육기본법에 ‘남녀 평등교육의 증진’조항이 신설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시책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금지하고, 체육·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을 포함하여야 하며, 학교 교육에서의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현 교육과학기술부)에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두도록 규정하였다. 1998년 교육부에 여성교육정책담당관을 두고 여성 교

26) 여성과 교육·훈련은 본원의 박성정 연구위원이 집필하였다.

육, 양성평등교육의 수립과 시행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나, 여성교육정책담당 관제도는 2008년 폐지되었다.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 교육에서 양성평등 이념을 고취하고 여성의 교육기회를 확대하여야 하며, 국공립 연수기관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학교 교육 기회의 양성평등은 달성된 상태이므로, 정부는 유치원 교육 기회 확대, 고등 교육과 취업에서의 여성의 전공 및 직업 선택의 편향성 완화, 교육에 관한 의사결정직과 관리직에서의 여교사 진출 확대, 대학교원의 여성 비중 제고, 여성의 직업훈련 기회 및 취약여성을 위한 평생교육 기회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나. 지난 15년간 주요정책 및 성과

1) 교육에의 동등한 접근

교육 기회에의 양성간의 동등한 접근은 고등교육 단계를 제외하고는 거의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민 평균 교육 년 수는 여성과 남성 모두 지난 15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유치원 취원율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 여아와 남아의 취원율은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는 유아교육법에 의거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 동안 유치원에 취학하는 저소득층 가정 원아들의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하였고 2010년 소득 하위 70%까지의 모든 둘째 이상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취학률은 90%를 넘고 남녀 차는 거의 없다. 고등교육 기관 취학률은 여 68.1%, 남 72.5%로 남성이 높으나 남녀 격차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즉, 초·중등교육단계에서 남녀 취학률 격차는 거의 없는 편이나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남녀 격차는 아직 존재한다. 석사, 박사학위 취득자 중 여성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어 여성 고급

인적자원 수가 크게 증대하고 있으나 박사학위 취득율은 남성이 훨씬 높다.

〈표 Ⅲ-2-1〉 국민 평균 교육년수

(단위: 년)

	여성	남성
1995	9.4	11.2
2000	9.8	11.5
2005	10.5	12.0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9). 「한국의 성인지통계」.

〈표 Ⅲ-2-2〉 유치원 취원율

(단위: %)

연도	여	남
1995	39.9	40.0
2000	38.9	38.8
2005	44.6	44.7
2009	58.3	5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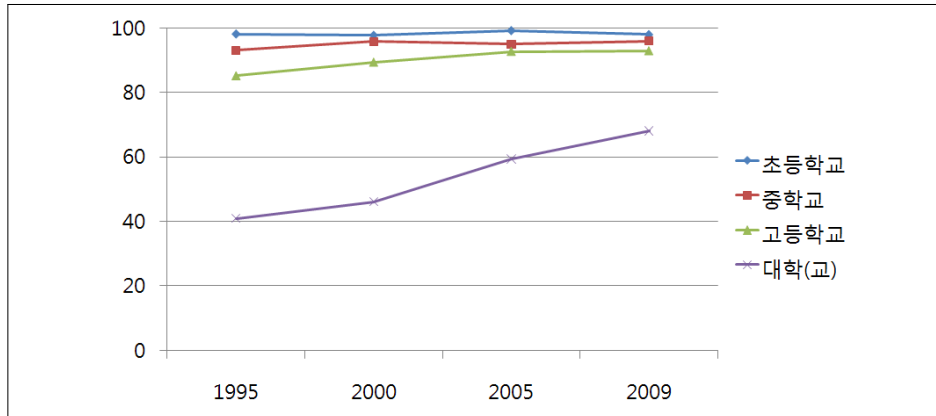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9). 「한국의 성인지통계」.

〈표 Ⅲ-2-3〉 학교급별 취학률

(단위: %)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교육기관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1997	98.2	97.0	93.1	92.6	85.2	85.7	40.9	49.5
2000	97.8	96.7	95.8	94.3	89.4	89.5	46.1	54.2
2005	99.2	98.4	95.0	93.7	92.7	91.7	59.4	64.9
2009	98.0	97.8	96.0	96.4	92.9	92.1	68.1	72.5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9). 「한국의 성인지통계」.



[그림 Ⅲ-2-1] 여학생 취학률

〈표 Ⅲ-2-4〉 학위취득자의 여성 비율

(단위: %)

	학사	석사	박사
1995	42.0	28.4	18.0
2000	48.1	31.7	20.5
2005	50.5	43.0	26.0
2009	47.0	47.9	30.1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9). 「한국의 성인지통계」.

2) 과학, 기술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 향상

양성평등한 교육기회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남녀 간 전공 선택과 진로결정에 있어서의 차이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여학생의 전공분포는 계열별로 차이가 크다. 주로 상업과 실업학교에 집중되어 있고 공업과 수산·해양계 학교의 여학생 비율은 매우 낮는데, 공업계 고등학교의 여학생 분포는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전공의 성별 분리는 고등교육 단계에도 드러난다. 여학생들은 교육계, 인문계, 의약계 등에 주로 재학하고 있고, 공학계 재학 비율은 낮다. 즉, 전통적으로 여성이 종사해온 직업과 전공 분야가 유지되고 있으나 비전통적 분야로의 진출도 늘고 있다.

〈표 Ⅲ-2-5〉 고등학교 계열별 여학생 비율

(단위: %)

연도	일반계	실업계					
		농업	공업	상업	수산·해양	종합	실업
1995	44.8	33.6	9.1	80.9	9.6	67.4	51.0
2000	47.4	34.9	11.4	79.9	12.3	61.7	56.2
2005	47.6	39.1	13.6	74.1	6.8	61.2	55.5
2009	47.6	37.1	15.1	72.5	6.5	57.2	56.3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9), 「한국의 성인지통계」.

〈표 Ⅲ-2-6〉 전공 분야별 대학교의 여학생 비율

(단위: %)

	인문계	사회계	사범계	자연계	의약계	예체계	
1995	52.1	25.5	65.4	20.7	38.8	55.7	
2000	56.1	35.8	62.8	22.1	47.8	56.3	
	인문계	사회계	교육계	공학계	자연계	의약계	예체계
2005	57.1	36.8	60.6	12.8	43.4	51.2	52.7
2009	55.9	38.3	57.8	13.5	43.7	55.9	52.6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9), 「한국의 성인지통계」.

정부는 여학생의 전공과 직업 편중을 완화하기 위해 중·고 여학생의 과학기술분야 진출을 지원하는 ‘WISE사업’, 공대 여학생의 역량개발을 위한 ‘여학생 공학교육 선도대학 지원 사업’, 여대생 진로지도를 위한 ‘여대생 특화 진로교육과정 지원 사업’을 운영하였다. 1998년에는 여자 중학생용, 1999년에는 여자 고등학생, 2003년 초등학생용 양성평등 진로지도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였으며, 여학생들의 진로 선택 다양화 및 과학기술분야 진출 유도를 위해 ‘중·고 여학생을 위한 과학 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001년부터 시작한 WISE(Women into Science and Engineering)프로그램은 중·고 여학생과 여성 과학기술자 연계로 우수 여학생들의 과학기술분야 진출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4년 1개 거점센터와 8개 지역 센터를

설치하였고 2009년 전국 14개 WISE지원센터를 지원하였다. 여성부(현 여성가족부)가 2003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에서도 이공계 여학생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0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지정하고 있다. 2009년 20개 대학에 지정 운영되었고 2010년 31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석, 박사과정 이공계 여성 양성규모는 자연계, 공학계 모두 증가하였고, 여성과학기술 연구 개발 인력 고용도 증가하는 추세이나 전체의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

〈표 Ⅲ-2-7〉 학위수준별 이공계 여성 양성 규모

(단위: %)

학위	계열	2004	2005	2006	2007
석사	자연계	45.2	45.1	44.3	47.6
	공학계	13.4	13.1	12.5	13.7
박사	자연계	30.5	34.2	33.2	34.4
	공학계	5.4	7.2	7.6	8.9

자료: 여성과학기술인통계DB(2010).

〈표 Ⅲ-2-8〉 여성과학기술 연구개발인력 고용 현황(정규직)

(단위: %)

기관 유형	2006	2007	2008
이공계대학	12.4	11.1	11.8
공공연구기관	12.2	11.7	12.0
민간기업연구기관	7.6	9.0	9.6
합계	9.4	9.8	10.4

자료: 여성과학기술인통계DB(2010).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로의 여성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2001년 ‘여성과학기술인력채용목표제’를 도입하였고 2002년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

다. 여성 과학기술 인력채용 목표제도는 2001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2007년부터는 승진 목표제도가 추가되었다. 여성 과학기술 인력채용 목표제가 실시되고 있는 정부 산하 연구기관의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 비율은 2005년 20.9%에서 2008년에 22.1%로, 고용 인력 중 여성비율은 2005년 11.8%에서 2008년 12.8%로 증가하였다.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승진비율은 2007년 11.5%에서 2008년 14.4%로 증가하였다.

〈표 Ⅲ-2-9〉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 운영기관 여성채용 비율

(단위: %)

	2005	2006	2007	2008
25개 정부출연(연)	13.0	14.9	15.0	16.5
66개 국·공립(연)	44.5	41.0	46.4	40.4
7개 정부투자(연)	12.5	15.9	23.5	13.6
전체	20.9	21.4	24.6	22.1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0). 「여성과학기술인력 실태조사 보고서」.

3) 성차별적이지 않은 교육과 훈련

성 고정적인 교육과정 편제의 개선과 교과서 내용의 성 차별적 요소의 제고를 위한 정책이 시행되었다. 중학교 남녀학생의 교과 선택에 있어 남녀가 분리되었던 가정 및 기술·산업교과를 1995년에 남녀가 공통으로 이수하게 하였고, 2000년(초등학교), 2001년(중학교), 2002년(고등학교)부터 적용한 제7차 교육과정에서 ‘기술·산업’교과와 ‘가정·가사’교과를 ‘기술·가정’교과로 통합하여 남녀 공통으로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실과 교과에서의 남녀 구분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와 함께 교과서와 교육 과정에 나타난 성 고정 관념과 성 차별적 요소를 점검하기 위한 분석이 이루어져 교과서개발에 반영되었다. 정부는 6차 교육과정부터 교육과정 및 교과서 집필지침과 교과서 검정기준에 남녀역할에 대한 편견이 없도록 규정을 명시하였다. 2003년 실시한 남녀학생의 학업성취도조사(PISA)에서는 한국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남녀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학, 과학

에서 여학생의 흥미와 성취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였다.

교과 선택권과 교육 내용의 성평등한 구성 노력과 함께 중요한 것은 교사들의 성평등한 교수활동이다. 정부는 교원들의 양성평등한 의식과 교육활동을 위해 교원 연수과정에 양성평등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1993년 ‘교원연수운영방향’에 양성평등의식에 대한 연수과정을 편성토록 한 이래 각종 교원연수에서 양성평등의식교육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4) 직업훈련 및 평생교육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 향상

전체 평생학습 참여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다. 직장연수와 직업훈련 참여율(2004)에서 남성 참여율이 여성의 두 배 전후로 높고, 교양강좌 참여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높다.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및 수요조사’(2005)에서도 직업훈련 참여율이 남성 12.1%, 여성 7.3%로 여성이 낮게 나타났다. 임금 근로자 중 지난 1년 간 교육훈련에 참여한 여성비율도 남성에 비해 낮게 나타나 재직자 직업훈련 참여기회에 성별 격차가 존재한다. 그러나 최근 재직자 직업훈련 참여율의 성별 격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재직자 직업훈련 중에서도 여성들은 사업 주 훈련이나 핵심 직무 능력 향상 등 업무와 직접 연관된 훈련보다 수강 지원금이나 근로자 능력 개발카드제와 같이 개인 선택형, 자기 계발형 훈련 참여율이 높다. 정부 지원 신규, 전직 실업자훈련 여성 참여율은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노동시장에서 인력이 부족한 우선 선정 직종 훈련의 여성 참여율은 여전히 낮다.

정부 여러 부처가 여성의 직업훈련기회 확대를 위해 여성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여성가장과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직업교육 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을 기반으로 청소년기에서 성인기에 이르는 여성의 경력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여성인재육성사업’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지자체 산하 여성평생교육시설을 기반으로 성인여성을 위한 인력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을 전담하는 one-stop 취업지원센터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개소를 지정·운영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직업훈련에서 직업능

력개발계좌제 도입과 확대에 여성의 실업훈련 참여율이 더 증대하고 있다. 2008년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이후 2009년 말까지 계좌 발급 및 훈련인원은 여성이 70% 이상으로 여성의 활용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Ⅲ-2-10〉 평생학습 참여율

(단위: %)

		전체	직장연수 (workplace training)	교양강좌	직업훈련 (vocational training)
1996	여	24.4	39.6	27.7	6.5
	남	33.8	60.9	11.3	17.2
2000	여	15.2	33.6	29.6	6.0
	남	19.4	54.8	9.9	17.7
2004	여	19.5	36.2	32.8	5.9
	남	23.8	62.3	11.0	13.5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9). 「한국의 성인지통계」.

〈표 Ⅲ-2-11〉 재직자 직업교육훈련 성별 참여율*

(단위: %)

	전체 25-64세	여성	남성
2007	26.3	23.1	26.3
2008	28.2	24.8	28.2
2009	32.3	29.4	32.3

*주: 임금근로자 중 지난 1년간 교육훈련경험이 있는 자의 비율.

자료: 고용노동부(2010). 「직업능력개발사업통계집」.

〈표 Ⅲ-2-12〉 직업훈련유형별 여성참여율

(단위: %)

	재직자훈련						실업자훈련		
	전체	사업주 훈련	유급휴가 훈련	수강 지원금	근로자능력 개발카드제	핵심직무 능력향상	신규	전직	우선선정 직종
2009	29.3	26.4	15.3	64.9	75.5	21.6	69.0	62.6	20.8

자료: 고용노동부(2010). 「직업능력개발사업현황」.

5) 여성을 위한 평생교육 증진

여성을 위한 평생교육에는 여성의 의식, 일, 여가, 사회참여, 가정을 위한 교육 등 다양한 영역이 있다. 이 가운데 정부정책과 사업은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결혼이민여성·탈북여성·장애여성 등 취약여성을 지원하는 평생교육, 그리고 전통적 가족의 약화와 다양한 가족의 등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가족을 지원하는 평생교육 사업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인프라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지원은 여러 부처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결혼이민자 조기적응을 위한 한국어교육, 문화이해교육, 가족통합교육 등을 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과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지도사, 아동양육지도사가 가정방문지도, 이중언어 발달 등을 지원하고, 여성교육훈련기관을 통해 결혼이민여성의 훈련과 취업도 지원하고 있다.

가족 정책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관여하고 있다. 2010년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재편됨에 따라 가족지원 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되어, 가족정책에 여성관점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가족정책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97개('09)에서 138개('10)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00개('09)에서 159개('10)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다기능 센터를 55개 운영할 계획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의 역할과 연대를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유아·아동기의 성 정체성 확립, 청소년기의 진로지도, 성인·노인기의 성역할 고정관념 극복 등 생애주기에 따른 의식교육 등을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장애인, 탈북여성 등 취약집단 여성을 지원하고 있다.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상담에서부터 기초역량 강화, 교육 및 의료, 법률, 취업 등 종합 서비스를 지원한다. 장애유형별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여 장애 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 전반에 대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한다. 저학력 재가여성장애인에게는 학습 멘토 여

성 자원봉사자를 1:1 연계하여 학습용 PC와 기초학습, 인터넷 활용법 및 생활·취업정보 습득을 지원하는 “e-희망날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는 정부와 민간(삼성사회봉사단) 공동협약을 통해 지원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원 입소 탈북여성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관점의 인권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진흥원은 성인지교육, 성별영향평가교육을 하고 있다. 여성과 남성을 모두 대상으로 하지만, 성평등의식과 여성 권익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여성평생교육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하여 “양성평등교육,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반영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성인지 교육)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진흥시키기 위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설립되었다.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및 진흥사업,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 여성과 남성의 지도력 함양 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등 전문 인력 양성사업,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양성평등 교육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교류협력 지원 사업, 양성평등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사업, 양성평등 교육 관련 자료 출간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6) 양성평등한 교육자원과 여건 확보

초, 중등학교 교직원의 여성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교장과 교감 중 여성비율도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평교사 여성비율에 비하면 교장과 교감 등 관리직급 중 여성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교육전문직의 여성비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여 교원 수에 비하면 그 비율은 매우 낮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는 2001년부터 초·중등학교 교장·교감의 여성임용확대제도를 도입하였다. 여 교원 관리직 임용의 성과는 2년마다 실시되는 시·도 교육청의 평가에 반영되고 있다. 2005년에 ‘여성교육공무원관리직인사관리지침’을 마련하고 2006년 이후 매년 여성교원의 교장·교감 임용현황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대학교원 가운데 여성비율은 계속 늘고 있으나 상위 직위일수록 여성비

율은 낮아진다. 정부는 국공립대학의 여교수 비율 제고를 위해 2003년 ‘국공립대 여성교수 임용목표제’를 도입하였다. 정부는 2003년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의 교원임용에 있어 양성평등을 이루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4년제 국공립대학은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3년마다 교원임용에 관한 양성평등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공립대학으로부터 양성평등조치계획에 대한 실행보고서를 받아 평가한 후 우수대학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여교수채용목표제’ 도입 이후, 국공립대 여교수비율은 2003년 9.2%에서 2005년 10.7%, 2009년 12.8%의 비율로 증가하였다.

〈표 Ⅲ-2-13〉 초·중등 교원의 직급별 여성 비율

(단위: %)

		교장	교감	평교사
1995	초	3.9	6.6	68.5
	중	7.6	6.1	57.7
	고	3.7	1.8	28.3
2000	초	7.0	8.9	79.0
	중	8.7	8.9	66.6
	고	4.5	2.7	35.3
2005	초	8.7	14.6	80.4
	중	9.9	17.7	70.2
	고	6.5	4.7	44.5
2009	초	12.9	22.7	80.0
	중	16.7	23.7	72.7
	고	5.9	6.0	5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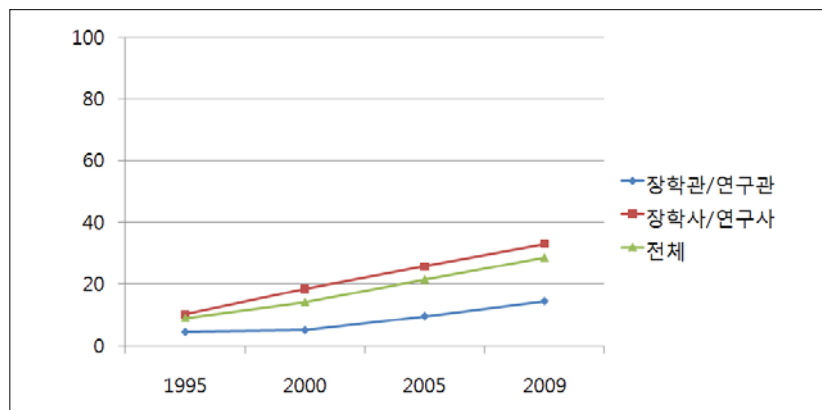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9), 『한국의 성 인지 통계』.

〈표 Ⅲ-2-14〉 교육전문직의 여성 비율

(단위: %)

	전체	장학관, 연구관	장학사, 연구사
1995	9.0	4.5	10.2
2000	14.1	5.1	18.5
2005	21.5	9.6	25.8
2008	28.6	14.4	33.0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9). 「한국의 성 인지 통계」.



[그림 Ⅲ-2-2] 교육전문직 여성 비율

〈표 Ⅲ-2-15〉 대학이상 직위별 여교원 비율

(단위: %)

	총(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1995	8.2	11.4	14.2	15.6	18.0
2000	8.5	12.6	14.7	16.5	24.6
2005	10.9	13.2	16.5	21.2	32.8
2009	11.4	13.6	19.4	26.3	37.7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9). 「한국의 성 인지 통계」.

다. 향후과제

기본적인 초, 중등학교 교육기회에서의 취학률은 매우 높으며 남녀 간 성별 격차도 거의 없다. 그러나 고등교육기회 그리고 석사, 박사학위 취득기회에서의 여성의 접근성은 남성보다 낮아 고급인적자원 양성에 있어 성별 격차문제가 남아있다. 대학교육이상 단계에서 남녀 간 평등한 교육기회 확보를 위한 정책이 요구되며, 고급인력의 양성과 함께 활용에 있어서의 성평등성도 제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더 심각한 문제는 전공 및 직업의 성별 분리문제이다. 여학생들은 여전히 전통적으로 여성친화적인 전공과 직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편중성이 점차 완화되고는 있으나 그 효과는 크지 않아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양성평등한 교육과 여학생의 전공 다양화를 위해서는 교과서 내용과 교사의 교수활동에 있어 성평등성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과 교사 교육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직업훈련과 평생교육에 있어서는 참여기회나 내용 면에서 성 차이가 존재한다. 직업훈련 참여율은 제공주체에 따라 성 차이가 있다. 사업주가 제공하는 사업주훈련 참여율에서 여성 참여율이 낮고, 정부가 지원하는 실업자훈련에서의 여성참여율은 높게 나타나, 재직자훈련의 여성참여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여건 면에서는 중요한 의사결정직에서의 여성비율이 낮은 것이 문제로 남아있다. 평교사 여성비율에 비해 교장, 교감, 장학사 등 교육관리직과 전문직에서의 여성비율이 낮다. 또한 대학교원 가운데 여교수 비율이 낮으며 상위직급일수록 격차가 크다. 임용 및 채용목표제를 통해 여성비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으며 이의 지속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교육기회 면에서의 성평등은 달성되었으나, 전공 및 직업의 성별 분리문제, 직업훈련의 성별 격차문제, 교육관리직 및 전문직의 여성 과소대표 문제, 그리고 대학교수 중 여교수 비율 저조문제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대표적인 교육문제로 남아 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더욱 효과적인 정책 개발과 시행이 요구된다.

3. 여성과 건강²⁷⁾

북경행동강령 전략목표

- 모든 생애주기 동안 적절한 양질의 보건의료와 정보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을 증진시킨다.
- 여성의 건강을 증진하는 예방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 성병, HIV/AIDS, 성 및 생식건강 문제에 대한 성인지적 사업에 착수한다.
- 여성건강 관련 조사연구를 촉진하고 정보를 확산한다.
- 여성건강 관련 재원을 증대하고 후속조치를 점검한다.

가. 국내 현황

북경행동강령에서 채택된 ‘여성과 건강’ 의제에서는 여성의 생애과정에 서 경험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변화 및 위험요인들을 파악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의 건강한 삶(healthy life)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적, 제도적, 재원적, 학술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다양한 전략 목표와 행동실천이 제안되었다²⁸⁾. 이는 그동안 여성 개인에게 주어진 건강에 대한 책임에서 머물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개입과 행동이 필요함을 촉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지난 15년 간 우리 정부가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한 정책과 성과를 개괄적으로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우선, 북경행동강령이 채택된 1995년 이후 「모자보건법」은 여성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태어난 아이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지원 등 제도적 지원 범위 확대와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리 시스템 체계화를 위해 수차례 개정되었다. 특히, 2010년 개정 시는 모성의 대상을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임산부에서 가임기 여성으로 확대됨으로써 기존 임산부에 국한된 각종 건강 검사

27) 여성과 건강은 본원의 김동식 연구위원이 집필하였다.

28) 정순영 외 (1995). 「제4차 세계여성회의의 북경선언 행동강령」. 한국여성개발원.

등의 혜택을 가임기 여성까지 확대 적용하여 여성의 생식건강에 대한 포괄적 보호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게다가 2007년에는 기존 「국민건강보험법」에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내용이 담긴 조항이 추가되면서 여성의 생애전환기에 맞춤형 건강검진을 제공함으로써 건강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치료와 관리 등의 의료 서비스 지원을 통해 여성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1995년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국가단위의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하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를 통해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임상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상태를 분석하고, 성별·연령별 건강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젠더적 관점에서 여성과 남성의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정책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최근에는 가정, 노동, 복지 등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여성의 건강상태를 이해하고, 이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기초 통계생산이 시계열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의 효율적 분배를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나. 지난 15년간 주요정책 및 성과

1) 여성건강 관련법의 제·개정 및 적용범위 확대

북경행동강령이 채택되기 이전까지는 여성의 건강증진 관련법은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데 근거가 된 「모자보건법」이 유일하였다. 그러나 북경행동강령이 채택된 그해 12월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여성의 임신·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의 보호와 취업여성에 대한 고용의 안정성 및 모성보호 비용에 대한 재정적 책무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08년에는 「근로기준법」에 ‘태아의 검진 시간의 허용 등’의 조항이 추가되어 임신부의 정기 건강진단을 위한 시간청구의 허용을 명시화하였다.

이상과 같이 여성의 임신·출산 및 양육에 대한 보호 등의 여성 건강증진 관련법의 적용범위 확대뿐만 아니라 보건 교육, 질병 예방, 영양 개선 및

건강생활실천 등을 통한 여성의 건강 증진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이 1995년에 제정되었다. 한편, 2000년 7월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임신부의 임신과 출산에 따른 비용 지원에 국한된 근거 조항만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2007년에는 여성의 생애전환기에 무료 건강 진단을 시행하여 건강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생애전환기 건강 진단 내용이 추가되었다. 또한, 2008년에는 임신부 본인 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 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 바우처(고운맘 카드)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 관련 내용이 담긴 조항(제45조)이 추가되었다.

특히 주목할 것은 2010년 「모자보건법」 개정 시 모성의 범위를 기존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임신부에서 가임기 여성으로 확대함으로써 여성의 생식건강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이 특정 시기에 관리되고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의 건강 증진과 건강한 자녀 임신 및 출산을 위해서는 가임기에 속하는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야 하며, 이들에게도 의료서비스가 동일하게 지원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향후 가임기 여성의 생식건강 증진 및 질 향상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건강증진정책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가임기를 연령과 임신 및 출산 경험에 따라 지원 정책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생식건강의 생애 주기별 관리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성도 있다.

2) 여성건강관련 다양한 통계 생산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어 국민건강 영양 조사실시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면서 이 법에 의거하여 ‘국민건강영양조사’가 1998년부터 매년 3년마다 실시되고 있다. 본 조사는 전국 여성과 남성의 자가 보고식 건강상태(주관적 건강, 우울증, 자살, 스트레스 등)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임상학적 특성(심혈관계 질환, 고혈압, 당뇨 등)을 실제 의료진이 진료함으로써 전인적 건강관련 자료를 생산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특히 2001년 제2기 자료

를 재분석하여 성별분리통계를 수록한 ‘한국여성의 건강통계’ 및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문제’ 보고서는 우리나라 여성의 건강실태를 보여주는 첫 시도라 할 수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와 같이 전국단위의 대규모 건강통계 생산에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이 지원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부터라 할 수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와 더불어 그 시초가 된 전국단위 조사로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생산한 ‘노동패널조사’가 있다. 본 조사는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근로행위와 이직 및 퇴직 등의 노동환경에 건강 관련 조사항목이 포함되어 개인의 노동환경과 건강상태 변화를 추적 조사하여, 건강의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추후 ‘아동 패널’, ‘청소년 패널’, ‘청년 패널’, ‘여성가족 패널’, ‘고령연구 패널’ 등 특정 연령대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패널조사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들 조사를 통해 여성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생애주기별 신체적 건강, 심리사회적 건강 및 생식건강의 변화와 관련 원인에 대한 인과관계(causal relationship) 분석이 가능한 통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한편, 여성의 출산과 임신 및 생식건강과 관련하여 다양한 통계가 2005년부터 생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조사로는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등이 있다. 특히, 2005년 전국의 기혼여성과 미혼여성 그리고 의료기관 및 산부인과 의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인공 임신중절 실태조사’는 우리나라 가임기 여성의 다양한 생식건강실태를 전국단위로 보여주는 첫 시도였으며, 이는 여성의 생식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방안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요구하는 모자보건 관련 통계 생산 및 제공을 목적으로 ‘영아·모성의 사망조사’ 및 ‘선천성 이상아 조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외 인구동향조사, 사회조사 등에서는 기대수명, 유병율, 건강검진 수검율 등 거시적 수준에서 여성건강 관련 통계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건강 관련 통계가 생산됨에 따라 여성

의 건강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미리 예방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데 이들 통계 자료가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통계 자료를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우리나라 여성의 주요 건강문제를 젠더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여성의 낮은 건강수명

‘기대여명(life expectancy)’은 국가 간 건강 수준을 비교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북경행동강령이 채택된 1995년(73.53세) 대비 2008년(80.08세)의 기대여명은 6.55세 늘었다. 이 기간 동안 여성(5.88세) 보다는 남성(6.97세)에서 기대여명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지만, 상대적으로 여성의 기대여명이 여전히 높다. 특히, 최근 여성과 남성의 기대여명의 차이는 줄어들고 있고, 2008년 현재 남녀의 기대여명 차이는 6.75세이다. 그러나 기대여명은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증가하는 질병 혹은 장애로 인한 삶의 질의 저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²⁹⁾ 이와 관련하여 유럽 및 북미 선진 국가에서는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기간을 기대여명에서 뺀 수치인 ‘건강수명(healthy life expectancy)’ 지표를 활용한 남녀 간 건강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현재 건강수명은 기대여명 78.63세 보다 10.03세 낮은 68.6세이다. 다시 말해서, 10.03년은 질병 혹은 장애로 인해 건강하지 않은 삶을 영위하여 살아가는 기간이라 할 수 있다. 남녀 간 기대여명과 건강수명의 차이의 경우 여성(12.28세)이 남성(7.65세)보다 크고, 건강수명이 기대여명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여성(85.0%)이 남성(89.82%)보다 낮다. 즉, 여성이 남성에 비해 오래 살기는 하지만, 사는 동안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은 남성 보다 낮다고 할 수 있다.

29) 강은정·조영태 (2009). 성별교육수준별 건강수명이 형평성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표 Ⅲ-3-1〉 성별·연도별 기대여명 및 건강수명

(단위: 세, %)

		1995	1998	2001	2005	2008
기대 여명	계	73.53	74.82	76.53	78.63	80.08
	여성	77.41	78.45	80.04	81.89	83.29
	남성	69.57	71.09	72.82	75.14	76.54
	남녀차이	7.84	7.36	7.22	6.75	6.75
건강 수명	계	-	-	-	68.60	-
	여성	-	-	-	69.61	-
	남성	-	-	-	67.49	-
	건강수명/기대여명(%)	-	-	-	85.00	-

자료: 통계청(2009). 「인구동향조사」.

나) 여성의 주관적 불건강 상태 완화

여성이 남성에 비해 건강 관련 삶의 질이 낮다는 근거는 앞서 제시한 기대여명 대비 건강수명 차이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건강지표(health index)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중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지표인 ‘주관적 건강상태(self-rated health)’를 살펴보다라도 지난 10년간 여성과 남성의 건강에 대한 부정적 응답률(나쁨)의 차이가 다소 좁혀지고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 보다 자신의 건강에 대해 ‘나쁘다’는 부정적 의견이 높다. 그러나 동일 기간 주관적 불건강 감소율은 남성(28.2%)에 비해 여성(47.0%)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여성과 남성의 주관적 건강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표 Ⅲ-3-2〉 성별·연령별 주관적 건강상태

(단위: %)

구분	여성				남성				전체			
	1999	2003	2006	2008	1999	2003	2006	2008	1999	2003	2006	2008
좋음/보통	75.3	78.0	80.8	83.2	85.9	86.9	88.4	89.0	80.5	82.4	84.5	86.0
나쁨	24.7	22.0	19.1	16.8	14.1	13.1	11.6	11.0	19.5	17.7	15.5	13.9

자료: 통계청(2009). 「사회조사」.

다) 여성의 유병률 감소

앞서 제시한 기대여명, 건강수명 및 주관적 건강상태 외에도 젠더간 건강 관련 삶의 질을 비교하는데 있어 유병률(prevalence) 또한 중요한 건강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 성인의 유병률은 1999년 22.4%에서 2008년 17.5%로 4.9%p 줄어들었다. 동일기간 젠더간 유병률 감소율은 여성(5.6%)이 남성(4.2%) 보다 높으나, 전반적으로 여성의 유병률이 남성보다 높으며, 2008년 현재 5.1%p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여성이 남성에 비해 건강수준이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질환 및 질병을 경험한 평균 유병일수를 살펴보더라도 여성이 남성 보다 다소 많다. 그러나 질환 및 질병으로 인한 평균 와병일수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낮은 사회적 지위와 가정에서의 성 역할로 인해 질환 및 질병을 경험하더라도 신체적·정신적 치료 및 완쾌를 위한 건강투자(health investment)는 여성에게서 더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표 Ⅲ-3-3〉 유병률, 유병일수 및 와병일수

(단위: %, 일)

구분	여성				남성				전체			
	1999	2003	2006	2008	1999	2003	2006	2008	1999	2003	2006	2008
유병률(%)	25.6	24.5	22.4	20.0	19.1	17.1	16.5	14.9	22.4	20.8	19.5	17.5
평균유병일수(일)	6.0	6.0	7.2	8.3	6.0	5.8	6.9	8.2	6.0	6.0	7.1	8.3
평균와병일수(일)	0.8	0.8	0.7	0.6	1.0	0.9	0.8	0.8	0.9	0.8	0.8	0.7

자료: 통계청(2009). 「사회조사」.

라) 여성의 건강검진 수진율 증가

건강검진은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예방 프로그램으로, 건강검진 수진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현재 48.0%로 1998년(48.9%) 대비 0.9% 줄어든 수준이다. 그러나 젠더간 추이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남성은 전체 추이와 같이 건강검진 수진율이 줄어드는 반면, 여성의 경우 반대로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남녀간 건강검진 수진율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

나 2008년 현재 여전히 남성(52.1%)에 비해 여성(44.2%)의 건강검진 수진율은 7.9% 낮은 수준이다. 이는 임신과 출산 및 자녀 양육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여성이 많은데, 이 경우 만 40세 이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주목할 것은 최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40세 미만의 가정주부(피부양자)의 경우 건강검진을 받는 40대 가정주부와 비교했을 때 주관적 불건강 상태, 질환 유병률, 우울증 경험 및 고혈압 증상 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³⁰⁾.

〈표 Ⅲ-3-4〉 건강검진수진율

구분	여성				남성				전체			
	1998	2001	2005	2008	1998	2001	2005	2008	1998	2001	2005	2008
건강검진수진율(%)	42.8	42.2	41.9	44.2	55.7	53.4	53.0	52.1	48.9	47.1	47.4	48.0

자료: 보건복지부(2009). 「2008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2차년도」.

마) 합계 출산율 감소

합계 출산율은 1995년(1.6명) 이후 2006년(1.1명)까지 점진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황금돼지해였던 2007년에 1.3명으로 반등되었지만, 그 이후 다시 1.2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 하락의 주요인으로 연령별 출산율의 변동과 연관성이 있다. 즉, 25-29세의 출산율은 크게 감소한 반면, 30-34세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데 기인한다. 이는 여성의 증가하는 초혼연령과 결부하여 설명될 수 있는데, 1995년(25.3세) 대비 2008년(28.3세)의 초혼연령은 3.0세 증가하였다.

30) 김영택(2009). 「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사업의 성인지적 분석: 대상자 선정기준의 타당성 검토와 소요예산 추정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표 Ⅲ-3-5〉 합계출산율과 여성의 초혼 연령

(단위: 명/여성인구 천명당, 세)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합계출산율(명)	1.6	1.6	1.5	1.5	1.4	1.5	1.3	1.2	1.2	1.2	1.1	1.1	1.3	1.2
초혼연령(세)	25.3	25.5	25.7	26.0	26.3	26.5	26.8	27.0	27.3	27.5	27.7	27.8	28.1	28.3

자료: 통계청(200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바) 여성의 높은 피임실천 부담감

여아 100명당 남아의 수, 즉 성비(sex ratio)는 1995년 108.2명이었으나, 2009년 현재 106.4명으로 완화되어, 향후 여아와 남아의 출생기회가 평등하다고 할 수 있는 정상 성비 범위인 105-106 수준에 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첫째 아를 제외한 둘째 아와 셋째 아 이상의 경우 성비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셋째 아 이상의 경우 2009년 현재 성비가 114.2명으로 남아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히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 출산순위별 남아의 출생기회가 높은 것은 의학발전으로 인한 태아 성 감별행위가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성감별 남아선호사상은 무분별한 인공임신중절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피임실천율은 1976년(44.2%)에서 1994년(77.4%)까지는 정부의 가족계획의 일환으로 급진적으로 증가하다가, 그 이후부터 2009년 현재까지 80.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연령별 피임실천율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피임실천율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및 높은 경제활동율로 인한 결혼과 출산의 연기와 연관성이 있다. 한편, 성별 피임실천율의 경우 최근 남성(정관수술, 콘돔)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여성의 피임실천율 또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는 피임으로 인한 여성의 건강부담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Ⅲ-3-6〉 출생성비 및 피임 실천율

(단위: 남아 수/여아 100명당, %)

	1997	2000	2003	2006	2009
성비(명)	108.2	110.2	108.7	107.4	106.4
첫째아	105.1	106.2	104.9	105.6	105.1
둘째아	106.3	107.4	107.0	106.0	105.8
셋째아 이상	135.5	143.9	136.6	121.7	114.2
피임실천율(%)	80.5	79.3	84.5	79.6	80.0
15-24세	45.2	43.5	56.8	43.3	39.5
25-29세	60.6	57.0	64.8	51.3	50.1
30-34세	82.6	81.3	80.8	74.2	71.2
35-39세	91.1	89.3	90.8	88.0	88.4
40-44세	89.6	87.7	91.5	90.3	90.4
피임방법(%)					
여성					
난관수술	24.1	18.3	15.6	11.3	7.3
자궁내장치	13.2	13.7	16.1	15.0	16.1
먹는피임약	1.8	2.1	2.0	1.1	2.7
남성					
정관수술	12.7	13.0	15.7	19.7	21.0
콘돔	15.1	16.5	8.5	19.2	25.0
기타방법	13.6	15.7	26.6	13.3	18.2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정보시스템.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0년). 『한국의 성 인지 통계』.

사) 모성·영아사망 및 저체중아 출생 감소

모성 사망률은 1995년 인구 10만 명당 20.0명 대비 2007년 9.7명, 영아사망률은 동일기간 8.6명에서 3.5명으로 각각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는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이 제·개정되면서 거의 모든 여성들이 전문 의료기관에서 임신관련 진료와 분만 및 산후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국 보건소에서는 의료기관에서 분만한 영아와 산모를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위험요인을 사전에 조기 진단하고 있는 것도 모성 사망률과 영아 사망률의 지속적인 감소에 기여를 하였다. 그렇지만 저체중아 출생률의 경우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1995년 3.0% 대비 1.9% 증가한 4.9%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들의 생물학적 원인 보다는 사회 환경적 요인, 즉 결혼연령이 증가함에 따른 고령여성의 증가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

〈표 III-3-7〉 모성·영아사망률 및 저체중아 출생률

(단위: 명/출생아 10만명당, 명/출생아 1천명당, %)

	1995	1999	2003	2007
모성사망률(10만명당)	20.0	18.0	15.0	9.7
영아사망률(1천명당)	8.6	6.2	-	3.5
저체중아 출생률(%)	3.0	3.6	4.0	4.7

자료: 보건복지부(2008). 「영아·모성사망조사 보고서」; OECD(2010). 「OECD Health Data」.

아) 높은 제왕절개분만을 및 인공임신중절율의 미미한 감소

우리나라의 제왕절개 분만율은 2008년 현재 36.8%로 OECD 가입국(평균 10-20%) 가운데에서도 높은 편에 속하며, WHO 권고율(5-15%)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2000년 대비 2.6%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감소세가 미미한 수준이다. 인공임신 중절율도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감소 폭은 1996년(44.0%) 대비 2006년(34.0%) 10.0% 정도이다.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인공임신 중절율도 높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희망하는 자녀의 수에 도달하였기 때문이다. 이상은 기혼여성에서 나타난 수치이지만, 2005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된 「인공 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연도 총 인공임신중절 34만건 중 미혼자가 144천건(42.0%)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3-8〉 제왕절개분만을 및 인공임신중절을

(단위: 건, %)

	200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제왕절개율(%)	38.9	39.2	38.5	37.7	37.1	36.0	36.3	36.3
인공임신중절 경험률(%)	39.0	-	40.0	-	38.0	34.0	-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7년). 「여성통계연보」; 김승권 외 (2006).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외 (2005).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가) 여성의 HIV/AIDS 감염자의 지속적 증가

2007년 현재 우리나라의 내국인 HIV 감염자 누계는 5,323명으로 인구대비 0.1% 미만이다. 이는 OECD 회원국가 중에도 낮은 수준이다. 1995년까지 연 100명 미만의 신규 감염인의 수(HIV 양성판정)는 1996년부터는 100명을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 한해 신규 감염인은 744명이다. 이러한 증가추세를 유지할 경우 2010년에는 연간 1,0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³¹⁾ 비록 HIV 감염인이더라도 감염으로 인한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보통이며, 길게는 15년간 무증상으로 지속되는 경우가 있어 실제 HIV 감염인의 수는 더 많을 수밖에 없다. HIV 감염인 중 여성은 2007년 현재까지 462명으로 남성 대비 5.8% 수준이며, 1999년 이후 남성 대비 여성의 HIV 감염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경우 HIV 감염인이 남성 동성애자(42.5%)들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여성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HIV 검사 기회가 남성에 비해 낮다는 것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성간 혹은 동성간 성 접촉 이외 수혈/혈액제제 및 수직 감염과 마약으로 인한 HIV감염 비율은 남녀 모두 2.5%-3.0% 수준이다. 주목할 것은 HIV 감염인 중 13.4%(713명)는 AIDS 진단을 받았으며, 2007년 현재까지 여성 AIDS 환자는 60명으로 남성 대비 8.4%를 차지한다. HIV/AIDS 감염자 중 사망자는 총 980명이고, 전체의 18.4% 수준이다. 특히 사망자 수는 매년 증가하여 2007년 한 해 사망자 수는 150명이었다.

31) 질병관리본부(2006). 「HIV/AIDS 예방 및 대응 구가전략 개발에 관한 연구」.

〈표 Ⅲ-3-9〉 성별·연도별 HIV/AIDS 감염인 비율

(단위: 명, %)

구분		계	1987-1995	1996	1999	2002	2005	2007
HIV	계	5,323	517	105	186	398	680	744
	여성	462	64	12	26	35	40	43
	남성	4861	453	93	160	363	640	701
	성비	8.7	12.4	11.4	14.0	8.8	5.9	5.8
AIDS	계	713	27	14	35	42	79	75
	여성	60	5	0	1	5	6	4
	남성	653	22	14	34	37	73	71
	성비	8.4	18.5	0.0	2.9	11.9	7.6	5.3
사망	계	980	76	33	43	76	91	150
	환자	683	37	25	34	58	65	103
	기타	297	39	8	9	18	26	47

자료: 질병관리본부(2006). 「HIV/AIDS 예방 및 대응 국가전략 개발에 관한 연구」; 질병관리본부(2007). 「에이즈결핵팀 보도자료: HIV 감염인 전년대비 증가율 사상처음 감소」.

3) 여성관련 건강증진 사업 활성화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된 그해 9월부터 의료보험의 예방사업비 일부를 건강증진기금으로 각출하였다가, 1997년 5월부터는 담배에 대한 건강증진기금을 각출하여 1998년부터는 본격적인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기금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³²⁾. 기금에 의한 건강증진사업 초기에는 주로 민간 보건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지원하였고, 보건소의 경우 지역 거점 보건소에 국한하여 지원되었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 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가 전망됨에 따라 비용 효과적인 전국 단위의 국민 건강 증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국민 건강증진 종합계획(Health Plan 2010)안을 2001년 확정하여, 2003년부터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등의 건강 생활 실천사업, 암 관리, 고혈압, 에이즈·성병 관리, 정신보건 등의 예방 중심의 건강 관

32) 이규식 (2010).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 중간평가 및 수정보완 결과. 대한예방의학회

리, 모성 보건, 영유아 보건 등의 인구 집단별 건강 관리, 그리고 건강 환경 조성 총 4개 중점분야 24개 중점 과제를 선정하여 전국의 보건소를 중심으로 사업이 실시되었다. 이는 그 동안 수동적이고 사후치료 위주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치우쳤던 보건 정책을 보다 적극적인 개념인 생애주기 관점에서 사전 예방적 건강증진 정책으로의 변화를 시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모자보건 관련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으로 영유아기에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록관리, 저소득 영유아 검진, 성장발달 상담 등의 사업을, 청소년기에는 성교육 및 성상담 등의 사업을, 청·장년기에는 올바른 출산인식, 홍보 및 생식건강관리 등의 사업이 지역특성에 맞게 정착되어 원활히 운영 되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

최근에는 여성과 아동의 건강사회 구현을 위해 2009년 「모자보건법」 개정내용을 반영한 가족건강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본 사업은 가임기 여성에게는 인공임신 중절 예방 홍보 등 생식건강증진 사업을, 임신부에게는 철분제 지원, 표준 모자보건 수업 발급, 모유수유 클리닉, 산후조리원 관리 강화 등 건강지원사업을, 그리고 영유아 및 아동에게는 선천성대상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 신생아 집중 치료실 지원, 취학 전 아동 실명 예방 지원 사업 등이 실시되고 있다.

다. 향후과제

첫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인지적 관점의 생애주기별 통계생산이 체계화되어야 할 것이다. 북경행동강령이 채택된 이후 그 동안 여성의 건강관련 정책 관심사는 이전의 가족계획 사업을 중심으로 한 여성의 임신과 출산 등 생식건강이라는 특정 건강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물론 생식건강 지원 사업을 통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여성과 영유아의 건강의 위험원인을 파악하여 이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었다. 그러나 특정시기의 여성으로 제한하는 생식보건사업은 여성의 전인적인 건강을 지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서, 부분적인 접근이 아닌 성 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의 전 생애 과

정 접근을 통한 건강증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정부 예산을 지원하여 생산되고 있는 통계 자료들을 통해 여성의 사회적 성 역할과 이로 인한 건강문제를 관찰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는 통계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결정자 및 이들 자료를 필요로 하는 관계자에게는 자료 접근도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사회적 성을 고려한 통계자료를 생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여성의 건강문제에 대한 생애주기별 건강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통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계획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젠더간 건강 형평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에 건강과 관련하여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가 바로 ‘건강 형평성’ 문제이다. 즉, 건강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득과 계층에 따라 건강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으로, 최근 이와 관련된 수많은 연구결과들이 생산되었다. 이에 따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득과 계층이 낮은 인구집단을 중심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개발 및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현재 건강불평등의 주 대상은 경제위기 이후 사회구조 조정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비정규직 여성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과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생식건강, 독거 여성노인과 여성 가구주 가구 및 여성 한부모가구 등이며, 이들의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심도 깊은 연구 및 관련 정책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셋째, 여성의 생식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OECD 회원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초저출산 국가, 즉 출산의 회복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국가로 전락하고 있다. 그 동안 국가차원의 출산장려 정책은 의료, 주택, 교육, 고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해 부담이 높은 것은 이를 지원하는 범위와 크기가 여전히 일회성의 금전적 지원 정책이라는 점도 있겠으나, 여성에 대한 전통적 성역할을 강하게 요구하는 가부장적 사회 제도상의 문제가 더 크다. 가부장적 사회제도는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만 부여하고, 더 나아가 여성의 태아에 대한 생명권과 선택권에도 관여하여 여성의 성을 통제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 높은 인공임신 중절률은 여성의 성과 재생산을 분리시키고, 나아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보호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 시대는 과거와는 달리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는 친양육 정책이 요구되는 시대이다. 태아의 생명과 선택이라는 상호 모순되는 사회적 목소리를 인정하면서, 이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다초점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³³⁾.

넷째,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양적확대와 더불어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ODA 중점 지원분야로 보건의료에 대한 지원이 꾸준히 확대되어 2009년 현재 보건의료 분야 지원 규모는 ODA 전체 재원의 16.2%(6,400만 불)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보건의료 ODA 사업의 상당 부분은 병원설립 및 의료장비 보급 등의 기초의료시설 확충(41.0%)에 중점을 두고 있어 모자보건 증진, HIV/AIDS 및 기타 전염병 예방 등 MDGs 달성과 직결된 분야로 사업과 재원지원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지난날 축적한 경험(보건소 모자보건요원 배치, 산전산후 진찰과 분만 시행, 기생충·결핵퇴치 등 질병관리 인프라 구축, 예방접종사업 및 전염병 관리 등)을 공유할 수 있는 보건의료 분야에 집중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보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영양, 식수, 위생, 고용, 교육 등의 분야에 대한 연계지원도 확대되어야 한다. 이상의 재원지원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재원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ODA 보건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KOICA의 내외적 역량 강화 및 보건 의료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통한 향후 보건의료 원조정책에 근거중심(evidence-based)의 피드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0년 2월 KOICA는 성인지 담당인력을 충원하여 여성을 수혜 대상으로 하는 ODA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위해 사업단계별 성 인지적 수행을 위한 지침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33) 양현아 (2010). 낙태에 대한 다초점 정책의 요청.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연구 콜로키움 회의자료.

4. 여성에 대한 폭력³⁴⁾

북경행동강령 전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시키기 위한 종합대책을 강구한다. ■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과 결과 및 예방대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를 추진한다. ■ 여성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인신매매로 인한 폭력의 피해자를 지원한다.

가. 국내 현황

북경행동강령의 ‘여성에 대한 폭력’ 부문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시키기 위한 종합대책을 강구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과 결과 및 예방대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인신매매 근절에 있어서는 성매매·인신매매로 인한 폭력의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한국에서의 최근 이행상황을 점검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5, 6차 이행 보고서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 권고 중 주요 내용을 보면, 가정폭력을 포함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배우자 강간의 처벌 및 강간죄와 관련한 친고죄 폐지를 요청하였다.

그 외에도 인신매매와 성매매 착취에 대한 데이터 수집·분석, 인신매매범과 성매매 착취자를 기소·처벌하여 협약 제6조를 완전히 이행할 것, 국제결혼 브로커의 활동규제, 외국인 여성들을 국제결혼 브로커, 인신매매자, 배우자로부터의 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추가 정책 마련을 권유하고 있다.

한국의 가정폭력 실태에 관련한 조사에 의하면 2007년 현재 40.3%로 두 가구 중 하나의 형태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에 신고 된 건

34) 여성에 대한 폭력은 본원의 변화순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다.

수에 의하면 2009년 현재 11,025건수로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가정폭력 중 부부폭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72.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발생비 (인구10만명 당 발생건수)를 보면 1999년의 18.9에서 2008년의 33.4로 76.7% 증가하였다. 성매매업소는 2008년 935개로 법 시행 이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성매매여성의 수 역시 2008년 2282명으로 2001년도의 절반 이하로 크게 감소하였다. 가정폭력관련법은 19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36호로 제정되었고, 성폭력방지법은 1994년 1월 5일 법률 제4702호로 제정되었으며, 성매매관련법은 2004년 3월 22일 법률 제7196호로 제정되었다.

이에 북경 여성행동강령이 마련된 지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과 관련한 성과와 문제점을 검토하여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단 여기서는 직장내 성희롱과 인신매매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사회에서의 인신매매는 성매매에 포함해서 다루고 있으며,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또 다른 범주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지난 15년간 주요정책 및 성과

1) 가정폭력 관련법의 제정과 피해자 지원의 제도화

경찰에 신고된 가정폭력의 발생건수는 2000년 12,893 건수에서 이후 점점 증가하여 2003년 16,408 건, 이후 점점 감소하여 2007년 11,744 건, 2009년 11,025 건을 보고하고 있고, 이 중 아내학대가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이후 10여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법제도 접근의 어려움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인지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가정폭력은 더이상 사적인 개인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임에 공감하고 있다.

〈표 Ⅲ-4-1〉 가정폭력 발생유형별 현황

(단위: 건, %)

구분	발생건수	아내학대	남편학대	아동학대	노인학대	기타
2000	12,893	10,578 (81.5)	218 (1.7)	209 (1.6)	389 (3.0)	1,589 (12.3)
2001	14,585	12,323 (84.5)	347 (2.4)	154 (1.1)	306 (2.1)	1,455 (10.0)
2002	15,151	13,144 (86.7)	239 (1.6)	89 (0.6)	230 (1.5)	1,449 (9.6)
2003	16,408	14,306 (87.2)	297 (1.8)	86 (0.5)	258 (1.6)	1,461 (9.0)
2004	13,770	11,487 (83.4)	290 (2.1)	63 (0.5)	235 (1.7)	1,695 (12.3)
2005	11,595	9,549 (82.4)	276 (2.4)	50 (0.4)	178 (1.5)	1,542 (13.3)
2006	11,471	9,217 (79.5)	299 (2.6)	50 (0.4)	223 (1.9)	1,772 (15.4)
2007	11,744	9,117 (77.6)	345 (2.9)	52 (0.4)	249 (2.1)	1,981 (16.9)
2008	11,461	8,349 (72.8)	353 (3.1)	59 (0.5)	213 (1.9)	2,487 (21.7)
2009	11,025	7,942 (72.0)	470 (4.3)	57 (0.5)	190 (1.7)	2,366 (21.5)

자료: 경찰청(각 년도).

가정폭력에 대한 전국 조사결과에 있어서 2004년 전체 부부폭력의 발생률이 44.6% 임에 비해 2007년은 40.3% 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발생률에 대한 조사에 있어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사대상의 선정 기준이나 규모의 차이 때문이며, 따라서 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이중에서 남성의 아내폭력은 37.3%에서 33.1%로 대다수의 폭력이 남성의 아내 폭력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정서 폭력은 물론이거니와 신체적 폭력의 비중도 13.2%에서 9.4%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부부 폭력 중 여성에 대한 폭력은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Ⅲ-4-2〉 전국가정폭력 실태조사에 의한 지난 1년간 가정폭력 발생변화
: 2004년과 2007년 비교

(단위: %, 명)

	구분	전체 가정폭력 발생률	폭력유형별 가정폭력 발생률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방임	성적 폭력
2004년	부부폭력	44.6	42.1	15.7			7.1
	남성의 아내폭력	37.3	34.1	13.2			6.4
	여성의 남편폭력	32.6	31.2	8.5			1.8
	상호폭력	25.3	23.2	5.9			1.0
2007년	부부폭력	40.3	33.1	11.6	4.1	19.6	10.5
	남성의 아내폭력	33.1	26.4	9.4	3.2	14.3	9.5
	여성의 남편폭력	27.1	22.5	6.4	1.9	13.8	3.6
	상호폭력	19.9	15.9	4.2	1.0	8.5	2.6

자료: 변화순외(2004).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여성부.; 김승권외(2008). 2007년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여성부.

가정폭력관련법은 1997년 제정되었으며,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으로 나뉘어 진다. 가정폭력관련 정부 정책의 성과로는 법률에 근거하여 일반여성뿐만 아니라 장애인, 결혼 이주여성을 포함하여 가정폭력 상담소, 피해자 보호시설, 여성 긴급전화 1366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가정폭력 상담소는 2009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27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82개소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가정폭력 상담소는 가정폭력의 피해를 신고를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을 하고 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 또는 의료기관이나 피해자 보호시설로의 인도, 법률구조기관 등에 연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Ⅲ-4-3〉 가정폭력상담소 현황

연도 말 기준, (단위: 개소, 건, 명)

연도별	개소수	상담실적(건)			개소 당 평균상담실적
		계	가정폭력	기타	
2006년	372	283,705	138,949	144,756	763
2007년	316	295,825	135,386	160,439	939
2008년	303	307,851	130,921	176,930	1,016
2009년	275	307,009	132,227	174,782	1,129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2009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6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62개소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피해자와 동반자녀에게 6개월에서 2년까지 무료숙박 제공, 신체적·정신적 안정지원,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요청,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여성 긴급전화 1366은 2009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1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16개소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여성 긴급전화 1366은 가정폭력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전화를 통해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특수한 전화 1366을 365일, 24시간 운영하여 여성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여성 긴급전화 2009년 상담건수는 190,859 건이며 전년도인 158,635 건 보다 20% 증가하였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가정폭력 피해자 직업훈련 실시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09년 프로그램 참여 및 지원인원은 7,700여명이었다.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피해여성들과 그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 임대주택(다세대, 다가구)을 별도 물량으로 확보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공동생활가정 형태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저가에 임대하고 있다. '09년 기준으로 총 54호, 90가구에 214명이 생활하고 있다. 이중 가정폭력 피해자 입주현황은 49호, 79가구에 196명이 생활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여성에 대하여 무료로 법률구조를 제공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통해 무료 민사·가사 소송대리, 형사 무료변호, 법률상담, 법률계몽사업(생활법률 강연 및 이동법률 상담, 무료 대서 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정폭력관련법이 1997년 제정되어 시행된 지 13년이 흘렀다. 이 법이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는 여러 기준에서 따져 보아야 하겠지만, 이 법이 장치로 두고 있는 임시조치, 보호처분 등의 제도들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가 하는 것이 하나의 법 활용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의하면, 가정보호사건 송치비율이 2003년 21.3%, 2005년 15.6%, 2007년 19.3%, 2008년 16.1%이고, 반면에 기소율을 보면, 2003년 19.1%, 2004년 35.7%, 2005년 19.2%, 2008년 15.0%로 나타났다. 기소율 역시 그다지 높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가정보호사건 송치율이 2003년 21.3%에서 2008년 16.1%로 낮아진 것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검찰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 현황은 2005년 868명, 2007년 177명, 2008년 448명, 2009년 379명으로 나타나 줄고 있는 상황이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가정폭력피해자들은 가정보호사건에 의존하지 않고 피해를 감수하거나 개인적으로 가정폭력피해 상황을 해결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현재 가정폭력사건이 당면하고 있는 가정폭력사건 처리의 현 주소라고 할 것이다.

경찰의 사건처리 현황을 보면, 가정폭력사건처리에서 구속율의 감소와 가정보호사건의견 송치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속율은 2000년에는 4.8%이나 2009년에는 0.7%로 감소하였고, 가정보호사건의견 송치 비율도 2000년에는 29.4%이나 2009년에는 6.0%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구속사건의 비율이 감소한 것의 주요 원인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처벌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일반 형사 사건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려는 경향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경찰의 가정보호사건 의견송치비율이 3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3년 이후 구속율 감소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 법원에서 2003년 이후 구속제도를 엄격히 제한적으로 운영하려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구속율의 감소는 검찰 기소율의 감소와 연결되는 것이다.

한편 가정보호사건의견 송치비율은 2001년 31.3%를 정점으로 해서 감소하고 있다. 그리하여 2009년에는 전체 검거건수의 6.0%만이 가정보호사건의견 송치를 하고 있는데, 매우 소극적임을 볼 수 있다.

〈표 Ⅲ-4-4〉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경찰의 조치현황(2000년-2010년)

단위: 건, 명(%)

구분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치			가정보호사건의건 송치	
			구속	불구속	기타(계도)	건수	인원
2000	12,983	14,105 (100.0)	678 (4.8)	13,380 (94.9)	47 (0.4)	3,813 (29.4)*	4,404
2001	14,585	15,557 (100.0)	691 (4.4)	14,760 (94.9)	106 (0.7)	4,559 (31.3)	4,818
2002	15,151	16,324 (100.0)	586 (3.6)	15,127 (92.7)	611 (3.7)	3,702 (24.4)	4,083
2003	16,408	17,770 (100.0)	496 (2.8)	16,787 (94.4)	487 (2.7)	4,186 (25.5)	4,459
2004	13,770	15,208 (100.0)	329 (2.2)	13,969 (91.9)	910 (6.0)	2,587 (18.8)	2,616
2005	11,595	12,775 (100.0)	181 (1.4)	11,800 (92.4)	794 (6.2)	1,881 (16.2)	2,022
2006	11,471	12,837 (100.0)	113 (0.8)	12,011 (93.6)	713 (5.6)	1,722 (15.0)	1,903
2007	11,744	13,165 (100.0)	87 (0.7)	12,587 (95.6)	491 (3.7)	1,455 (12.4)	1,629
2008	11,461	13,143 (100.0)	77 (0.6)	12,748 (97.0)	318 (2.4)	940 (8.2)	1,044
2009	11,025	12,493 (100.0)	87 (0.7)	12,064 (96.6)	342 (2.7)	657 (6.0)	756

* 건수는 검거건수에 대한 비율임.

자료: 경찰청 (각 년도).

2) 성폭력 관련법의 제정과 성폭력 범죄자의 처벌 강화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는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성폭력 범죄의 발생비를 보면 1999년의 18.9에서 2008년의 33.4로 14.5% 포인트 증가하여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4-5〉 성폭력범죄의 발생건수 및 발생비

(단위: 건)

연도	A	B	C	A+B+C	성폭력 발생비	전체범죄 내 성폭력범죄 비		참고통계: 강도강간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		전체 대비	형법 대비	발생 건수	발생 비
1999	6,410	2,420	-	8,830	18.9	0.5	1.9	221	0.5
2000	6,982	3,207	-	10,189	21.7	0.5	1.9	302	0.6
2001	6,911	3,584	-	10,495	22.2	0.5	1.9	350	0.7
2002	9,435	-	2,253	11,688	24.5	0.6	1.5	419	0.9
2003	10,365	-	2,119	12,484	26.1	0.6	1.5	414	0.9
2004	11,105	-	2,863	13,968	29.1	0.7	1.7	181	0.4
2005	11,757	-	1,874	13,631	28.3	0.7	1.7	117	0.2
2006	13,573	-	1,584	15,157	31.4	0.8	1.8	70	0.1
2007	13,634	-	1,752	15,386	31.8	0.8	1.8	77	0.2
2008	15,094	-	1,140	16,234	33.4	0.7	1.8	45	0.1

*주: 발생비는 인구10만명당 발생건수.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

여성이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에 대한 실태조사를 분석하면, 강간·강간미수는 19세에서 64세 여성 1,000명당 피해자 수가 2.2명이고 피해건수는 6.1이다. 심한 추행은 성인여성 1,000명당 4.7명, 15.1건이 발생하였고, 가벼운 추행은 성인여성 1,000명당 24.6명, 52.5건이 발생하였으며, 음란전화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피해율을 나타내는 유형으로 1,000명의 성인여성 중 32.0명이 83.4건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Ⅲ-4-6〉 여성의 성폭력 피해율

성폭력 유형	N	범죄피해 발생건수			1,000명당 피해율(%)	
		피해사례	피해건수	평균피해건수	피해사례	피해건수
강간·강간미수	6,880	15	42	2.8	2.2	6.1
심한 추행	6,880	32	104	3.3	4.7	15.1
가벼운 추행	6,881	169	361	2.1	24.6	52.5
성희롱	6,880	77	240	3.1	11.2	34.9
성기노출	6,880	132	251	1.9	19.2	36.5
음란전화	6,880	220	574	2.6	32.0	83.4
스토킹	6,882	58	309	5.3	8.4	44.9
부부강간	6,880	67	294	4.4	9.7	42.7

*표본수(N)는 무응답을 제외한 수치임. 1,000명당 피해율=피해사례(건수)/N×1,000
 자료: 김승권 외(2008). 「2007년 전국 성폭력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성폭력 관련법은 1994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로 제정되었으며, 2010년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으로 나뉘어 제정되었다.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각종 성폭력 범죄가 점차 흉폭화·집단화·지능화·저연령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 범죄가 빈발하여 기존의 법체계로는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 또는 강화하고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는 수사·재판등 사법처리 절차에 있어서 특례를 인정하도록 하며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특히 여성과 미성년자를 성폭력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1994.1.5 제정).

특히 이 법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몰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 등 당시 사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추가하였고,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뢰관계에 있는 자 동석규정과

18세 미만자의 보호, 교육 담당자들의 성폭력 범죄 사실 신고의무화, 성폭력 피해자 치료 전담의료기관 지정 시 민간 진료시설 포함 등의 도입이 특징적인 부분이다.

2008. 6. 13 개정에서는 최근 성폭력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13세 미만의 여자 아동을 납치 또는 유인하여 성폭행한 후 살해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항문에 손가락 등을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등 아동을 상대로 하는 성폭력 범죄자를 엄단하기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2010년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 각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분리·제정하였다(윤덕경, 2010).

새로 제정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4.15)은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 추행 등의 범죄에 대하여 유기징역의 하한을 높임으로써 처벌을 강화하였고, 처벌 대상이 되는 친족의 범위도 4촌 이내의 인척으로 확대하였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였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는 형법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디엔에이(DNA)증거 등 입증 증거가 확실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도록 함으로써 성범죄의 특수성으로 인한 증거 확보의 어려움으로 처벌망을 피해갔던 억울한 사례들을 줄이고자 하였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만을 인터넷 신상정보공개 대상으로 하던 것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도 인터넷에 등록·공개하고 성범죄자 정보를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인근 주민들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2010.7.23에는 16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만 19세 이상의 자에게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시행 2011.7.24). 이 법은 성폭력 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성범죄자에 대한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의 제정(2007.4.27)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성폭력 범죄자 중에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여 행적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범죄의 재발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차 개정(2009.5.8)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되었다. 2010년 개정으로는 성폭력범죄로 이미 확정판결을 받아 현행법으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도 형 집행의 종료 등이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자에게 이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³⁵⁾.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전국의 성폭력상담소는 2009년 현재 총 199개소이며, 개소 당 평균 상담실적은 2006년의 592건에서 2009년 775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표 Ⅲ-4-7〉 성폭력상담소 현황

연도말 기준, (단위: 개소, 건, 명)

연도별	개소수	상담실적			개소당 평균상담실적
		계	성폭력상담	기타상담	
2006년	202	119,655	57,865	61,790	592
2007년	202	124,591	58,628	65,963	617
2008년	196	145,247	69,115	76,132	741
2009년	199	155,902	67,221	88,681	775

35) 여성가족부(2010). 아동·여성보호종합대책(미간행).

3) 성매매 방지법 제정과 성매매 피해자 지원의 제도화

2004년 9월 23일 제정된 성매매 방지법은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로 나뉘어진다. 성매매 방지법 시행 이후 성매매를 둘러싼 논쟁이 시작되었다. 크게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긍정적인 입장은 범죄로서 성매매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다는 점, 성매매 관련한 법집행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부정적인 입장은 성매매 방지법은 도덕적인 법이므로 이는 국가 형벌권 남용이라는 입장, 성매매는 사회적 필요악이라는 입장, 성매매방지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 성매매를 성노동으로 보는 입장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해방 이후 줄곧 우리나라 정부는 성매매 금지주의 정책을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성매매가 이루어졌던 집결지에 대해 정책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그러나 성매매 방지법을 계기로 집결지에 대한 단속이 시작되어 업소의 폐쇄로 이어졌다. 경찰과 사법당국의 강력한 법집행이 큰 역할을 하였다. 2004년 이후의 집결지 단속과 축소에는 성매매 축소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전국 성매매 실태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집결지 업소뿐만 아니라 유흥업소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겹업형 성매매 업소의 규모는 2002년도 57,938개에서 2007년에는 44,804개로 감소하였고, 성매매 여성의 수는 해당년도에 각각 241,114명에서 147,392명으로 감소하였다³⁶⁾. 2002년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집결지, 겹업형, 기타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한 성매매 여성의 수는 329,218명인데, 2007년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267,707명으로 감소하였다³⁷⁾.

집결지 및 성산업의 축소와 성매매여성의 감소는 성매매 방지법 제정 이후 법집행기관의 적극적 단속으로 가능했다. 경찰청은 성매매 방지법 시행 이후 성매수 남성을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성매매 관련 업소의 영업장부와 신용카드전표를 추적수사 등 관련 범죄 증거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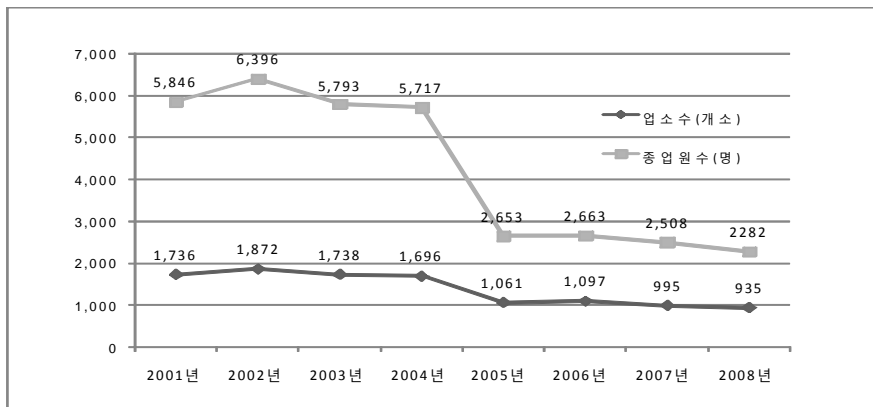
36) 변화순 외(2007). 「2007전국 성매매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37) 변화순 외(2007). 「2007전국 성매매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있다³⁸⁾. 그 결과 성매매로 검거된 인원은 성매매 방지법 시행이후 급격히 증가한다. 성매매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004년 16,947명에서 2006년도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2006년에 34,795명, 2007년에 39,236명, 2008년도 51,575명이 되었다. 2009년도 8월까지의 검거인원이 48,735명인 것으로 보아 2009년도 총 검거인원 수는 2008년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거된 성매매 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2004년도 성매매 알선으로 단속된 사람의 수는 2,824명인데, 2008년도에는 6,032명으로 급증했고 2009년도에는 이 수치를 훨씬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성매수자의 경우는 해당 년도에 각각 10,180명에서 39,071명으로 4배가량 증가하였다. 성매매여성은 2004년 3,943명에서 2008년 6,472명으로 증가하였다. 유형별 성매매사범 통계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성매매알선업자와 성매수 남성에 대한 단속에 더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정책으로 인한 성과도 거두었다. 성매매방지법에서는 ‘성매매피해자’ 및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개념이 도입되어 이들에 대한 수사 및 재판상의 보호절차가 규정되어 있고, 성매매 관련 채권 무효 조항에 근거하여 수사기관이 확인하여 집행하도록 하였다.



자료: 경찰청(2009). 내부자료.

[그림 III-4-1] 유형별 성매매사범 단속 현황(2004년-2009년 8월)

38) 경찰청 (2009).

성매매 방지법의 도입은 성매매 여성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업주와의 관계에서 성매매 여성은 보다 평등한 지위를 확보하였고, 경찰 단속 강화와 채권무효 관련 조항 등으로 성매매 여성은 업주의 지배와 통제를 덜 받게 되었고, 수입에 대한 업주의 심각한 착취도 다소 개선되었다³⁹⁾. 성구매자 역시 성매매의 불법성을 인지하면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심각한 폭력과 모욕 행위를 하는 경향이 감소하였다. 성매매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단절되고 고립되어 있는데, 탈성매매와 관련된 정부의 각종 전달체계와 보호·자활지원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성매매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상담실적으로 보면 2008년 8,848명의 52,502건이며 <표 III-4-8>, 구조 및 자활 서비스 제공은 2008년 20,432건으로 나타났다 <표 III-4-9>.

<표 III-4-8> 성매매 피해자 보호·지원 상담실적

(단위: 건, 명)

구분	2005	2006	2007	2008
건수	55,461	54,743	49,220	52,502
인원	16,935	9,428	8,178	8,848

<표 III-4-9> 구조·자활 서비스 제공 실적

(단위: 건)

연도	계	의료지원	법률지원	직업훈련·진학교육 지원	생계지원
2005	43,409	13,935	24,170	2,597	2,707
2006	42,648	18,841	17,343	4,299	2,165
2007	37,531	15,403	15,883	3,735	2,510
2008	20,432	16,325	16,220	2,311	1,752
계	160,196	64,504	73,616	12,942	9,134

39) 윤덕경·변화순·박선영(2005). 「성매매방지법상 성매매피해자에 관한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성매매피해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2005년 11월 여성인권 중앙지원센터 종이학 개소식을 시작으로 2009년 4월에는 재단법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 확대·개편되었다. 이 기관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여성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 연구, 조사, 인프라확대를 위한 연계망 구축 등의 사업을 통해 성매매를 포함하여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네트워크 구축, 상담원 교육 및 활동가 프로그램, 성매매 방지 및 예방홍보, 성매매 방지 예방을 위한 정책개발, 성매매 여성지원 정책개발, 노동부 부처 공모형 사회적 일자리 지원 사업, 탈매매 여성 취업지원 사업, 지원시설 및 상담소간 종합연계망 구축 등의 사업을 해오고 있다.

최근 신종 성매매 형태로 주택가에서도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집결지 업주와 성매매 여성들이 연결되어 도심의 주택가로 침투하여 점조식 형태로 소규모 게릴라식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택가에 침투한 성매매 업소들은 청소년의 탈선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대책 방안이 시급하다. 학교에서의 성교육의 실효성이 낮고 각종 유해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실제 주거지역에서의 성매매 관련 전단지 및 홍보를 접하게 되고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여 탈선으로 이끌 수가 용이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주택가로 교묘히 침투된 성매매 사업은 단속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성매매 업소인 오피스텔 경우 단속이 있다하더라도 카드키 등으로 되어 있어 경찰도 입장하기가 불가능하다.

다. 향후과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시키기 위한 종합대책에서 한국은 이제 가정폭력, 성폭력, 그리고 성매매 대책 관련 전담부서의 설립과 더불어 종합적 대책방안은 마련되었다. 그러나 정책의 이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가해자 처벌에 대한 정책집행 및 피해자 보호의 내실화와 더불어 폭력근절을 위한 예방이 강화되어야 한다.

첫째, 가정폭력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의 긴급 임시조치권 도입 및 ‘피해자 보호명령제도’의 도입을 통한 가해자 처벌의 강화가 요구된다. 한

국은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 이후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지만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기소율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보호 사건 송치비율이 2008년 16.1%로 낮아진 것은 가정폭력사건이 줄어들거나 형사 사범이 대응을 잘 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가정보호사건에 의존하지 않고 피해를 감수하거나 개인적으로 가정폭력피해 상황을 해결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현 가정폭력방지법 중에서 경찰의 초기 개입시 실무권한 강화를 위해 긴급임시조치권 도입 및 ‘피해자 보호명령제도’의 도입을 통한 가해자 처벌의 강화가 요구된다. 피해자 보호명령제도의 도입을 통해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를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보호의 실효성 제고할 수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피해자보호명령 사건의 정의, 관할, 내용, 임시보호명령, 이행실태 조사조항 등 포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성폭력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신속한 범인검거 및 피해자 구조를 위해 경찰의 범인의 조속한 검거 위한 수사 전담체계 구축, 실종아동 조기 수색 및 발견체계 구축, 아동 성폭력사범 엄정 대처, 재범 방지를 통한 아동 성범죄 사전 예방, 피해자에 대한 ONE-STOP 통합 지원이 시급하다. 폭력과 관련해서는 각종 성폭력범죄가 점차 흉폭화·집단화·지능화·저연령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범죄가 빈발하여 기존의 법체계로는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 또는 강화하였지만 여전히 성폭력 범죄율은 증가하고 있다. 이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은 마련되었지만 예방의 차원에서 지역사회가 힘을 모을 단계이다.

셋째, 성매매정책에 있어서 퇴폐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 구매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정책의 내실화가 요구된다.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정책으로 인한 성과도 거두었다. 성매매방지법의 도입은 성매매여성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업주와의 관계에서 성매매여성은 보다 평등한 지위를 확보하였고, 경찰 단속 강화와 채권무효 관련 조항 등으로 성매매 여성은 업주의 지배와 통제를 덜 받게 되었고, 수입에 대한 업주의 심각한 착

취도 다소 개선되었다. 그러나 성매매관련 업소의 변종으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심각하다. 따라서 변종 퇴폐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주거지역 및 학교주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불건전한 숙박 및 위락시설의 건축용도 변경 및 건축을 제한한다는 조례의 제정 및 엄격한 시행과 더불어 이러한 조례를 위반했을 경우 강력한 법적 제재 및 형사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구매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정책의 내실화가 요구된다.

5. 여성과 무력분쟁⁴⁰⁾

북경행동강령 전략목표

- 분쟁해결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증대하고 무력 및 기타 분쟁상황 또는 외국 점령 하에 살고 있는 여성들을 보호한다.
- 과도한 군사비를 감축하고 무장가능성을 통제한다.
- 비폭력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분쟁상황에서의 인권유린 사례를 감소한다.
- 평화문화를 조성하는 데 여성의 기여를 도모한다.
- 피난민 여성, 국제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기타 난민여성과 국내난민 여성에 대한 보호, 지원과 훈련을 제공한다.
- 식민지 및 비자치 지역 내의 여성에게 지원을 제공한다.

가. 국내 현황

1995년의 북경여성대회에서 여성들은 무력분쟁 분야에서 여성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북경행동강령을 통해서 “과도한 군비를 줄이고 무장가능성을 통제”하고(E2), “비폭력적 형태의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분쟁상황에

40) 여성과 무력분쟁은 본원의 김원홍 연구위원이 집필하였다.

서 인권남용의 사건을 감소”하고(E3), “평화문화를 배양하는 데 여성의 기여를 도모” (E4)하기로 하였다.⁴¹⁾ 한국의 여성평화운동에 접근하려고 할 경우, 우리는 통일운동을 언급하지 않고는 평화운동을 거론하기가 어렵다. 통일운동은 우리 평화운동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운동이 평화운동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작금의 통일운동이 서서히 화해·협력 및 평화체제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평화운동에 근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체로서 평화운동이 되기는 힘들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 한국의 현실에서는 통일운동이 서서히 평화운동과 결합하는 방식을 택해야 할 것이다.⁴²⁾

본 주제인 한반도 평화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무력분쟁국이 아닌 한국은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로서 분단극복을 위한 노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남한측은 2000년 최초로 남북정상 간의 역사적 만남을 통해 발표된 6. 15 남북공동선언, 2007년의 10. 4 공동선언 등을 통하여 남북대결의 시대를 화해협력시대로 돌리고 상호인정과 협력을 통해 남북의 재통합을 평화적으로 달성하도록 노력하여 왔으나, 현 정부 들어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남북한의 긴장은 어렵게 이룩한 남북한의 대화의 통로를 차단하고 교류와 협력에 있어서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있다. 최근 들어 북측은 개성의 남북경협사무소 남측 직원철수, 북한 미사일 발사실험, 북한 군부의 남북대화 중단 천명, 천안함 사건 등을 저지르는 등의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이후 남북관계에는 단절과 냉각기가 찾아 왔다.⁴³⁾

그간 우리나라의 1995년 북경여성대회에서 채택한 여성들의 무력분쟁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첫째가 분단극복을 위한 노력이다. 이를 위하여 여성계는 남북한 교류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1988년 ‘7.7선언’과 1990년 남북교류협력법이 제정되면서 미약한 가운데서 남북한 여성교류도 활성화 되어 왔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41) 안정애(2004.6.1). 「여성과 무력분쟁」,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의 여성정책 10년 돌아보며 내다보며: Beijing + 10 기념심포지엄 자료집」, p.131.

42) 정현백(2000). 「여성평화운동의 과제와 전망」, p.217.

43) 서보혁(2009). 「연계와 단절의 딜레마에 직면한 이명박정부의 초기 대북정책: 초기 처방의 필요성과 대안」, KNSI 현안진단, 제114호, p.1-2.

다음과 같다. 1990년 이래 2010년 8월까지 남북한 여성교류가 성사된 것을 안전별로 살펴보면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세미나 4건과 “일본의 전후처리 문제에 관한 토론회 및 실무협의” 9건, “남북여성대표자 회의” 4건, 개인 또는 여성단체를 통한 만남 ① 남북 여성교류 확대방안 토론회 및 협의, ② 북측 여성계 대표 접촉, ③ 노동당기념행사 참관차 방북시 접촉, ④ 남북한 및 중국 조선족 여성의 삶 관련 학술회의, ⑤ 「남북여성하나되기」 토론회 개최(2.21) ⑥ 6.15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여성 통일 토론회, ⑦ 한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연대하는 여성들 회의 참가, ⑧ 6.15 공동선언 실천과 평화를 위한 남북 여성 통일대회) 9건으로 총 26건이 전부였다.

이중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세미나와 “일본의 전후처리 문제에 관한 토론회”, “중군 위안부 아시아 연대회의”, “남북여성대표자 회의”는 남북한이 공동관심을 크게 불러일으키는 주제였다는 측면과 교류방법에 있어 남북만의 행사가 아니라 일본과 기타 국가들이 함께 한 국제행사여서 남북 관계가 침체화되지 않았으며 국제회의이므로 상호자제가 가능했던 점, 남한의 주최측이 재야단체였던 점 그리고 주최 측의 남북여성교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행사 성사의지 및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 지원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 또는 여성단체를 통해 이루어졌던 주제의 경우 학술적이거나 북한측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분야의 것들이었다. 이외에도 성사되지 않았으나, 남한측이 제안하고, 북한측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분야로는 “판소리의 밤 연주회”, “남북여성 토속음식 경진대회” 등이 있었는데, 이는 비정치적인 성향이 많은 분야로서 북한측이 자신감을 갖고 있는 분야들이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남북여성교류를 시도한 예와 성사된 예를 분석하여 볼 때, 남북여성교류의 필요성에 대한 깊은 인식과 계획의 성사를 위한 적극적 의지와 다방면의 노력이 요구되는데, 방법상으로는 남북왕래 행사에만 집착하기보다는 제3국 접촉과 국제기구 등을 통한 상호 정보교환과 개인적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남북만의 행사는 정치적 갈등 또는 성사 가능성 여부 불확실 등의 무리가 있어 다국간 여성행사에 함께 참여하는 방법이나 제3국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참여하는 방법의 모색이 중요하다

다고 판단된다. 현재 분단극복과 관련하여 활동 중인 여성단체는 ‘민족화해 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여성위원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한국통일여성협의회, 한국걸스카우트연맹,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세계평화여성연합 등의 단체를 소개 할 수 있다. 이들이 하는 역할로는 북한 여성돕기운동, 회원 통일평화교육, 남북여성교류, 젠더관점에 입각한 여성 통일운동 관련 연구와 토론회 등이다. 이를 지원하는 정부는 통일부와 여성가족부 등을 들 수 있는데, 현재 여성가족부에 통일관련 독자적인 담당직이 없었으며 통일부에도 여성관련 독자파트가 없다. 그러다 보니 통일관련 여성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도 제한 적일 수 밖에 없다.⁴⁴⁾

둘째, 국내외에서 전개하는 평화여성운동이다. 우리나라 여성단체의 평화운동은 1970년대의 민주화인권운동, 1980년대의 반독재 민주화운동, 반전·반핵운동으로 특징지을 수 있으며, 1990년대 이후 여성단체의 평화운동으로 맥을 이어 간다. 그동안 여성단체의 평화운동은 주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여성단체연합(과 회원단체), 한국교회여성연합,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등이 중심이 되어 반전 군축운동, 평화문화운동 등을 전개해 왔다.⁴⁵⁾

이러한 기본인식하에 1995년 북경행동강령채택이후 한국에서 이루어져 왔던 정책과 성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나. 지난 15년간 주요정책 및 성과

1) 통일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정부는 통일과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통일문제와 대북정책 추진과정에 있어 여성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통일관련 자문기구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10년 현재 통일관련 자문기구의

44) 김원홍(2009). 「분야별 실태분석 및 향후 대북정책 추진방향(여성부문)」. 통일정책연구협의회.

45) 권미혁(2008.7.25). 「평화통일운동에의 활발한 여성참여를 위하여-평화통일운동단체에게 바란다」. “한반도의 평화와 여성의 참여”. 2008년 여성통일토론회. 민화협 여성위원회. p.39-49.

여성참여 현황을 보면, 대통령자문기구인 통일고문회의의 여성참여 비율은 19.4%, 남북한교류관련법에 근거하여 구성된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경우 5.0%,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5.6%, 남북자피해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에 0%로 통일 관련 위원회의 여성의 참여와 그 비율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며, 참여 범위 또한 제한적이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정부 각종위원회의 목표율을 2008-2012년까지 40%로 잡고 있다. 이는 목표율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은 상황이다.

〈표 Ⅲ-5-1〉 2010년 상반기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단위: 명)

위원회명	여성위원참여현황								
	전체			당연직			위촉직		
	전체	여성	%	당연	여성	%	위촉	여성	%
통일고문회의	36	7	19.4	0	0	0.0	36	7	19.4
남북관계발전위원회	20	1	5.0	11	0	0.0	9	1	11.1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18	1	5.6	13	0	0.0	5	1	20.0
남북자피해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	9	0	0.0	3	0	0.0	6	0	0.0

자료: 통일부.

민간차원의 통일운동에 있어서도 여성의 참여는 확대되고 있다. 1998년에는 범국민통일단체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구성되었고, 2010년 현재 민화협 상임의장 8명중 여성의장은 2명, 공동의장의 경우 30명중 4명, 정책위원장의 경우 총 3명중 1명이 여성이다. 민화협에서 통일논의와 남북교류에 여성의 참여관련 업무는 여성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여성위원회의 역할은 ① 남북간 문화, 예술, 환경 등 각 분야의 남북여성교류의 확대와 촉진, ② 여성들의 남남대화와 토론의 장 확대, ③ 통일에 관한 이론과 운동의 매개 등으로 2010년 현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한국통일여성협의회, 한국걸스카우트연맹,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세계평화여성연합 등 26개의 단체가 회원단체로 가입하고 있다.

2) 여성의 통일대비 역량강화

가) 여성단체 지도자 교육

통일부는 통일교육지침서, 통일교육 교재 등을 마련하여, 일반인들에게 통일정책과 북한이해를 위한 교육을 확산하고 있다. 통일원 산하 통일교육원은 통일대비 여성의 통일대비 역량강화를 위하여 여성단체 간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왔다. 통일교육원에서는 공무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1년에 약 7,0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단체 지도자반을 운영하고 있다. 내용은 ① 통일미래, ② 북한실상 및 최근 동향, ③ 남부관계, ④ 대북 정책 등이다. 통일교육원의 여성단체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1년에 3-4차례 실시하고 있으며, 1995년 이후 교육받은 여성단체지도자의 현황은 <표 2>와 같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미비한 상황이다.

<표 Ⅲ-5-2> 여성단체 간부대상 통일교육 현황

(단위: 명)

년도	1995	2000	2005	2009	비고
인원	90	69	110	152	

자료: 통일교육원(2010). 통일교육원 내부자료(운영과).

나) 여성단체 대상 통일교육

2000년 6·15 이후 확산되고 있는 여성의 통일운동 방식 중 하나는 통일교육 실시이다. 「통일교육지원법」(1999) 제10조에 근거하여 2000년 12월 22일, 통일교육협의회가 창립되면서 국가적으로 통일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여성의 통일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육협의회 내에 여성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가입단체는 회원들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여성단체들이 가입하고 있으며, 2010년 현재 통일교육협의회 내 여성분과위원회 소속 여성단체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세계평화여성연합 등 10개의 단체가 가입하고 있다. 현재 회원단체들과 주로 통일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다) 탈북 여성 대상 사회적응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규모는 199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 북한이탈주민 총 입국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선 이래, 2009년 총 입국자수는 17,984명으로 조만간 2만 여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들 중 여성의 입국비율은 2002년을 기점으로 과반수를 넘었고, 2000년대 후반에는 거의 70% 후반대를 나타내고 있다.

〈표 Ⅲ-5-3〉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 현황

(단위: 명, %)

성별	~ 1989	1990 ~ 1995	1996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남	562	115	421	563	506	469	626	423	509	570	612	668	5,775
여	45 (7)	12 (9)	252 (37)	480 (46)	632 (55)	812 (63)	1,268 (67)	960 (69)	1,509 (75)	1,974 (78)	2,197 (78)	2,259 (77)	12,209 (68)
합계	607	127	673	1,043	1,138	1,281	1,894	1,383	2,018	2,544	2,809	2,927	17,984

* 주: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은 보호결정을 기준으로 집계됨.

자료: 통일부(2009). 「2009 통일백서」.

정부는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및 심리안정 및 건강회복 지원을 통해 사회적응교육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빠르고 쉽게 자립자활을 할 수 있도록 ① 초기 정착금 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생활 초기에 기초적인 생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최근 북한 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기본금을 축소하고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의 자립자활 노력 및 사정에 따라 정착장려금(직업훈련 장려금, 자격취득 장려금, 취업 장려금 등)을 폭넓게 도입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밖에 노령, 장애, 장기 질병이 있는 북한 이탈주민 중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정착가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② 취업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 이탈주민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장을 알선하며, 지역별 취업 박람회를 개최하고, 북한

이탈주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6년 하나원에 도입되어 운영된 ‘기초직업적응훈련’ 프로그램과 2008년 하나원이 노동부, 직업훈련 기관, 기업체와 협력 하에 실시하고 있는 ‘맞춤형 직업훈련-취업연계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들 수 있다. 또한 북한 이탈주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주는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③ 교육지원제도이다. 북한 이탈주민이 한국의 대학에 진학하거나 북한 이탈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및 보호시설-대안학교 설치 등의 경우 정부는 학력 인정기준마련, 학비 지원, 시설지원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④ 사회보장지원제도이다. 북한 이탈주민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서 최저 생계비 보장(생계급여) 및 의료혜택을 지원(의료급여)하는 제도이다. ⑤ 거주지 보호제도이다. 그 밖에 정부는 정착도우미 제도(2005년 1월부터 시행)와 취업보호 담당관과 거주지 보호담당관 및 신변보호 담당관으로 구성된 보호담당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09년, 하나원 퇴소 북한 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각 거주 지역에서 잘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 3주간(총 60시간)의 지역적응 교육제도인 ‘하나센터’를 도입하였다.

2010년 1월 통일부 자료를 보면, 연령별로 20세에서 40세 사이의 청장년층이 60%에 이르고 있다. 이는 학업이나 기타 자기계발을 통한 지원정착보다는 당장의 생계나 입국경비 마련 등을 위해 직업을 구하는 사람이 많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⁴⁶⁾ 특히 앞서 살펴본 북한 이탈주민의 국내 입국 규모 및 성별 분석을 보면, 여성과 가족 단위 북한 이탈주민이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기존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여성’의 특수성과 ‘여성 가장’ 가족 급증을 고려한 지원 정책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이애란(2010)⁴⁷⁾에 따르면, 가족구성을 살펴볼 때 한부모 가족의 비율이 높고, 자녀양육비를 부담하는 사람으로 탈북여성 본인이라고 응답한 사람

46)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9).『2009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47) 이애란(2010).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사회정착 현황과 조기정착 방안』.

이 53.5%에 이른다. 또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발간한 「2009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실태조사」⁴⁸⁾의 결과를 살펴보면, 현재 한국에서의 학력이 ‘무학’으로 표시한 비율이 76.6%였고, 여성이 남성보다 전반적으로 학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혼인 경우는 여성이 73.3%로 남성의 55.2%보다 비율이 컸다.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여성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에서 고려사항으로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지원제도와 자녀양육 및 교육 지원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즉, 여성 북한이탈주민은 정착과정에서 공통적인 어려움 외에 임신, 출산과 육아, 가사 등 여성만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가정생활, 취업 및 직장생활에서의 어려움 등이 중삼중고를 겪고 있으며, 여성들이 가정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부모 가정 이 많아 남성과는 다른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여성단체 및 정부의 지원활동⁴⁹⁾

① 여성단체의 활동

당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권익증진문제는 1988년 교회여성연합회, 여성단체연합 및 여대생대표자협의회가 한국과 일본정부에 대하여 군위안부 문제를 제기하였고, 그 이래 1990년에는 한국의 주요 여성단체가 거의 망라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발족으로 보다 체계화되고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이어서 한국의 여성운동은 일본의 여성운동과 연대하였으며 국내 여러 시민과 단체들의 협력을 확보하였다. ‘우리여성네트워크’나 ‘재일

48) 조사대상

- 조사 모집단은 2009년 5월까지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만 15세 이상에 해당하는 12,738명.
- 조사 대상은 2009년 5월까지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현재 생산가능인구(만 15세 이상) 621명 표본 추출.
- 하나원 사회적응 교육 수료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 사회 정착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
- 실제 조사된 북한이탈주민은 총 637명.

49) 강선헌(2010).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현황 토론편」. “일본군 위안부,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이야기하자” 정책토론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민주여성회' 등의 재일 한국인 여성단체 및 일본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재일 한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운동에 참가한 것과 남북한 단체가 상호 협력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북한은 1992년 동경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가한 이래 여러 회의와 UN에서 한국의 단체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2000년 법정에서는 남북한이 하나의 기소팀을 만들어 활동했다. 남북 직접 연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체로 일본단체 및 재일교포의 중개를 통해 한국 단체와 연결되었다. 또한, 필리핀, 대만, 중국 등과 같은 아시아 피해국의 여성단체 및 시민단체들이 운동에 가담했으며, 곧 세계의 여러 NGO들이 지원하면서 운동이 확대되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을 위하여 국내와 일본, 미국 및 UN, ILO 등 국제사회에서 다각적인 활동을 벌였다. 1992년, 정대협은 UN인권소위원회에 처음 이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현대형노예제실무회의, 인권위원회에도 호소하였다. 1996년부터 2003년에 이른 쿠마라스와미(Coomaraswamy)의 보고서와 1998년부터 2000년에 인권소위에 제출된 게이 맥두갈(Gay McDougall) 전시하 체계적 강간, 성노예제 및 유사성노예제에 관한 보고서에서는 일본이 피해자 배상과 책임자 처벌, 국가 차원의 사죄 등을 권고했다. 또한, 2007년 미국 하원에서 일본군위안부 관련 결의안(HR 121)을 통과시켜 일본정부의 사죄를 촉구하였고, 네덜란드,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의안을 통과시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여성단체의 활동에 힘입어 한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여성가족부 중심의 피해자 신고접수 및 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② 정부의 활동

1993년 임시국회에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법안”이 통과되었고, 이 법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보호와 의료보호를 하는 외에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토록 하며, 원할 경우에 영구임대주택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였다. 정부는 2002년 법개정을 통하여 피해자 지원과 더불어 기념사업을 할 것을 천명하였고, 그에 따라 여성부 홈페이지에 e-역사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독립기념관 내에 위안부 코너를 확대하여 전시하

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0년 현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총 234명이며 그 중 현재 생존자는 83명이다. 시도별로 서울, 경기 지역의 순으로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국외에도 8명이 거주중이다.

〈표 Ⅲ-5-4〉 지원대상자 현황

(단위: 명)

계	생존			사망
	소계	국내	국외	
234	83	75	8	151

〈표 Ⅲ-5-5〉 연도별 신규 발생자 및 사망자

구분	계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등록	234	153	15	5	6	6	5	4	6	6	1	5	3	8	11	0	-	-	-
사망	151	3	3	10	5	9	5	12	10	5	11	6	8	18	6	14	15	6	5

여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권익증진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생활안정 지원금이다. 정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⁵⁰⁾’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피해자에게 특별 지원금과 월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별 지원금은 등록과 함께 43,000천원을 1회

50)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는 당연직 7명, 위촉직(민간위원) 5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며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록신청사항의 사실여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 기타 여성가족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친 사항을 심의한다. 2006년에는 11명의 신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결정·등록되었다.

지급하며, 2010년도 월생활 안정 지원금은 1인당 매월 865천원으로 2009년 824천원에서 5% 상향 조정하였다.

〈표 Ⅲ-5-6〉 생활안정지원금 연도별 추이

(단위: 천원)

구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월지원	150	150	200	250	500	500	535	600	640	700	740	780	800	824	865
일시금*	5,000					43,000									

*주: 일시금: 1998년부터 4천 3백만원으로 인상하고 종전 등록자에게도 추가분 지급.

② 간병인 지원, 정서적 안정지원 및 건강치료 사업이다. 2006년 시행된 간병인 사업에 대하여 '09년도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고령임을 감안하여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모든 피해자들에게 간병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간병인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연간 간병비 지원 한도액을 상향 조정(2008년 500만원 → 2009년 600만원 → 2010년 1,000만원)하는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였다. 정서적 안정지원을 위하여 '위안부' 피해경험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재가자원봉사자들의 재가방문 활동, 나들이 활동 및 취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대부분 가족 없이 혼자 살고 있는 피해자들의 외로움을 해소하고 정신적 안정감 회복에 기여하였다. 건강치료사업은 의료급여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항목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한방치료, 양방치료, 응급치료, 기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등 수요에 맞게 지원범위가 넓어 피해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사업 수행자는 피해자들과 오랜 기간 유대관계를 맺어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대구 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통영·거제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 시민모임 등이다.

〈표 Ⅲ-5-7〉 치료사업 및 간병인 지원 사업 현황

(단위: 천원)

연 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치료사업비 (전체)	93,000	140,000	190,000	179,000	186,000	174,000	186,000	171,200	182,000	172,200
간병비 (전체)	-	-	-	-	-	167,000	178,560	154,080	163,800	140,160

그 밖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e-역사관을 운영하고 있다. 2004년 구축 후(2005.2.28개통)매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e-역사관’ 자료와 기능을 보강하며, 2008년에는 사용자편의성 제고 및 사이버지원단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2009년에도 홈페이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재구성하여 다양한 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마) 여성계의 평화운동 활동

1970년대부터 시작된 여성평화운동은 주로 기독교 여성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7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의 원폭피해자 문제를 사회문제로 또한 일본 제국주의 미결의 전후처리 문제로 꾸준히 여론화하였고, 동시에 피폭자에 대한 치료와 생계지원을 계속해왔다. 이후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1985년 유엔 여성의 해를 맞아, 유엔이 내세운 주제인 평등·발전·평화 중에서 평화관련 사업에 그 힘을 집중하였다. 한국여성단체연합도 우리 사회의 비민주와 분단의 극복 없이는 진정한 여성해방이 달성될 수 없다는 취지하에 통일과 평화의 문제를 여성운동의 주요과제로 채택하였다. 이후 한국에서는 1990년에 들어와 통일평화운동으로 조직적으로 전개할 ‘틀’이 필요하자 여성단체 연합은 특별위원회의 형태로 ‘조국통일위원회’를 만들었다. 1993년에는 ‘조국통일위원회’를 ‘평화통일위원회’로 개칭하였고 통일평화운동과 관련하여 활발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1997년에는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가 창립되어 여성평화 교육, 여성과 평화에 관한 연구, 여성평화운동 워크숍, 군축 워크숍, 군축운동, 여성관련 통일 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방위비

삭감 등 군축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여성주의 관점에서 평화로운 21세기를 일구고 여성의 힘을 모아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를 실천하는, 한발 더 나아가 아시아와 전세계의 평화를 지향하는 여성평화운동단체이다. 이를 위해 평화여성회는 한반도평화센터, 일상의 평화센터, 갈등해결중재훈련센터등을 통해 남북화해와 협력활동, 평화문화 확산활동, 갈등해결과 중재훈련, 국제연대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현재 여성단체의 평화운동은 주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여성단체연합(과 회원단체), 한국교회여성연합,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등이 중심이 되어 반전 군축운동, 평화문화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⁵¹⁾

다. 향후과제

이상으로 여성과 무력분쟁을 주제로 한국의 상황과 그간의 정책과 성과를 소개하였다. 그 결과, 여성들은 통일관련 주요정책 결정과정과 정부정책에서 지원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향후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통일관련 주요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 확대이다. 그간 통일·평화분야에서 장차관급 여성이 한명도 없었고 2009년 현재 5급 이상 여성 공무원비율은 통일부 14.8%(33명), 외교통상부가 16.9%(42명)이며, 국방부는 12.6%(43명), 민주평통자문회의 13.8%(4명)이다. 특히 정책영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3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에 통일부는 7.1%(2명), 외교통상부 0%, 국방부는 0%, 민주평통자문회의 0%였다. 정부는 여성 관리자 임용 확대 및 육성을 위하여 2011년까지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10% 이상 임용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 통일·평화관련 정부위원회의 여성위원비율 역시 20%도 못미치고 있었다.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통일관련 정부 부처 및 각종위원회에 여성참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통일 관련 및 남북협력관련위원회에 여성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51) 권미혁(2008.7.25). 「평화통일운동에의 활발한 여성참여를 위하여-평화통일운동단체에게 바란다」, “한반도의 평화와 여성의 참여”. 2008년 여성통일토론회. 민화협 여성위원회. p.39-49.

둘째, 통일 평화교육에 있어 여성역량 강화이다. 통일 교육원은 여성의 통일운동을 활성화하고 통일역량을 증대하기 위해 여성 통일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통일 준비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성 단체 간부를 대상으로 통일 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나, 그 수는 아직까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성단체의 통일교육을 보면, 통일교육에 교육생으로 참여하는 여성의 경우 중년 여성층이 많은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앞으로는 교육대상이 확대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도 대상에 따라 다양화되어야 한다. 또한 전체 여성인구나 여성단체의 수에 비해서 여성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단체의 수는 너무 미미하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폭과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예산지원과 홍보가 시급하다. 또한 통일과 생활이 접목될 수 있는 교육의 내용과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한다. 특별히 생활 속의 여성 통일운동을 발전시키는 노력이 강구되면서 생활 속에서 통일을 이야기하고 다양하고 적극적인 통일교육 방안 (행사, 미디어활용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여성단체나 평화관련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평화통일 관련 사업에의 여성참여 확대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남북여성교류는 만남을 통해 여성활동가에게 남북관계의 현실을 경험하고, 북측 여성간의 차이와 동질성을 확인해갈 수 있는 과정으로 의미가 크지만 일부에게 그 기회가 한정되고 있어 보다 다양화된 통로를 마련하여 남북 교류를 통해 여성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관련부처는 평화문화 정착을 위한 여성NGO의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지금까지 평화교육과 평화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여성단체의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전무 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미약한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통일교육에 대한 지원에 비한다면, 평화교육에 대한 지원은 낮은 편이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정부의 예산과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6. 여성과 경제⁵²⁾

북경행동강령 전략목표

- 고용 접근성, 적절한 근로조건 그리고 경제적 재원에 대한 통제를 포함하는 여성의 경제적 권리 및 자립을 증진한다.
- 자원, 고용, 시장 및 무역에 대한 여성의 평등한 접근을 촉진한다.
- 저임금 여성들에게 비즈니스 서비스 및 훈련과, 시장, 정보, 기술에의 접근성을 제공한다.
- 여성의 경제능력과 상업적 연대망을 강화한다.
- 직종분리와 모든 형태의 고용차별을 철폐한다.
- 직장가정에서의 책임 조화를 촉진한다.

가. 국내 현황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정리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여성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둘째,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의 확대이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여성부(여성가족부)의 여성발전기본법은 전체 여성 정책의 기본법이며 이중 여성인력의 양성과 활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경력단절여성등경제활동촉진법」과 「남녀고용평등 일·가정양립법」이 실질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법률이라고 볼 수 있다. 남녀 고용평등 뿐 아니라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하여 여성고용의 기회를 증진하고자 한 점이 최근 주요 정책성과이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특성상 광범위한 비경제활동여성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경력단절여성등경제활동촉진법의 제정은 여성 인력의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국가정책의 발전이다.

52) 여성과 경제는 본원의 김종숙 연구위원이 집필하였다.

2008년 제정된 경력단절여성등경제활동촉진법은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경력단절 여성)과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으나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도록 지원하는 법이다. 동 법에 의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은 경력단절 여성 등의 현황과 전망,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주요 시책, 그 밖에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정부는 1987년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2008년 ‘남녀고용평등 일·가정양립법’으로 개정되었다. 제1차(‘94-’97)·제2차(‘98-’02)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 제3차(‘03-’07)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을 통해 남녀고용평등 실현의 제도적 기반이 확충되었다. 제3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출산비용의 사회화 확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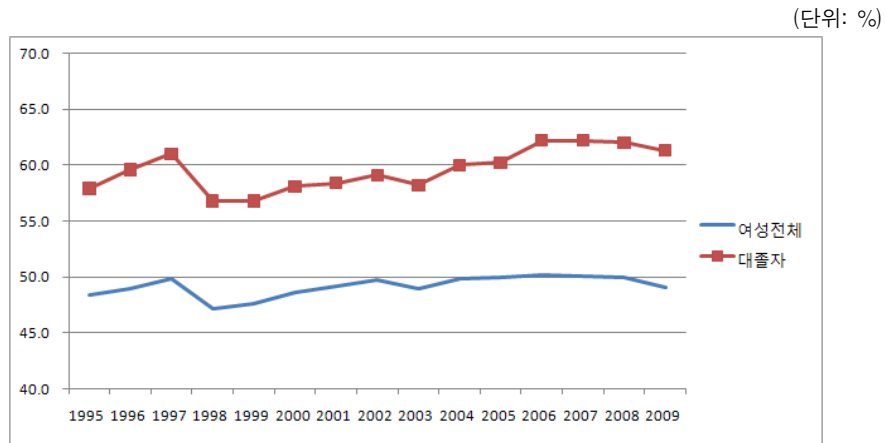
나. 지난 15년간 주요정책 및 성과

북경행동강령의 “여성과 경제” 부문에서는 여성의 경제적 권한을 강화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증가시키는 것은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강화하기 위한 가장 유용한 정책수단이며 정부 역시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15년 간의 성과와 과제들이 도출될 수 있다.

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

우선 양적인 지표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1995년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1985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1.9%수준이었고 1995년 48.4%로 10년간 약 7%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9년까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0% 내외이며 2009년 말 49.2%로 낮아졌다.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별다른 변화가 없이 주요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2008년 기준, OECD 주요국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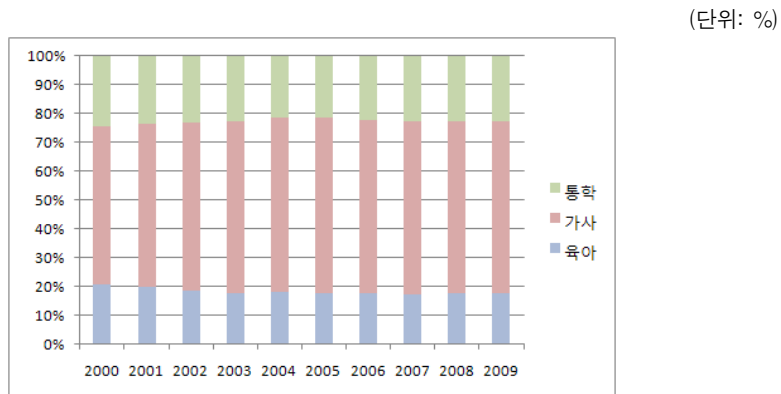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평균 61.3%, 고학력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평균 82.6%)



자료: 통계청(2009). KOSIS DB.

[그림 Ⅲ-6-1] 여성 전체 및 대졸자의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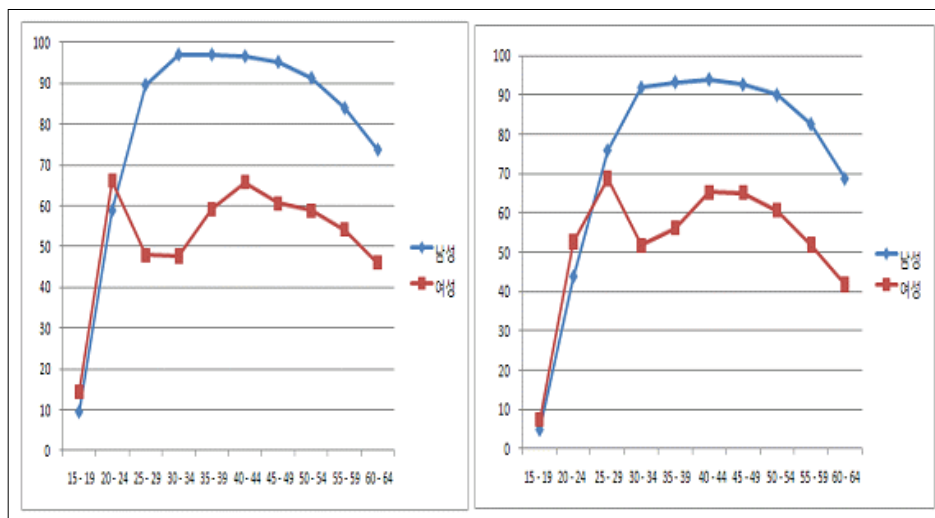
여성의 경제활동이 정체인 이유는 많은 수의 여성들이 비경제활동 상태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비경제활동 인구의 규모는 1995년 12,814이며 이중 여성 비중은 70%이고, 2009년 말 현재 15,758천명이며 여성 비중은 약 66%이다. 여성 비경제활동의 사유는 여전히 육아와 가사로 나타난다.



자료: 통계청. KOSIS(2009).

[그림 Ⅲ-6-2] 비경제활동사유의 변화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는 경력단절이 주원인이다. 남성과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의 차이는 30세 초반 연령대부터 급속하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20대 후반 연령대에서의 남녀 경제활동 참가율의 차이는 10%미만이나 30대 초반 연령대에서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차이는 무려 40%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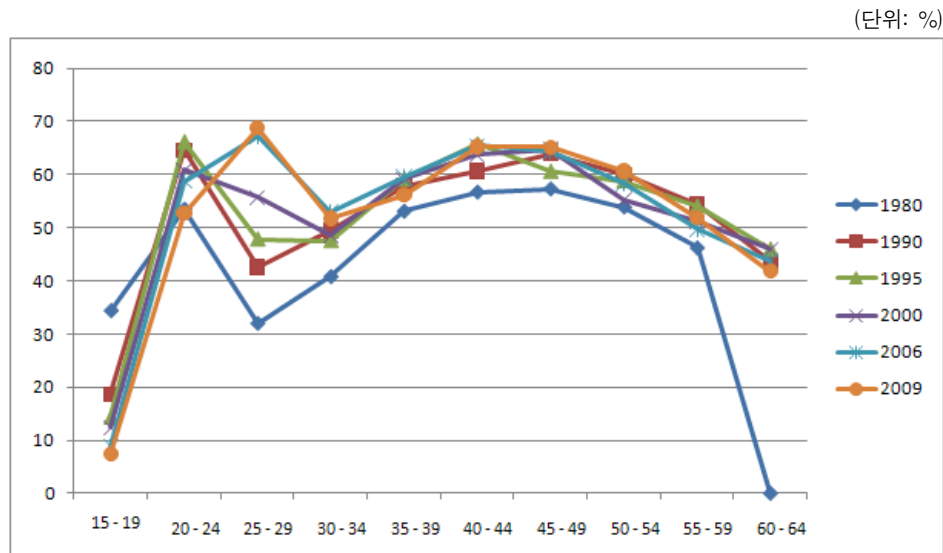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1995, 2009). KOSIS.

[그림 III-6-3] 남성과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주목할 만한 변화는 고학력화로 인한 노동시장 진출시기가 늦추어짐과 동시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20대 후반 연령대까지도 매우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동시에 30대 초반의 차이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 경력단절이 얼마나 장기간 지속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지난 15년간 여성의 경력단절은 여전히 지속되어 왔다. [그림 III-6-3]을 보면 경력단절이 이루어지는 시기, 낙폭, 재진입 양상은 변화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여성의 경력단절을 나타내는 M곡선은 여전히 남아있다. 여성의 학력수준이 높아지면서 노동시장 진입연령대가 이동하여 경력단절

시기의 변화가 나타났다. 경제활동 참가율 최고점을 이루는 시기인 20대에 서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95년 약 67%에서 2009년 68.8%로 약 1.8%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점과 최저점은 1995년도에 67%와 48%로 약 20% 차이를 보였으나, 2009년에는 68.8%와 51.8%로 약 17%p의 차이를 나타내어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그 원인은 혼인, 임신, 출산 시기가 다양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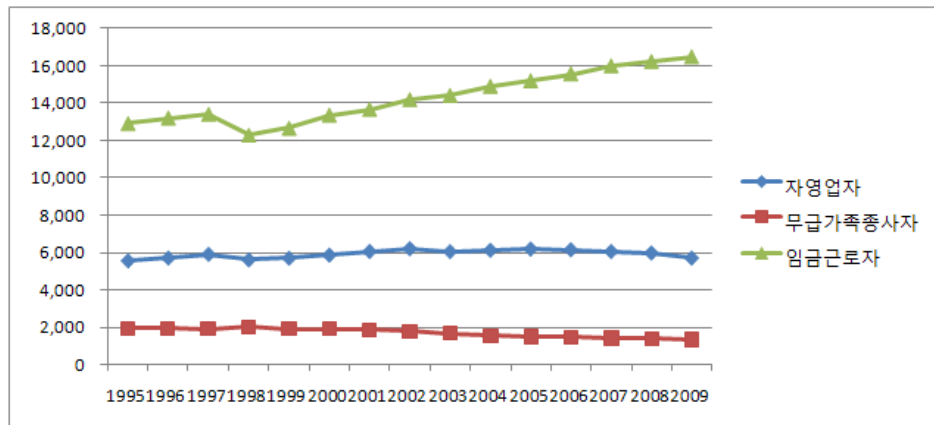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09), KOSIS.

[그림 Ⅲ-6-4] 전체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재진입 양상의 변화도 관찰된다. 1980년도에는 40~44세의 경제활동 참가율 56.7%, 45~49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7.3%로 20대의 53.2%보다 오히려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점차 변화되어 재진입시기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0~44세 65.3%, 45~49세 65.2%로 20대 후반 연령에 비하여 오히려 낮아져 고학력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단위: 천명)



* 주: 취업자 = 비임금근로자 +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 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임금근로자 = 상용근로자 + 임시근로자 + 일용근로자
 자료: 통계청(2009), 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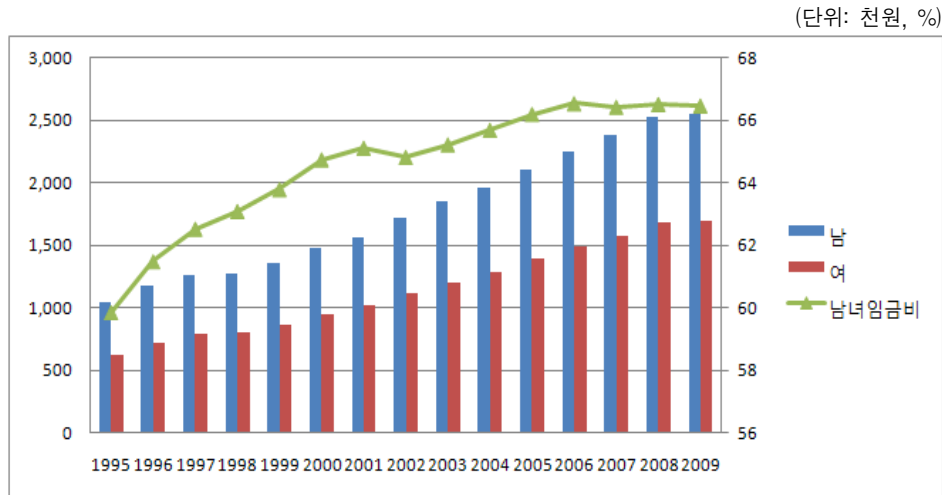
[그림 Ⅲ-6-5] 임금 및 비임금 근로자 현황

2) 성별 임금격차

종사상 지위 면에서 보면 임금 근로자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무급가족 종사자 비중의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다. 양적인 지표와 더불어 질적인 지표를 나타내는 성별 임금격차는 1995년 59.6%에서 2008년 62.3%로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OECD국가들에 비하여 매우 심한 수준이다. 성별 임금격차의 요인은 첫째 성별 직종분리 및 업종분리, 고용형태 등 시장 구조적 요인, 둘째, 사업장의 규모나 노조의 유무 등 사업장 요인, 셋째, 여성의 개인적 특성인 경력단절로 인한 짧은 근속기간이나 평균 교육 년 수, 근로시간의 차이 등이다. 비상시 근로자의 임금차별, 저임금 업종과 직종에 편중된 여성 분포는 성별 임금격차를 유발하는 구조적 원인이다. 특히 여성들이 소규모 사업장 종사비중이 높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저임금의 원인이다.

여성의 경력단절로 인한 경력손실이 임금격차를 발생시키는 주된 요인이다. 경력단절 이후 저위직종으로 이동함에 따른 임금격차의 확대, 연공급이

여전히 지배적인 임금 구조 하에서 짧은 경력연수에 따른 임금격차는 여전히 노동시장 구조적 문제로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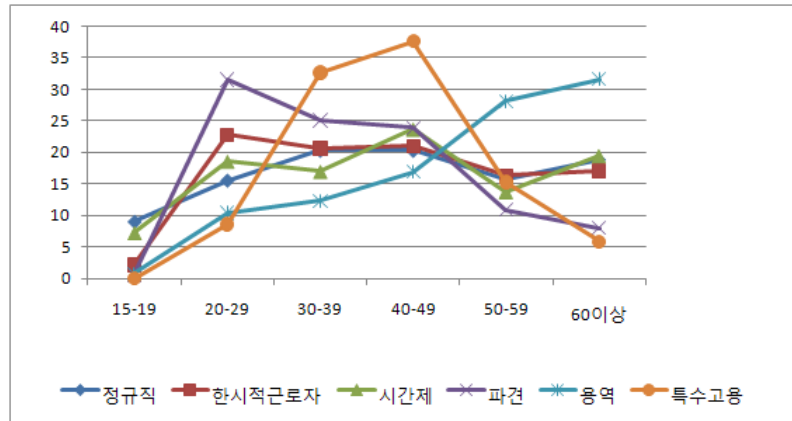
자료: 노동부(2008). 「임금기본구조조사 원자료 분석」.

[그림 Ⅲ-6-6] 성별·년도별 남녀 임금 비

3) 고용형태 및 직종 다양화

고용형태별 분포를 보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경직적인 고용형태가 여성 근로자들의 요구와 맞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일제로 근로하는 한시적 근로자와 파견직은 출산 및 육아기에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 시기에 근로시간이 탄력적인 특수고용과 시간제 근로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고용 형태의 다양화가 출산과 육아시기를 거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증진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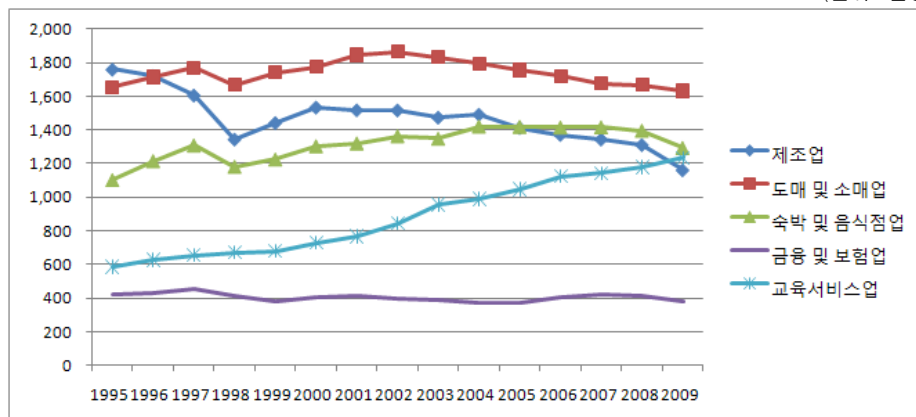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09), KOSIS.

[그림 Ⅲ-6-7] 연령별 고용형태 분포

지난 15년간 업종 및 직종구조의 변화를 보면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제조업으로 쏠림이 심각했던 여성 근로자의 업종구조는 보다 다양해지고 있다. 제조업 종사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대신 교육 서비스업 종사자의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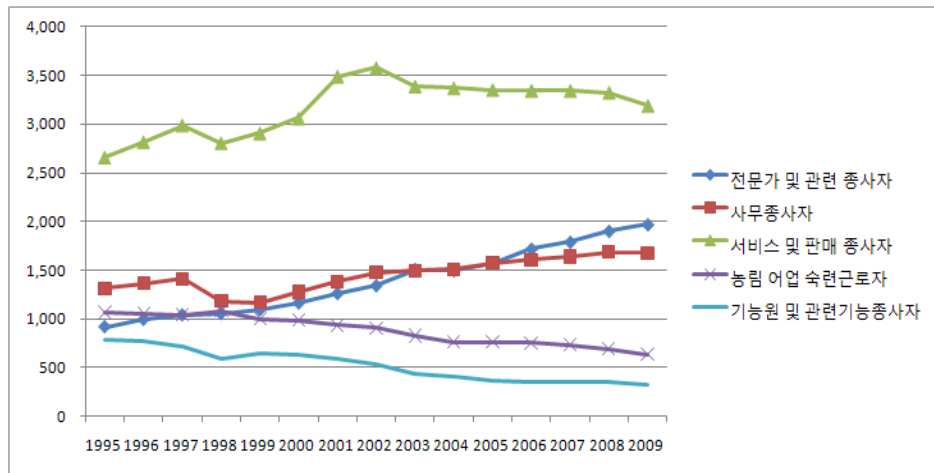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09), KOSIS.

[그림 Ⅲ-6-8] 여성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

업종과 유사하게 여성취업자의 직종별 분포 변화를 보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최근 년도로 올수록 직종에서의 의미 있는 변화가 관찰된다. 전통적 저위직종으로 알려진 직종 종사자의 수는 감소하고 사무직 및 전문가 직종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전문가 집단의 지속적인 증가세가 나타난다. 이는 노동시장에 진출한 여성들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향후 여성들의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한 매우 희망적인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다.

(단위: 천명)



*주: 관리자 집단의 비중이 매우 적어 주요 여성분포 직종만으로 구성하였음.
자료: 통계청(2009). KOSIS.

[그림 Ⅲ-6-9] 여성 취업자의 직종분포

4) 적극적고용개선조치

기업에서의 여성고용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의 도입도 주요한 정책의 발전이다.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는 2006년에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 동 제도는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를 고용부문에 적용한 개념으로, 사업주가 현존하는 고용상의 차별 해소와 고용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취하는 모든 조치와 이에 따른 절차이다. 즉, 동종 산업 유

사규모 기업들을 비교, 평가하여 여성을 현저히 적게 고용하였거나 여성관리직 비율이 낮은 기업에 대하여 간접차별의 징후가 있다고 보고, 개선 방안을 찾고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이다.

적극적 고용개선 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006년 3월부터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의 기업 및 정부투자,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008년 3월부터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999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2009년에는 정부산하 및 정부투자 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하던 것을 분류기준의 변화에 따라 50인 이상 공공기관(공기업, 준 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2009년 기준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적용 대상 사업장은 500~999인 이하 941개소, 1,000인 이상 666개소 등 총 1,607개소로 시행 첫해의 548개소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적극적 고용개선 제도의 운영 절차를 보면, 대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매년 5월 31일까지 ‘직종별·직급별 남녀근로자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직종별·직급별 남녀근로자 현황’에서 반드시 전 직종 총 근로자수, 전 직종 여성 근로자수, 관리직 총 근로자수, 관리직 여성 근로자 수는 반드시 기입해야 될 필수 항목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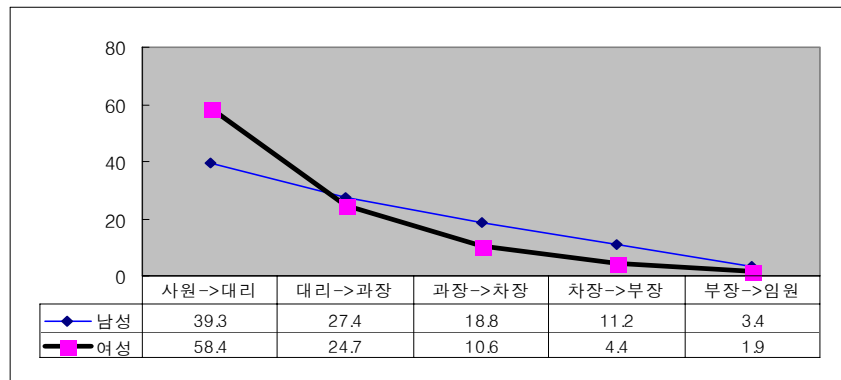
노동부(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고용 비율 또는 관리직 여성 비율이 비교 집단기업 평균의 60%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한다. 평균의 60%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은,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시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행계획서 작성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여성고용 비율 및 관리직 여성고용 비율에 대한 달성 가능한 목표(time table)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기준 미달 사업장 비율을 살펴보면, 2009년도에는 2006년 도입 첫 해에 비해 3.6%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1,000인 이상 사업장만 따로 비교하였을 때는 2010년에 대상 사업장 666개소 가운데 345개소로 51.8%를 차지하여 도입 첫 해에 비해 6%가 감소함으로써 10.4%의 여성고용 개선효과를 보여 주었다. 500~999인 사업장의 경우 2008년 62.1%에서 2009년에는 59.1%로 3%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여성(관리자)고용 비율이 향상되고 있으며 특히 1,000인 이상 규모에서 더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표 Ⅲ-6-1〉 AA 적응대상 사업장 및 기준 미달 사업장 변화 추이

연도	2006	2007	2008	2009
적용대상사업장수	546	613	1,425(622)	1,607(666)
기준미달사업장수	326	343	821(323)	902(345)
비율(%)	59.7	56.0	57.6(51.9)	56.1(51.8)

* 주: 괄호 안은 1,000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며 2008년부터 1,000인 이상으로 확대됨.
 자료: 노동부(현 고용노동부) (2008). AA도입 2주년 기념 고용평등 촉진을 위한 국제학술
 대회 자료집.; 노동부(현 고용노동부) (2010.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교육자료.
 (http://www.aa-net.or.kr/new_home/user/include/abc_down.asp?tb=inno_5&num=85&down=1)

기업의 여성인력 활용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개인들은 조직에서 성장하기 위해 다양한 경력 경로를 가지게 되는데 우리나라 여성들은 멘토의 부족, 경력 형성 방식의 차이, 업무 수행 방식의 차이 등 남성과 다른 차이점을 보인다. 결과적으로 중간 관리자로 성장하는 대리급에서 과장급으로의 승진 단계에서 가장 성공률⁵³⁾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를 지나면 이후 오히려 관리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간 관리자로의 경력 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자료: 김종숙 외(2007). 「여성관리자 패널조사」. 여성가족부에서 재구성.

[그림 Ⅲ-6-10] 성별 승진 비율

53) 승진대상자 대비 승진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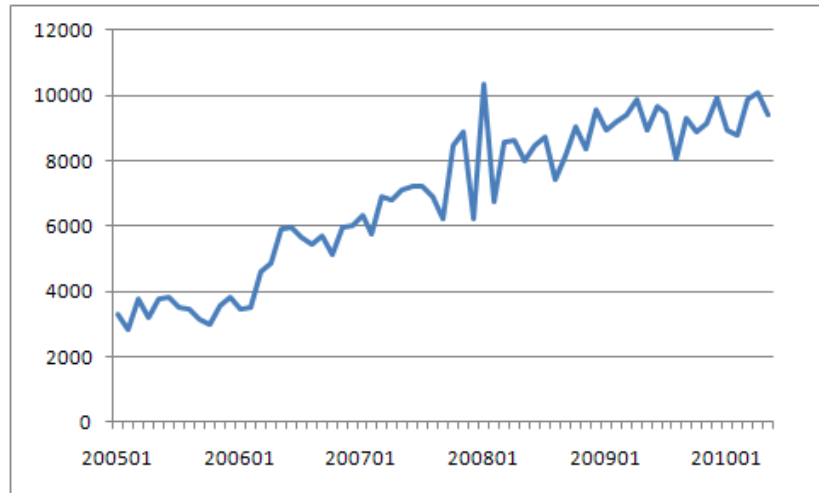
5)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제도를 통한 여성경제활동의 동등한 접근성 강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제도는 국가 주요사업의 성형평성을 점검하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하여 노동시장 및 국가고용정책에 여성들이 얼마나 동등하게 접근하여 경제적 평등의 기회를 가지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발전이다. 중앙 및 지자체의 각종 사업들 뿐 아니라 특정 사업의 심층분석 평가를 통하여 성형평성의 달성을 측정하고 있다. 이중 “기초 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지역의 성별 취업확률 격차에 미치는 영향”, “녹색뉴딜사업에서의 여성 일자리 규모 추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성인지적 분석”,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성 인지적 평가”, “실업급여 제도 예산의 젠더 분석”, “직업능력 개발사업의 성별영향평가” 등은 대표적인 국책 고용정책의 심층평가 사례로 동 결과를 이용하여 정책의 품질개선을 이루는 데 기여하였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사업주 지원훈련 사업의 여성참여율이 낮고 개인선택훈련의 여성 참여율이 높게 나타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식의 능력개발 카드제나 직업훈련 계좌제 등으로 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가시적인 성과는 여전히 제한적으로 나타나지만 향후 성별영향평가 등이 각 지자체 사업으로 확산되며 사업담당 공무원 교육 등으로 인하여 성별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6) 모성보호 및 일가족 양립지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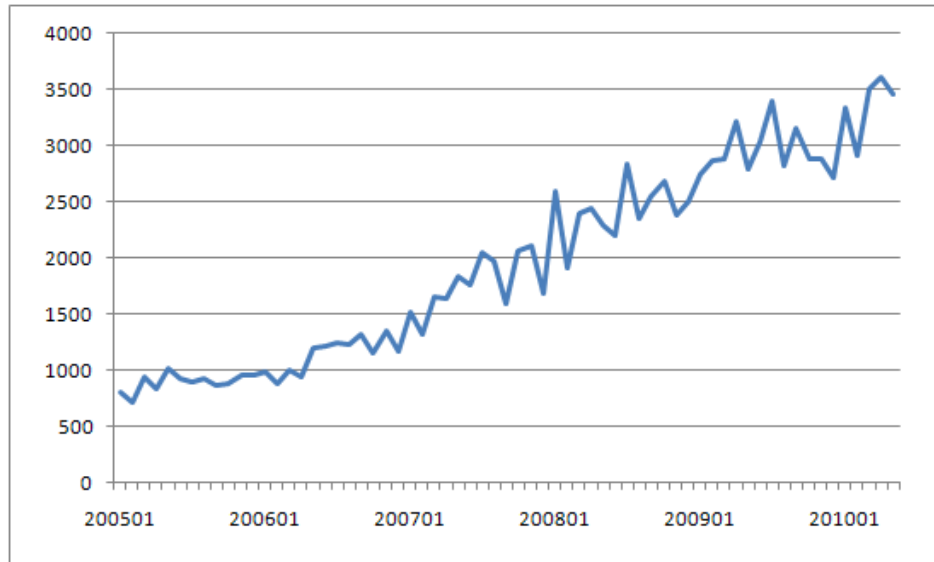
우리나라 여성근로자 중 산전후 휴가 급여 수급자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산전후 휴가 뿐 아니라 육아휴직 사용자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최근 우리나라 모성보호제도 발전을 알 수 있다. 기업주에게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온 모성보호제도의 사회분담을 위하여 2006년부터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산전후 휴가 90일 전체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휴가급여를 지급하게 되었고 출산 뿐 아니라 유사산자에게도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가능토록 수급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자료: 고용보험 DB. <http://www.keis.or.kr/>.

[그림 Ⅲ-6-11] 산전후 휴가급여 수급자 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여성들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육아부담을 배우자가 함께 나누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되었다. 육아휴직 급여의 인상을 통하여 소득 대체율을 높이고 대체인력 채용 장려금을 2004년부터 신설해서 지급하고 있다. 육아휴직 지원금 인상은 근로자에게 월 30만원 지급하던 급여를 2007년 월 50만원으로 인상하였고 사업주 대체인력 지원금은 월 10~20만원에서 20~3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가장 큰 변화는 2004년 도에 1세 미만이던 육아휴직 사용가능 아동연령을 3세 미만으로 2010년에는 6세 미만으로 확대한 것이다. 자녀 연령대에 따른 다양한 육아휴직 수요를 반영한 제도의 정비로 평가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뿐 아니라 배우자 출산 휴가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 등 모성보호 제도 정비가 이루어졌다.



자료: 고용보험 DB. <http://www.keis.or.kr/>.

[그림 Ⅲ-6-12]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

기업에게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융자이율을 3%에서 1%대로 인하한 바 있다. 공공직장 보육시설은 20개에서 24개로 확대하여 체계적으로 보육을 지원함으로써 일하는 여성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가정 양립 정책은 기본적으로 남녀 근로자 모두에게 직장가정의 조화로운 균형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배우자 출산 휴가제, 육아 휴직 등은 남성근로자들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나 동 제도의 남성이용은 저조한 편이다. 동시에 장시간 일하는 근로 관행, 여성들에게 지워진 자녀의 양육책임 등 우리 기업과 사회가 가진 문화를 바꾸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성들은 정시퇴근이나 근무시간 이후의 회식 등 일상적인 조직생활에서, 남성은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을 활용하는데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6-2〉 조직문화에 대한 구성원의 조직 내 인식차이(5점 척도)

	우리회사에서는 정시에 퇴근하면 눈치가 보인다	우리회사에서는 개인 사정이나 집안일로 주중에 휴가를 내기 어렵다	우리회사에서는 근무 후 회식이나 각종모임에 빠지면 눈치가 보인다	우리회사에서는 남성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눈치가 보인다
여성	3.08	2.79	3.27	3.59
남성	2.84	2.33	2.86	3.26
인사담당자	2.81	2.27	2.75	3.13

자료: 민현주 외(2008). 『여성관리자패널조사』. 여성가족부.

우리나라는 장시간 근로 뿐 아니라 근로형태가 전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특징이 있다. 시간제 근로 등은 단순히 근로시간이 짧은 고용 형태가 아닌 취업지위와 연결된다. 즉 시간당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에서 전일제 근로자와 차별이 발생한다는 점이 문제이다.

다. 향후과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의 경제활동은 지난 15년간 양적, 질적으로 상당한 변화를 보였다. 향후 우리나라의 여성경제 활동참가를 촉진시키는 것은 여전히 국가적인 과제라 할 수 있는데 그 원인은 다른 OECD국가들과의 격차에서 찾을 수 있다. 전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OECD 평균 61.3%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특히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평균 82.6%에 비하여 최하위 수준이다. 여성의 임금비도 남성의 62%에 불과하여 성별 경제적 격차는 매우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다.

향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면에서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변화와 도전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우리나라 인구구성의 변화이다. 현재도 고령화 사회를 지나고 있지만 2015년에 우리나라 여성인구는 45세 이상 인구 비중이 44세 이하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대여명이 긴 여성들이 노후 소득을 위해 경제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환경이 되고 있으며 실제로 현재 5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

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혼 이민자 여성 등 이주여성의 증가는 여성 경제활동 측면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새로운 정책의 준비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동시에 고학력화된 청년층, 공직진출이 확대되고 전문가화 하고 있는 다양한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각 집단에게 필요한 세밀한 정책이 요구될 것이다.

첫째,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다. 20대 후반 연령대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9%로 동일 연령대 남성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출산과 육아시기를 거치는 30대에는 51.9%로 떨어진다. 일과 출산, 육아를 병행할 수 없는 노동시장과 사회의 여건은 여성의 저활용으로 이어진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여성들의 모성을 보호하고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기업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제도가 인식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여성고용 정책이 아닌 다양성을 확대해나가고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여 결과적으로 기업의 이윤창출에 기여하는 인적자원 관리 방식으로 여성이 활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다양한 고용 형태와 근로 형태를 시험하고 확산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기술진보는 업무의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극복해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직적인 근로방식보다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근로방식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근로시간을 줄여 고용을 창출하고 일자리 나누기 등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둘째, 여성들의 경력형성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다. 여성들의 경력형성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리더십 훈련을 비롯한 다양한 업무관련 교육훈련의 확대, 사업장에서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학습, 여성 네트워크의 구축 등은 향후 여성들이 조직 내에서 유리천정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지원이 될 것이다.

셋째, 취약계층 여성들을 위한 직업 훈련과 일자리 창출은 향후에도 지속

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핵심과제이다. 노후 기대여명이 길고 노동시장 경협이 일천한 중장년 및 고령층 여성에게는 일을 통한 복지의 기반을 40~50대에 구축해 놓을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비교적 이른 연령대인 40대 초반에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년도로 올수록 노동시장 복귀연령대는 40대 후반에서 50대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 이 연령대는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여건상 연령차별을 겪거나 취업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직업훈련이나 취업지원 정책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여성 특화된 직업훈련이나 취업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음과 동시에 여성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 및 관심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전히 노동시장에서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처한 여성근로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고용보호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도급이나 파견 등 간접고용 근로자의 고용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고용보호 법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또한 가정내에서 근로하거나 영세한 사업장에서 근로함에 따라 고용정책에서 누락되는 근로자의 규모를 줄여나가도록 각각의 고용형태와 상황에 대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7. 여성과 권력 및 의사결정⁵⁴⁾

북경행동강령 전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력구조 및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동등한 접근과 충분한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정책결정 및 리더십에 참여하기 위한 여성의 역량을 증진시킨다.

54) 여성과 권력 및 의사결정은 본원의 김은경 전문연구원이 집필하였다.

가. 국내 현황

1995년 12월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제6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잠정적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여성의 참여가 매우 부진했던 정치 부문에서, 국회와 광역의회 비례대표에 여성후보 50% 공천할당의 내용을 담은 정당법 개정(2004)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한국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최근 실시된 제18대 총선(2008.4)에서 여성 당선자가 41명(13.7%)으로 늘어났으며, 2010년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기초의회가 21.6%(626명), 광역의회가 14.8%(113명)로, 4년 전인 2006년 지방의회 선거 당시보다 증가하였다. 기초자치단체장(시군구청장)의 경우 2010년 2.6%(6명)으로 2006년 1.3%(3명) 보다 늘어났으나,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의 경우 아직까지 여성은 한명도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행정부문에서의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해왔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0명중 4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지난 1983년 10.7%에서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며 2008년 42% 수준까지 도달했다.⁵⁵⁾ 그러나 직급 간 격차가 커서, 여성 공무원이 6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0%, 7급은 60.6%, 8급은 59%, 9급은 57%이지만, 관리직급으로 올라갈수록 여성 비율이 확연히 줄어드는 피라미드 구조를 띄고 있다.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추이는 여성부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2월말 위촉직 여성참여율은 30.9%로 10년 전인 1998년의 12.4%에 비해 18.5% 상승하였으나, 전년의 33.1%에 비해 2.2% 하락하는 등, 목표율 40%에 미치지 못하며, 증가 추세를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 고위급의 현황을 보면, 2010년 현재 정부는 15부 2처의 중앙부처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여성 장·차관현황은 장관 2명(여성부, 보건복지가족부)으로, 각료회의의 여성 참여율은 매우 낮다. 현재까지 차관급 여성은

55) http://www.fnnews.com/view?ra=Sent0801m_View&corp=fnnews&arcid=0922067819&cDateYear=2010&cDateMonth=08&cDateDay=15.

총 4명이며, 고위 공무원단 여성 비율은 2006년 3%에서 2009년 2.8%로 줄었고, 2010년 총 1,428명의 고위공무원단 중 여성은 40(2.8%)명에 불과하다.

나. 지난 15년간 주요정책 및 성과

1) 정치부문 여성참여의 확대

가) 국회의 여성참여 확대

국회의 여성 진출 현황을 살펴보면, 제16대 국회(2000-2004)는 16명(5.9%), 제17대는 국회(2004-2008) 40명(13.3%), 제18대는 국회(2008-2012) 41명(13.7%)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16대 국회 이전에는 여성 의원 비율이 3%였는데, 이처럼 여성의원이 늘어난 원인은, 제16대 총선 이전과 제17대 총선 이전에 실시된 정당법 개정으로 비례대표에 30%, 50%의 여성후보할당제가 도입된 데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의 정당법 개정을 정당에서 받아들인 데에는 1990년대 후반부터 결성된 여성단체의 모임인 ‘할당제연대’의 활동 덕분이었고, 특히 제17대 총선을 맞이하여 여성단체에서는 ‘총선여성연대’를 결성하고 여성할당 50%를 위한 정당법 개정 압력을 행사하였다. 또한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여성후보군 101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각 정당이 여성 후보를 적극적으로 공천하도록 독려했던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궁극적으로 한국의 정당이 여성 할당제를 정당법 차원에서 받아들인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여성의 정치참여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되었다.

〈표 Ⅲ-7-1〉 정당의 여성공천할당 관련 정당법 개정과정

선거 구분		2000년	2002년	2004년
국회	비례대표	30% 이상 의무규정	30% 이상 의무규정	50% 이상 의무규정
	지역구	-	-	30% 이상 권고사항(보조금 지급)
지방의회	비례대표	30% 이상 의무규정	50% 이상 의무규정	50% 이상 의무규정
	지역구	-	30%이상 권고사항(보조금 지급)	30%이상 권고사항(보조금 지급)

〈표 Ⅲ-7-2〉 여성 국회의원 현황

(단위: 명, %)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수 (지역구/비례)	여성의원					
		여성전체		지역구		비례대표제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제15대(1996)	299(245/54)	9	3.0	2	0.8	7	15.2
제16대(2000)	273(227/46)	16	5.9	5	2.2	11	23.9
제17대(2004)	299(243/56)	39	13.0	10	4.1	29	51.7
제18대(2008)	299(245/54)	41	13.7	14	5.7	27	50.0

자료: 한국여성개발원(2001). 『해방 후 여성의 정치참여 분석과 향후과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2-18대 국회의원 선거총람』.

나) 지방의회 선거제도 변화와 여성참여 확대

2000년대 이후 지방의회에 여성 참여를 살펴보면, 2002년 광역의회에 여성은 9.6%(66명/682명)로, 지역구 1.8%(11명), 비례대표 75.3%(55명)이었으며, 기초의회는 2.2%(79명)로 매우 낮았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광역의회 12%, 기초의회 15%로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 비해 많은 여성의원이 당선되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 중선거구제와 정당공천제·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되었고, 기초의회에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기초의회의 여성의원 비율이 과거의 2%에서 15%로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최근 실시된 2010년 지방선거의 경우, 기초의회가 21.6%(626명), 광역의회가 14.8%(113명)으로, 2006년 지방의회 선거 당시보다 증가하였다.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에도 2010년 2.6%(6명)으로 2006년 1.3%(3명)보다 늘어났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비록 광역단체장은 배출하지 못했으나, 기초단체장이 6명 등장했고, 비례대표를 통한 참여가 대부분이었으나, 지역구의 당선자도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⁵⁶⁾

56) 김원홍 (2010). 『6·2 지방선거와 여성』. “6·2 지방선거와 여성”.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학술교류 협정기관과의 지역협력 세미나 자료집. pp.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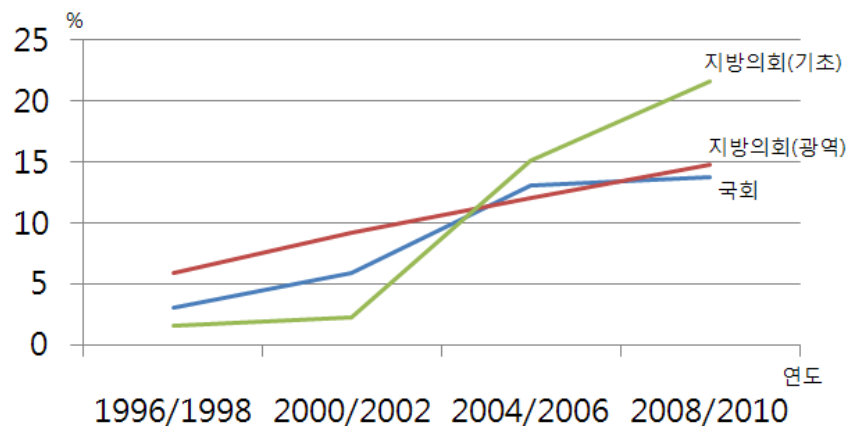
〈표 Ⅲ-7-3〉 연도별 광역의회 의원선거 여성 후보자 및 당선자수

연도		후보자 수						당선자 수					
		전체		여성		여성비율(%)		전체		여성		여성비율(%)	
1991년		2,885		63		2.2		866		8		0.9	
1995년	지역구	2,627	2,449	119	40	4.5	1.6	972	875	56	13	5.8	1.5
	비례		178		79		44.3		97		43		44.3
1998년	지역구	1,755	1,571	91	37	6.1	2.4	690	616	41	14	5.9	2.3
	비례		180		54		30		74		27		36.5
2002년	지역구	1,740	1,531	164	48	3.1	3.1	682	609	63	14	9.2	2.3
	비례		209		116		55.5		73		49		67.1
2006년	지역구	2,279	2,068	243	107	10.7	5.2	733	655	88	31	12.0	4.7
	비례		211		136		64.5		78		57		73.1
2010년	지역구	2,046	1,779	333	154	16.4	8.6	781	680	113	55	14.8	8.1
	비례		267		179		67.0		81		58		71.6

〈표 Ⅲ-7-4〉 연도별 기초의회 의원선거 여성 후보자 및 당선자 수

연도		전체 후보자수						당선자수					
		전체		여성		여성비율(%)		전체		여성		여성비율(%)	
1991년		10,151		123		1.2		4,303		40		0.9	
1995년		11,970		206		1.7		4,541		71		1.6	
1998년		7,450		140		1.9		3,490		56		1.6	
2002년		8,373		222		2.7		3,485		77		2.2	
2006년	지역구	9,020	7,995	1,141	391	12.6	4.9	888	2,513	437	110	15.1	4.4
	비례		267		750		73.2		375		327		87.2
2010년	지역구	6,781	5,862	1,281	552	18.8	9.4	2,888	2,512	625	274	21.6	10.9
	비례		919		729		80.0		376		351		93.4

한편, 1995년 이후 국회와 지방의회 여성참여 현황은 아래 그림과 같으며, 현재로는 국회의 여성참여가 가장 낮고, 지방의회 중에서도 기초의회의 여성참여가 그나마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이 그림에서 보듯이 전반적인 참여 수준이 10%대에 그치고 있어 적극적인 개선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림 Ⅲ-7-1] 국회 및 지방의회 연도별 여성 참여현황

다) 여성의 정치참여 및 리더십 참여를 위한 여성의 역량강화 노력

여성가족부는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을 통해 양성평등 증진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 중 여성의 정치적 리더십 제고가 중요한 측면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기획 주제로 정치참여 및 리더십 증진을 다루고 있는데, 여성의 정치참여에 분수령이 되었던 17대 총선이 있던 2004년에는 여성의 정치참여 관련된 사업이 가장 많이 운영되었다. 중앙단위에서 이 사업에는 (사)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사)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 (사)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 등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여성단체 및 연구소들이 참여하였으며, 여성유권자의식교육·여성후보 당선운동, 선거후 유권자의 투표행태조사 및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세미나 개최,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국회 및 지방의회 인턴 프로그램 등 사업의 방법도

다양하였다⁵⁷⁾.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일회성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고 실질적인 예비 정치인을 육성하는 것과 거리가 있어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육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2) 행정부문 의사결정직에 대한 여성의 약진적 참여

가) 장관급 여성참여 미약

우리나라에서 여성장관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대통령직 접선거가 다시 시작된 제13대 대통령 선거(1988년)부터 각 정당의 대통령후보들이 여성 장관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면서부터이다. 1998년 당시 새정부의 첫 조각에 전체 장관 17명 중 2명(보건복지부 장관, 문화관광부 장관)과, 장관급인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까지 3명을 여성으로 임명하였다. 2003년 출범한 새 정부에서는 출범당시 4명의 여성장관(법무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부)을 임용하였으나, 임기 중간에는 총 2명(11.1%) (여성가족부, 법제처)의 여성장관이 있었다. 2008년 현재 정부가 출범할 때에 여성부 장관 1명으로 크게 축소되었으나, 2010년 현재 여성가족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2명의 여성 장관이 있다.

정무직 중 차관급의 경우 1998년에는 전체 61명중 0명(0%), 2001년에는 전체 68명중 여성차관이 1명(1.5%)(노동부 차관)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는 출범 초기 보건복지부에 1명의 여성차관을 임명했었고, 현재는 통계청장,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을 여성으로 임명하여, 현 정부의 임기 중 총 4명의 여성차관을 임명하였다.

57) 김은경(2008). “여성정책 거버넌스 유형에 대한 분석: 여성부의 협력사업 사례,” 『아시아여성연구』 제47권 1호, p.81.

〈표 Ⅲ-7-5〉 여성장관 현황

	장관급행정부처	여성장관 수	비율(%)
2001	18부 4처	2명(환경부, 여성부)	11.1
2003		4명(법무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여성부)	22.2
2005		2명(여성부, 법제처)	11.1
2010	15부 2처	2명(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13.3

자료: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각 년도.

나) 여성공무원의 점진적 확대

정부는 1995년 공직에 여성채용목표제를 도입, 1996년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1998년 7월과 1999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여성채용목표제를 확대하였다. 우선 1998년 7월에는 기존의 채용목표 비율을 확대하여 조기에 여성의 공직 진출의 활로를 넓히하고자 기존의 1999년 18%, 2000년 20%이던 목표 비율을 앞당겨 1999년 20%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9급 시험에도 여성채용목표제를 확대 적용하였다. 또 1999년 2차 확대 실시에서는 여성채용목표제 적용기간을 2000년에서 2002년으로 연장하고 대상을 2000년부터 기술직까지 포함하도록 하였다.

한편, 1999년 헌법재판서에서 위헌판결을 내린 군복무가산점제를 2000년 12월부터 폐지하였는데, 이는 여성들에게 남성과 평등한 위치에서 공직에 참여할 수 있다는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표 Ⅲ-7-6〉 중앙부처 여성공무원 현황

구분	2001	2004	2005	2006	2007	2008
여성 공무원	19.8	26.3	26.6	27.7	28.6	29.5

*대상: 정부업무평가기관, 일반직(연구, 지도직), 별정직, 일반계약직, 외무직, 기능직.
자료: 행정자치부 균형인사실 내부자료(2008).

여성공무원 확대를 위해 시행해왔던 여성채용목표제(1998-2002)가 2002년 말로 적용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한국 정부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2003-2012)를 2003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공직 내 성비(性比)의 균형 유지와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로, 공무원 채용 시 어느 한쪽 성의 합격자 비율이 30% 미만일 경우 합격선의 범위 내에서 해당 성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이다.

〈표 Ⅲ-7-7〉 여성채용목표제 목표비율

(단위: %)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5급 이상	20%	20%	20%
6, 7급	20%	23%	25%
8, 9급	20%	25%	30%

자료: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내부자료(2002).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운영된 여성 공무원 채용 목표제를 바탕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다. 2002년 12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을 개정하는 한편 「양성평등채용목표제실시지침」을 수립하여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채용시험에 본 제도를 적용하였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도입된 첫해인 2003년에는 행정고시 여성 2명, 7급 공채 여성 19명, 9급 공채 여성 8명·남성 9명으로 총 여성 29명, 남성 9명이 추가적으로 합격하였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험령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특별채용시험(기능직은 제외)중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대해 선발예정 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를 그 대상으로 하며, 교정직렬·보호직렬은 제외한다. 2005년부터는 그동안 업무 특성 등으로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적용이 제외되었던 검찰사무 직렬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2005년도 17%, 2006년도 19%, 2007년도 20%)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였다. 시험실시단위별 채용목표 인원(이하 ‘목표인원’

이라 함)은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30%를 곱한 인원수로 하며, 검찰사무직렬은 20%로 한다. 예를 들어, 선발예정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소수점 이하를 버리는 식으로 계산한다. 본 제도의 시행으로 종래 모집 및 응시 인원이 적어 여성 진출이 저조했던 기술직 분야에 여성 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여성 합격비율이 높았던 일부 직종에서는 남성 합격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와 공직 내 직종 간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일정부분 도움이 되고 있다⁵⁸⁾.

〈표 Ⅲ-7-8〉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목표비율

(단위: %)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5급 이상	30%				
6, 7급					
8, 9급					

자료: 행정안전부 균형인사 운영지침 (2009).

다) 중간 관리직급 여성참여 제고를 위한 조치실시

정부는 2002년, 국가의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관리직 여성의 비율을 10%까지 확대하는 ‘여성관리자 임용계획 5개년 계획’(2002-2006)을 수립하고, 기관별로 1인 이상의 여성 국장 또는 과장을 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여성 공무원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성 관리직 진출은 좀처럼 증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임용목표제는 여성을 공직에 유치하고자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던 여성채용목표제에서 진일보하여 여성 공무원들을 관리직 공무원으로 적극 육성·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로서 그 적용대상은 일반직과 이에 해당하는 별정직, 연구·지도직, 계약직 및 5등급 이상의 외무 공무원이다.

58) 국가기록원나라기록.

<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1739>.

여성 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계획에 따라 2001년 4.8%였던 여성 관리자 비율이 2002년에는 5.5%, 2003년에는 6.4%, 2004년에는 7.4%로 증가하였고, 2007년 결국 목표치인 10%를 넘어서게 되었으며, 2009년 조사결과 2008년 시점에서 10.8%를 기록하였다. 이 같은 여성 관리자의 비율이 증가하게 된 데에는 그동안 추진해온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와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그리고 여성관리자임용확대 계획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표 Ⅲ-7-9〉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비율 및 5급 이상 여성공무원 현황

(단위: %)

구분(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여성관리자 목표비율	-	-	4.8	5.5	6.5	7.5	8.7	10.0	-	-
여성 현황	2.95	3.5	4.8	5.5	6.4	7.4	8.4	9.2	10.0	10.8

자료: 중앙인사위원회 (2005). 「공무원인사개혁백서」.; 행정안전부 인사행정과 내부자료 (2010).

나아가 ‘5급이상여성관리자임용확대 5개년 계획’의 후속조치로, 중앙인사위원회는 공직 내 여성 관리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2007-2011)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일선 부처들이 자체적으로 수립·통보해온 계획을 토대로 중앙인사위원회가 부처별 평균승진 소요 연수, 여성 공무원의 재직기간, 여성 인력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하였다. 임용확대의 대상 직급을 종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한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확대 목표비율에 따르면, 2006년 현재 5.4%인 중앙 행정기관의 4급 이상 여성비율을 2007년 6.2%, 2008년 6.9%, 2009년 7.7%, 2010년 8.8%, 2011년 10.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표 Ⅲ-7-10〉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확대 목표비율

(단위: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4급 이상 여성관리자 목표비율	5.4	6.2	6.9	7.7	8.8	10.0

자료: 행정안전부 인사행정과 내부자료(2010).

4급 이상 관리자급의 여성 현황은 부처별 차이가 뚜렷했는데, 중앙인사위원회, 법제처, 국정홍보처 등은 현재 비율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은 목표를 수립한 반면,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이미 여성비율이 매우 높거나,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등 해당 분야 여성 인력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기관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목표를 설정했다.

이처럼 임용확대 계획의 대상 직급을 1차 계획의 5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한 배경에는 최근 5급 공채의 여성합격자가 크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국장급 등 고위직에 여성 비율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기 때문이다.

라) 고등고시에서 여성 합격자의 급격한 증가

특정직 공무원인 판사의 경우 2000년 12월 전체 판사 1,567명 중 여판사는 118명으로 7.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1998년의 99명(7.2%)에 비하여 다소 증가한 것이다. 검사의 경우도 2001년 전체 1,367명 중 여검사는 67명(4.9%)으로 1998년의 17명(1.5%)에 비하여 다소 증가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2006년에 들어오면서 16.9%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2008년 현재는 21%를 기록하고 있다.

외무고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7년 여성 합격자는 전체의 67.7%를 기록해 2005년 52.6%를 기록한 이후 2010년 현재까지 최고의 합격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2010년까지도 60%대의 합격률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다.

또한 행정고시에서도 여성의 높은 합격률이 나타났다. 2008년 행정고시에서는 여성이 전체 합격자의 51.2%(124명)를 차지하여 행정고시 사상 가장 높은 여성 합격률을 기록했고, 국제통상직의 경우에는 여성의 합격비율이 64.7%에 이르렀다. 행정고시 여성 합격률을 살펴보면 2000년에는 25.1%, 2004년에는 38.4%, 2005년 44.0%, 2007년 49.0%, 2008년 51.2%로 지속적으로 합격률이 증가하였다.

〈표 Ⅲ-7-11〉 여성 판·검사 현황

	판사			검사		
	총수	여성수	비율(%)	총수	여성수	비율(%)
1995	1,239	61	4.9	946	10	1.1
1998	1,369	99	7.2	1,112	17	1.5
2000	1,567	118	7.5	1,111	28	2.5
2006	2,221	375	16.9	1,567	181	11.6
2008	2,378	499	21.0	1,671	260	15.6

자료: 총무처(1993, 1994, 1995). 「총무처연보」.; 행정자치부. 「1999년 통계연보」.; 2001년 행정자치부 내부자료.; 행정안전부 내부자료(2006, 2008).

〈표 Ⅲ-7-12〉 외무고시 여성 합격자 현황

	전체 합격자 수	여성 합격자 수	여성 비율(%)
2002년	35	16	45.7
2003년	28	10	35.7
2004년	20	7	35.0
2005년	19	10	52.6
2006년	25	9	36.0
2007년	31	21	67.7
2008년	35	23	65.7
2009년	41	20	48.8
2010년	35	21	60.0

자료: 외교통상부 내부자료. 각 연도.

마) 정부 각 부처 위원회 여성참여율의 정제

법령·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여성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부 소속위원회는 2000년 6월 현재 1,210개이고 16,297명 전체위원 중 여성위원은 4,203명(25.8%)으로, 1984년 2.2%, 1992년 5.5%, 1995년의 7.0%, 2000년 말 23.6%로 과거에

비해 커다란 증가를 보여왔다.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말 정부 전체 위원회는 1,346개이며, 전체 위촉위원 17,470명(당연직 위원 제외) 중 여성은 32.2%를 접하는 5,617명이다. 이 비율은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003년도 시행계획에서 정한 목표비율 32%를 달성한 수치로 정부 내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정책이 일정부분 가시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2005년 정부 내 위원회 여성참여율에 따르면, 1,431개 위원회의 위촉위원 1만9,969명 중 6,476명이 여성위원으로 전체 32.4%에 이르러 전년 대비 0.2% 증가하였으나, 목표율 36%에는 3.6%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앙은 43개 기관 362개 위원회 위촉직 위원 7,742명 중 여성 위원은 2,157명(27.9%)으로 전년에 비해 0.7% 증가했지만, 목표율 36%에는 8.1%나 미달되었다. 16개 광역자치단체 1,069개 위원회 위촉직 위원 1만 2,226명 중 여성위원은 4,313명(35.3%)으로 전년에 비해 0.5% 증가해 목표율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도에는 26,093 전체 위원 중 여성 위원이 8,070명이 되어 2008년 12월말 위촉직 여성참여율은 30.9%로 10년 전인 1998년의 12.4%에 비해 18.5% 상승하였으나, 전년의 33.1%에 비해 2.2% 하락하는 등, 목표율 40%에 미치지 못하며, 증가 추세를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는 양상을 보였다.⁵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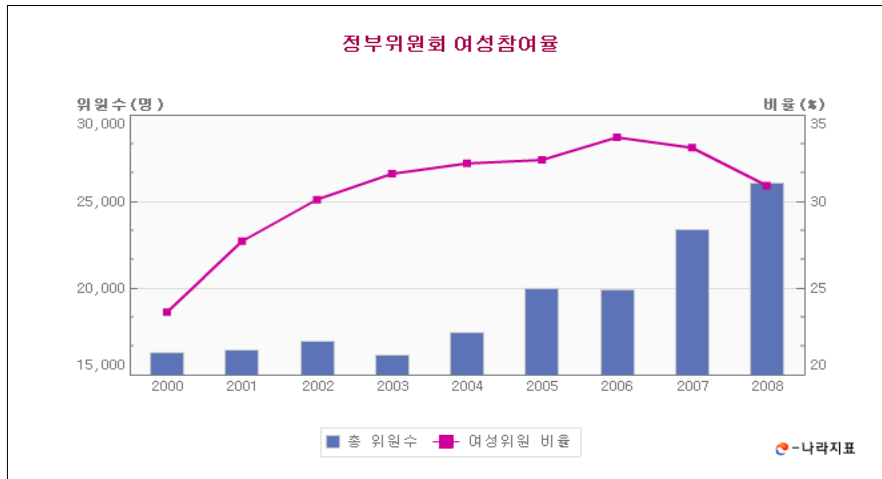
〈표 Ⅲ-7-13〉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

(단위: %)

	'97	'02	'03	'04	'05	'06	'07	'08	'09
목표비율	-	30	32	34	36	38	40	-	-
여성비율	11.1	30.1	31.6	32.2	32.4	33.7	33.1	30.9	28

자료: 여성부 내부자료(2009).

5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179&aid=0000000016>, 여성가족부 기사제공.



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

[그림 Ⅲ-7-2]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

다. 향후과제

북경행동강령의 권력 및 의사결정 참여와 관련하여 한국에서 가장 큰 성과는 정치부문의 여성할당제가 도입된 것이다. 비례대표제에 제한적으로 도입되긴 하였으나, 비례대표 후보자의 50%를 여성으로 한다는 조항은 일반 유권자에게까지 여성할당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였고, 여성할당제 도입 이전보다 여성의 정치진출을 증진시키는 획기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전체 의석의 15% 내외를 차지하는 비례대표제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는 여성할당제가 그 이름만큼의 성과를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의 여성단체에서는 비례대표제에서 나아가 지역구에도 여성 공천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은 여야간 합의를 통하여 지방선거시 지역구에 대한 여성후보 공천에 대해, 국회의원 선거구별 기초 또는 광역의회 후보 1명 이상 의무공천(시구에 해당)을 결정하였다. 그 결과 만족할 수준은 아니었으나, 지역구 여성후보자와 당선자가 약간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정치부문의 할당제 채택 외에, 고등고시에서 최근 여성들의 약진으로 인하여, 일반 보수적인 남성 사회로부터 역풍이 만만치 않은 상황은 한국 여성이 풀어야

할 과제이다.

공직분야에 대한 여성 진출도 여성채용목표제나 양성채용목표제를 통해 해소하고 있으며, 특히 의사결정직에 해당하는 관리자급 이상 여성공무원 확대계획이 실시되고 있어, 향후 공직분야 고위직급의 여성참여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한국은 정치와 공직분야에서 참여를 촉진시키는 조치나, 실질적인 참여 부분에서는 성과가 있었지만, 여성의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리더십 훈련 부분은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기존 제도에 진입하기 위한 진입 장벽이 낮아지긴 하였으나,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역량을 키우고 제도권 내에서 경력의 지속과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제도적인 보완, 나아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과 효과를 관리하는 것과 더불어 차세대 여성리더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임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8.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⁶⁰⁾

북경행동강령 전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담당 국가기구를 설치하거나 강화한다. ■ 입법, 공공정책, 프로그램 및 사업에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한다. ■ 기획 및 평가를 위한 성별분리통계와 정보를 생산하고 배포한다.

가. 국내 현황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평등진흥원 등이 있다. 여성가족부는 국가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며 2010년 현재 2실 2국 2관 1대변인과 22과로 구성되어 있다.

60)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본원의 이선주 연구위원이 집필하였다.

여성가족부 산하에는 한국양성평등진흥원이 있고, 진흥원은 성 인지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연구전문기관으로 여성 관련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현재 여성정책을 추진하는 여성가족부, 여성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 그리고 성 인지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까지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국가 기구가 체계화되어 있다.

입법, 공공정책, 프로그램 및 사업에 성 인지적 관점의 통합에 있어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 (정책의 분석·평가)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성별영향평가는 2004년 시범적 실시를 시작으로 하여 2008년 현재 총 295개 기관에서 1,531개의 과제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와 함께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 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57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제58조(결산보고서 등의 작성 제출)에 따라 성 인지예산제도 역시 실시하고 있다. 성 인지 예산 제도는 3년간의 유예에 걸쳐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성별분리통계와 정보 관련해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3조(여성관련문제의 조사 등)와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따라 성 인지 통계를 실시하고 있다. 성별분리통계로 현재 통계청의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한국의 성 인지 통계」이 발간되고 있다.

나. 지난 15년간 주요정책 및 성과

1) 여성담당 주요 국가 기구 설치

가) 여성정책 추진 기구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여성의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한 한국 여성정책의 발전은 국제사회의 양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아젠다의 확산과 그 궤를 같이 해왔다.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여성정책은 1995년 북경행동강령의 채택에 의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1995년 12월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1996년 시행됨에 따라서 북경행동강령의 이행을 위한 재원으로 1996년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였다.⁶¹⁾ 여성발전기금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추

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을 정부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성한 것이다.⁶²⁾ 2009년 현재 여성발전기금의 누적된 순 조성액은 13,403백만원이다.⁶³⁾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여성정책을 이끌 추진체계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1998년 여성특별위원회가 설립되었으나 이 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위원장의 의결권이 없고 준입법권이 없어 여성 관련 부처로서의 권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⁶⁴⁾ 이에 여성 업무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여성계의 요구에 따라 2001년 여성부가 설립되었다. 2001년 여성부가 설립되면서 부처 간의 조정이나 협의의 역할이 아닌 여성의 권한 증진과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업무를 실제로 추진하고 실행할 수 있는 부처가 생겼다. 2005년 6월에는 여성정책과 함께 통합된 가족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여성가족부로 확대·개편되었다. 여성가족부는 특히 보육 문제와 여성의 사회 참여를 연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보육정책을 이관 받아서 이를 중점사업으로 삼았다.⁶⁵⁾ 2008년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여성가족부가 가지고 있던 가족정책과 보육정책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면서 성별영향평가, 여성 인력개발, 여성 권익증진 등을 강화하여 여성부로 다시 개편되었다.⁶⁶⁾ 현재는 2010년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여성부가 가족 정책과 청소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면서 여성가족부로 확대되었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2실 2국 2관 1대변인과 22과로 구성되었다. 여성가족부는 ①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 여성의 권익 증진, ②청소년의 육성·복지 및 보호, ③가족과 다문화 가족 정책의 수립·조정·지원, ④여성·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 피해예방 및 보호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61) 여성특별위원회(1998).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4차 이행보고서 (1994-1997)」. 여성특별위원회. p.18.

62) 여성부(2001). 「제5차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1998-2001)」. 여성부. p.39.

63)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korea/view/intro/intro01_06_01.jsp. 2010. 9.10 검색.

64) 여성부(2002). 「제5차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1998-2001)」. 여성부. p.5.

65) 여성가족부(2005). 「제6차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이행보고서(2002-2005)」 여성가족부. p.10.

66) 여성부(2010). 「제7차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여성부. p.11.



[그림 Ⅲ-8-1] 여성가족부 체계도(2010년 9월 현재)⁶⁷⁾

2010년 현재, 중앙행정기관 간에 여성정책을 조정하는 기구로는 ‘여성정책조정회의’, ‘여성정책책임관 및 여성정책협조부서’,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가 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11조에 의해 개최되는 여성정책조정회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여성 정책에 관련된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여성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여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기구이다.⁶⁸⁾ 「여성발전기본법」 제12조에 의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여성정책책임관을 지정한다.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67)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korea/view/intro/intro03_01.jsp, 2010.9.9 검색.

68) 여성가족부(2010). 「2009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여성가족부. p.17.

등을 비롯하여 총 17개 부서에 여성정책책임관 및 협조부서는 지정하여 정책사안별 관계기관회의를 한다.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는 장·차관, 실장, 국장 및 정책자문위원 등 6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⁶⁹⁾

나)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양성평등진흥원 설립

1983년 여성관련 전문연구기관으로 한국여성개발원이 설립되었다. 한국여성개발원은 여성에 관한 조사연구, 여성의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과 여성 활동에 필요한 지적, 기술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⁷⁰⁾ 1998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기구를 개편하고 인원수를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그 기능도 연구를 중심으로 바뀌게 되면서 총리실 산하 인문사회연구회에 속하게 되었다.⁷¹⁾ 2007년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칭을 변경하였다.

한국양성평등진흥원은 2003년 여성발전기본법 제21조의 3에 따라 양성평등교육, 특정 성에 대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여 반영하는 성 인지 교육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 여성정책을 추진하는 여성가족부, 여성 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 그리고 성 인지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의 다각적 활동으로 여성의 지위향상과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국가기구가 체계화되었다.

2) 입법, 공공정책, 프로그램 및 사업에 성 인지적 관점 통합

가) 성별영향평가 도입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서, 정책의 기획 단계에서

69) 위의 자료.

70) 정무장관(제2)실(1994).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3차 보고서」. p.23, 정무장관(제2)실, p.23.

71) 여성부(2002). 위의 자료. p.37.

부터 집행 및 평가에 이르기 까지 특정 내용이나 프로그램 또는 법령 등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수 있는 차별적인 영향을 파악하여 사전에 이를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⁷²⁾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에 따라 2002년 12월 성별영향평가를 도입하여, 2004년에 성별영향평가 지침을 마련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하였다. 2005년부터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이 본격적으로 이 제도 적용하고 있다.

성별영향평가는 자체 평가와 심층 평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진다. 자체평가는 각 기관의 공무원이 직접 소관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평가하고 추진하여 그 결과를 작성하는 반면 심층평가는 핵심정책이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정책을 전문가가 심층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여 여성가족부가 연구용역으로 추진한다. 성별영향평가의 추진단계는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계획서 및 환류실적을 제출한 다음에 성별영향평가 중간 보고서와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표 III-8-1> 참조).

〈표 III-8-1〉 성별영향평가 추진단계

추진 과정	주요 내용
성별영향평가 과제 선정	- 대상: 모든 정책 및 사업 - 성별영향평가 지표를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는 과제 선정
성별영향평가 추진계획서 환류실적 제출	- 추진계획서 작성: 사업의 개요, 실시 필요성, 평가방법, 사업소관 부서 및 연락처 등 포함 - '05-'09년 환류 및 정책 개선 실적 제출
성별영향평가 중간보고서	- 성별영향평가 7개 지표 중에서 4번째 지표 내용까지 작성 • 성별통계의 생산·활용 • 정책의 성별 관련성 파악 • 정책결정과정의 양성평등참여 • 성인지적 예산 편성 등
성별영향평가 최종결과보고서	- 중간보고서 4개 지표에 3개 지표 추가 • 정책수행방식의 양성평등성 • 정책 수혜의 양성평등성 • 정책 개선 및 환류 노력

자료: 여성부(2010). 「성별영향평가매뉴얼」, p.10.

72) 여성부(2010). 「성별영향평가매뉴얼」, p.8. 여성부.

성별영향평가는 2005년 이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등 참여기관과 평가대상 과제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8년에는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더불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까지 성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적용할 기관을 확대하였다. 2005년 총 53개 기관에서 85개의 과제를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가 실시하였으나 2008년에는 총 295개 기관에서 1,531개의 과제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2007년부터는 16개시·도교육청이 시범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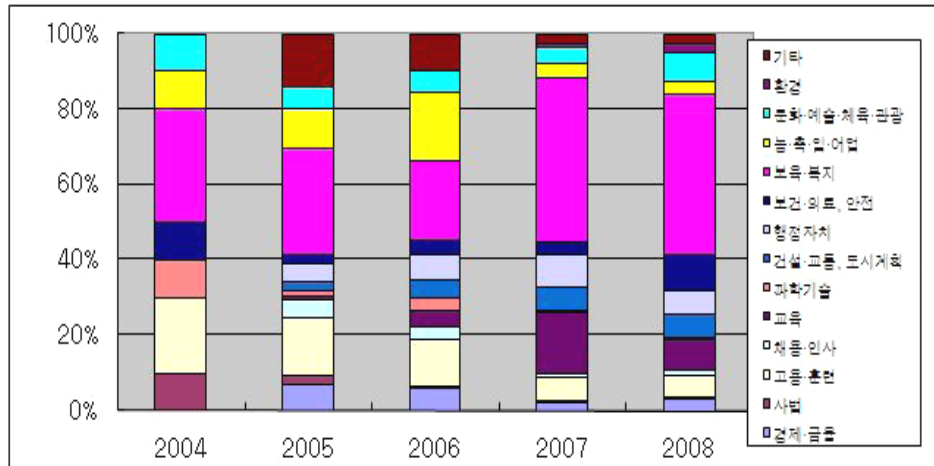
〈표 Ⅲ-8-2〉 추진 실적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기관수	과제수	기관수	과제수	기관수	과제수	기관수	과제수	기관수	과제수
계	9	10	53	85	187	314	278	720	295	1,531
중앙행정기관	6		37	51	38	60	37	78	31	78
지방자치단체	3		16	34	149	254	226	627	248	1,437
지방교육청			-	-	-	-	15	15	16	16

자료: 여성가족부 2004~2008 여성정책연차보고서 연도별 정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된 성별영향평가 과제를 분류하면 ①경제·금융, ②사법, ③고용·훈련, ④채용·인사, ⑤교육, ⑥과학기술, ⑦건설·교통, ⑧행정자치, ⑨보건·의료·안전, ⑩복지·보육, ⑪농·축·임·어업, ⑫문화·예술·체육, ⑬환경, ⑭기타 등 총 14개 분야이다.⁷³⁾ 아래 그림을 보면 지난 5년간 복지 및 보육분야에서 성별영향평가가 가장 광범위하게 행해졌다. 다음으로는 보건·의료·안전 및 건설·교통·도시계획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반면에 농·축·임업 분야와 고용 및 훈련 분야에서는 계속 감소하는 경향을 있고, 과학기술 분야는 2004년에는 수행되었으나 2007년과 2008년에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73) 여성부(2009). 「2008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p.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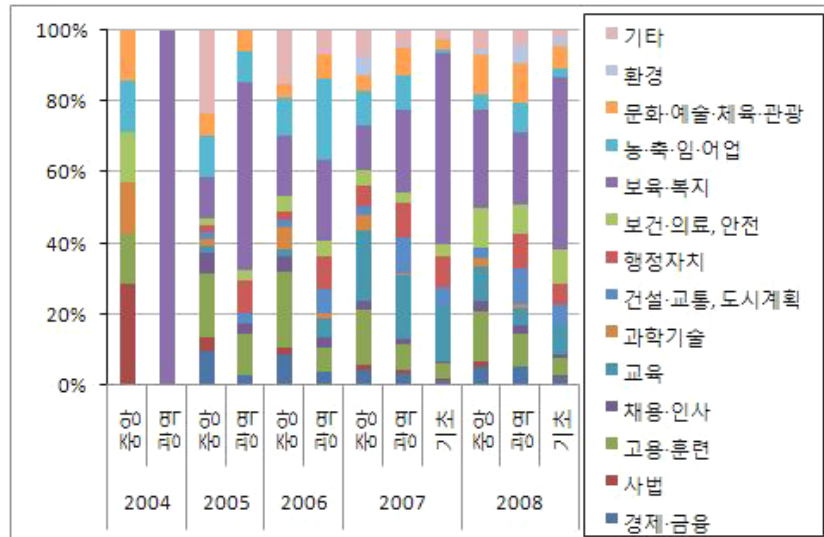


자료: 여성부(2009). 2008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p.19.

[그림 Ⅲ-8-2] 연도별 · 정책분야별 과제 추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관유형에 따른 평가과제 선정 경향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은 매해 고용·훈련과 관련된 정책 사업을 꾸준히 선정 및 평가하여 2005년 17.6%, 2006년 21.3%, 2008년 13.9%를 차지하였다.⁷⁴⁾ 보육 및 복지 분야는 2006년 17%에서 2008년 27.8%로 점유 비율이 대폭 증가하였다.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육 및 복지 분야에서 평가대상 과제를 많이 선정하였다.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성별영향평가에 참여한 기초자치단체는 2007년과 2008년 모두 전체 과제의 50%를 보육 및 복지 분야에서 대상과제를 선정하였다. 이렇게 특정분야에 집중되어 과제가 선정되는 현상으로 미루어 볼 때 향후과제 선정에 있어서 정책 분야별로 대상 과제를 다양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74) 여성부(2009). 위의 자료. p.20.



자료: 여성부(2009). 『2008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p.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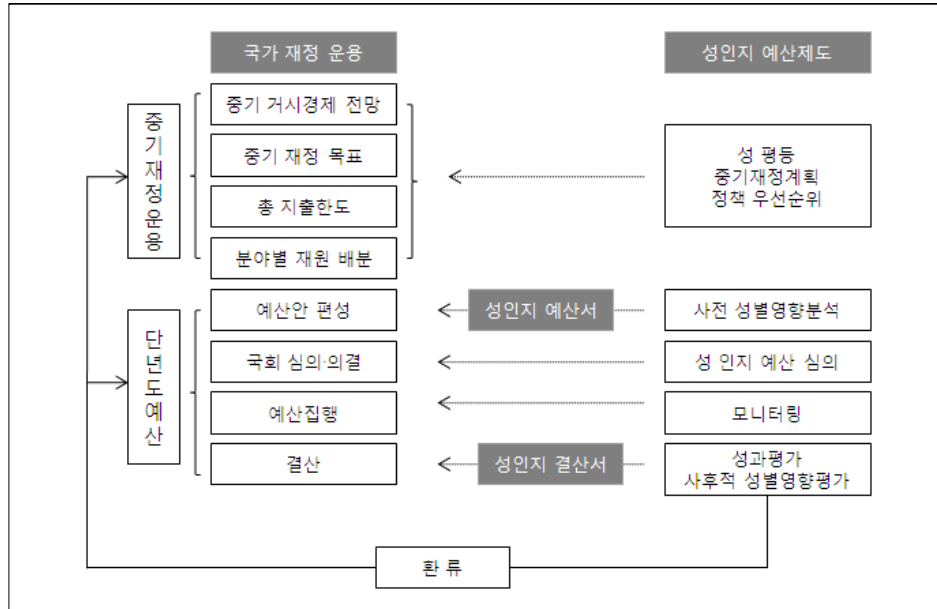
[그림 Ⅲ-8-3] 연도별 의무적용대상기관의 과제추이

나) 성 인지 예산 제도 도입

성 인지 예산은 공공 지출로부터 남녀가 균등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 여성과 남성의 실질적 요구를 통합하고, 예산 지출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예산과정을 개선하는 것이다.⁷⁵⁾ 그리고 이것은 여성지원이나 양성평등을 위한 개별사업 단위의 예산에 국한된 것이 아닌 재정 운영 전반에 걸친 제도이다.

75)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1_03_02.jsp. 2010. 8. 20 검색.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09).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p.3.

[그림 Ⅲ-8-4] 국가 재정운용과 성인지 예산제도

성 인지예산은 2001년 한국여성민우회가 자치단체 예산에 대하여 성 인지적 분석을 시도하면서 그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2002년 국회 본회의에서 ‘성 인지적 예산편성 및 자료제출 촉구결의안’을 의결하였다. 2006년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성인지관련재정연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성인지예산안작성지침’을 마련하여 ‘2007년 예산안편성지침’에 이를 포함시켰다.⁷⁶⁾ 2006년 말에는 국가재정법에 성 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되었으나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2010년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위해 기획재정부는 2009년 4월 ‘성인지예산서작성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성 인지 예산서 작성을 위한 부처 담당자교육과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성 인지 예산서 작성지침은 성 인지 예산의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양성평등사업과 성별영향분석 사업을 꼽는다. 양성평등사업은 양성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①제3

76) 국회예산정책처 (2009).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이 추진하는 사업, ②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권익증진사업, ③남녀평등기본계획과 여성농어민육성종합계획 등과 같은 법령·계획 등에 근거한 양성평등사업이 포함된다. 성별영향분석사업으로는 양성평등사업을 제외한 일반예산사업 중에서 성별수혜자 분석이 가능한 사업이다.

2010년도 국회에 제출된 성 인지 예산서는 총 29개 기관, 195개 사업으로 7조 3,144억원으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매우 적다.⁷⁷⁾ 게다가 국가재정법이 성 인지 예산 작성을 기금을 제외한 “예산”에만 적용하고 있다. 부처에 따라 기금의 지출이 상당이 많은 곳도 있기 때문에 기금을 제외할 경우 부처의 재정 운영에 있어 성 인지적 접근이 어렵기도 하다.

〈표 Ⅲ-8-3〉 2010년도 성 인지 예산서 개요 (29개 기관)

(단위: 개, 억원)

소관	사업 수	2010	주요 사업
합계	195	73,144	여성부·복지부 등 29개 기관
기획재정부	1	0.5	국제금융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학기술부	19	6,561	장학금, 인턴십 지원 등
외교통상부	1	376	한국국제협력단 출연(국내초청연수)
통일부	2	623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등
법무부	5	346	수형자 직업훈련, 법교육연수 등
국방부	3	14	여군편의시설, 청사어린이집운영 등
행정안전부	10	328	공공기관인턴, 자원봉사사업 등
문화체육관광부	14	722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콘텐츠인력 양성 등
농림수산식품부	22	2,153	농업인 교육훈련, 창업후계농업인 육성 등
지식경제부	4	638	무역·에너지·산업 인력 양성 등
보건복지가족부	27	50,843	보육료 지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환경부	5	310	자연환경안내원, 국립공원지킴이등
노동부	11	4,570	미취업자 직업훈련, 글로벌 취업 지원 등

77) 국회예산정책처 (2009). 위의 자료.

소관	사업 수	2010	주요 사업
여성부	28	677	새로일하기센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등
국토해양부	7	189	물류·우주항공 인력 양성 등
법제처	1	8	수요자중심법령정보서비스
국가인권위원회	2	1	여성차별시정, 스포츠분야 인권 개선
금융위원회	1	25	금융전문인력양성 사업
국세청	2	36	납세안내·세금교육지원 등
조달청	1	2	(직장내) 서울청사어린이집 운영
통계청	1	14	통계전문교육지원
문화재청	1	35	전통문화연수원 운영지원
농촌진흥청	11	239	농업전문 인력 양성, 기술지원 등
산림청	2	381	산림서비스 증진 등
중소기업청	8	3,994	기술개발, 아이디어상업화 지원 등
특허청	3	42	여성발명진흥, 발명교육 등
기상청	1	4	수치예보 전문인력 양성
해양경찰청	1	4	(직장내) 보육시설 신축 사업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1	8	예정지역주민 직업전환 교육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0년도 성 인지 예산서」, p.9 재인용.

3) 성별분리통계 및 정보 생산

개별 차원의 통계에서 남녀로 분리되어 있는 통계이며 여성과 남성의 조건과 사회공헌, 남녀의 필요와 특수한 문제를 반영하고자 생산 및 제시된 통계자료 일체를 의미한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성별로 불평등한 현상을 보여주고 이를 철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⁷⁸⁾

「여성발전기본법」 제13조는 ① 여성가족부 장관은 효율적인 여성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기초 조사와 여론

78) 성인지통계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gsis.kwdi.re.kr/gsis/ko/greeting.html>. 2010. 9. 1 검색.

조사를 실시할 것, ②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여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③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킬 것을 명시하고 있다. 2007년 「통계법」이 개정되면서 성 인지 통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개정된 「통계법」 제18조에 따르면 통계작성 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사항의 성별 구분 등은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0년 개정된 「통계법」에는 통계 책임관 담당 사무에 성별 통계 작성 및 보급에 관한 사무가 추가되었다.

성 인지 통계의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통계청이 1997년부터 매년 발간하는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1994년부터 매년 발간하는 「한국의 성 인지 통계」(구 여성통계연보)가 있다.

다. 향후과제

북경행동강령이 채택된 후 우리나라는 이의 이행을 위해 충실한 노력을 기해왔다. 현재 성별영향평가와 성 인지예산을 도입하여 실행하고 있는데, 이는 양성평등 증진과 여성의 권한 강화를 위한 성 주류화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별영향평가와 성 인지 예산을 실행함에 있어서 몇몇의 제한점이 나타나고 있어 향후과제로써 이의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성별영향평가의 대상과제가 특정 분야에 편중되어 있는 점이다. 예컨대 다양한 정책 분야 중 복지 및 보육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반면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2004년 성별영향평가를 시범 실시할 때 과제선정이 있었으나 2007년과 2008년에는 거의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성 중심의 과학기술 분야에서 성별영향평가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분야에서의 대상과제 선정을 독려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정책분야별로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를 다양화하여 특정 정책분야에서만 아닌 정책 전반에 걸친 성 주류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2010년도부터 성 인지 예산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그 대상기관과

사업이 아직 많지 않다는 점이다. 더욱이 대상사업도 국가재정법이 기금을 제외한 예산 항목에서 지출이 되는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그 규모도 크지 않다. 대상 기관과 사업의 확대를 위해서 예산 사업만이 아니라 기금 사업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 인지 예산이 효과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성별영향평가와의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 2010년도 성 인지 예산서 작성지침에서도 성별영향평가사업을 성 인지 예산의 대상 사업으로 꼽고 있으므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때 예산분석을 필수 요건으로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성별영향평가와 성 인지 예산의 실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공무원들에 대한 성 인지 교육의 강화이다. 공무원들이 성별영향평가와 성 인지 예산의 중요성을 인식할 때 그 실효성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성별분리통계로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과 한국의 성 인지 통계」이 발간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발간되고 있는 이들 통계집으로는 성별분리통계에 대한 수요를 수용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통계생산에 있어서 전 부처가 성별분리통계를 생산하도록 하고, 또한 이를 통해 여성정책의 범위가 전 부처로 확대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9. 여성인권⁷⁹⁾

북경행동강령 전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관련 국제법의 완전한 이행을 통하여 여성의 인권을 증진시키고 보호한다. ■ 법률 및 관습상의 평등성과 비차별성을 도모한다. ■ 법률 문해를 달성한다.

79) 여성과 인권은 본원의 윤덕경 연구위원이 집필하였다.

가. 국내 현황

북경행동강령의 ‘여성과 인권’ 부문에서는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관련 국제법의 완전한 이행을 통하여 여성의 인권을 증진·보호하고, 법률 및 관습상의 평등성과 비차별성을 도모하며, 법률 문해를 달성할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 국가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을 비롯한 인권과 관련된 국제협약 및 문서를 국내법과 일치하도록 하고 법상의 평등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특히 여성의 인권과 관련된 행정·입법·사법기관 담당자들의 인권의식이 매우 중요하며, 이 분야에 대한 여성 참여의 증진과 함께 모든 여성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이 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모든 여성과 남성을 대상으로 한, 국제법과 국내법상의 여성의 권리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권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법률문해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이 계속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북경 행동강령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법으로 거론되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은 각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이행해야 할 보편적인 수준의 국제기준을 16개 조항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각 국가에서는 동 협약에 대한 이행정도를 4년 단위로 유엔에 보고하게 되며, 이에 대한 심사와 권고가 이루어 진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2010년 사이 제4차(1994-1997), 제5차(1998-2001), 제6차(2002-2005), 제7차(2006-2009)의 4차에 걸쳐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제5, 6차 이행보고서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 권고에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2005년 호주제 폐지에 따른 민법 개정, 여성가족부의 전폭적인 예산 확대, 모든 정부 정책에 성 인지적 관점의 도입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2006년 성 인지적 예산 정책 도입,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반면에 우려를 표명한 부분 중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인신매매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중 주요 사항을 보면, 우리나라가 비준을 유보하고 있는 가족성(姓)과 관련된 조항의 유보를 철회하고, 1984년 협약 비준이래로 협약

을 내용으로 한 소송 사례가 부재한 것을 우려하며,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기존 법과 정책의 보다 효과적인 집행 권고를 위해 변호사, 검사, 판사들을 대상으로 협약 내용 및 선택의정서 절차에 대한 교육훈련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여성에 대한 직·간접 차별 금지가 헌법, 적절한 입법조치를 통해 구현되어야 하고, 특히 민간 분야에도 적용되기를 권고하고 있다. 또한 양성 평등원칙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공무원, 국회의원, 판사, 변호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협약의 실질적 평등개념에 대한 인식을 높일 것을 요청하였다.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법, 제도 또는 의식 개선 등 구체적인 방법으로 여성차별철폐를 해소해 나가겠다는 것을 유엔에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제 수준의 규범 이행을 담보하게 되며, 국가는 국제사회의 공신력을 쌓아가게 되는 것이다.

한편 동 협약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중요한 이행 상황으로 2006.10.18에 동 협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한 것이 있다. 이것은 성에 의한 차별을 받은 피해자가 자국의 모든 국내법적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 국제적으로 구제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당사자가 여성차별철폐 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하면 동 위원회는 당사국 정부에 문의하고 이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국제법적 구제 수단을 통해 여성차별철폐협약이라는 규범에 대한 실질적인 실천 수단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국제적인 수준의 규범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각 국가의 협약에 대한 이행보고와 심의를 통해 여성과 관련된 각 분야에서의 차별 제거와 인권 증진을 위한 법·제도는 상당히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전제로 하여 동 협약에 대한 최종권고도 직·간접차별 금지를 민간분야에도 확대되도록 하라거나 실질적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인식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실질적 평등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실질적 평등은 아직 달성되지 못했음을 역설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명목상의 법·제도 마련을 넘어 실질적인 법·제도의 확산에 기여하는 것이 지속적인 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북경 여성행동강령이 마련된 지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여성인권과

관련하여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관련 국제법의 이행을 통한 여성의 인권증진, 법률 및 관습상의 평등성과 비차별성 도모, 법률 문해 달성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루어왔는지를 남녀차별 철폐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가를 검토하여 향후과제로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서 법률상 평등성, 비차별성 달성에 있어서 여성의 인권증진과 관련된 법률분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사회개발 등 다방면에 걸쳐 다루어져야 하겠지만 본 고에서는 특히 법적으로나 관념적으로 여성차별의 전통이 뿌리깊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고용평등 부문과 가족생활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폭력 해소와 관련된 문제는 여성인권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다른 장에서 논의하게 되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 것으로 한다.

나. 지난 15년간 주요정책 및 성과

우선 남녀차별철폐와 관련된 법 제·개정 현황을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기본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을 필두로 해서 남녀고용평등 부문과 가족생활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Ⅲ-9-1〉 남녀차별철폐를 위한 법 개정 현황(1995-2010)

	법률 제·개정사항	주요 내용
1995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헌법의 남녀평등이념 구현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항 규정 등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여성근로자 모집, 채용시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등 제시하는 행위 금지 신설 등
1997	국적법 개정	자녀국적부여 관련 부계혈통주의에서 부모양계혈통주의로 전환, 처의 국적 수반취득 조항 삭제 통한 독자적인 국적선택권 보장
1999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고용, 교육, 재화·시설·용역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집행에 있어서의 남녀차별 금지, 피해자 권익 구제절차 마련
2000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간접차별개념 도입, 직장내 성희롱관련규정 신설

	법률 제·개정사항	주요 내용
2001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지원을 위한 육아휴직제도 개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2004	국적법 개정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국적법에 의한 간이귀화요건 불충족시 혼인 중 출생한 미성년 자녀 양육 등 필요시 국적 취득 허용
2005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 관한 법률 폐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업무 수행, 여성부는 성희롱방지교육 계속 관장
	여성발전기본법 개정	여성부의 성희롱방지교육 근거규정 마련 등
	민법 개정	호주제도 폐지, 자녀의 성과 본은 모의 성과 본도 따를 수 있고, 자녀의 복리를 위한 자녀의 성과 본 변경 가능, 동성동본금혼제도 폐지 및 근친혼금지제도로의 전환 등
	남녀고용평등법 개정(5.31)	유사산휴가 인정 등
	남녀고용평등법 개정(12.30)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도입근거 마련, 직장내 성희롱 관련피해 근로자 보호강화 법적 근거 마련, 육아휴직신청요건 확대
2007	가족관계의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정	호적법을 대체하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신설
2007	민법 개정	약혼연령 및 혼인적령을 남녀 모두 만 18세로 조정, 이혼숙려기간 도입, 협의이혼시 자녀 양육사항 및 친권자 지정 합의 의무화, 자녀의 면접교섭권 인정,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신설
2008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법명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 남녀차별개선, 모성보호, 일·가정의 양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일·가정 양립지원 기반 조성조항 신설
2009	민법	양육비 부담조서작성 의무화
20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육아휴직 요건을 생후 3년 미만의 자녀에서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완화, 입양자녀도 육아휴직 포함, 법상 각종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존가능,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을 면하도록 양벌규정 정비
2010	가족관계의등록등에 관한 법률 개정	입양관계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양부모만을 부모로 기록,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등록번호 기재 가능

1) 남녀차별철폐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여성발전기본법 부분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은 헌법의 양성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을 규정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의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의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정책결정과정 및 정치참여’ 등 16개 분야로 구성된 여성정책의 기본시책을 제시하고, 5년마다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양성평등을 이룩하기 위한 전략으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성 인지 예산, 성 인지 통계작성, 성 인지 훈련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헌법의 양성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다.

1999.7.1에는 헌법의 양성평등이념에 따라 고용,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었으나 종전 여성부의 사무로 되어 있던 남녀차별의 금지·구제에 관한 업무를 여성가족부의 사무에서 이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동 법은 폐지되었다.

2005.12.29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에 의하면, 기존의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폐지에 따라 성희롱 방지 교육 등에 관한 내용을 「여성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하도록 하였고, 정책 분석·평가지원 기관의 지정과 함께, 양성평등 전문교육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근거를 명시하였다. 또한 정책분석·평가지원기관을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가지원 기관으로부터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성발전기본법」의 주요 효과는 양성평등과 여성 발전을 위한 법의 제·개정의 촉진, 여성정책 수립의 촉진, 여성관련 행정기구 및 조직 설치의 확대, 여성발전기금의 설치·운용과 여성단체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2) 남녀차별철폐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남녀고용평등 부분

남녀고용평등 부분과 관련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상의 고용평등 달성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에 관한 법의 변천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1988년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2차 개정(1995.8.4)에서는 여성근로자 모집·채용시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임금 외의 생활 보조금품과 자금융자 등에서 여성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 이후 동 법에는 간접차별, 직장 내 성희롱 개념을 도입하였다.

동 법 제3차 개정(1999.2.8)에서는 “사업주가 여성 또는 남성 어느 한 성이 충족하기 현저히 어려운 인사에 관한 기준이나 조건을 적용하는 것도 차별로 보는” “간접 차별” 개념을 도입하였고, 제4차 개정(2001.8.14)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개념정의 하였다. 간접 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을 도입한 것은 법이 고용차별 금지나 고용상 남녀평등의 강조를 통해 고용 현장에서의 직접적이고도 명시적인 차별은 눈에 띄게 줄었으나 드러나지 않지만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차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현실인식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가정과 직장 생활의 양립지원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기업측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직장 생활과 가정의 일을 조화롭게 병행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를 수반하게 된다. 이에 관한 제도로는 육아휴직, 가족간호휴직, 탄력근무제도 등이 있으며 따라서 임신, 출산, 수유기능과 관련된 모성보호와는 달리 여성에게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당시 가정과 직장생활의 양립지원에 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선언하면서 이에 관한 입법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보다 앞서 이미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육아휴직제가 도입되었으나 이때의 육아휴직제도는 대상을 여성근로자

로 한정함으로써 여성이 ‘육아 담당자’라는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육아휴직제도의 도입은 민간 부문 뿐 아니라 공공 부문 즉 국가 및 지방 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경찰 등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정에 대한 지원조치의 하나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동 법 제7차 개정(2008.6.22 시행)에서는 법명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다. 법명을 이와 같이 변경한 이유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의 요구가 증가하였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여성 인력을 경제활동에 참여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무엇보다 여성의 취업률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남성이 일에 대한 의무를 전담하는 것에 비하여 여성은 일과 가정에 대한 의무 모두를 전담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 이러한 여성들의 부담을 줄이고, 여성과 남성 모두가 균등하게 일과 가정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법 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남녀차별개선, 모성보호, 일·가정양립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하여, 사업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존 직장 내 성희롱 발생에 대한 제재외에 업무수행 중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도 사업주의 의무로 하였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시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0년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2010.2.4 시행)하여 육아휴직 요건을 생후 3년 미만의 자녀에서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입양자녀도 육아휴직 적용범위에 포함하였다.

3) 남녀차별철폐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가족생활 부분

여기서는 가족생활에서의 평등과 관련된 입법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족생활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법 개정사항으로는 2005년에 이루어진

호주제 폐지를 들 수 있다. 1948년 제정된 헌법에서는 양성평등이념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실제 민법 중 친족상속법의 가족생활 관련 부분은 양성평등을 따르지 않고, 남자 우대, 여자 하대의 관습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다. 이에 근거한 각종 친족상속법의 규정들이 양성차별적인 법 규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규정들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최후까지 개정되지 않고 남아 있었던 것이 호주제였다.

이 제도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가 구성됨으로써 여자는 합리적 근거 없이 종속적이고 부차적인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이처럼 이 제도는 양성평등이라는 「헌법」 이념과 시대변화에 부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정에 50년 이상이 소요되었다. 호주제 폐지 반대론자들은 호주제 폐지는 가족폐지를 의미한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어 양성평등과 부부평등이라는 헌법적 이념의 실현에 커다란 장애가 되었던 것이다. 또한 호주제도와 호적제도가 폐지된 이후 가족관계가 어떻게 공시되고 확인되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 국민들도 있어 새로운 신분공시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하고 수용할 필요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호주제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05. 2.3 선고 2001헌가 9 등 전원재판부)을 받았으며, 이어서 2005.3.31 「민법」 개정을 통해 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창립·분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호주제가 폐지되기에 이르렀다.(2008.1.1 시행)

그와 함께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2007.5.17 제정, 2008.1.1 시행)에 의해 새로 도입된 신분공시 제도는 「호적법」에서와는 다르게 혼인 생활에 있어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이념을 구현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보호하며, 개인의 신분정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정확한 신분 관계의 공시가 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 「호적법」에서는 호주를 기준으로 그 가족의 구성과 내력을 기록하였으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모든 개인이 자신의 기록부를 가지고 개인을 기준으로 국적 및 가족관계 등을 기록하게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편제 방식이 변경된 것이다.

호주제 폐지를 통해서 가장 크게 변화된 상황은, 실제 가족관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다만 호주와 가족구성원, 아들과 딸, 남편과 아내를 구별하던 기존의 수직적이고 차별적인 가족관계에서 가족구성원 모두가 각자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주인이 되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로 재구성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혼인시 아내가 남편의 호적으로 옮겨야 한다거나 이혼시 어머니가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될 경우에도 자녀는 아버지 호적에 있어야 하는 등 남녀차별적인 호적편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이와 함께 2005년 민법개정을 통해 자녀의 성(性)과 본(本)을 정하는 방법을 바꾸어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하였다. 또한 여성에 대한 재혼금지기간을 폐지하였고, 처의 친생부인의 소 제기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친양자제도를 신설하였다. 또한 부모 등 친권자의 친권행사시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었다.

2007년 「민법」 개정(2007.12.21 시행)에서는 약혼연령 및 혼인적령을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던 것을 남녀 모두 만 18세로 조정하였다. 이는 약혼연령 및 혼인적령에 남녀를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남녀를 다르게 취급하는 문제가 있었으며, 이를 통해 「헌법」상의 양성평등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혼을 신중하게 고려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혼숙려기간제도를 도입하였다. 협의이혼 당사자는 일정기간(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협의이혼시 당사자는 자녀의 양육자 결정, 양육 비용 부담, 면접 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게 되었다. 이혼이 급증하고 있으나 자녀양육에 대한 논의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혼 가정 자녀의 양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와 같은 규정을 명시하게 된 것이다. 이는 이혼자녀의 양육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에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면접 교섭권만을 인정함으로써 자녀 입장에서 고려가 배제되어 있었으나 자녀에게도 면접 교섭권을 인

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게 되었다.

또한 이혼과정에서 부부의 일방이 부부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상대방 배우자(주로 여성)의 재산분할 청구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고 사해 행위를 한 때에는 상대방 배우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재산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의 부부재산에 대한 잠재적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2009.8.9 시행된 「민법」 개정에서는 협의이혼을 하려는 당사자는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양육자 일방이 자녀 양육비를 전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자녀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에게도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이혼 후에도 지속적으로 공동 부담할 수 있도록 이혼 전에 조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이다.

2010년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0.6.30 시행)을 통해 입양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친부모와 양부모를 함께 기록하도록 하던 것을 양부모만을 부모로 기록하도록 변경하였다. 이는 입양사실에 대한 개인과 입양가정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동 법 개정(2010.8.5 시행)을 통해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나 국제입양 또는 인지된 자녀 중 국적취득 이전인 외국인 가족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그 외국인의 동일성과 가족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이전에는 외국인 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가족관계 등록부로 가족관계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개선된 것이다.

한편, 국적법에 있어서도 기존의 성차별적 조항을 개선하는 작업이 몇 차례 이루어졌다. 「국적법」은 1997, 2004년의 개정을 통해 성차별적 요소를 양성평등원칙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정비하였다. 1997년 개정에서는 출생당시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그 자녀에게 우리 국적을 부여하는 부계혈통주의에서 부 또는 모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자녀에게 우리 국적을 부여하는 부모양계혈통주의로 전환하였으며, 그에 따라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

의 호적에 입적하도록 되었다. 이를 통해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9조 국적취득에서의 남녀평등조항에 대한 유보를 1999.8에 철회하는 성과가 있었다.

2004년 개정에서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국적법에 의한 간이귀화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때에도,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가 사망·실종되거나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었던 경우 또는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국적취득을 허용하게 하려는 것이다. 결혼이민자가 많아진 상황에서 외국인 배우자의 인권보장과 아동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진 입법이라 할 것이다.

다. 향후과제

이상에서 1995년 이후 우리나라의 남녀차별철폐를 위하여 여성발전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 부분, 가족생활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북경 여성행동강령 제정 이후 15년간 실정법상으로는 많은 변화와 개선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2010년 현재 「여성발전기본법」은 여성정책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동법은 특별히 성별영향평가, 성 인지 예산, 성별통계 등의 수단을 도입하여 정부정책에 양성평등한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여성발전이라는 여성 중심적 접근은 이전시대에 맞는 전략으로서 향후에는 양성평등전략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성발전기본법」의 목적과 이념도 향후 양성평등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고용관계에서의 양성평등을 기본이념으로 한 「남녀고용평등법」은 이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삶으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여성 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또한 2005년의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 개정은 헌법상 가족생활에서의 남녀평등이념을 현실적으로 실천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이제 법상의 차별철폐에서 나아가 사실상의 평등실현을 위해 향후 개선되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제언해 보기로 하겠다.

첫째,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등의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동 협약은 유엔 여성정책의 총괄적 국제규범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85년부터 헌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다. 동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국가는 모든 형태의 남녀차별을 철폐하고, 사실상의 평등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는 유엔과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회원국으로서 유엔 여성정책에 관한 국제적 발전전략에 공동노력하면서 동 협약의 당사국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동 협약에 관한 7차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5, 6차 보고서에 관한 심의와 권고를 받은 바 있다.

1984년 협약가입 당시에는 몇 개의 유보조항을 가지고 있었으나 유보가 모두 철회되었고 지금은 동 협약 제16조(사)항 가족성 선택에 있어서의 남녀동등한 권리보장규정만이 유보조항으로 남아 있다.

최근의 5, 6차 협약 이행보고서의 권고 중에는 변호사, 검사, 판사에 대한 협약내용과 선택의정서에 대한 교육훈련이나 공무원, 국회의원, 판사, 변호사 등에 대한 협약의 실질적 평등 개념에 대한 인식제고노력을 강조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그만큼 실질적인 평등의 달성을 위해서는 법집행 담당자들의 인식이 중요하다. 이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동 협약과 선택의정서를 비롯하여 여성인권에 관련된 교육의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시행, 교육에 대한 모니터링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동 협약 이행에 지속적으로 보조를 맞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차별철폐에 관련된 법의 사실상의 평등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법·제도 도입에 더하여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법적 성과와 실제 현실과의 괴리가 좁혀져야 한다. 여성관련 법이 이와 같이 규범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현실에서 개선되고 있는가는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입법적 성과가 국제사회에서 모범 사례로 칭송되기도 하지만 여성의 권한을 나타내는

국제척도를 통해 보면, 우리의 입법상황과 양성평등 달성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 같지는 않다.

국가별 양성평등지수(Gender Development Index: GDI)⁸⁰⁾에 의한 한국의 순위는 2009년 현재 26위(2002년 29위, 2004년 29위, 2007년 26위)이고, 국가별 남녀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 GEM)⁸¹⁾의 한국순위는 의회여성점유율이 13.4%로 역대 가장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09년 현재 61위(2002년 61위, 2004년 68위, 2007년 64위)에 머무르고 있다.

여성 지위향상이나 양성평등 달성에 관한 법적 성과가 효력을 발생했다면 최소한 이들 지수나 척도가 보다 상위에 위치하거나 상승의 폭이 컸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점은 법적 성과와 실제 현실과의 괴리가 얼마나 큰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것이다. 국가고시에서의 여성의 약진이나 알파결의 등장은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예이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여성의 빈곤화라든지 비정규직에 참여하는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문제, 성폭력·가정폭력 등 여성의 범죄 피해신고율이 여전히 낮은 점 등은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는 면이라 할 것이다.

셋째, 법률 문해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사회에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법상, 사실상의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법적 권리를 여성 스스로 인식해야 하고, 그 권리가 실행되는 법적, 행정적 체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국내 뿐 아니라 국제조약에서 정하고 있는 여성의 권리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 교육, 사회 교육, 미디어를 통한 교육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통해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교육과 홍보를 통한 인식 변화가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다양한 교육에서 여성의 법적 권리와 인권 교육이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80) 동 지수는 해당 국가의 평균수명, 문자해독률, 초·고등 취학률, 1인당 실질 GDP로 구성.

81) 동 척도는 의회여성비율, 행정관리직 여성비율, 전문기술직 여성비율, 소득격차로 구성.

10. 여성과 미디어⁸²⁾

북경행동강령 전략목표

- 미디어 및 새로운 통신기술에 여성의 참여와 접근성을 증진시킨다.
- 미디어의 여성에 대한 균형있고 비정형화된 묘사를 촉진한다

가. 국내 현황

북경회의와 북경행동강령의 채택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미디어의 양성평등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북경여성회의와 같은 해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미디어 양성평등 조항을 포함시키고 곧 이어 1, 2, 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도 구체적으로 반영하게 한 배경이 되었다. 이에 따라서 정부와 시민차원에서 북경행동강령을 이행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다.

여성과 미디어 부문의 첫 번째 전략목표인 미디어 및 새로운 통신기술에 여성의 참여와 접근성 증진과, 두 번째 전략목표인 미디어의 여성에 대한 균형 있고 비정형화된 묘사 모두를 실현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미디어 종사자 중 여성의 비율을 높이하고자 하는 첫 번째 전략목표는 시장의 논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따라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장애가 높다고 간주하여 두 번째 전략목표에 대해서보다 조직적인 노력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미디어의 여성에 대한 균형 있고 비정형화된 묘사에 대해서는 여성정책기본계획이나 방송심의규정에 반영하는 등 제도화의 노력과 모니터링 활동 등의 노력이 있었다.

한편 ICT는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의 기본적 필요(basic needs)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수단인 동시에, 여성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이기도 하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개발도상국 여성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82) 여성과 미디어는 본원의 이수연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다.

비율은 단지 4%밖에 되지 않는다(이선주, 변화순, 김경희, 2010 재인용). 정보화시대에 여성들이 ICT 활용에 익숙하지 않으면 정보로부터 소외되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빈곤으로부터 탈피하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의 ICT 접근성의 강화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해 주력해야 할 과제이다.

나. 지난 15년간 주요정책 및 성과

북경행동강령 제245조에는 미디어의 모든 수준에서 여성의 의사결정역할에 참여를 증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1) 미디어 종사자 중 여성비율 증가

미디어 종사자 중 여성비율은 여성의 전반적인 경제활동 참가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1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신문사, 방송사, 통신사의 종사자 중 여성의 비율은 1995년에는 13.1%였는데 2009년에는 19.9%에 이르고 있다. 이는 여전히 서구국가들에서 여성 미디어 종사자의 비율보다 낮은 숫자이다. 예를 들어 90년대 나온 연구에서 핀란드에서는 미디어 산업 여성 종사자의 수가 남성 종사자의 수를 웃돈다는 보고가 있다⁸³⁾. 또한 유럽 9개국에서 여성 기자와 부편집자 및 편집 관련 종사자의 비율은 25%를 넘는다고 하고⁸⁴⁾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비슷한 숫자가 보고되고 있다.⁸⁵⁾

83) Zilliacus-Tikhanen (1997), Berly and Ross(2006). p.77에서 재인용.

84) Lunenborg (1996), Berly and Ross(2006). p.77에서 재인용.

85) Norris (1997), Carter et al. (1998), Robinson (2005), Berly and Ross (2006). p.77에서 재인용.

〈표 Ⅲ-10-1〉 성별 언론 종사자 현황

(단위: 명, %)

연도	계			신문사		
	전체	여자	여자비율	전체	여자	여자비율
1995	32,033	4,182	13.1%	20,743	3,279	15.8%
2000	27,617	3,532	12.8%	13,035	1,903	14.6%
2005	34,297	5,905	17.2%	13,072	2,262	17.3%
2009*	34,764	6,952	19.9%	16,369	3,382	20.7%
연도	방송사			통신사		
	전체	여자	여자비율	전체	여자	여자비율
1995	10,628	856	8.1%	662	47	7.1%
2000	13,904	1,541	11.1%	678	88	13.0%
2005	20,505	3,509	17.1%	720	134	18.6%
2009	18,395	3,570	19.4%	119	모름	모름

*주: 2009년에는 통신사 종사자 119명 중 여성 종사자의 수는 보고되어 있지 않아 통신사를 제외하고 신문사와 방송사의 종사자 중 여성 비율만을 계산하였음.

자료: 언론진흥재단, 미디어 통계정보 시스템, 매체 유형별 종사자 현황 재분류.

http://mediasis.kpf.or.kr/mediaStatistics/sub_02_02_new.asp?strTypeCode1=1050

더군다나 직종이나 직급별로 비율을 보면 성별 편중이 더욱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유리천장 효과가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지상파 방송 3사(KBS, MBC, SBS)는 1999년과 2009년 모두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사의 여성 임원 비율은 1995년에 0.4%, 2000년에 1.4%, 2005년에는 2.1%, 그리고 2009년에는 0%로 방송사보다는 높지만 극히 미미한 비율이며 시간이 지나고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더욱 심각하다. 이처럼 미디어 산업에서 여성이 최고 지위까지 올라가는 것은 아직까지는 요원한 일로 보인다. 또한 직종별로도 성별 분리 현상이 뚜렷하다. 방송사의 경우 라디오와 편성에 많은 여성들이 몰려있는 반면 제작과 기술에는 소수의 여성이 참여하고 있다. 기획과 보도 부문에 여성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고무적인 현상이다. 신문에서는 비서실 인력의 다수가 여성이고 다음으로 사업과 출판 쪽에 여성이 몰려 있다. 신문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는 편집과 논설에는 여성의 수가 충분하지 않은데 다행히 편집 부분에는 여성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 Ⅲ-10-2〉 지상파 3사 직능별 여성 종사자

(단위: 명, %)

부문	1999/2000		2009	
	인원	여성(%)	인원	여성(%)
임원	25	0(0)	12	0(0.0)
직속/독립	355	82(23.1)	594	100(16.8)
기획	122	9(7.4)	77	13(16.9)
보도	1063	77(7.2)	1,315	201(15.3)
편성	219	40(18.3)	662	181(27.3)
제작	1481	110(7.4)	1,433	173(12.1)
라디오	417	89(21.3)	357	127(35.6)
기술	797	32(4.0)	366	14(3.8)
관리/경영	878	137(15.6)	607	91(15.0)
기타	339	53(15.6)	568	38(6.7)
계	5696	629(11.0)	5,991	938(15.7)

*주: KBS, MBC, SBS 본사.

자료: 언론진흥재단, 미디어 통계정보 시스템, 매체 유형별 종사자 현황 재분류

http://mediasis.kpf.or.kr/mediaStatistics/sub_02_02_new.asp?strTypeCode1=10

〈표 Ⅲ-10-3〉 신문사 직능별 여성 현황

(단위: 명, %)

부문	1995		2000	
	전체인원	여성(%)	전체인원	여성
임원	68	3(4.4)	69	1(1.4)
논설	87	10(11.5)	96	8(8.3)
편집	2,869	301(10.5)	2,546	269(10.6)
출판	676	161(23.8)	316	58(18.4)
기획/총무/업무	1,156	223(19.3)	828	98(11.8)
광고	446	50(11.2)	368	26(7.1)
판매	883	55(6.2)	592	31(5.2)
제작/공무	1,562	180(11.5)	867	85(9.8)
사업	150	45(30.0)	116	8(6.9)
뉴미디어	289	105(36.3)	21	0(0.0)
비서실	112	42(37.5)	47	27(57.4)
지사	12	0(0.0)		
기타	318	89(28.0)	141	52(36.9)
계	8,628	1264(14.6)	6,007	663(11.0)
부문	2005		2009	
	전체인원	여성	전체인원	여성
임원	47	1(2.1)	68	0(0.0)
논설	100	14(14.0)	96	13(13.5)
편집	2,232	427(19.1)	2,339	556(23.8)
출판	208	67(32.2)	189	64(33.9)
기획/총무/업무	589	102(17.3)	411	111(27.0)
광고	353	43(12.2)	293	41(14.0)
판매	554	64(11.6)	396	52(13.1)
제작/공무	655	90(13.7)	407	79(19.4)
사업	144	35(24.3)	115	26(22.6)
뉴미디어				
비서실	16	12(75.0)		
지사			44	4(9.1)
기타	61	15(24.6)	257	72(28.0)
계	4,959	870(17.5)	4,615	1018(22.1)

자료: 언론진흥재단, 미디어 통계정보 시스템, 매체 유형별 종사자 현황 재분류.

http://mediasis.kpf.or.kr/mediaStatistics/sub_02_02_new.asp?strTypeCode1=10

관련 위원회에 여성이 참여하는 것은 의사결정에 여성의 시각을 포함시킬 수 있는 중요한 통로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 관련 위원회에서 여성의 비율은 2010년 현재 전체 평균이 10.3%로 여성의 대표성 증진을 위해 장려하고 있는 30%에 훨씬 못 미치는 숫자이다. 이는 여성 위원의 비율이 16.8%인 2000년과 비교할 때도 줄어든 수치이다.

〈표 Ⅲ-10-4〉 언론관련 위원회 여성 비율 (2010)

기관명	전체	여성	비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9	2	22.2%
방송통신위원회	5	1	20.0%
언론중재위원회	85	8	9.4%
영상물등급위원회	2	0	0.0%
지역신문발전위원회	9	1	11.1%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17	3	17.6%
한국신문윤리위원회	28	1	3.6%
계	155	16	10.3%

자료: 언론진흥재단, 미디어 통계정보 시스템, 미디어 관련 법정진흥기관 재분류.
http://mediasis.kpf.or.kr/mediaDirectory/list.asp?cm_mCode=71&cm_sCode=7120&search_year=2009.

〈표 Ⅲ-10-5〉 언론 관련 위원회 여성비율(2000)

기관명	전체	여성	비율
심의위원회	29	5	17.2%
방송위원회	9	2	22.2%
언론중재위원회	75	12	0.16%
한국신문윤리위원회	12	2	16.6%
계	125	21	16.8%

자료: 한국여성개발원(2000). p.149 재구성.

2) 미디어 내용의 성차별성 개선을 위한 노력

두 번째 전략목표가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미디어 내용과 관련해서는 ‘여성에 대한 균형 있고 비정형화된 묘사의 촉진’이 북경행동강령의 요점이다. 이는 미디어의 여성 묘사가 여성을 성적으로 소비하는 것을 조장하고 여성의 속성과 역할을 정형화시키고 있다는 평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북경행동강령에서는 정부, 국제기구, 매스미디어와 광고회사, NGO 및 민간부분이 해야 할 15개 조치(para. 243-245)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미디어 부문과 여성단체의 미디어 모니터링을 통한 연구 활동, 행동규범, 전문 지침, 기타 자율규제 장치 마련 등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243조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정부와 국제기구가 여성의 균형적 묘사와 다중적 역할을 진흥시키기 위해 연구와 교육, 정보, 의사소통의 전략을 개발할 것, 미디어와 광고에이전시가 의식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 미디어 기업가와 종사자들이 고정관념적이지 아닌 다양하고 균형잡힌 여성의 이미지를 묘사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교육을 시킬 것, 미디어가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서, 성적 대상으로서 혹은 상품으로서 묘사하지 않도록 권고하기, 여성을 성적 스테레오타이프로 묘사하는 것은 성차별적임을 교육하기, 포르노그래피나 여성에 대한 폭력묘사를 막기위한 적절한 법제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244조는 미디어와 광고 관련 기구가 고정관념적이지 아닌 여성묘사를 장려하기 위한 지침, 행동강령이나 자기규제를 개발할 것, 커뮤니티, 소비자 그리고 민간 영역과 관련된 이슈에 성 인지 시각을 발전시킬 것의 조항이 있다. 245조에는 성평등과 고정관념적이지 아닌 가정에서 남녀역할을 강조하는 미디어 캠페인을 통해 가사 역할을 공평히 분담하도록 할 것, 여성 지도자들이 가정과 일의 양립 등의 다양한 경험을 자신의 리더십의 실현에 반영하는 미디어 프로그램을 확산할 것, 여성과 여성의 관심을 확산시키는 대안적 미디어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개발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 그리고 미디어의 성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인력을 양성할 것을 주장한다.

가) 주요 정책

우리 정부에서는 무엇보다 미디어 내용 성평등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요구할 수 있는 법,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1995년 12월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28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중매체 성차별적 내용 개선 지원과 대중매체를 통한 양성평등 의식 확산의 의무를 명시하였다. 이 법을 기반으로 하여 1,2,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12)에는 대중매체 종사자의 양성평등의식제고, 전문 모니터 양성 및 모니터 활동지원, 그리고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요소 심의기준 정비 등을 제시했다.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에는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내용개선 및 시정 강화, 미디어 종사자 전문교육 지원체계의 구축, 그리고 남녀평등 우수프로그램 제작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에는 양성평등 미디어 활성화라는 목표 아래 매체 환경 상업화에 따른 사회적 감시 체계 재정비와 미래세대의 양성평등 문화확산의 하위목표로 나누어진다. 여기에 구체적인 조항으로는 매체 환경의 변화에 따른 법·제도 개편 시 양성평등 조항 재정비, 디지털 정보격차 감시 및 해소를 위한 여성교육 지원, 매체 모니터링 및 연구사업 지원, 방송·통신 등의 양성평등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 미디어 사업자 및 제작자 교육용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 평등문화 콘텐츠 개발 지원, 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그리고 양성평등한 인터넷 사용 지침 개발 보급 등이 있다.

이 외에 미디어 관련법에서도 양성평등 조항을 포함하게 되었는데 2000년 1월 제정된 「통합방송법」에 방송의 성별 간의 갈등 조장과 방송편성에 있어 성차별을 금지하고 양성평등을 심의의 기준으로 명시하였다. 이 후 2004년에 개정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도 양성평등 관련 사항이 포함되었는데 제30조(양성평등)에 “① 방송은 양성을 균형 있고 평등하게 묘사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특정 성(性)을 부정적, 희화적으로 묘사하거나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방송은 성차별적인 표현을 하거나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제시되었다.

나) 성과

「여성발전기본법」에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내용 개선에 대한 사항이 포함된 후 여성정책을 담당하던 정무장관 2실에서는 1996년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요소를 모니터할 수 있도록 “텔레비전의 여성차별 지표”를 개발하였다. 여성단체들은 이 지표를 이용하여 지상파 3사의 뉴스와 드라마를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를 방송위원회에 통보하여 시정을 요구하였다.

또 민간 분야에서도 미디어의 성차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여성단체들의 미디어 모니터링 사업이 적극적으로 시작되었다. 여성단체협의회의 모니터링 사업을 필두로 1998년에는 한국여성민우회의 ‘미디어운동본부’가 발족되었고 한국성폭력상담소도 같은 해에 ‘21세기 여성미디어운동센터’를 개설하여 미디어 모니터링 사업을 시작하였다. 특히 미디어운동본부에서는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미디어 모니터링, 미디어 교육, 미디어 제작 운동을 현재까지 계속해오고 있다.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 기간 동안 여성특별위원회는 대중매체 성차별개선을 위한 지침서 발간(1998.12)하고 방송종사자의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범교육을 실시(1999)하였다. 또 남녀평등방송상을 제정하여 성평등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한 자들에게 수여하였다(1999).

또 방송 모니터링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01년에는 여성부가 설립되면서 텔레비전 성차별성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지상파 3사의 뉴스와 드라마를 모니터링하였다. 이 모니터링을 통해 3사의 성차별성 지수가 산출되었고 성차별성이 높은 프로그램이 가려졌다. 이 결과는 여성부 장관이 참석한 세미나를 통해 3사의 임원에게 전달되었다. 또 텔레비전의 성차별성에 대한 심의가 강화될 수 있도록 성차별성에 대한 방송심의용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어 보급되었다. 2002년에도 역시 텔레비전의 성차별성을 모니터링하였는데 이번에는 뉴스와 드라마 외에 오락 프로그램도 포함하였다. 이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방송작가 워크숍을 마련하여 양성평등한 방송제작에 대해 논의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1: 뉴스

뉴스의 성차별성은 무엇보다 뉴스라는 프로그램 자체를 남성적인 것으로 규정하는데 있다. 뉴스는 공적인 프로그램이고 공적인 것은 남성적인 것이라는 삼단논법이 적용된다고 하겠다. 제작인력이나 뉴스원에 있어 남성이 여성보다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 뉴스 산업의 인력 자체가 남성이 여성보다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기자나 리포터가 대부분 남성이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만 뉴스란 남성이 다루어야 한다는 선입견도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뉴스 진행자는 오랫동안 관행처럼 남성이 맡아왔다. 현재는 남녀앵커가 공동으로 뉴스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때에 따라 여성 단독 진행도 있지만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여성 앵커는 존재하지 않았다.

남녀 앵커 공동 진행에 있어서도 남성 앵커의 역할이 여성의 역할보다 중요한 것이 관례이다. 뉴스를 시작하는 것은 언제나 남성 앵커이다. 남성 앵커는 여성 앵커보다 말하는 시간이 길며 다루는 뉴스 기사에 있어서도 영향력, 시의성, 시사성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녀 앵커가 다루는 주제도 확연히 다르다. 남성의 경우 정치-사회-문화-경제/과학-생활정보 순으로, 여성 앵커의 경우 사회-문화-정치-경제/과학-생활정보 순으로 많이 다루고 있다. 취급하는 뉴스 주제에 있어서도 남성은 정치 같은 하드 영역, 여성은 문화 같은 소프트 영역이라는 이분법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뉴스원에 있어서도 성별의 차이가 크다. 뉴스를 만드는 사람은 남성이라는 고정관념이 작용하고 있는데 인터뷰 대상에 있어 남성이 여성보다 3배 정도 많다. 인물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초점보도의 대상은 남성이 여성보다 10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인터뷰 대상에 있어 역할도 성별로 나누어진다. 인터뷰 대상이 전문가인 경우 남성이 여성의 8배 정도로 많았다. 이에 반해 사건의 목격자나 일반 시민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는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았다.

취재기자를 성별로 보면 남성 취재기자의 수가 여성 취재기자의 수보다 현저하게 많아서 뉴스를 만드는 사람은 남성이라는 관념을 잘 반영한다. 이는 물론 전술한대로 뉴스 산업의 남성종사자가 여성종사자보다 훨씬 많다는 인력의 문제가 연관되어 있다. 취재 기사 수에서 뿐만 아니라 뉴스에 등장하는 특파원의 수에서도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한 취재기자가 담당하는 뉴스의 주제에 있어서도 성별 차이가 났는데 남녀 앵커가 담당하는 주제에서의 차이와 유사하였다. 또한 남녀 기자가 담당하는 뉴스의 중요도에 있어서도 남성 기자가 주요 아이টে임을 더 많이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뉴스에서의 성차별성은 남녀 앵커의 성별 역할 및 중요도, 취재 기자의 성별 비율 및 성별 담당 뉴스의 중요도, 취재원(인터뷰 대상, 초점 보도 대상)에서의 성별 비율 등 다양한 측면에서 관찰되고 있다.

모니터링 결과 2: 드라마

드라마 성차별성은 고정관념을 나타내는 면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등장인물의 성격, 행동과 역할이 전통적인 여성성과 남성성의 개념에 의해 한정되고 여성 인물에게는 모성/현모양처 이데올로기가 강조된다. 이는 특히 중심인물에서 더욱 현저하다. 여성 주요 인물은 용모가 단정한 것이 무엇보다 강조된다. 여성 등장인물들은 대체로 날씬하고 매력적으로 표현된다. 이에 비해 남성 등장인물은 외모에서 힘 있고 튼튼해 보이며 성격에서 소탈하고 신념/의지가 강한 것으로 표현된다. 남성도 중심인물에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등장인물의 교육수준과 직업도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데 일조한다. 등장인물들은 여성 인물들이 남성 인물들보다 젊고 여성 인물들은 특히 20대에 편중되어 있다. 직업을 가지는 비율은 남성 인물들이 여성 인물들보다 높았고 직종으로 보면 남성은 전문직, 여성은 가정주부가 가장 많았다. 여성부 모니터링에 의하면 남성 등장인물 중 대졸 이상의 비율은 여성 등장인물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 영역에 있어 여성의 활동장소는 집안인 경우가 남성에 비해 많고 활동이 집안일이나 가족 돌보기, 신변잡기 등에 치중되어 있는 경우도 남성보다 많다.

또한 한국 드라마는 남녀인물들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고정관념적이어서 이러한 면이 시청자에게 성차별적 의식을 갖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 더구나 중심인물의 묘사에서 고정관념을 반영하는 비율이 더욱 높다는 사실이 문제의 심각성을 높인다. 또 장면에 있어서도 여성은 주로 가정에서 집안일을 하는 등 고정관념을 반영하는 비율이 높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드라마는 주제면에서는 성차별을 피하거나 더 나아가 교정하려는 시도가 보이지만 개별적인 인물의 묘사에서나 장면의 설정에서는 여전히 성차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남녀관계의 묘사에 있어서는 다양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남녀가 직장에서 관계를 이룰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한 경우가 더 많이 표현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고 여성이 남성에 의존하는 관계를 정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향이 크다. 드라마에서는 여성의 50% 이상이 직업을 가진 것으로 묘사된다. 또한 그 직업은 반드시 전형적인 여성 직종인 것

은 아니다. 근래에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신종 직종을 많이 보여주고 남녀 주인공들이 선망 받는 직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경향도 보인다. 또한 직장여성을 가정과 직장생활을 모두 완벽하게 수행하는 수퍼우먼으로 그리거나 혹은 이기적으로 그리는 비율이 높지 않다. 반면에 가족의 행복이 여성의 희생 아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묘사하는 등 성평등한 가족관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차별 및 성폭력성은 성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남아선호, 남존여비, 여성비하, 지나친 가부장적 권위를 과시하는 면에서 여전히 나타난다.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기간 동안에는 여전히 모니터링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2003년에는 텔레비전 광고의 성차별성에 대해 모니터링하였고 그 결과를 중심으로 광고 제작자, 관련자, 학자들을 모아서 세미나를 열었다. 또 2002년 모니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PD포럼을 열어 방송 제작자들의 성평등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2003년에는 텔레비전에서 인터넷으로 관심을 확장하여 “인터넷에서 성희롱적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이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성희롱 현황 분석으로 분석결과에 따라 인터넷에서 성희롱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미디어 종사자에 대한 성평등 교육을 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이외에 남녀평등방송상을 계속하여 시상하는 한편 성평등 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원하였는데 KBS 1TV의 수요일기획 ‘딸들의 나라, 핀란드의 힘’이 우수한 양성평등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지원받았다. 2006년에는 성차별적 미디어 언어를 모니터링하였고 현업종사자들이 모여서 그 결과에 대해 토론했다. 또 KBS와 EBS에 대한 양성평등 프로그램 협찬을 계속하였다. 2007년에는 미디어 성차별성을 모니터링하는데 시민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시행하였다. 시민모니터링단은 남녀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져 온라인 양성평등 교육 이수 후에 직접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여 미디어 감시와 함께 시민들의 양성평등역량 향상에 이바지하였다.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기간에는 모니터링과 남녀평등방송사 시상이 미디어 관련 주된 활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2008년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모니터링요원을 위한 모니터 교육교재를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방송 프로그램에서의 성차별성 사례를 모니터링하였다. 2009년에는 성평등한 방송 프로그램이 사례를 모니터링하였다. 2010년에는 계속해서 양성평등한 방송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였는데 전문가 대신에 시민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한 후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용하였다.

3) 여성의 ICT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에 기여

정보화사회에 ICT는 양성평등을 증진하고 여성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ICT 교육훈련을 통해 여성들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지식 노동자, 사회적 기업 경영자 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ICT는 여성과 남성의 전통적 역할을 변화시키고 여성이 개발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개체라고도 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이런 이유 때문에도 ICT 분야에 여성의 참여를 중요시 여기는 바 이다. 한국은 비교우위분야인 ICT에서 개발도상국 여성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해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여 양성평등을 증진하고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APEC 회원국의 ICT 또는 여성정책 담당 공무원과, 교육훈련가를 국내로 초청하거나, 또는 직접 해당 국가를 방문하여 참가자를 대상으로 ICT와 여성리더십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APEC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ICT 교육훈련은 참가자들이 높은 만족도(평균 90%이상이 만족)를 보이는 과정으로 APEC 회원국사이에서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⁸⁶⁾

그러므로 한국은 앞으로도 비교우위에 있는 ICT분야를 개발도상국 여성의 역량강화와 연계하여 지원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역량강화의 기본인 여성 직업능력 개발 관련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국제사회가 MDGs를 달성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86) 이선주, 변화순, 김경희(2010).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목표와 양성평등증진과의 연계성 연구」, 여성가족부.

다. 향후과제

북경행동강령을 실행하는 주체는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 다자이지만 가장 중요한 주체는 정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에서 수립하여 집행하는 여성정책기본계획과 실행은 북경행동강령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1,2,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의 미디어 부분 계획과 그 실행정도를 검토하였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의 미디어 부분은 북경행동강령의 정신에 입각하여 충실하고 수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계획에 비해 실행 정도는 아쉬운 감이 있다. 특히 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미디어 부분의 실행은 대단히 미약한데 이는 3차 기본계획의 기한이 앞으로 2년이 남은 것은 고려하더라도 실행률이 심각하게 낮다고 할 수 있다.

이 계획은 여성과 미디어 부문의 첫 번째 전략보다는 두 번째 전략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전술했듯이 첫 번째 전략이, 이 중에서도 미디어 산업에서 여성의 참여를 늘리는 부분은 미디어 산업이 시장의 논리에 지배받기 때문에 정책으로서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도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모든 산업에서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는 것은 북경행동강령이나 여성정책의 일반적인 목표이기도 하다. 따라서 미디어 산업의 여성참여율 제고도 다른 산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성인력 개발의 차원에서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나장에서 보는 것처럼 미디어 산업에서 여성인력의 참여의 시대별 추이를 보면 명암이 엇갈린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신문사, 방송사, 통신사를 합한 미디어 종사자 중 여성의 비율은 1995년 13.1%에서 2009년 19.4%로 꾸준한 증가를 했다고 할 수 있다. 현재는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미디어 직종이 여성들에게 선호되고 있는 점에서 여성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직급별로 유리천장의 효과가 극명하고 직종별로는 성별 분리가 여전한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미디어 산업에서 여성 임원의 비율이 극히 낮는데 이는 다른 직종에서 여성 임원의 비율이 5%가 넘는다는 사실과 비교해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표 III-10-6> 참조)

〈표 Ⅲ-10-6〉 내 직급별 여성고용현황

(단위: 개소, 명, % ()는 '08년)

구분		계	임금
1,000인 이상(666)	근로자수	2,000,024	26,996
	여성	636,226	1,774
	여성비율	35.1(35.0)	6.1(5.7)
500인 이상 (941)	근로자수	566,691	12,246
	여성	189,624	1,224
	여성비율	33.2(32.4)	6.6(6.5)

자료: 노동부(2009). 「AA대상 사업장 남녀근로자 현황분석」; 여성부(2009). p.61 재인용.

일자리 사업의 성별영향평거나 성 인지에산 같은 일반적인 성 주류화 도구가 미디어 부분에도 유효한 정책수단이 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미디어 산업부분 전문인력 양성 정책의 성 인지에산 분석을 통해 여성이 미디어 산업에 더 많이 진입하고 동시에 전문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여성과 미디어 부문의 미디어의 여성에 대한 균형 있고 비정형화된 묘사의 촉진을 위해서 특히 미디어 모니터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디어 모니터링은 2001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수행되어 왔다. 2001년부터 2008년까지는 주로 텔레비전에서의 성차별성을 대상으로 하였고 인터넷도 한 회 모니터링하였다. 2009년부터는 양성평등성으로 대상을 전환하였다.

그런데 모니터링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수행되어왔다면 그 외의 조항들은 그다지 적극적인 노력이 투여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미디어 종사자들의 양성평등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나 가이드라인 제작 등이 한 예이다. 미디어 종사자 교육은 사실 용이한 과제는 아니다. 근무방식이나 업무내용이 창의적이고 근무방식이 자유로운 미디어 종사자들은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많고 특히 양성평등 교육은 그것이 자신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모으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방송내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피디들을 모으는 것은 더욱 어렵다. 이 때문에 2002년과 2003년에 종사자 교육 이후 더 이상 교육이 시행되지 않

고 있다. 또 이들을 위한 지침제작도 활발하지 못했고 제작을 한 후에도 활용률이 떨어진다. 한 예로 여성가족부에서는 2008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모니터링 요원을 위한 심의 가이드라인 교안을 개발하였으나 아직 활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심의와 관련해서는 심의위원들의 양성평등 관련 의식이 높지 않아 심의 규정에 성차별 조항이 들어있음에도 실지로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2001년에서 2007년 사이 방송심의 결과를 보면 라디오, 지상파 텔레비전, 유선방송을 합해서 21건에 불과하였다. 이는 물론 요즈음 미디어에서 적나라한 성차별적 표현이 줄어들고 또 심의라는 것이 누가보아도 객관적이라고 간주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전체 심의 위반 사항(징계, 권고, 경고, 주의)이 4,599건임을 고려할 때 양성평등 기준을 적용한 위반사례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방송에서 성차별 사례는 여전히 눈에 띈다. 전체적으로 방송에서 성차별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인상이다. 드라마를 예로 들면 등장하는 여성인물이 가진 직업의 다양성이라든지 이들 성격의 적극성, 플롯에서의 중요성 등에서는 이전보다 양성평등한 묘사를 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드라마를 제외한 장르에서 성별 역할을 볼 때 여전히 여성들은 소극적이거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뉴스의 앵커, 시사나 연예 프로그램의 진행자를 생각해 보라). 더욱 심각한 것은 여성의 성적 대상화이다. 2008년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성차별성 사례 54건 중 여성의 성적 대상화 범주⁸⁷⁾에 드는 것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케이블 TV에서 이러한 경향이 강했는데 여성의 몸을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묘사하면서 성적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었다.

이처럼 유선방송을 중심으로 적나라한 성차별성 사례가 눈에 띄는데도 성차별성에 의한 심의 위반 사례가 별로 없는 것은 심의위원들의 양성평등 의식이 부족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심의는 먼저 1차 심의인 모니터링 요

87) 성차별성의 범주는 여성의 성적 대상화 외에 여성비하, 남녀관계의 위계화, 성역할 강조 및 여성역할의 평가절하, 여성성/남성성에 대한 고정관념, 외모지상주의, 신데렐라 콤플렉스, 모성이데올로기, 성희롱/성폭력, 여성의 성적 대상화, 가부장적 사고 및 편견 등이다.

원에 의해 1차 심의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적발이 된 사례만 본 심의에 올라 가게 된다. 따라서 1차 모니터링 요원들의 양성평등의식과 방송 성차별성의 인식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기존에 개발한 교육교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텔레비전의 성차별성은 낮아지는 반면 케이블 TV의 선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필요가 있다.

3차 기본계획에 관한 한 앞으로 남은 2년여의 기간 동안 실행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정보격차 감시 및 해소를 위한 여성교육 지원, 매체 모니터링 및 연구사업 지원, 방송·통신 등의 양성평등 제작가이드라인 마련, 미디어 사업자 및 제작자 교육용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 평등문화 콘텐츠 개발 지원, 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그리고 양성평등한 인터넷 사용 지침 개발 보급 등의 조항들이 아직 전혀 실행되고 있지 않다. 더구나 2010년 실행계획에도 미디어 부분은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아 미디어 양성평등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약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를 갖게 된다.

미디어는 상업적인 문화이다. 따라서 현재의 지배적 문화가 가부장적이라면 미디어의 내용도 가부장적인 이념을 따르게 되기 쉽다. 그래서 미디어의 성차별성은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디어 모니터링은 이러한 미디어의 내재적 보수성을 점검하는 도구이다. 따라서 모니터링을 한 해 수행했다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모니터링은 항시적으로, 장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개발도상국에 ICT 교육훈련을 확대하여 여성의 역량강화로 양성평등을 증진하고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은 ICT 분야를 개발도상국 여성의 역량강화와 연계하여 지원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직업능력 개발 관련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국제사회가 MDGs를 달성하는데 일조해야 할 것이다.

11. 여성과 환경⁸⁸⁾

북경행동강령 전략목표

- 환경정책 결정과정에 여성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킨다.
-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과 사업에 있어 젠더에 대한 관심과 관점을 통합한다.
- 개발과 환경정책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국가, 지역 및 국제적 차원의 기구를 강화 혹은 설치한다.

가. 국내 현황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사회 통합, 환경 보호, 경제 성장이라는 3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엔환경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가 합의한 환경정책 패러다임은 남성에게 의해 주도된 경제 중심의 발전을 사회의 모든 주체가 참여하고 이끌어가며 지구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발전으로 변경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지구 환경과 경제 발전 간의 조화와 이 과정에 모든 시민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 통합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이행계획에는 발전의 주체로서 여성의 지위 향상과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동등한 접근 및 완전한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조치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992, 의제 21 제24장).

전 세계적으로 전개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여성의 환경 활동은 개인 신체에서부터 생활공간, 지역 생태계, 지구 환경의 보존 및 안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를 중심으로, 지역의 환경 여건에 따라 추진되어 왔다. 삼림과 농업 생태계의 비중이 큰 동남 아시아에서는 환경과 주민생활 양식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개발 과정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개발방식과 관련된 활동이 관심을 끌었고, 태평양지역 국가들은 해양 생태계 복원 및 지구 온난화와 관련

88) 여성과 환경은 한국여성재단 명진숙 배분팀장이 집필하였다.

된 활동이 활성화되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산업화와 더불어 도시에서 환경 파괴가 주된 관심사였고,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환경보호 캠페인, 녹색소비자활동, 쓰레기 분리수거, 환경교육 및 생활협동조합 운동이 주로 진행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실천계획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유엔환경회의와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 등과 같은 국제적인 협력이 활발해지고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등과 관련된 다자간 환경협약들에 가입하게 되면서 부터이다.

먼저, 1996년 만들어진 ‘의제 21 국가실천계획’에서는 <표 III-11-1>와 같이 환경과 개발 분야의 여성 참여증대와 여성 보건, 여성의 환경활동 지원 체계 수립을 세부 실천계획으로 수립하고 있다.

〈표 III-11-1〉 의제 21 국가실천계획 제24장 중 환경 부문

- | |
|---|
| <p>A. 환경과 개발 분야의 여성참여 증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부의 환경·개발 관련 각종위원회의 여성비율 확대 ② 식품 및 식수오염과 관련한 정책수립과 관리과정에 여성참여 ③ 에너지소비의 합리화, 관련 정책 수립, 대중교통 관련 정책 결정에 여성참여 증진 ④ 환경영향평가제도에 여성참여 증진 ⑤ 기술영향평가제도 도입 및 여성참여 보장 ⑥ 여성과 환경에 관한 국가포럼 구성 ⑦ 여성환경 지도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훈련기회 확대 <p>D. 환경과 여성보건</p> <p>F. 여성의 환경활동 지원체계</p> |
|---|

자료: 환경부 (1996).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 의제 21 국가실천계획』

이와 같은 관심은 유엔환경개발회의(1992년, 리우회의)에서 작성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제적 행동프로그램인 ‘의제 21(Agenda 21)’⁸⁹⁾에 따라 한

89) 의제 21은 21세기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을 위한 행동지침으로 1개 전문과 39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구환경문제의 원인이 되는 각종 사회, 경제적인 요인에 대한 해결방안, 대기, 해양, 폐기물, 토지 등 각종 환경사안에 대한 해결방안, 이를 위한 사회 각계각층의 역할 그리고 법, 제도,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 등의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이행체계를 규정하며 2,500여개의 권고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의제 21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에 9개의 주요그룹(Major Group)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9개 주요 그룹은 여성계, 청소년, 농민, NGO, 지방정부, 근로자와 노동조합, 기업 및 산업계, 과학기술계, 원주민이다.

국 역시 ‘의제 21 국가실천계획’을 작성하여 UN에 제출해야 했기 때문이다.

1995년 세계여성회의는 ‘북경여성행동강령’에서 여성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해야 할 영역으로 환경을 설정하였으나, 1997년 수립된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 조차 환경에서 여성 역할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2002년에 수립된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03-2007)은 제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정책 추진과 전략의 하나로 ‘환경 분야에서 여성역할 강화 및 인식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관련된 정책과제로는 “환경 분야에서의 여성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와 “환경관련 NGO활동 및 국제협력 지원”이라는 다소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과제를 채택함으로써 환경 분야의 성 주류화,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에서 여성을 핵심주체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고하지는 못하였다. 즉, ‘환경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완전한 참여’, ‘환경과 개발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에 성 관심사와 관점 통합’, ‘환경정책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기제 강화’와 같은 전략과제가 채택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북경행동강령의 여성과 환경 부문에서는 환경 분야의 여성이 영향력을 확대하고 개발과 환경이 여성에게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제안한 세 가지 전략목표에 대한 국내의 이행 정도는 평가의 전제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그 성과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제3차 여성발전기본계획에 환경 분야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단지, 여성 국제협력 확대 중 하나의 사업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여성담당 국가기구 및 NGO와 자연재해·환경파괴 관련 이슈에 대해 공동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향후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나 젠더 관점을 통합하고 책임성 강화 기제를 수립할 여건이 충족되어 있지 못하다.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개입은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젠더 관점을 통합하고 여성을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의 주체화하려는 체계적인 시도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이다.

나. 지난 15년간 주요정책 및 성과

1) 환경정책 결정과정의 여성 참여 저조

가) 중앙정부 환경 정책 결정과정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전 세계 차원의 산업화와 경제활동으로 인해 대기 및 해양 오염, 기후변화, 오존층 및 산림 파괴, 생물 다양성 등의 지구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고 인류의 장기적인 성장과 번영을 이루기 위해 제시된 방안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정책을 조절하기 위하여 133개 국가에서 국가지속가능개발위원회(NCSD)가 조직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9월 대통령자문기구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발족되어 활동해왔다.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한 기능을 환경정책 및 집행기능을 넘어 부처 간 협의와 조정을 수행하는 범정부적 혹은 범국가적 기구로서의 위상이 있다. 따라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보전 중장기계획과 주요 환경 현안 등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 상정하여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의 구성은 정부 부처 장관 등 13명의 당연직 위원과 시민단체, 학계, 경제계 인사 20명 등 총 33명이며, 국토보전, 수자원, 생태·보건, 에너지 대책, 산업과 환경, 국제·지역협력 등 6개 분과위원회로 운영되었다. 하지만, 환경에 대한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인 국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여성의 참여 현황은 대단히 저조하다. 출범 당시 여성은 당연직 위원으로 환경부 장관 1인과 위촉직 위원 3명이 참여하여 전체 위원 중 여성 비율은 12%에 불과하며 위촉위원 비율은 15.8%이다. 6개 분과위원 비율은 더욱 낮아 전체 109명의 위원 중 여성은 단지 9명으로 8.3%이다.

2010년 2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제정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부 장관 소속으로 전환되었고, 국가적 차원의 정책 입안과 조정을 위하여 녹색성장위원회가 발족하였다. 녹색성장위원회는 기후변화, 에너지 분야 뿐만 아니라 국토, 도시 등 포괄적인 정책 영역에 저탄소 녹색성장 계획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한다. 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당연직위원

17명과⁹⁰⁾ 3개 분과에서 민간위원 29명이 활동하고 있다. 3개 분과는 ① 녹색성장·산업분과위(10명), ② 기후변화·에너지 분과위(10명), ③ 녹색생활·지속발전분과위(9명)이다.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민간위원 구성을 보면, 총 29명중 여성위원은 4명에 불과하다. 녹색성장·산업분과위에 여성 CEO 1명, 기후변화·에너지분과위에 여성 CEO, 교수 각 1명, 녹색생활·지속발전분과위에 기업 여성 임원 1명이다. 위원회를 지원하는 녹색성장기획단은 녹색성장 기획팀, 에너지 정책팀, 기후변화 대응팀, 녹색기술 산업팀, 녹색생활지속 발전팀 및 협상 태스크포스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획단에서 활동하는 담당 공무원 중 여성 공무원은 과장급 1명, 사무관급 5명 뿐이다.

나) 지방정부 환경 정책 결정과정

지방정부에서는 정부 기구인 지방녹색성장위원회와 민관협의체인 지방의제 21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방의제 21은 지속가능 발전 정책에 대한 민간 참여의 일환으로 1995년부터 수립하기 시작하였다⁹¹⁾. 지방의제 21 지방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거버넌스(governance)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지방의제 21은 지난 15년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문제에 대해 영향력을 미

90)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09)에 따르면,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국무총리실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비서관,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산업연구원 원장,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국토연구원 원장,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이다.

91) ICLEI(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는 환경문제에 관한 지방자치단체간 국제협력을 위해, 1990년 8월 뉴욕 UN본부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지방정부 세계총회를 계기로 발족되었다. ICLEI는 리우 지구환경정상회담 이후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병행을 뜻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등장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지방적 구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1992년 UN환경 및 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 21 내용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 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제 21(Local Agenda 21)작성하였고, 지속가능한 개발 기획과 모델 개발, 기후변화 방지 도시캠페인, 자치단체간 공동프로젝트 추진, 독일 프라이부르크에 국제연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http://www.iclei.org/>. 2010. 8. 6 검색).

친 중요한 민관협력기구이기는 하지만, 지방의제 21 추진 기구에 대한 여성들의 참여율은 2009년 현재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평균 22%,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7%이다. 광역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지방의제 21 추진기구가 조성되는 바, 여성의 참여율은 광역자치단체별로 대단히 편차가 크다. 일례로 단 한 명의 여성위원이 없는 경우도 있고 전체의 72%가 여성위원인 경우도 있다.

〈표 Ⅲ-11-2〉 지방의제 21 추진기구(협의체) 위원 구성

광역(16)				기초(232)		
자치단체	전체(명)	여성(명)	비율(%)	전체(명)	여성(명)	비율(%)
서울	65	13	20			
부산	67	8	12			
대구	72	20	28			
인천	133	21	16			
광주	116	18	16			
대전	57	12	21			
울산	50	7	14			
경기	278	111	40	3,477	1,182	34
강원	50	9	18	737	166	23
충북	54	0	0	1,319	389	30
충남	94	15	16	711	122	17
전북	74	23	31	991	139	14
전남	93	10	11	2,346	732	31
경북	47	6	13	2,646	1,154	44
경남	71	22	31	359	85	24
제주	110	79	72			
전체	1,431	374	22	12,586	3,969	27

자료: 전국성평등의네트워크 (2009).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제정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역 차원의 녹색성장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되는 지방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아 16개 시도에 모두 지방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할 정도로 빠른속도로 확산되었고 16개 시도에서 481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 중 여성 위원은 8.6%로 대단히 낮다. 특히, 행정 공무원으로 구성된 당연직 비율은 3%이고 민간 위촉직 위원의 여성 비율은 12.9%이다(<표 III-11-3> 참조). 2008년 12월말 현재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촉직 여성위원의 비율은 평균 30.9%인데 비해 상대적으로 구성 비율이 낮다.⁹²⁾

〈표 III-11-3〉 지방녹색성장위원회 현황(2010.3.25 기준)

	전체위원			당연직			위촉직		
	전체	여성	비율(%)	당연직	여성	비율(%)	위촉직	여성	비율(%)
서울	47	13	28%	11	1	9%	36	12	33%
경기	36	12	33%	11	2	18%	25	10	40%
인천	-	-	-	-	-	-	19	3	16%
강원	30	2	7%	9	0	0%	21	2	10%
광주	30	4	13%	10	0	0%	20	4	20%
경북	39	1	3%	9	0	0%	30	1	3%
경남	26	0	0%	8	0	0%	18	0	0%
대구	43	2	5%	11	0	0%	32	2	6%
대전	-	-	-	-	-	-	23	5	22%
부산	39	3	8%	13	1	8%	26	2	8%
울산	27	4	15%	8	1	13%	19	3	16%
전북	44	1	2%	15	0	0%	29	1	3%
전남	30	0	0%	10	0	0%	20	0	0%
충북	29	2	7%	9	0	0%	20	2	5%
충남	31	0	0%	8	0	0%	23	0	0%
제주	30	5	17%	10	0	0%	20	5	25%
계	481	49	8.6%	142	5	3%	381	52	12.9%

자료: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92) <http://www.moge.go.kr>.

2)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과 사업에 젠더 관점 통합 미흡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에 젠더 관점을 통합한다는 것은 환경 정책은 사회 문화적 여건에 따라서 그 영향을 차별적으로 준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 문제의 해결은 빈곤 문제와 교육, 보건, 성 역할 문제 등의 경제 및 사회발전 이슈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환경과 젠더 통합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웨덴의 경우 기후 변화로 인한 폭한이나 자연재해 등에 대한 시민의 대응력은 권력, 수입 및 경제적 자원, 노동분업, 사회적 역할과 생물학적 차이에 따라서 차별적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다섯 개의 영역에서 취약한 집단에 따라 차별적인 정책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1995년부터 국가적인 지속가능발전 전략이 수립되어 왔으나 성 관점을 통합시키려는 노력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모니터링되지는 않고 있다. 한국에서 종합적인 지속가능발전 전략은 1995년 「그린비전 21(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서 10개년 장기 환경정책목표와 이행수단을 담은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⁹³⁾의 수립·추진으로 이행되어 왔다. 그린비전21의 계획은 환경부 이외 부처의 영역도 포함하고 있으며, 부문별로 보면 자연환경보전, 대기환경보전, 수질환경보전, 해양환경보전, 상수도관리, 폐기물관리, 환경기술개발 등의 7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환경정책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정책에 대한 성 분석은 시도되지 못했다. 경제·사회·환경·제도 등 4개 분야 53개의 지속가능발전지표, 환경영향평가⁹⁴⁾, 교통영향평가 및 통합영향평가(1999)에도 성 평등 측면에

93) 환경비전 21의 계획은 환경부 이외 부처의 영역도 포함하고 있으며, 부문별로 보면 자연환경보전, 대기환경보전, 수질환경보전, 해양환경보전, 상수도관리, 폐기물관리, 환경기술개발 등의 7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린비전 21의 주요 목표는 국가의 환경 부존용량 범위 내에서 후손의 복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개발과 보전을 조화시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94) 지속가능 발전의 중요한 정책수단인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81년부터 실시하였으나,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 본격적으로 실시한 것은 1993년 “환경영향평가법”의 제정 이후라고 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은 현재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도시개발, 산업입지 조성, 도로 조성 등과 정부투자기관의 개발사업 그리고 민간개발사업 등 17개 분야 62개 단위 사업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00년부터 사전환경

서의 평가지표가 포함되지 못했다. 2000년 6월 5일에 새로운 전략적 종합계획인 「새천년국가환경비전」⁹⁵⁾을 수립되었지만, 여기에서도 젠더에 대한 관심과 관점을 찾아보기 어렵다.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과 사업에 있어 젠더에 대한 관심과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2001년 여성부 출범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일 예로 환경부가 수립한 국가환경종합계획(2006~2015)에서는 환경관리 7대 핵심전략 중의 하나로 환경 형평성 구현 기반 구축이 포함되었다. 즉, 환경 정책의 결정·집행·평가 등 전 과정에서 여성 참여 및 성 인지적 접근을 확대하고자 한다는 전략이다. 형평성 구현 기반으로 여성 참여와 성 인지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언한 것은 2003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여성위원들의 활동에 힘입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여성부 출범과 더불어 수립된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03-2007)에 이르러서 여성과 환경에 대한 2가지 정책 과제가 채택되었다. 환경관련 계획은 환경부가 수행하는 정책 사업으로 첫째, 환경 관련 정책 수립·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여성의 관점과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고 둘째, 여성 환경 NGO 및 여성 환경 전문가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자발적인 여성 환경운동 유도이다.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기간이 완료되는 2007년도 환경부의 계획 대비 실적은 다음의 <표 III-11-4>와 같다.

성 검토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95)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에는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생명공동체”를 형성하여 환경친화형 복지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는 「새천년 국가 환경비전」이 수립(2000년)되었다. 동 계획은 환경대책을 사전오염예방 중심으로 전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에 입각한 환경행정을 운영하고, 환경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한 공동 노력을 경주하는 것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부문별로는 환경윤리의 정착 및 환경교육의 강화, 경제·산업의 녹색화, 환경친화적·계획적인 국토관리, 기초생활환경 개선기반 확립, 환경과학기술의 발전, 지구환경보전에 적극참여, 녹색정부체계의 구현 등 7대 분야에서 22개 중점 추진과제 그리고 80개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Ⅲ-11-4〉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중 환경 분야 실적 (2007)

계획	실적
환경부 및 소속기관에서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에 여성계 참여 확대 및 협력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단체 환경정책실천 협의회 운영(연 4회)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7개 단체 • 민관 환경정책협의회 운영(연 2회)에 여성환경연대 등 15개 단체 •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1회) 전체 위원 188명 중 여성위원 66명
환경교육 희망 여성단체, 부녀회 등에 강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 무료 지원(1,500회, 50만명)
여성단체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다양한 행정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환경운동 여성단체의 기업의 친환경적인 광고개발 유도를 위한 우수환경광고상 지원 • 그린웨이, 그린 스카우트 등 단체행사에 후원명칭 사용승인 96건 • 생활환경운동 여성단체 등 3개 단체에 음식물류쓰레기 줄이기 생활문화정착을 위한 공동사업 141백만원 지원

자료: 여성부,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007년도 시행실적』.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보건 업무 신설, 국가환경종합계획(‘06~’15)의 수립, 실내공기 질 관리 강화 등에 자문 활동을 전개한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 여성참여율은 36%이다. 그 밖에 민관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여성 환경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강사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였다.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의 환경 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 이외에 ‘여성 환경 지도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훈련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노력은 전무한 실정이다.

같은 시기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기본계획에는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 분야 여성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 과제를 추진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여성환경 정책은 첫째, 위원회 여성 참여 비율 제고와 둘째, 가정에서 환경보전 활동 활성화 셋째, 환경 관련 교육 확대에 요약할 수 있다.

〈표 Ⅲ-11-5〉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련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2007)

	계획	실적
대구	환경보전활동 참여 확대	국토대청결운동(설맞이, 물의 날, 새봄맞이, 피서철, 추석맞이 등)
	환경보전지역 견학	금호강, 안심습지 등 10회 8,000명.
	주말 농촌환경교육	농사체험 5회 1,500명
	사회교육시 환경문제 교육	25개 과정, 750명
	폐식용유 수거 및 비누제조	폐유수거 3,700리. 비누제조 12,000장, 판매수익금 이웃돕기 3,800천원
광주	여성환경 전문가 확보 및 양성	YWCA, 여성발전센터, 시민단체 환경대학 등 운영
	환경직여성공무원 적극활용	핵심업무 근무기회 확대
	환경관련 위원회 참여확대	2개 위원회 여성위원 33%
	푸른광주21협의회 회장단 여성참여 확대	여성참여 50%(총 8명 중 4명)
	환경관련 해외연수 기회제공	20명 중 여성 8명
충남	위원회 및 협의회 여성참여율 제고	5개 분야 29.6%참여
	여성 편의시설 설치 강화	공중화장실 15개, 간이 화장실 20개소 3,000백만원
전북	3개 소관 위원회 40%이상	위원회 여성비율 45.5%
	명예환경감시원 여성위촉확대	382명 중 여성 42명
	재활용품 나눔 장터 활성화	14개 시군 월1회(총 82회) 운영
전남	지방의제 21 및 푸른 전남 실천운동	12개 단체 환경보전 활동 사업지원 48백만원
	쓰레기 감량 및 지방의제 21 추진	주민의제 반영
경북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직 비율 50%	여성비율 50%
제주	여성 환경 지도자 과정	120명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위촉	100명
	환경관련 단체 초청 간담회	15회 50명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	18개 단체, 132백만원

자료: 여성부 (2008).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007년도 시행실적-지방자치단체」.

반면, 북경여성대회를 계기로 한국여성NGO위원회 산하 ‘여성과 환경분과’ 활동의 연장선에서 환경문제를 다루는 여성단체들이 늘어났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환경위원회(1996)를 설치하였고, 한국 여성환경운동 본부 및

한국여성민우회의 여성환경센터, 여성환경연대(1999)가 만들어졌다. 활동 또한 녹색가게, 에코가족운동, 생협운동 등 다양하고 전문화된 활동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이 지원하고 젠더 관점을 통합시킨 여성환경 정책 제언 등으로 수렴되지는 못했다.

‘지방의제 21’은 1997년부터 환경부 지침(지방의제 21 작성요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로 급속하게 확산되기 시작하여 2001년에는 16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였다(지방의제 21 추진현황 분석 및 평가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2001.10. 환경부). 2002년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 이후 2004년 3월 전국 250개 지자체 중 226개 지자체에서 추진되었고, 2010년 현재 국내 248개 지방자치단체 중 222개가 지방의제 21을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이다.

〈표 Ⅲ-11-6〉 지방의제 21 추진기구 및 여성·양성평등 분과 구성현황(2009)

	자치단체 수		추진기구 설치		성평등(여성) 분과위원회	
	광역시	기초	광역시	기초	광역시(5)	기초(15)
서울	1	25	1	25	×	×
부산	1	16	1	14	×	×
대구	1	8	1	7	×	×
인천	1	10	1	7	성평등특별위원회	×
광주	1	5	1	5	×	×
대전	1	5	1	5	여성참여분과	×
울산	1	5	1	0	×	×
경기	1	31	1	30	성평등의제실천위 (양성평등위원회)	9
강원	1	18	1	12	×	3
충북	1	12	1	12	×	×
충남	1	16	1	11	×	2
전북	1	14	1	13	성평등분과	1
전남	1	22	1	21	×	×
경북	1	23	1	22	×	×
경남	1	20	1	18	여성분과	×
제주	1	2	1	2	×	×
계	16	232	16	204		

자료: 2009. 7. 30 현재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하지만, 1997년부터 작성된 지방의제 21 작성요강은 자연환경 위주의 의제가 대부분이어서, 여성 의제, 혹은 양성평등 의제가 지역에 따라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지역마다 다른 형태와 다른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167개의 지방의제 21 중, 여성의제로 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곳은 서울, 수원, 부천, 인천, 대전, 제주 정도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제 21에 젠더 관점을 통합시켜 활동할 수 있도록 여성·양성평등 관련 분과 또는 위원회를 구성한 지방자치단체는 5개 광역자치단체와 15개 지방자치단체 정도이다.

지속가능 발전 정책에 젠더 관점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이 저조한 가운데, 지방의제 21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환경단체를 중심으로 2009년 전국 양성평등 의제 네트워크가 출범하였다. 이들은 지방의제 21과 성 평등을 연계하기 위하여 ‘지방의제 21 젠더 체크리스트’를 개발·보급(2009)하였고, 2010년 지방의제 21과 성 평등을 연계하기 위하여 「한국 지방의제 21 성평등 현실 진단」 조사·연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3) 개발과 환경정책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평가 부재

우리나라는 1981년부터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한 후, 대상사업의 확대, 주민참여의 강화, 이해당사자의 참여범위 확대 및 환경영향평가 결과의 이행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 등의 지속적인 개선을 이루어왔다.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개발과 관련된 생활환경 질을 평가하고 생활환경의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토지 이용, 대기질, 수질, 위생 및 공중 보건 등의 항목을 두고 있다. 더불어 사회경제영역의 평가도 수행하고 있는데 인구, 주거, 산업,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 등의 항목들을 평가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평가 방식에 있어 대상항목에 대하여 양화된 방법으로 평가가 이루어져 심도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인지적 관점에서 생활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거나 여성의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 등을 반영한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⁹⁶⁾. 또한, 환경영향평가에

96) 예를 들어 스웨덴 환경부는 환경정책에 대한 성 분석 및 젠더와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주류화 과정을 매년 평가하고 있다(UNEP 2007).

있어 여성의 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제고할 여지 또한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범위 확정 위원회는 개발 사업의 특성 및 입지 조건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만 위원회 구성원 자격 조건에 여성참여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주민 의견 수렴시 성별 집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건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환경영향평가에서의 성 인지적 관점의 부재 문제 이외에도 ‘의제 21 국가실천계획’에 따라 권고된 정보기술, 생명공학기술, 환경기술 등 신기술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는 아직까지 도입되고 있지 못하다.

다. 향후과제

환경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유엔환경회의와 세계여성회의를 통해서 ‘여성, 환경, 발전’의 세 가지 주제를 통합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유엔환경회의는 ‘의제 21’ 추진의 주요 그룹 중 하나로 여성을 인식하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강조하였고, 세계여성회의는 북경행동강령을 통하여 환경을 여성의 지위 향상이 이루어져야 할 하나의 영역으로 주목하였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여성의 지위 향상 간의 연계는 주로 기후변화로 인한 빈곤문제로 위협받는 최빈국들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기후변화의 영향력이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별적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 발전과 여성 지위 간의 문제는 이들 국가들의 해결책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줄 수 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여성환경 활동은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신선한 음식, 지속가능한 에너지, 녹색 생산과 소비 등의 문제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단계에 있다.

베이징 세계여성회의 이후 우리나라 여성의 환경정책과정에서의 참여에 있어서 다소 진전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젠더 관점이 통합되어 여성 환경활동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향후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환경활동을 촉진시키고 성 인지적 환경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첫째, 환경 및 녹색관련 분야에 대한 성별 분리 기초 통계가 주기적으로 생산되고 축적되

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앙 및 지방 정부의 환경관련위원회에 대한 성별 참여 현황이 매년 수집되어야 한다. 또한 물·에너지 등의 자원에 대한 성별 활용 행태나 오염물질로 인한 성별 건강 피해 등에 대한 공식 통계 또한 생산되어야 한다.

둘째,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여성과 환경 분야가 포함되어야 한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이 환경 분야의 여성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국가계획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① ‘여성과 환경에 관한 국가포럼’ 설치 ② 여성환경 전문가 양성 및 지원 계획 수립 및 국가전략 분야 인적자원 개발 계획에 포함 ③ 여성의 환경인식 증진과 역할 제고를 위한 지원 ④ 여성 환경 데이터베이스 구축 ⑤ 지속가능한 농지사용을 위한 여성 농민의 역할 지원 등의 과제가 포함되어야 한다.

각 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① ‘여성과 환경에 관한 국가포럼’은 여성과 환경 의제의 이행 을 모니터링하고 여성 환경정책 의제를 발굴하는 기구로 역할한다. 포럼은 각 부처 의사 결정직의 여성, 여성과학자, 환경전문가, 여성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단체에도 설치가 권고될 필요가 있다. ② 여성환경 전문가 양성은 친환경기술과 신재생에너지 등의 새로운 산업기술 영역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며, 친환경 공정, 친환경 소재·제품, 측정 분석 장비 및 장치, 환경친화적 폐기물자원순환, 토양·지하수 복원·관리 등 그간 여성참여가 저조한 영역에 대해서는 여성 인력 훈련 및 교육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여성의 환경인식증진과 역할 제고를 위한 지원책은 여성 환경단체 지원과 더불어 여성에 대한 환경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연구지원, 녹색소비자 운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등의 과제들을 포함해야 한다. ④ 여성환경 데이터베이스는 여성 환경전문가 목록을 포함하여 여성 환경이슈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여성 환경단체나 활동사례에 대한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성 인지적 관점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에 여성 환경 보건 관점이 통합될 수 있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는 각종 개발 정책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여성과 남성의 삶의 조건과 양상이 다름

으로 인한 차별적인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 환경보건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유해화학물질 및 환경 보건에서 여성의 참여는 미비하였는데, 여성에게 노출도가 높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및 환경 민감집단을 고려한 기준의 설정이 요청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체계에 전문가 및 주민 모두의 수준에서 여성의 참여 확대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속가능개발에서 여성의 국제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제적인 여성환경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여성과 환경 관련 쟁점은 삼림 생태계와 농업생태계에서 농약중독과 지속가능한 농업 및 환경친화적 전통 생산기술의 발굴, 해양 생태계 관련 자원착취적 기술 사용 문제, 수자원 개발, 도시 지역의 공해, 식품오염, 산업노동환경 개선, 지구 환경과 관련된 방사능 폐기물 국제이동, 자연재해 등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 국제적 차원의 여성 환경 네트워킹은 지구적인 수준의 여성 환경 이슈를 고려하면서 지역 내 차이와 다양성을 반영한 환경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 여성 환경 활동은 베이징 회의 참가를 계기로 ‘여성과 환경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여성과 환경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활동하였다. 이후, 지방의제 21 추진과 관련하여 여성 환경 단체들은 ‘여성환경위원회’를 조직하여 2002년 지속가능 세계 정상회의에서의 동북아 여성코카스의 책임을 담당하였고, 여성 환경 의제 이행평가, 아시아 여성환경 워크숍, Women's Action Tent 등 국제연대 활동을 전개한 경험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네트워크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태라는 점에서 정부와 여성단체 모두 네트워크 활성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정책적 차원에서 여성환경 단체의 국제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국제리더십 양성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지원이 요청된다.

12. 여아⁹⁷⁾

북경행동강령 전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한다. ■ 여아에 대한 부정적인 문화적 태도와 관습을 타파한다. ■ 여아의 권리 보호와 증진 및 욕구와 잠재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 교육, 기술개발 및 훈련에 있어서 여아에 대한 차별을 철폐한다. ■ 보건 및 영양에서 여아에 대한 차별을 철폐한다. ■ 아동근로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근절하고 노동상황 에서의 여아를 보호한다. ■ 여아에 대한 폭력을 근절한다. ■ 사회·경제·정치적 활동의 참여에 대한 여아의 인식을 증진한다. ■ 여아의 지위향상을 위한 가정의 역할을 강화한다.

가. 국내 현황

여아에 대한 폭력은 가족 내에서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적 개입이 쉽지 않은 영역이다.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성단체들의 꾸준한 문제제기로 1994년 1월 제정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1997년 7월 30일에 장애인과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주요 내용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 추행 등의 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과 “청소년 보호 등의 시설 종사자가 비친고죄 범죄의 피해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신고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대중매체와 관련된 여성 문제를 정책에 통합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1995년 10월에 발표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10대과

97) 여아는 본원의 장미혜 연구위원이 집필하였다.

제」와 같은 해 12월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대중매체의 성 차별 개선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후 교육에서 여아와 남아에게 가능하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양성평등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 출산 시 성비의 불균형을 시정하며, 가정폭력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꾸준한 정책적 노력이 이어졌다.

여아의 안전문제가 본격적인 정책현안으로 부상한 것은 여아에 대한 성폭력 사건들이 연이어 사회적인 문제가 된 2008년 이후라고 볼 수 있다. 아동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는 여론을 반영하여 2009년 6월 9일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범 억제를 위하여 여러 가지 처벌규정이 강화되었다. 변화된 법률은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제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열람제도의 도입’과 ‘성범죄 가해자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인 경우, 검사 외에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도 친권상실 신고 또는 후견인해임결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⁹⁸⁾ 이외에도 「아동·여성 보호대책」이 추진되어, ‘아동·여성보호지연연대’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아동안전 지킴이 집’과 ‘아동안전지킴이’, ‘학교배움터지킴이’, ‘실버폴리스’ 등의 순찰·보호제도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실종된 아동의 조기발견 체계로서 ‘유괴실종 경보 매체’를 확대하는 등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키는 법률안 정비 및 제도적 개선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에서는 성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등 담당부처 별로 업무가 분산되어 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는 성폭력 상담소에서는 성인 성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는 중앙 아동 전문보호기관에서는 아

98) 구체적인 내용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기간 및 대상기관을 확대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과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이 폭행협박에 의해 강간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 신고가 없어도 처벌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동 성학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아 안전망과 관련된 사회 시스템을 보면, 현재 1차적 서비스 연계망은 아동 성학대 업무를 수행하고 지원하는 상담기관(성폭력상담소, 성폭력위기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위주로 되어 있고, 2차적 서비스 연계망은 경찰, 검찰, 의료 기관, 법률 기관으로 되어 있어 1차적 서비스 기관과 2차적 서비스 기관과의 연계망이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폭력피해자에 대한 사회서비스는 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을 적절한 보호장소로 이동시키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사법체계와 성 학대 피해아동의 신체적 응급처치를 담당하는 의료체계, 상담서비스와 일시보호, 지속적인 치료와 사회복지를 위한 서비스 연계와 사회복지체계 사이의 긴밀한 협조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나. 지난 15년간 주요정책 및 성과

1) 여아에 대한 차별적 문화 개선

가) 대중매체를 통한 양성평등문화 확산

여아에 대한 가족 내의 차별과 폭력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가족 내의 지원과 의사소통의 증진,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 개별 가족을 넘어선 사회 전반에 걸친 양성평등문화의 확산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1999년부터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사회의식 전환을 주창해 왔고 그 일환으로 여성부(현 여성가족부)는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년~2012년)에서 미디어 활용을 양성평등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국민의 생활 속에 평등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명절 문화, 살림 문화, 육아 문화, 자녀교육 문화, 회식 문화 등 5대 생활문화 개선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변화하는 매체 환경을 고려하여 디지털 환경에 따른 미디어법의 양성평등 조항 재정비, 여성들을

위한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 및 접근 교육 강화, 시민제작콘텐츠를 비롯한 기존 ‘영상물’, ‘게임물’, ‘공연물’, ‘간행물’ 등에 대한 기금 지원 및 제작지원 센터 건립 검토, 양성평등 미디어 교육 활성화 등의 조항을 포함하였다. 이와 더불어 성차별 의식의 개선을 위한 매체 모니터링, 남녀평등 미디어상 시상, 제작자 가이드라인 및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도 지속하고 있다. 특히 2006년에는 신문방송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 나타난 성차별적 언어 표현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업 종사자들과의 토론을 통해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시책의 하나로, 2003년 3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설치하여 성 인지성 향상 및 성 인지 정책 분석 등의 전문적 교육시스템을 마련하였다. 또한 남녀차별 금지정책과 양성평등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인의 의식을 높이기 위해 TV, 라디오, 지하철, 잡지, 포스터 등을 통해 대중적 홍보를 추진하였다. 특히 중요 대중매체에 대해 2001~2003년에 걸쳐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방송과 광고의 성 차별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하고, 그 결과를 방송사와 방송위원회에 통보하여 시정을 권고하였다.

나) 여아 낙태 및 성비 불균형 예방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어온 가족계획 사업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하여 1999년에는 인구 자연증가율이 0.92%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선진국형 저출산 시대에 진입하면서 가족계획사업은, 산아제한 정책이 폐지되고, 남녀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계획 운동 목표로 ‘출생 성비 바로잡기’ 운동을 추진하였다.

대한민국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형법 제27장 제269조, 제270조에서 낙태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의하면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를 한 부녀 또는 낙태를 도운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리고 동의 없이 또는 동의를 받아 낙태하게 된 의사 등은 2년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데 예외적 사유는 임신의 지속으로 모

체의 건강을 심히 해할 경우, 임신부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등 범죄 행위로 인하여 임신된 경우와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로 제한되어 있다.

남아선호 사상과 함께 태아 성 감별 기술의 도입으로 여아 인공 임신중절이 증가하여 성비 불균형을 초래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태아 성 감별을 금지하고 불법 시술을 한 의사의 면허 취소 등 단속을 강화하였다. 또한 대한가족계획협회 부설로 한국성문화연구소를 설치하는 한편 전국 보건소에 다기능적인 상담센터를 설치해 성비 불균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성 차별적인 국민의식 전환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담당하게 하였다. 그 결과, 총 출생 성비에서 남아대 여아의 비율이 1995년 113.2에서 2008년에는 106.4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셋째아이 이상의 성비는 2000년 144.2에서 2008년에는 116.7로 감소하였다.

〈표 Ⅲ-12-1〉 출생 순위별 출생성비

(단위: 여아 100명당 남아 수)

년도	총 출생성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이 이상	셋째아이	넷째아이 이상
1995	113.2	105.8	111.7	180.6	-	-
2000	110.2	106.3	107.4	144.2	141.9	167.6
2005	107.8	104.8	106.5	128.5	128.0	132.4
2006	107.5	105.7	106.0	121.9	121.9	121.9
2007	106.2	104.5	106.0	115.7	115.3	119.1
2008	106.4	104.9	105.6	116.7	115.8	123.9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해당년도.

2) 각종 폭력(폭력, 학대, 성적 착취 등)으로부터의 여아 보호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개정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1994년 1월 제정되었다. 1997년 7월 30일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 추가되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청소년 보호 등의 시설종사자가 비친고죄 범죄의 피해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신고의무규정을 신설하였다.

동법의 2003년 12월 11일 개정에서는 13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인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보존하도록 하고,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강간·강제추행 등 일정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비디오 등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6년 10월 27일의 개정에서는 수사·재판 절차상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고 13세 미만의 사람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였다. 13세 미만 피해자에게 적용하던 의무적 진술 녹화제 적용 대상을 16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신청할 경우 모든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수사·재판 시 신뢰 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유사 강간행위(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 성기 삽입 등)를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하였다. 2008년 6월 개정 시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를 엄단하고자, 13세 미만 사람을 상대로 한 강간죄, 유사 강간행위, 강제 추행죄 등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을 상향조정하였다.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2007년 4월 27일 제정)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함으로써 성폭력 범죄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동 법은 2009년 5월 8일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포함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법령이 변경되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 하에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13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10년의 범위 내에서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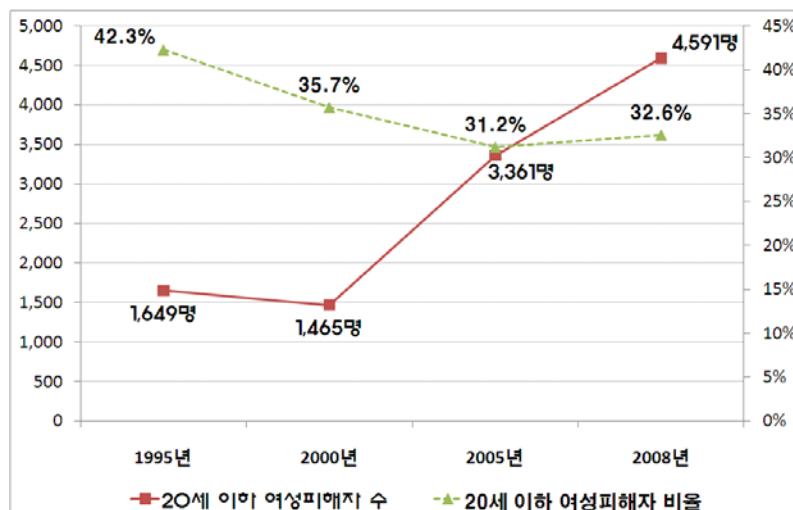
〈표 Ⅲ-12-2〉 성폭력범죄(강간)의 피해자 성별·연령별(1995-2008)

(단위: 명)

연도	성별	계	6세 이하	7~12세	13~15세	16~20세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0세 초과
1995	남	264	5	17	31	41	75	54	33	7	1
	여	3,901	111	242	410	886	1,079	747	269	99	58
2000	남	244	2	10	14	33	46	77	48	10	4
	여	4,102	38	113	276	1,038	1,198	821	459	100	59
2005	남	433	11	27	20	59	117	119	57	12	11
	여	10,780	177	544	503	2,137	4,209	1,496	1,208	295	211
2008	남	635	11	57	25	73	194	108	101	45	21
	여	14,094	142	972	751	2,726	5,183	1,800	1,650	564	306

* 주: 성별·연령별 불상 피해자는 2005년 127명, 2006년 198명, 2007년 67명, 2008년 190명임.

자료: 대검찰청(1996~2009). 「범죄분석」.



[그림 Ⅲ-12-1] 20세 이하 성폭력범죄 피해자

성폭력 범죄(강간)의 여성 피해자수는 1995년 3,901명(20세 이하 1,649명, 42.3%)에서 2000년 4,102명(20세 이하 1,465명, 35.7%)으로 점진적인 증가추세를 유지하다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여 2005년에는 10,780명(20세 이하 3,361명, 31.2%), 2008년에는 14,094명(20세 이하 4,591명, 32.6%)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범죄의 특성상 여성 피해자가 남성 피해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으며, 각 성별의 전체 피해자 중 20세 이하 피해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여성이 높아 특히 20세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전 사회적 차원의 강력한 대처가 요구된다.

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 개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 매매춘을 하는 업주에게 징역 최고 15년까지 대폭 가중엄벌하고, 매춘 청소년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대신 선도조치, 매매춘 고객에 대한 형사처벌 외 신상공개 제도의 도입을 주요지로 하며 2000년 1월 제정되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01년 8월에는 169명에 대한 신상공개를 실시하였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2009년 6월 9일 전부 개정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법령을 바꾸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범 억제를 위하여 유사 성교 행위 및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판결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성범죄 가해자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인 경우, 검사 외에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도 친권 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 해임결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하였고,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기간 및 대상 기관을 확대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관리 체계를 강화하였다.

동 법의 2010년 4월 15일 개정에서는 음주나 약물상태에서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 「형법」 상의 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진술녹화제도와 증거보전의 특례,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제도를 도입하여 수사·재판과정 및 재판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

방하는 한편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 성범죄 및 성범죄자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2010년 7월 23일의 일부 개정에서는 2009년 6월 9일의 법 개정(2010년 1월 1일 시행) 이전에 유죄 판결과 열람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 등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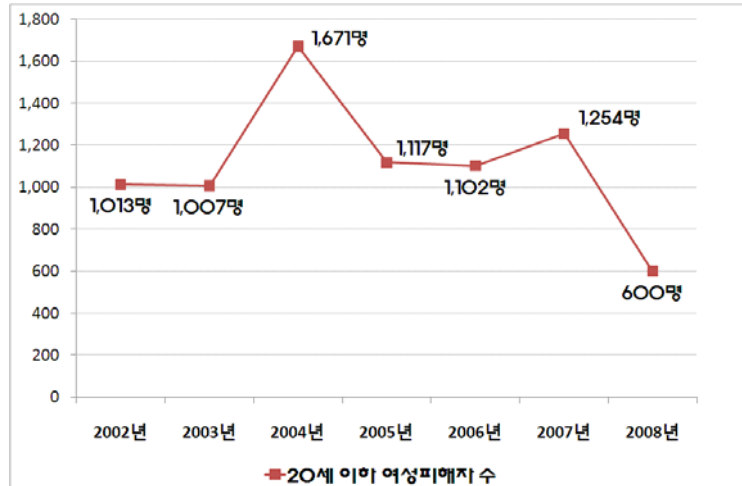
〈표 Ⅲ-12-4〉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피해자 성별·연령별(2002-2008)

(단위: 명)

연도	성별	계	6세 이하	7~ 12세	13~ 15세	16~ 20세	21~ 30세	31~ 40세	41~ 50세	51~ 60세	60세 초과
2002	남	133	0	3	11	65	9	13	3	0	29
	여	1,073	6	38	296	673	7	51	0	0	2
2005	남	44	1	3	8	20	2	4	4	1	1
	여	1,146	5	17	315	780	8	11	5	2	3
2008	남	38	0	3	10	16	3	2	4	0	0
	여	621	0	9	257	334	9	5	3	1	3

주: 성별·연령별 불상 피해자는 2005년 62명, 2006년 62명, 2007년 21명, 2008년 17명임.
자료: 대검찰청(2003~2009), 「범죄분석」.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20세 이하 여성 피해자는 2002년 1,013명에서 2005년 1,117명으로 증가하였다. 이후 2007년 1,254명을 기록한 후 2008년에는 크게 감소하여 600명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12-2]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세 이하 여성피해자

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개정

1997년에 제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 중 1999년 1월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비밀엄수 의무범위가 일부 개정되어 학교를 전학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분이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노출되어 교육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밀엄수 등의 의무범위에 교사 및 교장을 포함시켜 이들의 전학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가정폭력방지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1998년 11월에는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와 6개 부처(법무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노동부)가 합동으로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2001년에는 여성부(현 여성가족부)가 발족하면서 ‘여성폭력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폭행, 상해, 유기, 학대, 체포, 감금, 협박 등을 ‘가정폭력범죄’로 정의하고 있다. 동법은 가족폭력범죄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반적인 형사처벌 외에 접근 제한, 보호 관찰, 치료 및 상담, 감호 위탁 등 보호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가정보호 사건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정폭력 범죄사건은 경찰의 수사 단계부터 검찰, 법원의 절차까지 별도로 특별 관리된다.

법무부는 1999년 9월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가정폭력전담검사제를 실시하여 가정폭력사건뿐 아니라 어린이에 대한 성폭력, 근친 간 성폭력 등 특수한 성폭력사건수사도 관장하도록 하였다.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는 민간상담기관과의 협력방안도 모색하여 2000년 9월 가정폭력사건 수사절차상 민간 상담기관과의 연계방안을 수립, 서울지검 소년부의 가정폭력 전담검사가 행위자 또는 피해자 중 검사가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당사자가 상담을 원하는 사건에 대해 민간상담기관 상담위원에게 상담을 의뢰하고 그 상담결과를 반영하여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라) 청소년 성매매 및 인신매매로부터의 보호

「형법」상의 처벌규정으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제287조), 추행·간음·영리목적 약취, 유인(제288조 제1항), 부녀매매(제288조 제2항), 국외이송약취·유인·부녀매매(제289조 제1항), 피매매자 국외이송(제289조 제2항) 등이 있고, 이러한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제4항)에 의해 가중처벌 받게 되어 있다. 「아동복지법」에서도 취업이나 국외이송 등의 목적이 아니어도 18세 미만의 아동을 매매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제40조 제1호, 제29조 제5호),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청소년을 국외나 국내에 매매 또는 이송하는 경우에 대해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제9조).

청소년 성매매는 주로 인터넷을 이용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만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처벌되며, 아동 성폭력 범죄자나 재범이상의 성매수자, 알선자는 신상정보 등록·열람의 대상이 된다. 성매매대상 청소년은 처벌되지 않으며, 교육, 상담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검사의 명령에 의한 교육과정 또는 상담과정을 이수하도록 한 법규정에 따

라 보건복지가족부는 성매매 대상 청소년의 보호 및 재활을 위한 맞춤형 치료, 재활프로그램 40시간을 개발하여 전국 7개의 위기청소년교육센터를 교육시설로 지정, 2006년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정부는 2000년 5월 25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UN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같은 해 9월 6일 서명하였고, 2000년 11월 15일 유엔에서 채택된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예방, 억지, 처벌에 관한 의정서(인신매매 의정서)’에 같은 해 12월 13일에 서명하였다.

〈표 Ⅲ-12-5〉 「성매매방지법」 피해자 성별·연령별(2004-2008)

(단위: 명)

연도	성별	계	6세 이하	7~12세	13~15세	16~20세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0세 초과
2004	남	10	0	0	0	0	1	7	2	0	0
	여	96	0	0	2	19	52	16	6	0	1
2005	남	35	0	0	0	1	10	14	6	4	0
	여	339	0	0	7	141	152	22	15	2	0
2006	남	138	0	0	1	2	25	49	34	11	16
	여	441	0	0	2	93	265	56	20	5	0
2007	남	145	1	0	2	4	35	51	25	17	10
	여	405	0	1	13	94	207	52	28	8	2
2008	남	187	0	0	3	3	33	60	47	28	13
	여	401	1	0	9	61	167	111	40	10	2

*주: 성별·연령별 불상 피해자는 2005년 47명, 2006년 15명, 2007년 10명, 2008년 12명임.
자료: 대검찰청(2005~2009). 「범죄분석」.

「성매매방지법」에 의한 20세 이하 여성 피해자는 2004년 21명(전체 여성 피해자의 21.9%)에서 2005년 148명(전체 여성 피해자의 43.7%)으로 증가하였다가 점차 감소하여 2008년에는 71명(전체 여성 피해자의 17.7%)으로 나타났다.

마) 각종 폭력 방지에 대한 대책 마련

정부는 유괴 및 성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2008년 4월 30일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구축과 운영, 아동놀이터·공원·학교 내 CCTV 설치, 아동안전 지킴이집 운영, 노인 및 퇴직인력을 활용한 아동안전 확보, 배움터 지킴이 배치 확대, 아동안전 자원봉사단체의 효율적 관리·운영 등의 과제를 수립·시행하고 있다. 이 대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총리실 산하에 ‘아동·여성보호대책 추진점검단’을 설치하였으며, 지역사회의 아동·여성보호대책 활성화를 위하여 234개의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아동성폭력전담센터를 설치하였는데 2006년 3개소, 2007년 3개소, 2008년도 4개소, 2009년에는 1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아동성폭력전담센터에서는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피해 상담, 심리 평가, 의료 지원, 법률 및 소송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와 시설이 제공하는 피해자 지원 서비스 실적을 취합하여 관련 통계를 매년 생산하고 있으며 전국 가정폭력·성폭력 실태조사를 매 3년마다 실시하고 있고, 2007년에는 전국 1만 가구 표본조사, 피해자 및 피해자 지원시설 전수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는 가정폭력·성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에 활용되고 있다. 한편, 2009년에는 2010년 전국 실태조사에 대비하여 지난 평가의 문제점을 분석·검토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설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3) 아동보호 사업 확충 및 방과후 아동지도 실시

대한민국은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 및 여성지위 향상 이념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걸쳐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정책적인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1995년 12월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이 법 제23조에는 ‘영유아보육시설의 확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제1차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1994~1997)과 ‘제2차 근로여성복

지기본계획'(1998~2001) 및 '영유아 보육사업확충 3개년계획'(1995~1997)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한편 제4차 여성세계회의의 후속조치로서 '95.10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10대 과제'를 선정·추진하였다. '근로여성 복지기본계획'은 2003년부터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 계획은 남녀차별 시정의 소극적 보호개념에서 한발 나아가 고용평등을 통한 적극적인 여성인력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제3차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은 중점 추진과제로 "2. 모성보호 비용에 대한 사회분담 확대, 육아 휴직제도 활성화, 보육지원 강화, 가정친화적인 근무형태 개발 등을 통한 직장과 양립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령을 변경(2007년 12월 21일)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장 내 일·가정양립조치를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으로 이름을 바꾸어 제4차 기본계획(2008~2012)이 추진 중이다. 이 계획의 중점 추진과제 중에는 "2. 일하는 여성 보육부담 완화, 출산비용의 사회화 확대 등 일하는 여성 중심의 육아지원제도 마련"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비영리 단체나 종교시설 등에서는 방과후 보육의 요구가 절실한 저소득층 취업모의 자녀들을 위해 방과후 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학령기 아동에게 제공되는 방과후 보육시설 유형은 초등학교에서 개설한 방과후 교실, 저소득층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의 하나인 방과후 교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의 방과후 보육, 대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민간이나 종교시설의 비영리 공부방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과후 보육프로그램들은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아동의 보호와 학습지도, 생활지도를 주목표로 하고 있어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돕는 활동은 미흡한 감이 있다.

다. 향후과제

사회 전반에 걸친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과 법률적 정비, 제도적 기반 형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아에 대한 안전이 증진될 수 있다. 그러나

2010년 6월 이루어진 일련의 법 개정 과정은 가해자 처벌강화 위주로 되어 있으나, 아동 성폭력 발생을 억제하는 아동과 가해자의 개인적 특성, 가족 내의 역할이나 경제적 수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포함하는 가족적 특성, 지역사회의 책임 등 다차원적인 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종합적인 대책이라고 보기에에는 미흡한 감이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아동 성폭력 피해는 은폐되고 있고, 소수의 가해자만이 처벌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아동 성폭력 발생 억제에 가장 효과적인 접근은 폭력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개인을 넘어서는 사회적 요인으로서는 지역 내의 빈곤과 시민 의식, 성폭력에 대한 문화적 규범과 사회적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성과 아동에 대한 단기적인 폭력방지책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아의 안전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지역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여성과 아동을 위한 폭력 예방과 안전 증진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지역 사회전체의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며 최근에 구성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는 이러한 지역사회 대상 안전정책으로서 의미가 있다. 여성과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를 대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정책보다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져 지역의 유대(social cohesion)를 강화하고, 민간과 공공부문의 상호 협력이 이루어져 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역공동체 차원의 감시가 이루어지는 지역일수록⁹⁹⁾ 여성과 아동을 폭력으로부터 예방하고, 그들의 안전을 증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향후 여아에 대한 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한 일관된 정책이 마련되기 위해서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단일화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99) Daro, D. & K. A. Dodge. 2009. "Creation Community Responsibility for child Protection: Possibilities and Challenges." *The Future of Children* 19(2): 67-93.

IV

정책제언 : 향후과제

- | | |
|-----------------------------------|-----|
| 1. 12개 주요 관심분야별 정책제언 | 245 |
| 2. 12개 주요 관심부문 중 강화되어야 할
정책 | 260 |
| 3. MDGs 달성을 위한 한국의 ODA기여 부문
개발 | 261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15년간의 북경행동강령의 이행 성과를 12개 주요관심부문에서 공유하고 여성의 권한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나타난 장애요소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과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개발하는데 있다. 이와 동시에 국제적 맥락에서 MDGs 채택 10주년의 해로 2015년까지 달성해야 할 MDGs를 북경행동강령과 연계하여 다루는데 있다. 그리하여 첫째, 한국의 지난 15년 동안의 12개 주요관심부문에서의 변화를 고찰한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언하고자 한다. 둘째, 12개 주요관심분야 중 가장 이행이 되지 않은 부문의 정책이행 우선순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공여국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12개 주요 관심분야별 정책제언

가. 여성과 빈곤

양성평등 증진을 통해 빈곤을 퇴치하고자 하는 국가의 노력은 대단히 컸다. 한국의 역사는 남성은 물론 여성의 빈곤퇴치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도 복지정책의 이분화 현상은 그 대로 확인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결과 국가의 빈곤정책의 여성 수혜자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여성빈곤율은 전체빈곤율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빈곤심화로 여성가구주 빈곤율은 남성가구주 빈곤율의 약 5배가 높다. 기초노령연금제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노인빈곤율은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의 3배 빈곤비율을 보인다.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이 되었지만 그러나 여성장애인은 일반 장애인가구의 빈곤상황보다 더욱 열악한 상황이다.

따라서 자활사업에서 여성가구주의 원활한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지원과 자녀양육 지원, 자녀양육의 책임과 취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일가정양립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보다 구체적인 탈빈곤 전략이 필요하다. 여성근로자와 여성가구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

여 근로장려세제가 보다 양성평등한 근로복지연계제도로써 정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성빈곤의 완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 시민권적 개념에 기초한 소득보장 프로그램, 여성의 피부양자로서의 수급권이 아닌 개별적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회보장제도의 성인지적 개편이 필요하다. 기여에 기반을 둔 사회보험제도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적 부조제도에서 제도의 대상 범주의 적절성과 급여의 충분성을 검토하여 향후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여성노인의 증가를 고려한 제도설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 여성장애인의 취업지원, 모성역할과 관련된 서비스의 지원 등 다양한 제도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표 IV-1〉 여성과 빈곤 현황 및 향후과제

북경행동강령 전략목표	현황과 성과	향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곤여성의 욕구와 노력을 포함한 거시경제정책과 발전전략을 점검, 채택하며 유지함 ■ 경제자원에 대한 여성의 동등한 권리 및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법과 행정적 시행을 개정 ■ 예금과 신용제도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을 촉진 ■ 성인지적 방법론을 개발하고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결과 국가의 빈곤정책의 여성수혜자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여성빈곤율은 전체빈곤율보다 2배 이상 높음 - 근로연계복지, 사회적 일자리사업,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등의 성인지적 개선과 확대로 여성접근성 제고 -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으로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제고와 실질소득 지원향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빈곤심화, 여성가구주 빈곤율은 남성가구주 빈곤율의 약 5배 - 기초노령연금제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노인빈곤 완화, 여전히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의 3배 빈곤비율 -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 그러나 여성장애인은 일반 장애인가구의 빈곤상황보다 더욱 열악한 상황 - 탈빈곤을 위한 여성경제활동 접근성 개선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연계복지정책의 성별통계 확충으로 여성의 탈빈곤 통계 생산필요 - 근로장려세제는 가구단위로 설계되어 있어서, 여성가구주, 한부모가족,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특성을 고려한 여성친화적인 개편 필요 - 근로장려세제의 성별 수혜율 및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 필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성인지적 개편에 기반한 여성 접근성 향상으로 여성빈곤의 구조적 원인 해소 필요함 - 여성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 - 향후 여성경제활동 접근성 개선하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 필요(여성노동시장 진입, 일가정양립, 경력단절 방지 등)

나 여성과 교육·훈련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초, 중등학교 교육기회에서의 취학률은 매우 높으며 남녀간 성별 격차도 거의 없다. 그러나 고등교육기회 그리고 석사, 박사 학위 취득기회, 이공계 접근기회에서의 여성의 접근성은 남성보다 낮아 고급인적자원 양성에 있어 성별 격차문제가 남아있다.

따라서 대학교육이상 단계에서 남녀간 평등한 교육기회 확보를 위한 정책이 요구되며, 고급인력의 양성과 함께 활용에 있어서의 성평등성도 제고되어야 한다. 또한 양성평등한 교육과 여학생의 전공 다양화를 위해서 교과서 내용 모니터링과 교사의 교수활동에 있어 성평등성 제고를 위한 교육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여건 면에서는 중요한 의사결정직에서의 여성비율이 낮은 것이 문제로 남아있으므로 임용 및 채용목표제를 통해 여성비율 제고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요구된다. 직업훈련에 있어서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사업주훈련 참여율에서 여성 참여율이 낮으므로 재직자훈련의 여성참여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고령여성 비율의 증가, 결혼이민여성 및 탈북여성의 증가 등으로 여성평생교육의 대상과 내용의 다양화도 요구된다.

〈표 Ⅳ-2〉 여성과 교육·훈련 현황 및 향후과제

북경행동강령 전략목표	현황과 성과	향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 보장 ■ 여성의 문맹 퇴치 ■ 직업훈련, 과학, 기술 및 평생교육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 향상 ■ 남녀 간 동등한 교육과 훈련 개발 ■ 교육개혁을 위한 충분한 자원 할당 및 이행 점검 ■ 여아와 여성을 위한 평생교육과 훈련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접근기회가 중등교육까지 거의 동등해짐 - 초등학교는 거의 완전 취학에 가까운 수준으로 기초 문해 달성됨 - 직업훈련, 과학, 기술 및 평생교육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 향상 - 과학·기술 특히 공학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은 아직 저조 - 교과선택에 있어 성차별 해소 - 교육관리직, 전문직의 여성 비율 증가, 남성에 비해 저조 - 경력단절여성, 결혼이민여성, 탈북여성의 평생교육과 훈련 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여성, 탈북여성 및 자녀 등의 교육 접근성 제고 - 과학·기술 특히 공학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 제고 - 여성의 직업교육 참여 제고, 재직자훈련의 성차 해소 - 성 역할 편견이 배제된 교과과정 구성 - 여성 교육관리직, 전문직의 비율 제고 - 고령여성, 여자청소년의 평생교육 증진 - 경력단절여성, 결혼이민여성, 탈북여성의 훈련기회 증진

다. 여성과 건강

북경행동강령이 채택된 이후 우리나라는 생식보건 지원 사업을 통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여성과 영유아의 건강의 저해원인 파악을 통해 건강향상을 도모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여성건강 관련법의 제·개정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여성건강관련 다양한 통계를 생산할 수 있었으며, 특히 여성관련 건강증진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특정시기의 여성으로 제한하는 생식보건사업은 전인적인 차원에서 여성의 건강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첫째, 부분적인 접근이 아닌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의 전 생애과정접근을 통한 건강증진 정책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에 건강과 관련하여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가 바로 ‘건강형평성’ 문제이다. 이에 따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득과 계층이 낮은 인구집단을 중심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개발 및 사업의 필요하다. 둘째,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양적확대와 더불어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모자보건 증진, HIV/AIDS 및 기타 전염병 예방 등 MDGs 달성과 직결된 분야로 사업과 재원지원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표 IV-3〉 여성과 건강 현황 및 향후과제

분야별 북경행동강령전략목표	현황과 성과	향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생애주기 동안 적절한 양질의 보건의료와 정보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을 증진 ■ 여성의 건강을 증진하는 예방 프로그램을 강화 ■ 성병, HIV/AIDS, 성 및 생식 건강 문제에 대한 성인지적 사업에 착수 ■ 여성건강 관련 조사연구를 촉진하고 정보를 확산 ■ 여성건강 관련 재원을 증대하고 후속조치를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건강 관련법의 제·개정 및 적용범위 확대 - 여성건강관련 다양한 통계 생산 - 여성관련 건강증진 사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적 관점의 생애주기별 통계생산을 기반으로 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계획 수립 필요 - 취약계층 및 위기상황에 노출된 여성의 건강불평등 문제 제고 - 여성의 생식건강 보호를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 필요 -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의 질적 개선을 위한 근거중심의 성인지적 사업기획 및 평가 필요

라. 여성과 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시키기 위한 종합대책에서 한국은 이제 가정폭력, 성폭력, 그리고 성매매 대책 관련 전담부서의 설립과 더불어 종합적 대책방안은 마련되었다. 또한 여성에 대한 폭력 원인과 결과 및 예방대책 효과성 연구 추진에 있어서 정부는 3년마다 폭력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어 전국의 가정폭력, 성폭력, 그리고 성매매 관련 실태조사가 2004년 (혹은 2002년), 2007년, 2010년 3차에 걸쳐 시행되어 폭력의 추이를 점검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의 이행에 있어서 가해자 처벌에 대한 정책집행 및 피해자 보호의 내실화가 욕구된다.

첫째, 가정폭력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 도입 및 ‘피해자 보호명령제도’의 도입을 통한 가해자 처벌의 강화가 요구된다. 한국은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 이후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가정폭력이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피해자보호의 실효성 제고할 수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피해자보호명령 사건의 정의, 관할, 내용, 임시보호명령, 이행실태 조사조항 등 포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성폭력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신속한 범인검거 및 피해자 구조를 위해 경찰의 범인의 조속한 검거 위한 수사 전담체계 구축, 실종아동 조기수색 및 발견체계 구축, 아동 성폭력 사범 엄정 대처, 재범 방지를 통한 아동성범죄 사전 예방, 피해자에 대한 ONE-STOP 통합 지원이 시급하다.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은 마련되었다면 앞으로는 예방의 차원에서 지역사회가 힘을 모을 단계이다. 셋째, 성매매근절을 위한 정책에 있어서 퇴폐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 구매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정책의 내실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변종 퇴폐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 구매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정책의 내실화가 요구된다.

〈표 IV-4〉 여성과 폭력 현황 및 향후과제

분야별 북경행동강령 전략목표	현황과 성과	향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강구 ■ 여성에 대한 폭력 원인과 결과 및 예방대책 효과성 연구 추진 ■ 여성의 인신매매 근절, 성매매·인신매매피해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 관련법 제정과 피해자 지원의 제도화 - 성폭력 관련법 제정과 성폭력 범죄자의 처벌 강화 - 변화순외(2004). 2004년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 여성부. - 김승권외(2008). 2007년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 여성부 - 김승권외(2008). 2007년 전국 성폭력실태조사. 여성부 - 김재엽외(2010). 2010년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김재엽외(2010). 2010년 전국 성폭력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성매매방지법 제정과 성매매 피해자 지원의 제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긴급 임시조치권 도입 및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을 통한 가해자 처벌 강화 시급 - 성폭력 범인의 조속한 검거 위한 수사 전담체계 구축, 실종아동 조기수색 및 발견체계 구축, 재범 방지를 통한 아동성범죄 사전 예방 필요 - 가정폭력, 성폭력 실태에 대한 전국자료이지만 지역별 비교하기에는 조사 규모의 한계가 있음. 조사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성매매정책에 있어서 퇴폐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 구매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정책의 내실화

마. 여성과 무력분쟁

한국이 여성평화운동에 접근하려고 할 경우 통일문제에서 평화운동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남북으로 분단된 이래 통일에 관한 논의를 지속해왔으며 통일운동은 우리 평화운동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관련 주요정책 결정과정과 정부정책에서 여성의 지원은 미비하다. 이의 극복을 위하여 첫째, 통일관련 주요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즉 통일관련 정부 부처 및 각종위원회에 여성참여가 확대되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통일평화교육에 있어 여성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대상과 프로그램 다양화, 남북여성교류 활성화가 필요하다. 셋째, 관련부처는 평화문화 정착을 위해 여성NGO의 평화교육과 평화문화활동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표 Ⅳ-5〉 여성과 무력분쟁 현황 및 향후과제

분야별 배경행동강령 전략목표	현황과 성과	향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쟁해결과정에 여성참여 증대, 분쟁상황하의 여성 보호 ■ 무장가능성 통제 ■ 비폭력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분쟁상황에서의 인권유린 사례 감소 ■ 평화문화를 조성하는 데 여성의 기여를 도모 ■ 난민여성에 대한 보호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북여성 사회적응 지원 - 여성계의 평화운동 전개 - 여성단체 및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전개 - 통일관련 주요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저조 - 통일평화교육에 여성참여 저조 - 평화를 위한 여성운동관련 단체에 정부 지원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관련 주요정책 결정과정에의 여성참여 확대 - 통일평화교육에 있어 여성역량 강화 - 평화를 위한 여성운동단체에 적극 지원 - 탈북여성 지원 강화

바. 여성과 경제

우리나라 전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평균 61.3%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특히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평균 82.6%에 비하여 최하위 수준이다. 여성의 임금비도 남성의 62%에 불과하여 성별 경제적 격차는 매우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다. 향후 우리나라는 고령여성 및 이주여성의 증가, 고학력화된 청년층 등 각 집단에게 필요한 세밀한 정책이 요구될 것이다.

첫째, 가장 필요한 것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다. 일과 출산, 육아를 병행할 수 없는 노동시장과 사회의 여건은 여성의 저활용으로 이어지므로,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근로방식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여성들의 경력형성과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리더십 훈련을 비롯한 다양한 업무관련 교육훈련의 확대, 사업장에서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학습, 여성네트워크의 구축 등 여성들이 조직 내에서 유리천장을 극복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취약계층 여성들을 위한 직업훈련과 일자리 창출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핵심과제이다. 넷째, 여전히 노동시장에서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처한 여성근로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고용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표 IV-6〉 여성과 경제 현황 및 향후과제

분야별 북경행동강령 전략목표	현황과 성과	향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 접근성, 적절한 근로조건 그리고 경제적 재원에 대한 통제를 포함하는 여성의 경제적 권리 및 자립을 증진 ■ 자원, 고용, 시장 및 무역에 대한 여성의 평등한 접근을 촉진 ■ 저임금 여성들에게 비즈니스 서비스 및 훈련과, 시장, 정보, 기술에의 접근성을 제공 ■ 여성의 경제능력과 상업적 연대망을 강화 ■ 직종분리와 모든 형태의 고용차별을 철폐 ■ 직장과 가정에서의 책임 조화를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소폭 제고 - 고용형태 및 직종 다양화 - 적극적고용개선조치 - 모성보호 및 일가족 양립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 정착 - 여성들의 경력형성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 - 취약계층 여성들을 위한 직업훈련과 일자리 창출

사. 여성과 권력 및 의사결정

권력 및 의사결정 참여와 관련하여 한국에서 가장 큰 성과는 정치부문의 여성할당제가 도입된 것이다. 비례대표제에 제한적으로 도입되긴 하였으나, 비례대표 후보자의 50%를 여성으로 한다는 조항은 일반 유권자에게까지 여성할당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였고, 여성할당제 도입이전보다 여성의 정치진출을 증진시키는 획기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전체 의석의 15%내외를 차지하는 비례대표제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는 여성할당제가 그 이름만큼의 성과를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부문의 할당제 채택 외에, 고등고시에서 최근 여성들의 약진으로 인하여, 일반 보수적인 남성사회로부터 역풍이 만만치 않은 상황은 한국여성이 풀어야 할 과제이다. 공직분야에 대한 여성 진출도 여성채용목표제나 양성채용목표제를 통해 해소하고 있으며, 특히 의사결정직에 해당하는 관리자급 이상 여성공무

원 확대계획이 실시되고 있어, 향후 공직분야 고위직급의 여성참여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한국은 정치와 공직분야에서 참여를 촉진시키는 조치가, 실질적인 참여 부분에서는 성과가 있었지만, 여성의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리더십훈련 부분은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기존 제도에 진입하기 위한 진입장벽이 낮아지긴 하였으나,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역량을 키우고 제도권 내에서 경력의 지속과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제도적인 보완, 나아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표 Ⅳ-7〉 여성과 권력 및 의사결정 현황 및 향후과제

분야별 북경행동강령 전략목표	현황과 성과	향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력구조 및 의사결정과정 에 여성의 동등한 접근과 충분한 참여를 도모하기 위 한 조치를 취함 ■ 정책결정 및 리더십에 참여 하기 위한 여성의 역량을 증진시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참여에 여성 비례대표후 보 50% 할당제 도입 - 공직의 여성참여 제고를 위 한 목표율제도 실시 - 유권자 정치의식 교육, 차세 대 여성정치 리더십 육성프 로그램 등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할당제의 지역구 후보에 까지 확대적용 필요 - 관리자급 여성공무원의 확대 를 위한 제도적 조치의 실효 성 강화 -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리 더십 훈련 및 공직 내 경력지 속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아.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북경행동강령이 채택된 후 우리나라는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서 이의 이행을 위해 충실한 노력을 기해왔다.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한 여성정책조정회의, 여성정책책임관 및 여성정책협조부서 지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양성평등진흥원 설립, 여성지위향상과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국가기구 체계화, 그리고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성별영향평가제 및 성 인지예산제도 실시가 전세계적으로 모범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별영향평가와 성 인지 예산을 실행함에 있어서 몇몇의 제한점이 나타나고 있어 향후과제로써 이의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궁극적으로는 정책분야별로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를 다양화하여 특정 정

책분야에서만이 아닌 정책 전반에 걸친 성 주류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둘째, 2010년도부터 성 인지에산 사업에서 예산사업만이 아니라 기금사업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 인지에산이 효과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성별영향평가와의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 성별영향평가와 성 인지에산의 실시에 있어서 공무원들에 대한 성 인지 교육의 강화가 요구된다. 그리고 통계생산에 있어서 전 부처가 성별분리통계를 생산하도록 하여 또한 이를 통해 여성정책의 범위가 전 부처로 확대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IV-8〉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현황 및 향후과제

부문별 북경행동강령 전략목표	현황과 성과	향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담당 국가기구를 설치 또는 강화 ■ 입법, 공공정책, 프로그램 및 사업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 ■ 기획 및 평가를 위한 성별 분리통계와 정보 생산 및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부 설치 -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한 여성정책조정회의, 여성정책 책임관 및 여성정책협조부서 지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 양성평등진흥원 설립 - 여성지위향상과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국가기구 체계화 - 성별영향평가제 및 성 인지 예산제도 실시 - 「여성발전기본법」과 「통계법」에 따른 성별분리통계 및 정보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의 다양화 - 성 인지예산제 적용기관의 확대 - 성별영향평가제와 성 인지 예산제의 연계 - 성별영향평가제와 성 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공무원 교육 강화 - 모든 부처가 성별분리통계 생산

자. 여성인권

한국의 여성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 도입은 어느 정도 기반이 닦여졌음은 전 세계가 괄목할만하다. 여성발전기본법의 제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민법개정과 관련하여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호주제 폐지는 개인을 기준으로 국적 및 가족관계를 기록하는 새로운 신분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실천적 부분에서는 그 차이는 여전히 크다. 그러므로 법적 성과와 실제 현실과의 괴리가 좁혀져야 한다. 여성관련법이 규범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현실에서 개선되고 있는가를 살펴 보아야 한다. 국가고시에서의 여성의 약진이나 알파 길의 등장 등은 여성의 지위향상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예라 할 것이나 한쪽 단면만 보여 준다. 그와 반대로 여성의 빈곤화라든지 비정규직에 참여하는 여성의 비율이 높은 문제, 성폭력·가정폭력 등 여성의 범죄피해신고율이 매우 낮은 점 등은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법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이기 때문에 실제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지 못한다. 따라서 이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등의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법률문해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Ⅳ-9〉 여성인권 현황 및 향후과제

분야별 북경행동강령 전략목표	현황과 성과	향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관련 국제법의 완전한 이행을 통하여 여성의 인권을 증진시키고 보호함 ■ 법률 및 관습상의 평등성과 비차별성을 도모 ■ 법률 문해를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발전기본법이 1995년 제정, 시행되면서 남녀평등, 여성발전을 위한 법의 제·개정, 여성정책수립, 여성관련 행정기구 및 조직설치의 확대, 여성단체사업의 활성화에 기여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간접차별, 직장내 성희롱이 금지되었고, 가정과 직장생활의 양립지원에 관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됨 - 민법개정과 관련하여 호주제 폐지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가능하게 하며, 개인을 기준으로 국적 및 가족관계를 기록하는 새로운 신분제도가 도입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등의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함 - 차별철폐에 관련된 법의 사실상의 평등이 실현되도록 해야 함 - 법률문해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차. 여성과 미디어

2009년 언론 관련 위원회 여성의 비율은 여성의 대표성 증진 장려 비율(30%)에 훨씬 못 미친다. 또한 미디어 내용의 성차별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1,2,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대중매체 모니터링, 종사자 성평등 교육, 방송 성평등 심의기준, 성평등한 콘텐츠 지원 사항이 들어갔다. 그러나 많은 여성언론인들이 남성보다 낮은 임금으로 일하며, 여성은 미디어 산업에서 고문직, 경영직, 모니터링과 같은 주요 의사결정직에서 대표성이 낮다.

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한 앞으로 남은 2년여의 기간 동안 실행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구체적으로 미디어 종사자 중 여성비율 계속 증대 노력해야하며, 미디어 종사 여성임원 비율을 전체 평균 5% 정도까지 끌어올림과 동시에 미디어 관련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 높여야 한다.

미디어는 상업적인 문화이다. 따라서 현재의 지배적 문화가 가부장적이라면 미디어의 내용도 가부장적인 이념을 따르게 되기 쉽다. 따라서 방송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며, 방송심의 중 성평등 관련 심의활성화 및 심의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방송종사자 정규교육에 성평등 과목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ICT는 새로운 사회 및 경제적 인프라를 제공하며 그러한 인프라를 통해 만들어진 교육, 의료서비스 등과 같은 시스템은 여성들의 역량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정보화사회에서 여성들이 낙후되지 않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관련 교육훈련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Ⅳ-10〉 여성과 미디어 현황 및 향후과제

분야별 북경행동강령 전략목표	현황과 성과	향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 및 새로운 통신기술에 여성의 참여와 접근성 증진 ■ 미디어의 여성에 대한 균형 있고 비정형화된 묘사를 촉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 종사자 중 여성비율 지난 15년간 꾸준히 증가함 - 그러나 유리천장효과 극명히 드러나 2009년 언론 관련 위원회 여성의 비율은 여성의 대표성 증진 장려 비율(30%)에 훨씬 못 미침 - 미디어 내용의 성차별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1,2,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대중매체 모니터링, 종사자 성평등 교육, 방송 성평등 심의기준, 성평등한 콘텐츠 지원 사항이 들어감 - 방송 성평등 심의가이드라인 개발, 방송 성차별성 모니터링 정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 종사자 중 여성비율 계속 증대 노력 - 여성임원 비율을 전체 평균 5% 정도까지 끌어올림 - 미디어 관련 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율 높임 - 방송 모니터링 지속 - 성평등 콘텐츠 제작 지원 - 방송심의 중 성평등 관련 심의활성화 및 심의 현황 모니터링 - 방송종사자 정규교육에 성평등 과목 포함 - 정보통신관련 교육훈련 확대

카. 여성과 환경

환경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여성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뚜렷한 조치 없으며, 관련 위원회 여성참여 수준 또한 낮다. 한국은 1995년 국가적 수준의 지속가능발전정책 수립되었고, 지방의제 21 사업 시행되고 있으나, 환경관련 젠더의제 통합 수준은 높지 않다. 게다가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제한적인 여성환경정책이 포함되었으나 그 추진실적은 저조하다. 개발의 영향을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도 성 관점은 통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북경여성회의 행동강령의 이행과 지속가능하고 성인지적인 환경정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발전관련 정부정책 및 실천 계획에 양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려는 체계적인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현재 범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녹색성장 추진계획에 성 관점이 통합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녹색성장 관련 성별 통계의 생산 및 수집이 요청된다. 따라서 녹색 환경의 관리자, 설계자, 계획자

및 환경사업의 이행자 및 평가자로서 모든 수준의 환경정책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할 기회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북경행동 강령 이행을 위한 여성과 환경 분야가 여성발전기본계획에 통합되어야 한다. 특히, ‘여성과 환경에 관한 국가포럼’은 여성과 환경의제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여성환경정책의제를 발굴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부여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의 여성환경단체 지원과 더불어 여성에 대한 환경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연구지원, 녹색소비자 운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등의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성인지적 관점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에 여성 환경 보건 관점이 통합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지속가능개발에서 여성의 국제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제적인 여성환경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표 IV-11〉 여성과 환경 현황 및 향후과제

북경행동강령 전략목표	현황과 성과	향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정책 결정과정에 여성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킴 ■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과 사업에 있어 젠더에 대한 관심과 관점을 통합 ■ 개발과 환경정책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국가, 지역 및 국제적 차원의 기구를 강화 혹은 설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여성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뚜렷한 조치 없으며, 관련 위원회 여성참여 수준 또한 낮음 - 1995년 국가적 수준의 지속가능발전정책 수립되었고, 지방의제 21 사업 시행되고 있으나, 젠더의제 통합 수준은 높지 않음 -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제한적인 여성환경정책이 포함되었으나 그 추진실적이 저조함 - 개발의 영향을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에 성 관점은 통합되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환경관련활동 및 관련위원회 참여 등에 대한 공식적인 성별 통계 생산 - 국가인적자원개발 계획에 여성환경전문가 양성 및 지원 계획 포함 -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여성환경분야 포함 - 여성환경분야 정책 영역 확대 - 여성과 환경의제를 발굴하고 이행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여성과 환경에 관한 국가포럼 설치 - 국제적인 여성환경 네트워크 활성화

타. 여아

많은 국가들은 점차 여아들에게 가해지는 수많은 형태의 폭력과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법안과 정책을 새로 채택하거나 개정하고 있다. 1995년 이후 정부의 성차별 개선 노력으로, 교육에서의 성차 개선,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아 낙태 및 성비 불균형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08년 이후 여아의 안전문제 부상에 따라 범부처 차원의 「아동·여성보호 대책」 추진과 그에 따른 각 부처의 관련 대책 시행하고 있다.

〈표 Ⅳ-12〉 여아 현황 및 향후과제

북경행동강령 전략목표	현황과 성과	향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 ■ 여아에 대한 부정적인 문화적 태도와 관습을 타파 ■ 여아의 권리 보호와 증진 및 욕구와 잠재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 ■ 교육, 기술개발 및 훈련에 있어서 여아에 대한 차별을 철폐 ■ 보건 및 영양에서 여아에 대한 차별을 철폐 ■ 아동근로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근절하고 노동상황에서의 여아를 보호 ■ 여아에 대한 폭력을 근절 ■ 사회·경제·정치적 활동의 참여에 대한 여아의 인식을 증진 ■ 여아의 지위향상을 위한 가정의 역할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5년 이후 정부의 성차별 개선 노력으로, 교육에서의 성차 개선,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아 낙태 및 성비 불균형 예방 - 2008년 이후 여아의 안전문제 부상에 따라 범부처 차원의 「아동·여성보호 대책」 추진과 그에 따른 각 부처의 관련 대책 시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등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및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법률 제·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아 안전망과 관련된 사회 시스템이 안고 있는 1차적 서비스기관과 2차적 서비스 기관의 취약한 연계망을 개선 - 여아에 대한 폭력 예방과 일관된 대책 마련을 위한 퇴거정부기관의 단일화된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아의 안전이 보장되는 지역 환경 조성 및 광범위한 지역 사회 전체의 사회적 개입

하지만 여아들은 여전히 안전과 관련해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 자원분배에 있어서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여전히 성적·생식적 건강을 비롯하여 충분한 정보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여아의 안전은 사회전반에 걸친 양성평등문화의 확산과 법률적 정비, 제도적 기반 형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증진될 수 있다. 여아에 대한 단기적인, 개인적인 폭력방지책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아의 안전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지역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향후 여아에 대한 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한 일관된 정책이 마련되기 위해서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단일화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안전망과 관련된 사회시스템이 안고 있는 1차적 서비스기관과 2차적 서비스 기관의 취약한 연계망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2. 12개 주요 관심부문 중 강화되어야 할 정책: 경제, 무력분쟁, 환경, 여아

향후 21세기의 경제사회변화를 예측해 볼 때, 12개 주요관심분야 중 경제 위기로 인한 여성의 고용, 여성과 무력분쟁, 여성과 환경, 그리고 여아의 인권보호는 중요한 아젠다로 대두될 것이다.

글로벌 경제위기는 여러 분야에 걸쳐 양성평등 증진에 위협적인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제위기는 여파는 여성에게 더욱 불리하게 나타나서 여성의 실업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문제에 대비하여 사회안전망과 사회정책을 통해 이를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전 지구화의 영향으로 한국에도 외국인 거주자, 특히 결혼이민자들의 증가하여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다양화되고 있다. 앞으로는 여성결혼이민자들만이 아니라 그 자녀세대도 성장하게 됨으로 이들에 대한 정책이 구체화되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아이로니컬하게도 한국에서 여성과 무력분쟁, 여성과 환경, 그리고 여아의 인권보호 부문에 대한 정책 이행 정도가 가장 낮았으며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여성과 무력분쟁에서, 즉 통일관련 주요정책 결정과

정에 여성의 참여가 부족하였다. 이에 통일 평화교육을 통해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통일 준비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성과 환경부문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관련 역시 정부정책 및 실천 계획에 양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려는 체계적인 시도는 매우 미흡하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보호 및 보존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아직도 이 부문에 대한 여성의 참여가 미약하다. 그러므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정책에 성 인지적 관점이 통합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복돋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 전반에 걸친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과 법률적 정비, 제도적 기반 형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아에 대한 안전이 증진될 수 있다. 그러나 2010년 일련의 법 개정 과정은 가해자 처벌강화 위주로 되어 있으나, 아동 성폭력 발생을 억제하는 아동과 가해자의 개인적 특성, 가족 내의 역할이나 경제적 수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포함하는 가족적 특성, 지역사회의 책임 등 다차원적인 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종합적인 대책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한 감이 있다. 아동 성폭력 발생 억제에 가장 효과적인 접근은 폭력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개인을 넘어서는 사회적 요인으로서는 지역 내의 빈곤과 시민 의식, 성폭력에 대한 문화적 규범과 사회적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이 네 분야에서 여성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마련과 더불어 집중적 관심이 필요하다.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에 있어서도 이 부문에 대한 정책개발과 예산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3. MDGs 달성을 위한 한국의 ODA기여 부문 개발

전지구적 차원의 발전을 지속하고 빈곤을 감소할 목적으로 2000년 유엔은 국제개발목표인 MDGs를 채택하였다. 새천년선언문의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제6절 평등, 제20절 양성평등과 여성의 권한 강화, 제25절 여성에 대

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근절할 것을 권유하였다. MDGs는 8개의 주요 목표 중 젠더(gender)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은 MDG 3과 MDG 5이다.

2010년 9월 20-22일에 MDGs 이행 10주년 점검을 위한 정상회의가 뉴욕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회의에서 MDGs의 달성에 있어서 여성과 여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여성과 아동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인 “모자보건 세계전략(Global Strategy for Women’s and Children’s Health)”이 출범하였다. 이 전략은 여성과 아동의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재정적 정책적 변화를 꾀한 로드맵이다.¹⁰⁰⁾ 이 전략의 이행을 위해 국제기구, 각 정부, 시민사회 및 NGO, 연구기관 등이 향후 5년간 400억불 상당의 기금을 마련할 것이다. 한국도 이 전략의 이행을 위해 재정적 기여할 것이다.

모자보건 문제는 유엔의 MDGs 이행 10주년 점검회의 앞서서 2010년 6월 캐나다에서 개최된 G8 정상회의에서도 MDG 4와 MDG 5 달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스코카 이니셔티브(Muskoka Initiative on Maternal, Newborn and Child Health)를 발표하여 모자보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웠다. 무스코카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 위하여 G8 회원국은 총 50억불, 한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위스 등 비G8 회원국들은 총 23억불 상당의 기금을 2015년까지 제공할 것이다.¹⁰¹⁾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은 우선 ‘여성과 건강’과 관련하여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양적확대와 더불어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모자보건 증진, HIV/AIDS 및 기타 전염병 예방 등 MDGs 달성과 직결된 분야로 사업과 재원지원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지난날 축적한 경험(보건소 모자보건 요원 배치, 산전산후 진찰과 분만 시행, 기생충·결핵퇴치 등 질병관리 인프라 구축, 예방접종사업 및 전염병 관리 등)을 공유할 수 있는 보건의료 분야에 집중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보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영양, 식수, 위생, 고용, 교육 등의 분야에 대한 연계지원도 확대되어야 한다.

100) UN Press release, http://www.un.org/sg/hf/global_strategy_release.pdf, 2010.10.1. 검색.

101) G8 Muskoka Declarations Recovery and New Beginnings, Muskoka, Canada, 25-26 June 2010.

그리고 여성의 생식보건과 관련해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 특히 아동성폭력 예방 교육도 필요하다. 재원지원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재원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ODA 보건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KOICA의 내외적 역량 강화 및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통한 향후 보건의료 원조정책에 근거중심의 피드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여성과 평등과 관련하여 개발도상국가에 ICT 교육을 확산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즉 ICT를 통해 새로운 사회 및 경제적 인프라를 제공하며 그러한 인프라를 통해 만들어진 교육, 의료서비스,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여성리더십, e-Biz 교육훈련, 여성의 역량강화 교육 등과 같은 시스템을 개발 보급해 여성들의 역량강화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국제사회에 정보화사회에서 여성들이 낙후되지 않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관련 교육훈련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성 주류화의 국제화를 위하여 정책분야별로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를 다양화하여 정책 전반에 걸친 성 주류화 확산을 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도구로서 성별영향평가와 성 인지예산에 대한 각국의 공무원들을 초청하여 성 인지 교육의 강화가 요구된다. 이를 통해 여성정책의 범위가 전 세계로 확대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여성의 권한 증진을 위한 아젠다: 북경행동강령

-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ECLAC)(2010).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Beijing Platform for Action and the twenty-third Special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in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Countries. LC/L. 3175.
- Gurumurthy, Anita(2009). Recasting the Beijing Platform for Action through the Information Society Lens. Expert Group Meeting in preparation for the High-Level Intergovernmental Meeting to Review Progress made on Implementation of the Beijing Platform for Action. 13-15 May 2009. Bangkok. ESCAP.
- ILO(2009). Global Employment Trends for Women. March 2009.
- ILO(2010). Global Employment Trends, January 2010.
- UN(2006). In-depth Study on all forms of violence against women: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1/122/Add.1
- UN(200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UN.
- UN(2010a).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Report on the fifty-fourth session (13 March and 14 October 2009 and 1-12 March 2010), Economic and Social Official Records. 2010, Supplement No. 7. E/2010/27, E/CN.6/2010/11.
- UN(2010b). Keeping the Promise : A forward-looking review to promote an agreed action agenda to achieve the MDGs by 2015. http://www.un.org/millenniumgoals/pdf/sgreport_draft.pdf, 2010.8.23 검색.
- UN(2010c).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10. UN.
- UN(2010d).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 the outcomes of the twenty-third special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and its contribution to shaping a gender perspective towards the full realization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E/2010/4 - E/CN.6/2010/2.
- UNAIDS(2009). AIDS epidemic update, December 2009. UNAIDS and WHO.
- UNAIDS(2010). OUTLOOK Report 2010. UNAIDS.

ESCAP(2009). Highlights of Progress and Challenges in Implementing the Beijing Platform for Action: Good Practices, Obstacles and New Challenges. E/ESCAP/BPA/2009/2.

UNIFEM(2009). Who Answers to Women?: Gender & Accountability. UNIFEM.

UNIFEM(2010). Press Release: At UN Consultations, Women Peace Advocates in Post-Conflict Countries Highlight Urgent Need to Engage Women in Peacebuilding. 11 June, 2010.

WHO(2009). Women and Health: Today's evidence tomorrow's agenda. WHO.

강선헤 · 김영혜(2000). 「북경행동강령이행조사 보고서」. 한국여성개발원.

파이낸셜 뉴스 2010.8.6 일자 기사 “수입 하는데 밀값 연일 폭등”.

파이낸셜 뉴스 2010.8.17 일자 기사 “러시아 밀수출 중단, 수입국들 곤경”.

한국의 북경행동강령+15: 12개 부문 이행 사항 점검

1. 여성과 빈곤

김교성(2007). 「도시근로자 가구의 빈곤추이와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9(2).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DB.

노대명(2010). 자활사업 10년의 평가 및 전망. 보건복지포럼. 2010.9.

보건복지부(2000(c)). 「200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자활급여)」.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8 보건복지가족백서」.

통계청(2010). 「2010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빈곤통계연보 2009」.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0). 「2009 한국의 성인지통계」.

홍승아 외(2007).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지원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 여성과 교육·훈련

고용노동부(2010). 「직업능력개발사업현황」.

고용노동부(2010). 「직업능력개발사업통계집」.

교육과학기술부·전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2010). 「2009 여성과학기술인력실태조사 보고서」.

민무숙·김엘림·박성정·이준일(2006). 「양성평등교육정책 실효성 제고방안 탐색」. 한국여성개발원.

민무숙·신선미·김남희(2009). 「대학의 여성인력 참여 확대 및 능력증진 지원사업 운영 및 성과분석」.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과학기술인통계 DB.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9). 「한국의 성인지통계」.

3. 여성과 건강

강은정, 조영태(2009). 「성별교육수준별 건강수명의 형평성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김영택(2009). 「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사업의 성인지적 분석: 대상자 선정기준의 타당성 검토와 소요예산 추정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승권, 조애저, 김유경, 도세록, 이건우(2006).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2009). 「2008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2차년도」.

보건복지부(2008). 「영아·모성사망조사」.

양현아(2010). 낙태에 대한 다초점 정책의 요청.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연구 콜로키움 회의자료.

이규식(2010).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 중간평가 및 수정보완 결과」. 대한예방의학회.

이삼식, 정운선, 김희경, 최은영, 박세경, 조남훈, 신인철, 도세록, 조숙경, 강주희(2005).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순영, 강선혜, 김영혜, 서미석, 주영미(1995). 「제4차 세계여성회의의 북경선언 행동강령」. 한국여성개발원.

질병관리본부(2006). 「HIV/AIDS 예방 및 대응 국가전략 개발에 관한 연구」.

질병관리본부(2007). 「에이즈결핵팀 보도자료: HIV 감염인 전년대비 증가율 사상 처음 감소」.

통계청(2009). 「인구동향조사」.

통계청(2009). 「사회조사」.

통계청(200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7). 「여성통계연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0). 「한국의 성인지통계」.

OECD(2009). 「OECD Health Data」.

4. 여성에 대한 폭력

김재엽(2007). 「한국의 가정폭력」. 학지사.

김승권 외(2008). 「2007년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여성부.

김승권 외(2008). 「2007년 전국 성폭력실태조사」. 여성가족부.

박선영 · 윤덕경 · 박복순 · 이성은 · 한지영(2007). 「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관련법제정비 연구(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관련 법제 정비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선영 외(2007). 「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관련법제정비 연구(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관련 법제 정비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변화순 외(2001). 「한국의 가정폭력관련법 제정이 후 가정폭력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변화순 외(2004).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여성부.

변화순 외(2007). 「2007전국 성매매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윤덕경 · 변화순 · 박선영(2005). 「성매매방지법상 성매매피해자에 관한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여성가족부(2010). 「아동·여성보호종합대책」(미간행).

이미정 · 변화순 · 황정임 · 이소영(2008). 「여성폭력관련 서비스 개선방안: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미정 외(2009).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 및 전략적 추진방향 연구」. 여성부.

이미정 외(2009). 「청년층 섹슈얼리티와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0).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 국회의원 홍일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2010.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www.stop.or.kr. 2010.

5. 여성과 무력분쟁

- 김원홍(2009). 「분야별 실태분석 및 향후 대북정책 추진방향(여성부문)」. 통일정책 연구협의회.
- 정현백(2000). 「여성평화운동의 과제와 전망」.
- 통일부(2009). 「2009 통일백서」.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의 여성정책 10년 돌아보며 내다보며: Beijing + 10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 서보혁(2009). 「연계와 단절의 딜레마에 직면한 이명박정부의 초기 대북정책: 초기 처방의 필요성과 대안」. KNSI 현안진단. 제114호.
- 권미혁(2008.7.25). 「평화통일운동에의 활발한 여성참여를 위하여-평화통일운동 단체에게 바란다」. “한반도의 평화와 여성의 참여”. 2008년 여성통일토론회. 민 화협 여성위원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9). 「2009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 이애란(2010).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사회정착 현황과 조기정착 방안」.
- 강선훈(2010).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현황 토론회」. “일본군위안부,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이야기하자 정책 토론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6. 여성과 경제

- 김종숙 외(2007). 「여성관리자패널조사」. 여성가족부.
- 김태홍(2010). 「적극적고용개선조치 평가와 과제」. “여성고용정책평가와 향후 여성일자리창출 방향모색”. 고용노동부.
- 민현주 외(2008). 「여성관리자패널조사」. 여성가족부.
- 전명숙 외(2008). AA도입 2주년 기념 고용평등 축진을 위한 국제학술대회. 노동부. 고용노동부. www.moel.go.kr.

한국고용정보원 www.keis.or.kr/.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홈페이지 www.aa-net.or.kr/.

통계청 kosis.go.kr.

7. 여성과 권력 및 의사결정

김원홍(2010). 「6·2지방선거와 여성」. “6·2지방선거와 여성”.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학술교류협정기관과의 지역협력세미나 자료집.

김원홍·김은경·김혜영(2001). 「해방 후 여성의 정치참여분석과 향후과제」. 한국여성개발원.

김은경(2008). “여성정책 거버넌스 유형에 대한 분석: 여성부의 협력사업 사례,” 「아시아여성연구」 제47권 1호.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제12-18대 국회의원 선거총람」. 각년도.

중앙인사위원회(2005). 「공무원인사개혁백서」.

총무처(1993, 1994, 1995.). 「총무처연보」.

행정안전부 인사행정과(2010). 내부자료.

행정안전부(2009). 균형인사운영지침.

행정자치부(2008). 균형인사실 내부자료.

행정자치부. 1999년 통계연보.

행정자치부(2002). 중앙인사위원회 내부자료.

8.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국회예산정책처 (2009).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성인지 통계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여성가족부(2005). 「제6차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이행보고서(2002-2005)」.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여성가족부(2010). 「2009년도 여성정책연차보고서」. 여성가족부.

여성부(2001). 「제5차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1998-2001)」. 여성부.

여성부(2002). 「제5차 유엔여성차별철폐이행보고서(1998-2001)」. 여성부.

- 여성부(2009). 「2008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 여성부(2010). 「성별영향평가매뉴얼」. 여성부.
- 여성부(2010). 「제7차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여성부.
- 여성부(2010). 2007년 여성정책연차보고서 2004~2008 여성정책연차보고서.
- 여성특별위원회(1998).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4차 이행보고서 (1994-1997)」.
여성특별위원회.
- 정무장관(제2)실(1994).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3차 보고서」. 정무장관(제2)실.

9. 여성인권

- 김선옥·윤덕경(1996). 「북경여성회의 행동강령이행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김선옥(2000).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과 한국여성입법정책」. 법학논총. 2000년 2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p.139-162.
- 김선옥(2002). 「법여성학의 연구동향과 과제」. 서강법학연구제4권. 2002년 5월.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p.259-276.
- 김엘림·윤덕경·박현미(2000). 「20세기 여성인권법제사」. 한국여성개발원.
- 김재인 외(2007). 「성평등정책론」. 교육과학사.
-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7).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심의 보고
및 권고이행을 위한 과제와 전망」. 2007.12.7.
- 여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8). 「한국 여성 삶의 변화와 미래 아젠다」. 건국
6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자료집. 2008.11.3.
- 이은영(1995). 「여성의 법적 지위」. “한국여성발전50년”. 정무장관(제2)실. p.153-
180.
- 조형 편(1996). 「양성평등과 한국 법체계」.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9). 「가족법 개정운동 60년사」.
- 한국법학교수회(1998). 「한국 법학 50년 - 과거·현재·미래」. 대한민국 건국 50
주년 기념 제1회 한국법학자대회 논문집.

10. 여성과 미디어

- 한국여성개발원(2000). 「북경행동강령 이행보고서」.

여성부(2009). 「제7차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Berly, Carolyn and Karen Ross(2006). 「Women and Media: A critical introduction」.
Blackwell Publishing.

이선주, 변화순, 김경희(2010).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목표와 양성평등 증진과의 연계성 연구」. 여성가족부.

11. 여성과 환경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05).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06).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의제 21의 새로운 전략과 재작성 지침 개발」.

대한민국(2002). 「지속가능발전 추진성과 평가보고서」.

여성부(2008).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007년도 시행실적」.

여성부(2008).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007년도 시행실적-지방자치단체」.

전국성평등의제네트워크(2009). 「전국성평등의제네트워크 출범 경과 보고」 자료집.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2008). 「성평등한 지속가능발전 정책포럼」 자료집.

한국여성개발원 (2000). 「북경행동강령 이행보고서」.

환경부(1996).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 의제 21 국가실천계획」.

환경부(1999). 「의제 21 국가실천계획 추진실적 평가 보고서」.

환경부(2001). 「지방의제 21 추진현황 분석 및 평가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UNEP(2007). Gender Mainstreaming Among Environment Ministries.

12. 여아

국회여성가족위원회(2007). 「여아차별 및 폭력 방지 관련 입법 과제 연구」.

국회입법조사처(2008). 「현행 법률의 주요내용과 쟁점」.

여성가족부(2005).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6차 이행보고서(2002-2005)」.

여성부(2002).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5차 이행보고서(1998-2001)」.

여성부(2009).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7차 이행보고서(2006-2009)」.

여성특별위원회(1998).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4차 이행보고서(1994-1997)」.

윤덕경(2008). 「인신매매 의정서」 관련 ACJ권고 이행을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APF 법률가자문위원회(ACJ) 권고·의견 이행 토론회(2008.7.8.).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여성개발원(1997). 「유엔여성지위위원회 50년과 한국활동 10년」.

한국여성개발원(2000). 「북경행동강령 이행조사 보고서」.

Abstract

The Review of Beijing + 15 and Challenges

Sun-Ju Lee
Wha-Soon Byun
Sung-Jung Park

The year 2010 holds significant importance for the promotion of gender equality and empowerment of women as it marks the 15 year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Beijing Platform for Action(BPfA) and the 10 year review of progress towards achieving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t its fifty-fourth session in 2010, the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carried out the 15-year review and appraisal of implementation of the Beijing Platform for Action and the outcomes of the twenty-third special. The review in the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particularly through its focus on the linkages between the implementation of the Platform for Action and the achievement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contributed to the high-level event on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held by the General Assembly in September 2010.

In this respect this study focuses on the 15 year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BPfA and challenges and obstacles in global context as well as in domestic context. Then, it makes recommendations on each of 12 critical concerns of BPfA in relation to Korean gender policy.

2010 연구보고서(수시과제)-4

**북경행동강령 이행 15주년 점검 및
향후과제**

2010년 10월 11일 인쇄

2010년 10월 12일 발행

발행인 : 김 태 현

발행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76(불광동 1-363)

전화 / 02-3156-7000 (代)

인쇄처 : 도서출판 한 학 문 화

전화 / 02-313-7593 (代)

ISBN 978-89-8491-384-4 93330

<정가 11,500원>